2025.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부처별Ⅳ)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http://budget.na.go.kr

CONTENTS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 문화체육관광부 ····· 3

Ⅰ. 개 관 ····· 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6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0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2

Ⅱ. 사업별 검토 ····· 13

【총 괄】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 사업: 기존 펀드의 투자 여력, 투자집행액, 회수재원 등을 고려한 적정 신규 출자규모 검토 필요 ····· 13
2.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신규): 운영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등 ····· 19

【일반회계】

<세 입> ····· 24

3. 입장료수입: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유료화 방안 검토 필요 ····· 24

<세 출> ····· **29**

4.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 기존 펀드 추가 출자 및 신규 펀드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 29

5.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 기존 펀드의 결성 및 투자집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검토 필요 ····· 33

6.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신규): 국제역량 제고 및 K-컬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체계 마련 필요 ····· 35

7.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신규): 소득·재산 요건 반영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39

8.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구축 사업(신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검토 필요 ····· 43

9.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신규): 공제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사업 추진 필요 ····· 46

10.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사업추진 지연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4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 **53**

11.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53

【문화예술진흥기금】

<지 출> ····· **56**

12.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개선책 마련 필요 ····· 56

【영화발전기금】

<지 출> ····· 62

13.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사업(신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검토 필요 ····· 62

【관광진흥개발기금】

<지 출> ····· 65

14.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신규): 신규 관광객 유입 및 재방문 효과 극대화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65

15. 외래관광객 한국형 통합관광패스 시범운영 사업(신규):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단계적 추진 필요 ····· 68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 출> ····· 72

16.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신규): 부상·사고 예방 및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72

17.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최근 대출실적을 고려한 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 75

❖ 국가유산청

Ⅰ. 개 관 ····· 7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77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80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82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83

Ⅱ. 사업별 검토 ····· 84

【일반회계】

<세 출> ····· 84

1.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사업: 사업 추진일정 및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 84
2. 경복궁 국가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사업(신규): 복원정비 사업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 89
3.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업(신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필요 ····· 92
4.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사업: 실시간 영상연계 확대 사업 참여 독려 및 영상 관제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 95
5.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관리 철저 필요 ····· 97
6.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 사업: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철저 필요 ····· 1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103

7.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103

【국가유산보호기금】

<지 출> ····· 107

8.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사업: 사업 관리·감독 철저 필요 ····· 1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Ⅰ. 개 관 ····· 113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113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17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120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22

Ⅱ. 사업별 검토 ····· 124

【총 괄】

1. 한국농어촌공사 미집행 수탁자금(약 2조원)의 보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손실 문제 ····· 124

【일반회계】

<세 출> ····· 128

2. 국가 농업 AX플랫폼 사업(신규): 출자 근거 및 회수 절차 보완 등 ····· 128
3.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신규): 내역사업 간 지원대상·지원 기간 일치 필요 등 ····· 13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 136

4.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신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 환수 검토 등 ····· 136
5.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한 출자금 규모 조정 검토 필요 ····· 140
6.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인증수요 증가에 따른 일부 비용 자부담 검토 필요 ····· 143
7. 노지 스마트농업ICT융복합확산 사업(신규): 솔루션 도입비 단계적 편성 및 컨소시엄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147
8.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수출 지원센터 사업(신규): 전문인력 중심 운영체계 마련과 핵심시설 위주로 건립 필요 ····· 151
9.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낮은 가입률로 인한 집행부진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 15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 출> ····· 157

10.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신규): 실질적 사업효과를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등 ····· 157
11.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청년농 우선공급 취지에 배치되는 사업 운영방식 개선 필요 ····· 1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 163

1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한 관리 강화 필요 ····· 16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165

1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신규):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비 매칭비율 과다 측면을 고려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등 ····· 165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 출> ····· 169

14. 수급조절지원 사업: 사업비 분담비율 및 사업담당기관 재조정 필요 등 ····· 169

【농지관리기금】

<지 출> ····· 175

15.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은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할 필요 ····· 175

【농업 · 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지 출> ····· 178

16. 전략작물 직불 사업: 수요기반 없는 전략작물 확대 정책 재검토 필요 ····· 178

❖ 농촌진흥청

Ⅰ. 개 관 ····· 182

1. 예산안 개요 ····· 18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184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186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187

Ⅱ. 사업별 검토 ····· 188

【총 괄】

1. 농촌진흥청 R&D 예산: 신규 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88

【일반회계】

<세 출> ····· 195

2.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사업: 사업관리예산의 기획평가관리비로 분리 계상 및 적정 금액 반영 필요 ····· 195

3.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사업(신규):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성과의 국가소유 확대 검토 등 ····· 198

4.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 사업: 홍보비 등 운영비 지출 최소화 노력 필요 ····· 20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 206

5.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 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한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 필요 ····· 206

❖ 산 림 청

Ⅰ. 개 관 ····· 209

1. 예산안 개요 ····· 20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11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213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14

Ⅱ. 사업별 검토 ····· 215

【총 괄】

1. 조림·임도시설·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경영 정책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필요 ····· 215
2. 효율적 재정운용 및 성과관리를 위한 내역사업 정비 필요 ····· 220

【일반회계】

<세 출> ····· 223

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지원 사업(신규): 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공단 보조예산 편성 필요 ····· 223
4.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산림보호지원단 존치 필요성 검토 등 ····· 227
5.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신규): 산불 등 재난예방 목적으로 사업목표 변경 검토 ····· 23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 지역지원계정)】

<세 출> ····· 233

6. 조림 사업: 활엽수·혼효림 비중 확대 필요 등 ····· 233
7. 임도시설 사업: 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과학적 분석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적정예산 반영 필요 ····· 238

❖ 해양수산부

Ⅰ. 개 관 ····· 241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241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244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248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249

Ⅱ. 사업별 검토 ····· 250

【일반회계】

<세 출> ····· 250

1.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사업(신규): 출자 규모 및 주목적 의무투자비율 조정 필요 ····· 250
2.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254
3.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신규): 이사 지원비 집행 시 철저한 관리 필요 ····· 258
4.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신규): 사업계획 구체화 및 예산 집행방식 검토 필요 ····· 262
5.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사업: 선종별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26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 입> ····· 270

6. 기타경상이전수입: 최근 수납액 증가 추세를 반영한 세입 증액 검토 필요 ····· 270

<세 출> ····· 273

7.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73

8.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 277

【교통시설특별회계】 ····· 281

<세 출> ····· 281

9.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미집행 이월액 및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8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 285

10.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사업(신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 28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 288

11. 어촌신활력증진(자율)·어촌신활력증진(제주)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288

12.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사업 추진 일정 관리 강화 필요 ····· 296

【수산발전기금】

<지 출> ····· 299

13.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 실제 반납 실적을 고려한 기존 어구 반납비 예산 적정 규모 조정 필요 ····· 299

❖ 해양경찰청

Ⅰ. 개 관 ····· 304

1. 예산안 개요 ····· 304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06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308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09

Ⅱ. 사업별 검토 ····· 310

【일반회계】

<세 입> ····· 310

1. 기타재산이자수입: 연구개발비 예수금 이자 증가를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필요 ····· 310

<세 출> ····· 313

2. 드론 조종교육 사업: 자체 교육체계 구축 필요 ····· 313

3.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신규): 연내 수행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규모의 조정 검토 필요 ····· 317

4 시뮬레이터 도입 사업(신규): 도입 및 활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필요 ····· 3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산업통상부

Ⅰ. 개 관 ····· 329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32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332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341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343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 344

Ⅱ. 사업별 검토 ····· 354

【총 괄】

1. 연구개발(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평가관리비와 중복되는 사업별 기획평가관리비 조정 필요 등 ····· 354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59
3. R&D 사업의 장비구축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이 편성된 문제 ····· 362

【일반회계】

<세 출> ····· 366

4.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366
5.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373

6.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378
7.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양질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 382
8.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사업: 사업실적 분석 후 예산 반영 필요 ····· 386
9.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사다리조성 사업(신규): 공정별 지원단가 조정 검토 필요 ····· 390
10. 첨단반도체양산 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R&D) 사업: 장비구축비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문제 등 ····· 39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 399

11.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 해외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 399
12. AX 실증밸리 조성(R&D) 사업(신규): 지방비 확보 노력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404
13.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 사업(신규): 운영비성 경비와 사업비 간 예산안 상호 조정 검토 필요 ····· 40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융자계정)】

<세 출> ····· 412

1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과거 지원된 융자금의 회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 412

【기후대응기금】

<지 출> ····· 415

15. 투자지원 사업: 예상 협약체결 건수를 고려한 일정 금액 감액 조정 검토 필요 ····· 415

❖ 지식재산처

Ⅰ. 개 관 ····· 419

1. 예산안 개요 ····· 419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22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 424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25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 426

Ⅱ. 사업별 검토 ····· 42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출> ····· 427

1.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사업(신규): 민간위탁사업비와 국외업무여비의 명확한 집행목적 구분 관리 필요 ····· 427
2.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사업(신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일부 사업경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430
3. AI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사업(신규): 기존 관리시스템의 유지·관리 예산과 신규 시스템 검증 비용의 중복성 검토 필요 ····· 433

4.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공정성을 위한 전문가 구성 및 체계적인 환류구조 마련 필요 ····· 436
5.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 상대 국가와 신속한 합의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 ····· 440
6.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사업(신규): 후속 단계인 사업화 R&D를 고려한 로드맵 보완 필요 ····· 443
7.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매입 IP의 활용성과에 대한 관리 병행 필요 ····· 447

❖ 중소벤처기업부

Ⅰ. 개 관 ····· 452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452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 455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457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 458

Ⅱ. 사업별 검토 ····· 459

【일반회계】

<세 출> ····· 459

1.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459
2. 제조혁신구축 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필요 ····· 465
3. R&D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신규): 법률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 마련 필요 ····· 471

4.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도출 전 예산 편성 문제 등 ····· 476
5.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R&D): 팁스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대폭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등 ····· 482
6.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신규): 대표 공정도 마련 등 사전준비 철저 필요 ····· 492
7. K-뷰티 클러스터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지원내용 및 사전계획 필요 등 ····· 497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 502

8. 지식산업센터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필요 ····· 502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총 괄> ····· 506

9. 중소기업·스타트업 AI 인력 양성 관련: 스타트업·중소기업 취업자·재직자를 위한 체계적인 AI 교육 체계 마련 필요 ····· 506

<수 입> ····· 517

10. 기타경상이전수입: 경륜·경정수익금의 출연금에 상응하는 사업 수행 필요 ····· 517

<지 출> ····· 5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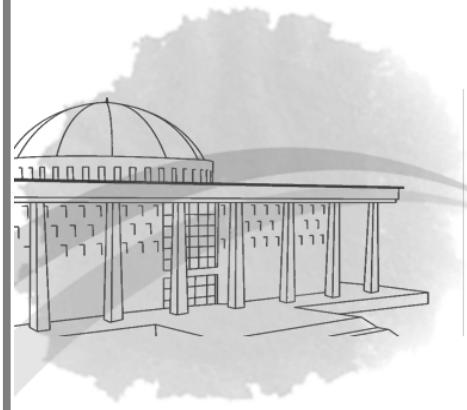
11.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민간 자금의 매칭 조성 및 투자 유도 필요 등 ····· 52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 출> ····· 529

12.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신규): 소상공인의 AI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 529
13.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기금운용계획 확정 이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의 임의 변경 유의 필요 ····· 536
14.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신규):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 541
15.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신규): 사실상 정보화 사업으로서 관련 절차 미실시 및 명확한 산출근거 부족 ····· 54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은 4조 1,80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3억원(4.9%) 증가함.

예산은 1,70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9억원(28.6%) 증가하고, 기금은 4조 106억원으로 전년 대비 1,574억원(4.1%) 증가함.[1)]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323	1,323	1,702	379	28.6
기 금	38,532	38,784	40,106	1,574	4.1
총수입	39,855	40,107	41,808	1,953	4.9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은 7조 7,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7,289억원(10.3%) 증가함.

예산은 4조 2,41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92억원(12.4%) 증가하고, 기금은 3조 5,5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597억원(7.9%) 증가함.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7,718	38,961	42,410	4,692	12.4
기 금	32,954	33,509	35,551	2,597	7.9
총지출	70,672	72,470	77,961	7,289	10.3

나. 예산안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70억원(6.9%) 증가함.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074	1,074	1,349	275	25.7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1,201	1,211	1,021	△180	△15.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3	213	288	75	35.0
합 계	2,488	2,498	2,658	170	6.9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4조 3,636억원으로 전년 대비 4,442억원(11.3%) 증가함.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2,932	34,175	37,730	4,798	14.6
아시아문화중심 도시조성특별회계	1,201	1,211	1,021	△180	△15.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61	5,061	4,885	△176	△3.5
합 계	39,194	40,447	43,636	4,442	11.3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기금(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6조 1,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347억원(11.6%) 증가함.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문화예술진흥기금	5,776	5,776	6,152	376	6.5
영화발전기금	937	1,189	1,346	409	43.6
지역신문발전기금	100	100	149	49	49.4
언론진흥기금	508	508	545	37	7.4
관광진흥개발기금	17,142	17,142	18,399	1,258	7.3
국민체육진흥기금	30,372	30,382	34,590	4,218	13.9
합 계	54,835	55,097	61,182	6,347	11.6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2개(3,513억 4,2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지원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 감경을 통해 창작 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예술기업의 높은 성장률에도 보조금 외에 사업체 대상 금융지원이 부재하므로 예술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 사업은 어린이박물관 관람수요 증가와 어린이 대상 박물관 교육 다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사업은 개인운동기록 표준화·수집, 분석·활용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스포츠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7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R&D)’ 사업은 관광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관광데이터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AI 융합 관광 특화기술을 개발하여 관광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7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재해복구비(종교)	8,462
2	문화공간 AX 전환을 위한 차세대 Culture Tech 기술개발(R&D)	5,200
3	문화예술 온톨로지 기반 LLM연계 기술개발(R&D)	1,750
4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18,000
5	국립진주박물관 이전건립 지원	3,500
6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	715
7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	255
8	국립한글박물관 복구	4,0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9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48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0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자율)	6,599
11	지역 공연예술 인프라 조성(자율)	6,615
12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자율)	46,000
13	광역권 관광개발(자율)	179,468
14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자율)	8,309
15	관광자원 기반조성(자율)	14,278
16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자율)	12,213
17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제주)	4,660
18	지역 공연예술 인프라 조성(제주)	315
19	광역권 관광개발(세종)	1,042
[문화예술진흥기금]		
20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21	AI기반 관광 혁신 기술개발(R&D)	3,750
[국민체육진흥기금]		
22	개인운동기록 활용 기술개발(R&D)	5,725
총지출		351,342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K-콘텐츠 펀드 출자’,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사업 등 총 53개임.[3)]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2,455	3,624	1,169	47.6
2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33,268	43,238	9,970	30.0
3	콘텐츠산업 생태계조성	44,278	63,214	18,936	42.8
4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00	465,000	170,000	57.6
5	영상콘텐츠산업육성	74,472	86,531	12,059	16.2
6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42,460	77,958	35,498	83.6
7	문화기술연구개발(R&D)	60,020	83,200	23,180	38.6
8	K-Culture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기술개발(R&D)	1,967	9,275	7,308	371.5
9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 핵심기술개발(R&D)	4,864	6,400	1,536	31.6
10	WIPO신탁기금지원(ODA)	958	1,558	600	62.6
11	글로벌 저작권 현안 신속 대응(R&D)	10,467	14,198	3,731	35.6
12	국가기간통신사지원	5,000	29,900	24,900	498.0
13	유네스코세종문해상지원	206	276	70	34.0
14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4,141	7,655	3,514	84.9
15	전통문화 창업 및 융합 활성화	13,933	24,383	10,450	75.0
16	문화예술교육(ODA)	600	1,050	450	75.0
17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7,145	14,273	7,128	99.8
18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	24,500	37,687	13,187	53.8
19	문화예술 창제작 거점 조성	58,000	98,970	40,970	70.6
20	한국문학번역원지원	14,071	24,949	10,878	77.3
21	대국민소통활성화지원	7,503	13,930	6,427	85.7
22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13,365	20,121	6,756	50.5
23	박물관문화재단지원	3,471	7,016	3,545	102.1
24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6,309	23,326	17,017	269.7
25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273	1,966	1,693	620.1
26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562	998	436	77.6
27	국어원청사관리	523	841	318	60.8
28	미디어홍보	12,981	17,399	4,418	34.0
29	재외 한국문화원 운영	70,913	143,393	72,480	102.2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30	국립민속박물관 이전건립	10,184	15,374	5,190	51.0
31	생활민속자료아카이브구축(정보화)	919	1,210	291	31.7
32	KTV운영	21,916	29,384	7,468	34.1
33	한국문화정보원운영(정보화)	10,071	15,266	5,195	5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4	생태녹색관광활성화(자율)	3,272	6,368	3,096	94.6
35	레저스포츠관광활성화(자율)	715	1,230	515	72.0
36	생태녹색관광활성화(제주)	600	800	200	33.3
37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세종)	3,000	4,000	1,000	33.3
[문화예술진흥기금]					
38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18,000	28,000	10,000	55.6
39	문화예술향유 지원	280,581	329,638	49,057	17.5
[영화발전기금]					
40	영화 창제작 지원	21,710	37,929	16,219	74.7
41	영화정책지원	16,496	28,099	11,603	70.3
[지역신문발전기금]					
42	지역신문발전지원	8,251	11,751	3,500	42.4
[관광진흥개발기금]					
43	국내관광 역량 강화	42,780	64,193	21,413	50.1
44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591,863	647,066	55,203	9.3
45	한국관광 해외광고	23,372	34,530	11,158	47.7
46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63,694	104,474	40,780	64.0
[국민체육진흥기금]					
47	안전한스포츠활동지원	4,263	5,765	1,502	35.2
48	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	65,853	88,300	22,447	34.1
49	주최단체지원	154,540	167,395	12,855	8.3
50	전국(소년)체전지원	34,637	49,035	14,398	41.6
51	스포츠산업금융지원	30,321	40,321	10,000	33.0
52	국제체육교류지원	15,198	21,402	6,204	40.8
53	국제대회국내개최지원	50,758	61,282	10,524	20.7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지역신문발전기금·언론진흥기금·관광진흥개발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840억 9,700만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300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74억 6,700만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9억 3,800만원이 전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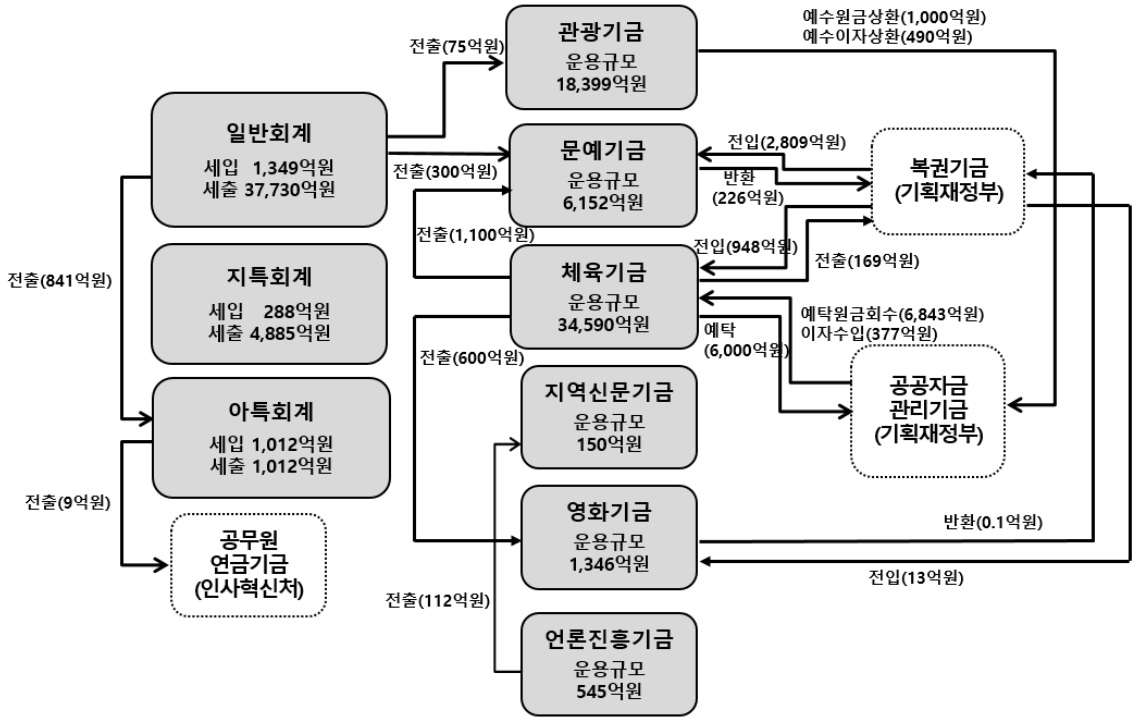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000억원의 예수원금과 490억2,600만원의 예수이자가 상환되었음.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2,808억 7,100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부터 1,100억원이 전입되었으며, 복권기금으로 225억 7,200만원이 반환되었음.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948억 800만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에 168억 7,800만원을 반환할 예정이며,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1,100억원, 영화발전기금으로 600억원이 각각 전출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원금 회수 6,843억 2,700만원 및 예탁이자 수입 376억 6,500만원을 받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 6,000억원을 예탁할 예정임.

또한 언론진흥기금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112억 700만원이 전출되고, 영화발전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3억원을 전입받고, 복권기금에 1,000만원을 반환할 예정임.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위해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K-콘텐츠 펀드, 보증 등 자금지원 및 분야별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지원 및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사업 추진을 통해 콘텐츠산업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을 지원한 것을 들 수 있음.

또한 국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예술인의 창작·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본격 확대하고,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설하였음. 더불어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스포츠 및 지역·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사업,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외래관광객 한국형 통합관광패스 시범운영 사업 등을 신규로 추진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펀드 출자 사업은 기존 모태펀드(문화·영화·관광·스포츠 계정),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및 글로벌 리그 펀드의 자펀드 결성 지연 및 투자집행 부진으로 인해 동 펀드들의 투자여력이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추가 재정투입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고, 투자분야가 기존 펀드들과 중첩되는 콘텐츠 미래전략펀드의 신규 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직간접적인 비용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구축’ 사업은 아직 기본구상 완료 전으로 사업 규모·방식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예산안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 수행주체 및 건립 장소 또한 미정으로 사업계획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2026년 연내 리모델링 및 전시 콘텐츠 구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6년 이용분야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을 보면 당초 목적인 청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형성 및 소비 유도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률 제고 등 개선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적 환류를 추진하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티켓 양도나 현금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 사업: 기존 펀드의 투자 여력, 투자집행액, 회수재원 등을 고려한 적정 신규 출자규모 검토 필요

가.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문화·영화·관광·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당 분야 기업에 투자하는 자펀드에 자금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00억원(49.5%) 증액된 4,530억원이 편성되었음.[4)]

출자금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영하는 한국모태펀드에 귀속되고 민간자본과 매칭되어 자펀드를 결성한 이후 투자가 이루어지며, 자펀드는 결성 후 5~8년가량 운용된 후 청산됨.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B)	증감 (B-A)	
		본예산(당초) (A)	추경 (계획현액)			(B-A)/A
일반회계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00	370,000	465,000	170,000	57.6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205,000	260,000	270,000	65,000	31.7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35,000	55,000	70,000	35,000	100.0
관광기금	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	63,694	63,694	104,474	40,780	64.0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33,000	33,000	73,000	40,000	121.2
체육기금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30,321	30,321	40,321	10,000	33.0
	스포츠산업 펀드	30,000	30,000	40,000	10,000	33.3
합계		303,000	378,000	453,000	150,000	49.5

4) 일반회계-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콘텐츠정책국),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사업 창업지원 및 벤처육성(4462-313)(관광정책국),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산업 금융지원(5365-301)(체육국)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사업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문화계정에 정부재원을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50억원(31.7%) 증액된 2,700억원이 편성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신규 출자금 2,700억원에 회수재원(재출자액) 800억원을 더해 총 3,500억원을 출자한 후,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2026년 총 5,75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모태펀드 영화계정 출자’ 사업은 한국영화 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영화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50억원(100.0%) 증액된 700억원이 편성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2026년 총 1,4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관광기업 육성펀드 조성’ 사업은 관광중소기업의 금융지원 및 민간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모태펀드 관광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400억원(121.2%) 증액된 730억원이 편성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2026년 총 1,124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스포츠산업 펀드’ 사업은 스포츠산업 분야 창업자 및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국내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태펀드 스포츠계정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00억원(33.3%) 증액된 400억원이 편성되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신규 출자금 400억원에 회수재원(재출자액) 50억원을 더해 총 450억원을 출자한 후,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2026년 총 643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2026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계정별 조성계획(안)]

(단위: 백만원)

계정	2026년 조성계획(안)					
	정부출자금			민간	정부출자 비율	결성총액 (목표액)
	’26년 예산안	회수액(안)	계			
문화	270,000	80,000	350,000	225,000	60.9%	575,000
영화	70,000	-	70,000	70,000	50.0%	140,000
관광	73,000	-	73,000	39,400	65.0%	112,400
스포츠	40,000	5,000	45,000	19,280	70.0%	64,280
계	453,000	85,000	538,000	353,680		891,680

주 1) 2026년 재출자규모는 아직 미정으로, 현재 작성된 수치는 8월말 기준 추정치임
2) 정부출자비율 및 결성총액(목표액)은 2025년 수치를 준용한 값으로 잠정적 수치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각 계정별 기존 자펀드 결성 실적 및 투자여력, 연도별 투자집행액 현황 및 재출자가 가능한 회수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적정 신규 출자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모태펀드 출자사업의 경우 모태펀드로 정부자금이 출자되면 한국벤처투자(펀드 운용기관)는 민간 운용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조달·매칭하여 자펀드를 결성한 후 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수행하게 됨. 펀드 출자사업의 목적인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출자 후 실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최근 자펀드 결성 지연에 따라 출자가 이루어진 당해연도(1차년도)에 조속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2025년의 경우에는 8월말 현재까지 조성계획 중인 25개 자펀드 중 4개 자펀드만 결성되는 등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으며, 투자실적도 전무한 상황임.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자펀드 결성 계획 대비 현황]

(단위: 억원, 개)

연도	계정	예산 (A)	회수액 (B)	정부 출자액 (A+B)	결성 목표액	목표 자펀드 수	선정 운용사 수	자펀드 결성 규모	결성 자펀드 수
2025	문화	2,600	950	3,550	6,118	15	13	1,155	3
	영화	550	48	598	1,196	5	3	-	-
	관광	330	120	450	694	2	-	-	-
	스포츠	300	50	350	500	3	3	-	1
	계	3,780	1,168	4,948	8,508	25	19	1,155	4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아직 자펀드 결성 전인 2025년도 자펀드 결성목표액을 포함하여 각 계정별로 투자여력을 살펴보면, 문화계정은 약 1조 2,173억원, 영화계정은 약 1,379억원, 관광계정은 약 1,339억원, 스포츠계정은 약 1,080억원 등 각각 상당한 규모의 투자여력이 남아있음.

[2022년~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결성규모 및 투자여력 현황]

(단위: 억원, %)

계정	출자연도	정부출자	민간	결성총액	투자집행액	투자소진율	투자여력
문화	2022	1,741	947	2,688	2,144	79.8	275
	2023	2,175	2,311	4,486	2,230	49.7	1,807
	2024	3,500	3,292	6,792	1,485	21.9	4,628
	2025	3,950	2,568	6,518	403	6.2	5,463
	계	11,366	9,118	20,484	6,262	30.6	**12,173**
영화	2022	436	310	746	724	97.1	-
	2023	250	280	530	492	92.8	-
	2024	325	328	653	285	43.6	303
	2025	598	598	1,196	-	-	1,076
	계	1,609	1,516	3,125	1,501	48.0	**1,379**
관광	2022	450	252	702	455	64.8	177
	2023	300	130	430	202	47.0	185
	2024	350	191	541	135	25.0	352
	2025	450	244	694	-	-	625
	계	1,550	817	2,367	792	33.5	**1,339**
스포츠	2022	254	122	376	159	42.3	179
	2023	175	89	264	167	63.3	71
	2024	375	167	542	108	19.9	380
	2025	350	150	500	-	-	450
	계	1,154	528	1,682	434	25.8	**1,080**

주 1) 2025년 8월말 기준임

2) 2025년은 운용사 선정시 결성 목표액으로 현재 조성 진행중임

3) 투자여력은 자펀드 결성규모(2025년은 결성목표액)에서 旣 투자액과 펀드 운용비용(운용사 보수 등으로 청산 시 확정되며, 통상 자펀드 결성액의 10% 이상 규모임. 이 표에서는 10%로 가정)을 제외하고 실제 투자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임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0년 이후 계정별 연간 결성규모 및 투자집행액 현황을 살펴보면, 결성총액(목표액)은 2020년에 비해 2024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집행액은 그에 비례하지 못함에 따라 각 계정별로 기업에 투자되지 못하고 개별 자펀드에서 대기 중인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문화계정의 경우 결성총액은 2020년 2,438억원에서 2024년 6,792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연간 투자집행액은 2020년 2,118억원에서 2024년 2,829억원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스포츠계정의 경우에도 결성총액은 2020년 294억원에서 2024년 542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연간 투자집행액은 2023년 이후 100억원대에 그치고 있어, 신규 출자분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0년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계정별 결성규모 및 투자집행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2026(안)
문화계정	결성규모(목표)	정부 출자금	1,460	1,540	1,741	2,175	3,500	3,950	3,500
		민간	978	1,341	947	2,311	3,292	2,568	2,250
		결성 총액	2,438	2,881	2,688	4,486	6,792	6,518	5,750
	투자집행액		2,118	2,450	2,287	2,559	2,829	2,324	
영화계정	결성규모(목표)	정부 출자금	310	362	436	250	325	598	700
		민간	154	199	310	280	328	598	700
		결성 총액	464	561	746	530	653	1,196	1,400
	투자집행액		531	487	643	629	687	560	
관광계정	결성규모(목표)	정부 출자금	300	450	450	300	350	450	730
		민간	141	200	252	130	191	244	394
		결성 총액	441	650	702	430	541	694	1,124
	투자집행액		326	349	354	455	423	395	
스포츠계정	결성규모(목표)	정부 출자금	200	130	254	175	375	350	450
		민간	94	55	122	89	167	150	193
		결성 총액	294	185	376	264	542	500	643
	투자집행액		235	253	239	156	145	179	

주 1) 결성규모는 해당연도에 결성된 자펀드 기준으로 작성(단, 2025~2026년은 결성목표액 기준)
2) 투자집행액은 각 계정별 해당연도에 집행된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작성(단, 2025년은 8월말 기준)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른 한편으로, 2025년 8월말 기준 문화계정은 3,071억원, 관광계정은 221억원의 회수재원이 대기 중에 있어 현재 계획한 2026년 재출자 규모(문화계정 800억원, 관광계정 없음)보다 각각 2,200억원 및 200억원대의 재출자가 추가로 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2026년 신규출자 규모를 조정할 필요도 있음.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계정별 회수액 현황]

(단위: 억원)

계정	누적 회수액 (A)	누적 재출자 계획액(B)	납입예정 대기금액 (C=B-A)	'26년 재출자 계획액(안)(D)	추가 재출자 가능액(C-D)
문화	8,780	5,709	3,071	800	**2,271**
영화	678	656	22	-	22
관광	491	270	221	-	**221**
스포츠	266	214	52	50	2

주 1) 2025년 8월말 기준
2) 2026년 재출자 계획액(안)은 아직 미정으로, 현재 작성된 수치는 8월말 기준 추정치임
자료: 한국벤처투자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투자지원(펀드) 사업은 정책자금이 모태펀드에 출자되더라도 자펀드가 결성되어야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집행할 수 있으므로 자펀드 결성 전까지 재정출자액은 모태펀드 내에서 장기간 유보되게 되고, 자펀드 결성이 완료되더라도 실제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은 투자가 실시되는 시점에 이루어지는바,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경우 펀드 출자 초기에 국가 예산이 적정한 곳에 배분되지 못하고 대기자금이 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며, 가치평가에 따른 선별적 투자의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도 있음.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도 펀드 출자사업의 경우 기 출자예산의 집행실적(기존 출자예산을 통한 자펀드 결성 실적 및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현황 등), 투자금의 회수 및 재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출자예산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5)]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각 계정별 기존 자펀드 결성 실적 및 투자여력, 연도별 투자집행액 현황 및 재출자가 가능한 회수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6년 적정 신규 출자규모를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2025.5.)」(p.289)
□ 펀드 출자사업의 경우 기 출자예산의 집행실적*, 투자금의 회수 및 재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적정한 출자예산 요구
* 기존 출자예산을 통한 자펀드 결성 실적 및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 현황 등

2.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신규): 운영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관련 예산은 2026년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융자금 예산 200억원, 일반회계에 운영비 예산 6억 3,8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은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

‘예술산업 금융지원 운영’ 사업은 2026년 신규 도입되는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억 3,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6년도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예산안(계획안)]

(단위: 백만원, %)

회계/기금	구분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5년도 본예산(당초) (A)	2025년도 추경 (계획현액)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문예기금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	-	20,000	20,000	순증
일반회계	예술의 산업화 추진	26,675	26,675	28,588	1,913	7.2
	예술산업 금융지원 운영	-	-	638	638	순증
합계		-	-	20,638	20,638	순증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예산안(계획안) 세부내역]

○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200억원**
- 기타보전금(310-04목): 180억원
- 민간경상보조(320-01목): 20억원

○ **예술산업 금융지원 운영: 6억 3,800만원**
- 관리체계 구축, 안내・교육・상담, 성과조사 등 제도운영: 5억원
-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ISP): 1억 3,8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6) 문화예술진흥기금-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1633-314)(예술정책관)

7) 일반회계-예술의 산업화 추진(1633-306)(예술정책관)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예술산업 분야 사업체*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의 예술 분야에서 예술작품 및 예술상품을 개발·생산·유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경제활동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사업체

○ (융자분야) 시설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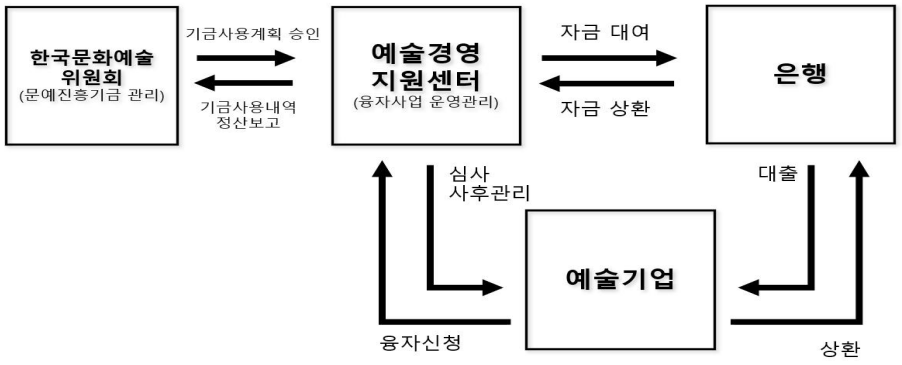
○ (지원방식) 대출 원금을 은행 대여 후 지원(은행 담보부 대리대출, 은행 취급수수료 1% 약정)

○ (융자이율) 공공자금관리자금 융자계정 변동금리('25.3분기 2.53%)

○ (융자조건(안)) 융자대상별 한도액,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상이

융자대상	분야	한도액	상환기간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 예술시설업체	시설설치자금	3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 포함)
	개보수	10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운전자금	5억원	3년(일시상환)
기타 예술서비스업체	시설설치자금	10억원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운전자금	5억원	3년(일시상환)

○ (사업 추진체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첫째, 예술산업 금융지원 운영 사업은 관광·스포츠 등 다른 분야 융자사업에 비해 운영비 규모가 과다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일반회계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그 용도와 재원이 구분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영비 예산 또한 융자금이 편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함께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예술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 자금 200억원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 운영비로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런데 이 사업이 2026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해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는 관광·스포츠 등 다른 분야의 융자 사업에 비해 운영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임.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융자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

구분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문예기금, 1633-306)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관광기금, 4267-300)	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 (체육기금, 5365-300)
'26년 융자규모	융자금 200억원	융자금 6,405억원, 이차보전금 62억 300만원	융자금 2,416억 4,700만원, 이차보전금 64억 1,000만원
'26년 운영비	6억 3,800만원 (일반회계)	3억 6,300만원 (관광기금)	2억 8,900만원 (체육기금)
세부 산출내역	○ 관리위원회: 60백만원 ○ 콜센터: 120백만원 ○ 지역별 설명회·컨설팅: 40백만원 ○ 교육자료제작: 60백만원 ○ 현장모니터링, 기업정보조회 이용료, 간담회 등: 120백만원 ○ 금융환경 및 성과분석: 100백만원 ○ 금융지원시스템 도입(ISP): 138백만원	○ 시스템 유지보수 등: 100백만원 ○ 온라인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편 등 융자지원센터 운영: 263백만원	○ 서류검토 위탁수수료: 125백만원 ○ 콜센터 운영: 90백만원 ○ 심의회 개최: 12백만원 ○ 사업개선 용역: 30백만원 ○ 사업홍보: 26백만원 ○ 현장점검 및 회의비: 6백만원 * 시스템 운영비 별도: 스포츠산업 지원사이트 운영 ('26년(안) 202백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초기 홍보 및 교육, 사업체계 구축, 금융환경 및 성과분석, 금융지원시스템 도입(ISP)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이 안정화됨에 따라 2027년 이후 운영비 예산은 점차 감소해 나갈 것이라 설명함.[8)]

그러나 관광 분야 융자금 규모가 6,405억원, 스포츠 분야 융자금 규모가 2,416억원으로, 예술 분야 융자금 규모 200억원의 10배 이상임에도 운영비 예산 규모는 그 절반 수준인바, 융자 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법이 대출 분야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 운영비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2026년~2028년 운영비 예산(안)

한편, 관광 및 스포츠 분야 융자 사업의 운영비 예산이 각각 융자금이 편성된 해당 기금에 함께 편성된 것에 비해, 이 사업의 경우 운영비 예산이 융자금이 편성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에 별도로 편성되었음.

그러나 이는 재원과 용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되는 회계와 기금의 예산을 혼용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고, 각 사업별 예산 편성의 적절성 검토 및 사업 성과의 점검·환류에도 곤란한 문제가 있으므로, 운영비 예산 또한 일반회계가 아닌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둘째,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의 융자금 예산을 기타보전금(310-04목) 및 민간경상보조(320-01목) 비목으로 편성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기타 민간융자금(450-04목) 비목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편성된 예술산업 금융지원(융자) 사업의 융자금 예산을 기타보전금(310-04목) 180억원 및 민간경상보조(320-01목) 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에 해당하는 비목은 기타 민간융자금(450-04목)이므로, 적정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단위: 백만원)

구분	세부내용	'26년	'27년	'28년	비고
제도 운영	관리위원회 운영	60 (5백만원×12개월)	60 (5백만원×12개월)	40 (△20) (5백만원×8개월)	운영규정안 구축 및 운영 프로세스 표준화에 따른 비용 감소
	상담 콜센터	120	120	120	10백만원×12개월
	기타 운영비	120	120	120	현장모니터링, 기업정보조회 서비스 이용료 등
	지역순회 설명회·컨설팅	40 (10백만원×4식)	20 (△20) (10백만원×2식)	20 (△20) (10백만원×2식)	사업인지도 확산으로 설명회 횟수 감소
	온·오프라인 교육자료제작	60 (30백만원×2식)	30 (△30) (15백만원×2식)	- (△60)	기존 교육 및 홍보 콘텐츠 재활용
	금융환경 및 성과조사	100 (50백만원×2식)	100 (50백만원×2식)	50 (△50) (50백만원×1식)	초기 금융환경 조사 분석, 이후 정기적 성과조사 수행
소 계		**500**	**450 (△50)**	**350 (△150)***	* '26년 대비 증감
전산 시스템	금융지원시스템 도입 ISP	138 (138백만원×1식)	미정	미정	'26년 ISP 결과에 따라 추후 확정
소 계		**138**	**미정**	**미정**	
합 계		**638**	**450+시스템구축비**	**350+시스템구축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세출예산 과목 구분]

세출과목	적용대상(내역)
기타보전금 (310-04목)	사회보장적수혜금, 장학금 및 학자금, 보상금, 실비 변상금 등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민간경상보조 (320-01목)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기타 민간융자금 (450-04목)	특정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타 민간분야에 대해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금

자료: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25.1.)」을 바탕으로 재작성

【일반회계】

<세 입>

3. 입장료수입: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유료화 방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입장료수입’ 은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입장료, 국립국악원 기획공연 입장료, 국립현대미술관 기획전시 입장료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억 5,400만원(55.7%) 증가한 82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9)]

[2026년도 입장료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입장료 수입	5,299	5,299	8,253	2,954	55.7

[입장료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 입장료: (’25년) 8억 7,800만원 → (’26년) 9억 100만원
○ 국립국악원 연악당, 연지당 입장료: (’25년) 5억 3,800만원 → (’26년) 5억 5,500만원
○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공연 입장료: (’25년) 16억 9,200만원 → (’26년) 17억 4,300만원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덕수궁, 서울관 입장료: (’25년) 7억 8,800만원 → (’26년) 40억 4,500만원
○ 기타 부정기적 입장료: (’25년) 14억 300만원 → (’26년) 10억 1,0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이 급증하면서 과밀화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바, 적정인원 수용을 통한 관람환경 개선 및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 제고 등을 위해 상설전시 유료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일반회계-입장료수입(64-641)(기획조정실)

최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급증함에 따라 2025년 8월말까지의 관람객이 445만 2,960명으로 이미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고, 현재 추세라면 연내 500만명을 넘어 600만명을 기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 국립중앙박물관 방문객 수]

(단위: 명)

구분	내국인	외국인	합계
2015년	2,995,802	133,553	3,129,355
2016년	3,212,143	183,849	3,395,992
2017년	3,365,028	111,578	3,476,606
2018년	3,178,236	126,217	3,304,453
2019년	3,215,697	138,464	3,354,161
2020년	756,028	17,593	773,621
2021년	1,248,566	13,996	1,262,562
2022년	3,341,102	70,279	3,411,381
2023년	4,008,208	172,077	4,180,285
2024년	3,590,700	198,085	3,788,785
2025년 8월말	4,298,458	154,502	4,452,960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이와 같이 급격히 증가한 관객으로 인해 안전사고 우려 및 관람환경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짐에 따라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음.[10)]

국립중앙박물관은 2009년 12월부터 서민 가계부담 경감과 문화소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상설전시는 무료로 운영중이고, 특별전시만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데, 무료화로 인해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박물관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국립중앙박물관과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정당한 가치 제고 필요성, 유료화를 통한 사립박물관·미술관과의 상생, 가격 지불에 따른 관람태도 개선 등의 이유로 상설전시를 유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은 최근 애니메이션(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과 박물관 문화상품(뮷즈)의 인기에 따른 관람객 급증으로, 편의시설 부족·대기시간 장기화·안전문제 발생 우려 등 과밀화로 인한 문제가 야기되면서 적정인원 수용을 통한 관람환경 개선을 위해 유료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국민들의

10) [광화문] 문화유산 관람료, 무료가 정답인가(머니투데이, '25.7.29.),
"주차 대기만 1시간"…북적이는 미술관·박물관, 입장료 유료화를 보는 엇갈린 시선(데일리안, '25.8.10.),
'케데헌' 열풍에 오픈런 부른 국립중앙박물관의 과제(동아일보, '25.9.2.),
"입장료 올릴까 말까" 이분법에 갇힌 국립중앙박물관 유료화 논쟁(더스쿠프, '25.9.16.),

보편적 문화향유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전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최근 3년간 국립중앙박물관의 연간 특별전시 입장료 수입이 평균 19억 6,700만원에 그쳤음에 비해[11] 2026년도 국립중앙박물관 운영을 위해 편성된 세출예산 규모는 총 2,372억원으로[12] 차이가 매우 큰 점, 그리고 주요국 국립박물관에서 입장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13]

---

11) 2022년 20억 8,000만원, 2023년 29억 5,700만원, 2024년 8억 6,300만원

12) 국립중앙박물관 지원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사업코드) (내역사업)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결산	본예산 (A)	추경			(B-A)/A
국립중앙박물관 운영(2831-300)	83,601	79,357	82,980	82,980	84,445	1,465	1.8
국립지방박물관 운영(2831-301)	48,166	43,697	49,180	49,180	56,029	6,849	13.9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지원(2831-312)	4,154	4,124	3,471	3,471	7,016	3,545	102.1
박물관 정보서비스 구축 및 운영(정보화) (2831-500)	2,280	2,308	2,052	2,052	1,963	△89	△4.3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2831-362)	8,996	2,445	6,309	6,309	23,326	17,017	269.7
국립청주박물관 디지털문화관 건립(2831-373)	2,461	952	5,712	5,712	6,487	775	13.6
국립대구박물관 복식문화관 건립 (2831-372)	1,557	556	273	273	1,966	1,693	620.1
국립전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2831-389)	-	-	562	562	998	436	77.6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2831-385)	-	636	-	-	3,500	3,500	순증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확장 건립(신규) (2831-388)	-	-	-	-	715	715	순증
국립공주박물관 어린이박물관 건립(신규) (2831-390)	-	-	-	-	255	255	순증
문화유산 과학센터 건립(종료)(2831-316)	11,931	10,260	7,091	7,091	-	△7,091	순감
국립광주박물관 도자문화관 건립(종료) (2831-359)	8,434	11,341	9,234	9,234	-	△9,234	순감
국립부여박물관 백제국보관 건립(종료) (2831-371)	8,906	5,514	9,605	9,605	-	△9,605	순감
국립나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종료) (2831-386)	3,941	3,554	8,752	8,752	-	△8,752	순감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4362-306)	2,159	2,045	2,172	2,172	2,231	59	2.7
국립박물관 인건비 (7102-103)	42,044	39,846	42,491	42,491	43,436	945	2.2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총액인건비 대상) (7118-213)	986	829	953	953	1,005	52	5.5
국립중앙박물관 기본경비 (7119-253)	3,511	3,186	3,815	3,815	3,797	△18	△0.5
합계	233,127	210,650	234,652	234,652	237,169	2,571	1.1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 유료화 전환 시 해외 사례와 같이 미성년자·장애인 등에게는 무료를 유지하거나, 관람객이 몰리는 날짜에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참고로 2024년 관람객 수를 기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 산출한 관람료 수준에 따른 입장료 수입 전망은 다음과 같음.

13) 주요국 국립박물관 입장료 부과 현황

순위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명	국가	구분	현지화	원화(원)	비고
1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	유료	€22	35,800	· 만 18세 미만, EU 18~25세 무료 · 미술사, 시각예술 등 교사 무료
2	바티칸 박물관	바티칸	유료	€20 (온라인 €25)	32,500 (40,700)	·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무료
3	영국박물관	영국	무료	-	-	
4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유료	$30	41,600	· 장애인, 노인 $22, 학생 $17 · 12세 이하 무료
5	테이트 모던	영국	무료	-	-	
6	상하이박물관 동관	중국	무료	-	-	
7	미국 내셔널갤러리	미국	무료	-	-	
8	국립중앙박물관	한국	무료	-	-	
9	오르세 미술관	프랑스	유료	€14 (온라인 €16)	22,800 (26,000)	· 만 18세 미만, EU 18~25세 무료 · 구직자, 장애인 및 동반자 무료 · 목요일 야간 €10(온라인 €12) · 매달 첫 번째 일요일 무료
10	국립인류학박물관	멕시코	유료	100MXN	7,500	· 13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60세 이상 성인 등(화~토 무료) · 국민, 영주권을 가진 시민(일 무료)
-	미국 현대미술관	미국	유료	$30	41,600	· 16세 미만 무료 · 65세 이상 성인, 장애인 $22 · 학생 $17
-	도쿄국립박물관	일본	유료	￥1,000	9,400	· 대학생 ￥500 · 고등학생 이하, 만 18세 미만, 만 70세 이상, 장애인과 보호자 무료
-	교토국립박물관	일본	유료	￥300	2,800	· 대학생 ￥150 · 고등학생 이하, 만 18세 미만, 만 70세 이상, 장애인과 보호자 무료
-	기메 박물관	프랑스	유료	€13	21,100	· 만 18세 미만, EU 18~25세 무료 · 장애인 및 동반자 무료 · 매월 첫 번째 일요일 무료
-	싱가폴 국립박물관	싱가폴	유료	(외) SG$24 (내) 무료	25,900	· 싱가폴 시민권자, 영주권자 무료 · 외국인 중 60세 이상, 학생 SG$18 (6세 이하 무료)
-	국립고궁박물관	대만	유료	(외) NT$350 (내) NT$150	16,000 6,800	· 만 18세 미만 무료(국적 불문) · 만 65세 이상 무료(내국인) · 장애인과 동반 1인 무료(국적 불문) · 내국인 학생 무료

주) 순위(1~10위)는 '24년 아트뉴스페이퍼 방문객 수에 따른 순위, 환율은 '25.9.15. 기준임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관람료 수준에 따른 연간 국립중앙박물관 입장료 수입 전망]

'24년 관람객 수	유료 관람객 비율*	관람료 수준		가격인상에 따른 관람객 감소 예상 시나리오	관람객 수 예상	입장료 수입 예상**
3,788,785명	60%	1안	2,000원 (무료관람 전 입장료)	10% 감소	3,409,907명	40억 9,200만원
				20% 감소	3,031,028명	36억 3,700만원
				30% 감소	2,652,150명	31억 8,300만원
				40% 감소	2,273,271명	27억 2,800만원
		2안	3,000원 (경복궁 수준)	10% 감소	3,409,907명	61억 3,800만원
				20% 감소	3,031,028명	54억 5,600만원
				30% 감소	2,652,150명	47억 7,400만원
				40% 감소	2,273,271명	40억 9,200만원
		3안	5,000원 (20년 간 물가 상승률(53.1%) 감안 인상 수준)	10% 감소	3,409,907명	102억 3,000만원
				20% 감소	3,031,028명	90억 9,300만원
				30% 감소	2,652,150명	79억 5,600만원
				40% 감소	2,273,271명	68억 2,000만원
		4안	8,000원 (유료 운영 사립박물관 평균 관람료 수준	10% 감소	3,409,907명	163억 6,800만원
				20% 감소	3,031,028명	145억 4,900만원
				30% 감소	2,652,150명	127억 3,000만원
				40% 감소	2,273,271명	109억 1,200만원

주 1) 유료화 이전인 '07년 유료 관람객(총 2,281,700명 중 1,395,677명, 61%) 비중 준용
2) 예상 관람객 수에 따른 추정치이며, 관람료 감면대상(단체관람객 등) 감안 시 이보다 감소 예상
자료: 국립중앙박물관

<세 출>

4.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 기존 펀드 추가 출자 및 신규 펀드 조성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민간 중심의 모펀드를 통해 투자대상의 제한 없이 시장 수요에 기반한 투자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00억원(333.3%) 증액된 650억원이 편성되었음.[14]

[2026년도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00	370,000	465,000	170,000	57.6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15,000	15,000	65,000	50,000	333.3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2024년부터 추진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추가 조성을 위해 한국성장금융에 출자하는 예산 150억원과 2026년에 신규로 추진할 계획인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500억원으로 구성됨.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150억원 출자 ○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500억원 출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4) 일반회계-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콘텐츠정책국)

나. 검토의견

콘텐츠 전략펀드 출자 사업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1~2차년도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3차년도 추가 출자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존 펀드들과 투자분야가 중첩되는 콘텐츠 미래전략펀드의 신규 조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직간접적인 비용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에서 2024년부터 추진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는 운용상 제한이 없는 민간중심 펀드를 조성하여 자펀드 규모 대형화 및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당초에는 다음과 같이 5년간 정부 출자 1,5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9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50억원)을 통해 약 1조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자펀드 결성이 지연되고 조성 목표는 축소되고 있음.

[당초 연도별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계획(안)(2024년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계
모펀드	정부	800	200	200	150	150	1,500
	문체부	450	150	150	100	100	950
	과기부	350	50	50	50	50	550
	민간 등	1,200	200	200	150	150	1,900
	소계	2,000	400	400	300	300	3,400
자펀드	모펀드	2,000	400	400	300	300	3,400
	민간자금	4,000	800	800	600	600	6,800
	합계	6,000	1,200	1,200	900	900	10,2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먼저 1차년도인 2024년 사업 추진 결과, 민간 참여기관들과의 출자 여부·규모 및 참여방식 등에 대한 협의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모펀드 조성이 지연되었고, 민간 출자 규모 또한 목표의 절반 수준만 모집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600억원 감소한 1,400억원 규모의 모펀드가 2025년 3월말에 조성되었으며, 이에 자펀드 조성 목표도 당초 6,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축소된 상황으로 2025년 8월말 기준 아직까지 2024년도의 자펀드 결성내역이 없음.

[변경된 연도별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조성계획(안)(2025년 9월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소계
모펀드	정부	800	200	200	150	150	1,500
	문체부	450	150	150(정부안)	100	100	950
	과기부	350	50	5(정부안)	50	50	550
	민간 등	600	-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소계	1,400	2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자펀드	모펀드 (및 지정출자자*)	1,600*	2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민간자금	2,400	200~3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합계	4,000	400~500	미정	미정	미정	미정

주) * 2024년 모펀드 결성 후 산업은행에서 지정출자자로 추가 200억원 참여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차년도인 2025년도 출자액 200억원(문화체육관광부 15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억원) 또한 민간 출자자 모집을 위한 모펀드 출자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2025년 8월말 기준 모펀드 결성 전으로,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펀드를 정부 출자금만으로 구성하고 자펀드 조성 목표 또한 당초 1,200억원에서 400~500억원 규모로 축소할 계획이며, 2026년도 이후의 조성 목표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이나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이 2025년 8월말 기준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2024년도 자펀드 결성이 아직 추진 중이고, 2025년도는 모펀드 결성 전인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3차년도 추가 조성을 위해 150억원을 편성하였음.

또한 이와 별도로 2026년 콘텐츠 분야에서 또 다른 신규 펀드인 '콘텐츠 미래전략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 500억원도 편성하였는데, 정부 출자금 500억원을 바탕으로 민간자금 등을 매칭하여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기업 규모에 따른 투자제한 없이 'AI 활용 콘텐츠', 'AI 콘텐츠 관련 기술 개발·활용(R&D)', '대작 IP 확보' 등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함.

[2026년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조성계획(안)]

(단위: 억원, 개)

구분	지원분야	출자금액 재정	출자비율	선정 운용사 수	조성 목표
1안 (문체부 단독출자)	대작 IP 확보 및 AI 콘텐츠	500	50%이내	1	1,000
	계	500			1,000

구분	지원분야	출자금액			출자비율	선정 운용사 수	조성 목표
		재정	비재정	소계			
2안 (민간·공공자금 추가출자)	블라인드 펀드	400	400	800	50%이내	2	1,600 (800x2)
	프로젝트 펀드	100	100	200	50%이내	-	400
	계	500	500	1,000			2,000

주) 2안 : 민간·공공자금의 매칭 출자를 통한 전체 펀드 조성 규모 확대 협의 중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나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자펀드의 경우 2024~2025년을 더해 4,4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3차년도 자펀드의 추가 조성이 필요한지, 아직까지 결성되지 못한 1~2차년도 자펀드의 결성 및 투자가 우선시됨에 따라 2026년도 추가 출자 예산이 대기자금이 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콘텐츠 미래전략펀드 또한 기존 모태펀드 문화계정,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등을 통해 AI 콘텐츠 및 대작 IP 확보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및 각 펀드의 투자여력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투자분야가 중첩되는 신규 펀드의 조성이 필요한지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직간접적인 비용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 기존 펀드의 결성 및 투자집행 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은 해외자본 유치를 통해 콘텐츠 정책금융의 지속적인 확대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해외 벤처캐피털(VC)이 자펀드 운용사로 참가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억원(50.0%) 증액된 600억원이 편성되었음.[15)]

[2026년도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K-콘텐츠 펀드 출자	295,000	370,000	465,000	170,000	57.6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40,000	40,000	60,000	20,000	50.0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600억원을 한국벤처투자에 출자하여 총 1,500억원 규모의 역외펀드를 조성(정부출자비율 40%)하고, 정부 출자액의 최소 1배수 이상을 주목적 투자에 사용할 계획임.

[2026년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 개요]

○ (조성 방향) 해외 VC가 자펀드 운용사로 참가할 수 있는 펀드 조성, 해외자본 마중물 역할 수행
○ (조성계획) 600억원 출자, 총 1,500억원 규모 역외펀드 조성(정부출자비율 40%)
- (자펀드 운용사) ①해외 운용사 및 ②해외-국내 공동 운용사(Co-GP) 또는 ③역외펀드를 운용 중인 국내 운용사
- (기타 출자조건) 외국 금융기관 등 해외 출자자 참여 필수
○ (주목적 투자) K-콘텐츠 기업에 지분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성 및 유망성에 기초하여 투자
- (투자비율) 정부 출자액의 최소 1배수 이상을 주목적 투자에 사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5) 일반회계-K-콘텐츠 펀드 출자(1231-322)(콘텐츠정책국)

나. 검토의견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은 2025년 출자액의 연내 자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존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자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 부진으로 인해 동 펀드들의 투자여력 또한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신규 재정투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국내 문화·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외자유치를 위해 2025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것으로, 2025년 예산에 총 1,00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출자금 40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9월말 기준 아직까지 자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 중으로 출자한 자금이 민간에 공급되지 못하고 유보되어 있음.

[2025년 글로벌 리그 펀드 출자 사업 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결성규모			출자일 (문체부→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 모집공고(기간)	자펀드 운용사 선정일	자펀드 결성시한
정부 출자금	민간	결성총액 (목표액)				
400	600	1,000	'25.7.31.	'25.7.31. ~ 8.21.	'25.10. (예정)	선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 2025년 9월말 기준
자료: 한국벤처투자

현재 계획대로 자펀드 운용사가 2025년 10월 선정되더라도 자펀드 결성시한을 고려하면 2025년 연내 자펀드 결성 및 투자 개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와 마찬가지로 결성이 지연된 1차년도 자펀드의 결성 및 투자가 우선시됨에 따라 2026년도 추가 출자 예산이 대기자금이 되어 비효율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16)]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에 대한 재정투입이 계속되었음에도 자펀드 결성 및 투자집행 부진으로 인해 동 펀드들의 투자여력 또한 상당히 존재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펀드의 투자집행 상황을 점검하여 투자여력이 소진된 이후 추가적인 재정 투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16) 2024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의 2024년도 자펀드가 2025년 8월말 기준 아직 결성 전으로 지연됨에 따라, 2025년도 출자액의 경우 현재 모펀드도 결성되지 못하고 있음.

6.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신규): 국제역량 제고 및 K-컬처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체계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은 해외 현지 K-컬처 확산 거점에서의 문화외교형 활동을 지원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국제경험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7)]

[2026년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제문화정책지원	20,987	22,987	20,350	△637	△3.0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	-	7,000	7,000	순증

이 사업은 만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율기획형 해외 프로젝트 및 해외 현지 일경험을 통해 청년의 국제역량 계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70억원 = 자율기획형 900명(52억) + 일경험형 100명(11억) + 운영비(7억)
- (자율기획형) 85개 프로젝트(1개 프로젝트(10명)당 5,800만원) + 태권도봉사단 50명(1명당 540만원)
- (일경험형) 문화원·콘진원·관광공사·세종학당 일경험 100명(1명당 1,100만원)
* 기관수요 및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유형별 인원 변동 가능
* 운영비(7억): 모집·교육·홍보(1.8억), 인건비(2억), 성과공유회(2억), 모니터링, 기타 진행비(1.2억)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17) 일반회계-국제문화정책지원(3132-307)(국제문화정책관)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 활동유형별 추진계획]

구분	자율기획형	일경험형
목적	**주도적 해외 프로젝트로 청년 성장, K-컬처 확산**	**현지 일경험 통한 청년 국제 역량계발, 전문가 확보**
대상	**국제경험 희망 청년** * (아마추어) 자율 프로젝트 기획 가능자, (전문가) 전공자, 현장 예술인	**국제문화교류 관심 청년** (기획·행정가, 예체능인 등)
방식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공모 → 위탁기관 선정 (지역문화재단·대학 등)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직접사업 (문체부에서 기관 수요조사 후 인원 할당)
기간	**최대 2개월** (국내 준비기간 1개월+해외 체류기간 2주 이내) * 기존 태권도봉사단은 최대 1개월	**최대 4개월** (국내 준비기간 1개월+해외 체류기간 3개월) * 기존 세종학당 문화 인턴은 최대 3개월
활동	**기관 협업 공익적 현지 문화 프로젝트 수행** * 프로젝트 관리할 현지 협업기관 필수(지자체, 축제, 예술기관 등) * 공연, 전시, 축제, 포럼 등 공익적 문화 활동 수행 (프로젝트 예시) ▲(소재) 사물놀이, 국악, K-POP 댄스, 한식, 뷰티, 영화/드라마 등 활용 ▲(장소) 문화원 소재국의 대표 축제, 관광명소 (허가 필요) 등 연계(문화원, 현지 축제 협업) ▲(예시) 현지 MOU 대학(한국학과 등) 협업 한국문화 페스티벌 개최 등	**문화 유관기관 현지 사업 및 행정 보조** * 문화 유관기관: 재외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세종학당 등 * 업무 범위에 '자율기획형 파견자 현지 관리 업무'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자율기획형 중 '재단협업형' 및 '대학협업형' 사업이 단발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국제역량 강화와 K-컬처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준비·현지활동 수행 및 관리·사후 환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참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 문화 역량과 청년의 잠재력을 연결하여 K-컬처의 확산 및 청년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였음.

2024년 기준 쉬었음 청년 및 장기실업 청년이 증가하고 있어 청년고용 문제를 타개할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18] 한류의 인기와 함께 이미 국제화된 청년세대가

18) 청년인구 중 쉬었음 비중 역대 최고치(5.2%, 42.1만명, '24년), 장기실업자 절반 이상(52.5%)이 30대 이하

K-컬처 확산의 주역으로 활약함으로써 국제감각과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고립 청년의 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임.

이 사업은 자율기획형(900명) 및 일경험형(100명) 2가지 유형으로 추진되는데, 자율기획형은 다시 재단협업형(700명), 대학협업형(150명) 및 기존 태권도봉사단(50명)[19]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됨.

이 중에서 '재단협업형' 및 '대학협업형'은 공모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지역문화재단 및 대학을 선정하여, 청년이 주도하는 공익적 현지 문화 프로젝트 수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청년 K-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자율기획형) 중 '재단협업형' 및 '대학협업형' 추진계획]

구분	재단협업형	대학협업형
인원	700명	150명
선발/관리	공모를 통해 7개 내외 지역문화재단 선정 (7개 재단×100명)	공모를 통해 3개 내외 대학 선정 (3개 대학×50명)
지원	재단별 10개 내외 팀 프로젝트 활동비 지원 (10개 프로젝트×10명)	대학별 5개 내외 팀 프로젝트 활동비 지원 (5개 프로젝트×10명)
팀 구성	▲ 1팀 10명 내외, ▲ 시니어급 리더 1명 포함(문화기획자 등), ▲ '쉬었음' 청년 30% 이상 포함 * 기회균등/형평성(고졸, 저소득, 자립 준비 청년 등) 요소 가점 부여	▲ 1팀 10명 내외, ▲ 시니어급 리더 1명 포함(교수, 졸업생 등), ▲ '쉬었음' 청년 30% 이상 포함 * 기회균등/형평성(고졸, 저소득, 자립 준비 청년 등) 요소 가점 부여
활동 내용	공연, 전시, 축제, 포럼 등 공익적 문화 활동 * 프로젝트를 관리할 현지 협업기관 필수(지자체, 자매대학, 축제, 예술기관 등)	
기간	최대 2개월 (해외 체류 기간 2주 이내)	
지원액	1개 프로젝트당 평균 5,800만원 (교육 등 운영비 750만원 포함)	

주) 공모 상황에 따라 인원수 및 세부내용 조정 가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정된 재단 및 대학은 시니어급 리더 1명 및 쉬었음 청년 30% 이상을 포함하여 총 10명 내외로 이루어진 팀을 구성한 후, 청년들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다듬어 현지에서 공연, 전시, 축제, 포럼 등 공익적 문화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며, 활동기간은 최대 2개월(해외 체류기간 2주 이내)로 계획하고 있음.

팀별로 시니어급 리더를 포함하여 현장 활동의 질적 관리 및 현지 대응력을 제고하면서, 형평성 가점 등을 통해 현실적인 제약으로 국제경험을 희망함에도 해외에 나가기

19) 태권도 진흥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선발된 청년은 최대 1개월 동안 태권도 교실 운영, 훈련 지원, 지역 순회공연 등의 활동을 수행함.

힘든 청년 일반의 참여를 권장하여 청년의 국제감각을 기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임.

다만, 이와 같은 공익적 현지 문화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직접 해외 현장에서 K-컬처를 기획·운영하며 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단기 체험형 활동 위주로 운영될 경우 지속가능성과 실질적 성과 창출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청년의 현지 문화·관습에 대한 이해 및 언어능력이 부족할 경우 해당 활동으로 인해 오히려 한국의 국가 이미지·K-컬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들이 팀을 이루어 직접 기획한 프로젝트를 국내에서 충분한 사전 교육과 운영 설계를 통해 보완하여[20] 현지에서 최종 작업물을 선보이고, 해외 활동 이후 성과공유회 등 후속 관리를 진행할 계획으로, 일회성 해외 체험이나 여행이 아닌 공공 문화 활동이라고 설명함.

또한 팀 단위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경험이 풍부한 리더를 팀별로 포함하거나, 국내 사전교육 시 전문 문화기획자의 멘토링 등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임.

따라서 재단협업형 및 대학협업형 사업이 단발적 체험에 그치지 않고 청년의 국제역량 강화와 K-컬처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및 준비·현지 활동 수행 및 관리·사후 환류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사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참여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 국내 교육 기간 중 현지 문화 등 문화적 감수성 함양 교육을 포함하고, 자유방임형 운영이 아닌 위탁기관(재단·대학)+현지 협업기관+참여자 간 체계적 협력 구조를 통해 체계 내에서 활동하도록 설계하여,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성숙한 청년문화 프런티어로서 인재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 설명하고 있음.

7.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신규): 소득·재산 요건 반영 등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청년 창작예술가의 생계노동 부담을 감경하고 창작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	-	18,000	18,000	순증

이 사업은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가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기관·단체와 연계하여 1인당 연 900만원(월 100만원×9개월)을 지방비와 매칭(보조율: 수도권 60%, 비수도권 70%)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보조사업자, 지역별 광역문화재단을 2차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되며, 세부적인 전달체계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임.

2026년 예산안에는 3,000명의 청년 창작자를 지원하기 위해 180억원이 편성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2027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후속사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 평가 후 사업 확대 시 유사 사업과 통합·연계하여 사업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청년 창작예술가 지원: 175억 5,000만원 - 1인당 900만원(월 100만원×9개월) × 3,000명 × 국비 평균 65% ○ 사업운영비(공모, 효과성 연구, 모니터링, 성과공유 등): 4억 5,0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1) 일반회계-K-Art 청년 창작자 지원(1633-303)(예술정책관)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예술활동증명자(신진예술활동증명 포함) 중 청년 예술 창작활동 종사자(만 39세 이하, 전체의 약 47%) 및 신진 예술가 -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순수예술 청년 창작자(클래식음악・오페라・국악 작곡・지휘・연출가, 희곡 극작・연출가, 안무가, 문학작가, 미술작가 등) * 他 정부 지원사업(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학 상주작가 지원・아르코청년예술가 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예술활동준비금, 문화예술교육진흥원-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술경영지원센터-미술 전속작가 지원 등)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내역)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기관・단체와 연계하여 인당 연 900만원 지방비 매칭 지원(국비: 수도권 60%, 지방 70%), 창작물 산출 - 창작물(창작곡, 희곡, 무용 등) 공연・전시・출판 시 문예위 등 실연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전달체계) 문체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광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기반시설 등 → 청년 창작예술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은 생계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 창작 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전념하게 하여 창작 역량을 강화하려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여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추가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지원대상자 선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원기간 동안의 창작활동을 실질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지원 이후의 창작활동 지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실연자 또는 기성 예술가, 예술단체 지원에 집중된 기존 사업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청년 창작 예술가가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신작 창작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편성하였음.

만 39세 이하 청년 창작자 개인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기반시설(문예회관・미술관 등) 및 예술단체(극단・오케스트라・무용단 등)와 연계하여 지원자를 공모・선정한 후 1인당 연 900만원(월 100만원×9개월)의 창작활동 사례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은 필수 자격요건은 아니나 선정 시 고려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고,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지원 가능 횟수를 한정하지는 않을 계획(즉, 2년 연속 지원 가능)이며,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안)으로 ‘월별 창작활동 및 중간보고, 신작 창작물 제출’ 등을 들고 있음.

[지원대상자(청년 창작자)의 의무(준수) 사항(안)]

구분	의무(준수)사항
매월	지역 내 문화시설・예술단체 연계(공연장르 등) 창작활동 진행
반기별	활동 중간보고서 제출
사업종료 시	지원기간 내의 신작 창작 결과물 제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청년 창작 예술가의 '생계부담 완화'를 통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사업의 취지를 고려하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반영하여 한정된 재원을 생계 여건이 어려운 청년 창작자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지원대상자의 공모・선정과 관련하여, 각 지역별 광역문화재단에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22]을 통해 자체 공모하여 제출된 활동계획서 서류심사를 토대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지역별・장르별 편차가 발생함에 따라 탈락한 지원자의 반발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이 사업이 전국에 있는 클래식음악・오페라・국악 작곡・지휘・연출가, 희곡 극작・연출가, 안무가, 문학작가, 미술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창작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점 및 시범사업이라 하더라도 1인당 연 900만원의 수혜 여부가 달려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모 심사 시 주관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등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국 및 각 지역의 장르별 인원 현황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서는 전국 공통의 선발 기준을 제시하고, 지역 광역문화재단 등 중간 매개자가 1차 심사・추천을 하되, 최종 심사・선정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 심사위원단 구성 시 지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외부 전문가를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면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방안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지원대상자의 의무사항으로 '월별 창작활동 및 중간보고, 신작 창작물 제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창작활동 수행 여부를 관리・검증하기가 곤란함에 따라 실질적인 창작활동 없이 지원금만 수령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업 효과와 관련하여서도 9개월 동안의 지원으로 청년 창작자의 창작 역량이 강화되고 창작활동의 지속성이 담보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시된 의무사항은 예시 성격으로, 장르별 특성과 창작

22)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관리・운영하는 예술가 및 예술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 행정업무 시스템

분야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창작 활성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지역 내 거점기관과의 협업 및 발표 기회 제공을 통해 경험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수 창작물은 타 지원 사업과 연계한 후속 지원(재공연, 네트워킹, 브랜딩 등) 등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의 지속성 및 사업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함.

다만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는 못한 상황이므로, 이 사업의 취지가 단순한 생계부담 경감이 아닌 창작 환경 조성을 통한 창작 역량 강화인 점을 명확히 하여, 청년 창작자의 실제 창작활동을 객관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지원 이후의 창작활동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체계를 구체화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구축 사업(신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한 예산안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구축’** 사업은 한국 대중문화예술 전 장르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이자 복합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3)]

[2026년도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42,460	42,460	77,958	35,498	83.6
대중문화예술진흥	3,559	3,559	19,382	15,823	444.6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구축	-	-	15,500	15,500	순증

이 사업은 K-콘텐츠의 국제적 문화 위상에 부합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및 영상박물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리모델링: 100억원
- 약 2,000평 규모, 평단 단가 5백만원 예상
  * 지자체 소유 토지 건물 활용 예정
  * 명예의 전당 및 영상박물관 통합 조성 규모 총 5,000평, 평단 단가 5백만원 예상

○ 전시 등 콘텐츠 구입: 50억원
- 국립한글박물관 ’25년 운영 예산(연면적 약 3,566평, 143억원) 기준으로 콘텐츠 구입 등 운영비 산출

○ 연구용역비: 5억원
- 명예의 전당 및 영상박물관 통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1식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3) 일반회계-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1232-301)(콘텐츠정책국)

나. 검토의견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구축 사업은 아직 기본구상 완료 전으로 사업 규모·방식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예산안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 수행주체 및 건립 장소 또한 미정으로 사업계획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2026년 연내 리모델링 및 전시 콘텐츠 구입을 추진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현재 명예의 전당과 영상박물관 각각의 건립 장소·규모·운영체계 등과 관련한 기본구상 연구를 진행하는 중으로,[24] 이를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에 '명예의 전당 및 영상박물관 통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이후 2026년 하반기 리모델링 및 전시 콘텐츠 구입을 추진할 계획임.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구축 사업 추진 일정(안)]

○ '26년 상반기: 명예의 전당 및 영상박물관 통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 '26년 하반기~'27년: 리모델링 및 전시 콘텐츠 구입
○ '28년: 명예의 전당 및 영상박물관 통합 운영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현재 기본구상 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으로, 사업 규모·방식 등이 구체화되지 않아 정부가 산출한 리모델링(100억원) 및 전시 등 콘텐츠 구입(50억원) 예산안 규모가 적절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어려움.

따라서 2025년 수행 중인 기본구상 연구와 2026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인 통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사업의 타당성,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지자체 소유 토지 건물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업 수행주체 및 건립 장소 또한 미정으로 물색 중인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2026년 명예의 전당 및 영상박물관 통합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5억원)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이 추진될 토지 및 건물이 지자체 대상 공모 등을 통해 선정·확보되어야 하고, 이후 지자체와의 협의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계획이 불확실한

24) 현재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기본구상 연구' 및 '영상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연구'를 추진하는 중으로, 2025년 연내 마무리할 계획임.

부분이 많아 2026년 연내 리모델링 및 전시 콘텐츠 구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9.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신규): 공제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은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예술인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5)]

[2026년도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술인 창작안정망 구축	82,770	82,770	88,249	5,479	6.6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	-	5,000	5,000	순증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을 위한 정부 출연금: 50억원
- 이자 수익금을 공제상품 운영 및 지급 예비비*, 홍보・관리비 등으로 활용
* 보험형 공제사업 초기에 손해율이 100% 초과할 경우 대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 개요]

○ 사업대상: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단체 소속 예술인, 프리랜서 예술인, 문화예술시설・기관・단체 사업자 등

○ 수행주체 / 방식: 한국예술인복지재단(지정) / 출연

○ 복지금고 공제사업(안)

구 분	공 제 사 업 (안)	구 분	공 제 사 업 (안)
프리랜서 예술인	퇴직공제	단체소속 예술인	퇴직연금공제
저소득층 예술인	포괄적 재해보상보장	문화예술시설	배상책임보험, 화재시설보험 등
전체 예술인	유니버설 저축・공제	예술인 사업자	금융재무 위험교육, 사업자금 대출 보증
	적립형 저축공제		

25) 일반회계-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1633-302)(예술정책관)

○ 추진일정(안)
- ('25.12.~'26.1.) '26년 정부출연금 예산 배정, 공제사업 운영계획 수립, 공제사업 전담조직 구성
- ('26.2.~6.) 예술인 대상 공제상품 연구·개발
- ('26.7.~8.) 보험사 협의, 계약 추진
- ('26.9.~) 신규 시범 공제상품 등 연구·개발
- ('26.11.) 예술인 시범 공제상품 출시 사전 홍보
- ('26.12.) 예술인 시범 공제상품 출시 및 '27년 공제사업 운영방안 검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예술인 복지금고 조성 사업은 공제사업에 대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전문성 부족, 법적 근거 미비 및 예술인의 불안정한 소득 등에 따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2026년에는 공제상품의 연구·개발 용역 등을 통해 예술인의 수요 및 재단의 운영 역량을 확인하는 한편, 「예술인 복지법」 개정 등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본격적인 공제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공제사업이란 조합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 등을 자본으로 하여 조합원에게 공제사고 발생 시 공제금을 교부하는 사업으로,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신규사업으로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여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공제상품 및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이를 통해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의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공제사업은 사실상 보험과 유사한 금융업으로, 보험·금융 전문기관이 아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수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할 우려가 있음.

둘째, 「예술인 복지법」을 개정하여 (가칭)예술인공제회 등의 목적, 회원의 자격 및 권리·의무, 조직, 사업, 예산 및 결산, 준비금의 적립, 이익금의 처리, 회계와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공제사업이 원활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입자 수, 자산규모 등이 일정 규모 확보되어야 하는데, 예술인의 경우 소득이 불안정하고 납입 여력이 부족함에 따라 가입률이 저조하고 납부액도 적을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적립형 저축·공제 참여

저조 가능성), 공제사업이 지속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초기에는 보험사 위탁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26~'28년 공제사업 시범운영 후 '2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제사업을 운영할 계획으로, 공제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식 등은 위탁 보험사 협의 등 보험상품 개발 과정에서 결정할 예정이며, 공제규정 제정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또한 예술인 공제사업 운영과 그에 따른 공제상품의 「보험업법」 적용 예외 규정 등 재단의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출연금의 운용 수익금, 공제상품 가입자의 부담금, 법인·기업 또는 개인 등의 기부금 및 공제사업 운영 수익금 등으로 예술인 복지금고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임.

그리고 공제사업 대상인원은 최소 16만명에서 최대 33만명,[26] 전국에 있는 문화기반시설은 약 3,400여 개소로 추산하는바,[27] 예술인이 매월 납입액을 조절할 수 있는 유니버설 저축공제 또는 일반형 저축공제 상품, 문화예술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재·안전·보증공제 등을 운영하게 되면 예술인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가입인원 및 자체 부담금 등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복지금고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그러나 아직까지 공제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어 예술인의 구체적인 수요가 확인되지 않은 점 및 가입대상이 프리랜서·저소득·단체소속 예술인 및 문화예술기관·단체 등으로 다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보장내용·공제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식 등 보험상품의 연구·개발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사업 추진 전 「예술인 복지법」 개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2026년에는 공제상품의 연구·개발 용역 등을 통해 공제사업에 대한 예술인의 수요를 검증하고 재단의 공제사업 운영 역량을 확보하는 한편, 「예술인 복지법」 개정으로 법적·재정적 기반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본격적인 공제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6)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159,532명('25.9.11. 유효자 기준), '24년 예술인 실태조사 시 예술인 수: 약 33만명

27) 문화기반시설 2,000여 개소(도서관 제외, '24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시·도별 공연장 1,400여 개소('24년 전국 지자체 등록현황 취합)

10.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사업추진 지연 사업의 면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개 요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전통종교문화 체험, 종교 유적지의 역사적 보존, 종교 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2억 600만원(△15.9%) 감액된 327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28)]

[2026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종교문화시설건립	38,914	38,914	32,708	△6,206	△15.9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등 총 22개 종교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30%) 예산 238억 8,800만원 및 민간자본보조(정액) 예산 88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최근 예산의 일부가 재해복구비 예산으로 사용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어 사업비의 상당액이 당초 계획한 사업으로 교부되지 못하고 있고,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률 또한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계속 낮아지고 있으므로, 향후 연례적 집행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최근 5년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37억 5,000만원, 2024년 27억 1,000만원, 2025년에는 8월말 기준 54억 7,100만원이 재해복구비 예산으로 이용 및 내역변경되는 한편,[29)] 2021년 14억 4,400만원, 2022년 21억 9,200만원, 2023년 28억 3,600만원, 2024년 10억원이 불용되는 등 매년 사업비의 상당액이 당초 계획한 사업으로 교부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28) 일반회계-종교문화시설건립(1131-302)(종무실)

29) 2023년~2025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이·전용 등 세부내역

[최근 5년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예산		이·전용 등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1	12,411	12,411	-	10,967	1,444	10,967	10,619	21,586	14,866	6,667	53	68.9
2022	9,160	9,160	-	6,968	2,192	6,968	6,667	13,635	8,432	5,040	163	61.8
2023	26,026	26,026	△3,750	19,440	2,836	19,440	5,040	24,480	12,853	11,389	238	52.5
2024	33,487	33,487	△2,710	29,777	1,000	29,777	11,389	41,166	20,084	20,793	289	48.8
2025	38.914	38,914	△5,471	20,066	-	20,066	20,793	40,859	7,780	-	-	19.0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단계의 실집행률도 사업계획변경,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2021년 68.9%, 2022년 61.8%, 2023년 52.2%, 2024년 48.8%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날짜)	~에서			~으로		
		세부사업	비목	금액	세부사업	비목	금액
2023	이용 ('23.9.26.)	종교문화시설건립 (1131-302)	330-03	1,326	재해복구비(관광) (4131-300)	330-03	1,326
	내역변경 ('23.9.26.)			2,424	재해복구비(종교) (1131-304)	330-03	2,424
	합계			3,750			3,750
2024	이용 ('24.9.10.)	종교문화시설건립 (1131-302)	330-03	293	재해복구비(관광) (4131-300)	330-03	293
	내역변경 ('24.9.10.)			253	재해복구비(종교) (1131-304)	330-03	253
	이용 ('24.12.23.)			2,164	재해복구비(체육) (5132-302)	330-03	2,164
	합계			2,710			2,710
2025.8.	이용 ('25.6.12.)	종교문화시설건립 (1131-302)	330-03	1,773	재해복구비(관광) (4131-300)	330-03	1,773
	이용 ('25.6.12.)			492	재해복구비(체육) (5132-302)	330-03	492
	내역변경 ('25.6.12.)			40	재해복구비(종교) (1131-304)	330-03	40
	내역변경 ('25.7.30.)			2,827	재해복구비(종교) (1131-304)	330-03	2,827
	이용 ('25.8.29.)			339	재해복구비(관광) (4131-300)	330-03	339
	합계			5,471			5,471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은 실집행 부진은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8월말 현재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률이 10% 미만인 내역사업이 14개에 달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계획변경 및 사전행정절차 이행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2026년도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예산안 내역사업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안	비고 (집행부진 사유 등)
	본예산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8월말 실집행액 (D)	8월말 실집행률 (D/C)		
10.27법난기념관 건립	3,000	2,400	-	2,400	192	8.0	8,820	기본계획 변경 등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부지 이동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건립	1,600	1,120	800	1,920	180	9.4	546	설계 지연 및 BF 인증, 계약 사전심사 단계 순연
나바위성당 성지문화체험관	1,410	987	1,410	2,397	55	2.3	600	문화재 현상변경 절차 지연, 설계 공모 및 수행기간 소요
용인 전통복합문화 체험관 건립	1,475	1,032	925	1,957	-	-	425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
양평 기독교문화 체험관	1,600	-	100	100	-	-	700	건축허가 등 사전행절절차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
포항 보경사 전통문화체험관	1,026	718	76	794	-	-	1,026	인허가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청주 능인정사 MZ 복합문화센터	213	-	24	24	24	100.0	213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
평창 월정세계청소년 명상센터	2,610	1,827	105	1,932	74	3.8	2,610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
구미 도리사 시민치유센터	300	210	584	794	-	-	600	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담양 보리암 명상센터	1,515	-	-	-	-	-	3,900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
울산 석남사 명상센터	507	355	-	355	272	76.6	507	-
청도 용천사 종교문화체험관 건립	463	324	20	344	-	-	117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
남양주 봉선사 명상체험센터 건립	2,147	1,503	-	1,503	711	47.3	2,658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
구미 기독교 역사문화관 건립	855	600	45	645	-	-	900	지방재정투자심사 지연
원주 구룡사 명상센터 건립	1,230	861	39	900	-	-	1,855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
의정부 성불사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360	-	-	-	-	-	840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5년						2026년 예산안	비고 (집행부진 사유 등)
	본예산 (A)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8월말 실집행액 (D)	8월말 실집행률 (D/C)		
속초 신흥사 설악명상문화센터 건립	500	350	-	-	-	-	3,244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지연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	-	1,721	1,721	1,721	100.0	1,280	-
창원 가야 불교문화교육관 건립	-	-	-	-	-	-	90	'23~'24년 내역사업
서대문구 옥천암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	-	-	-	-	-	825	'26년 신규 내역사업
포항 죽림사 선명상센터 건립	-	-	-	-	-	-	330	'26년 신규 내역사업
해미국제성지 교류센터 건립	-	-	-	-	-	-	622	'26년 신규 내역사업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현재 계획과 달리 착공 또는 설계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향후 연례적 집행부진이 지속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11.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남부권(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관광자원을 관광 명소로 만드는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26억 6,400만원(79.5%) 증액된 1,414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30)]

[2026년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광역권 관광개발	110,403	110,403	179,468	69,065	62.6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78,824	78,824	141,488	62,664	79.5

이 사업은 2022년 국정과제로 추진되어 2023년 예산에 ‘땅끝수상복합공연장조성’ 사업 등 5개 사업이 최초 반영되면서 시작되었고, 2023년 7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음.

이 계획에 따르면, 부산·광주·울산·전남 및 경남(5개 시도 40개 시군)을 대상으로 2033년까지 총 3조 64억원(국비 1조 3,265억원,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자 2,776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임.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광역권 관광개발(4153-317)(관광산업정책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관광자원 및 K-컬처를 활용하여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및 지역관광 활성화 ○ (사업기간) '24년 ~ '33년 ○ (총사업비) 3조 64억원(국비 1조 3,265억원, 지방비 1조 4,023억원, 민자 2,776억원) ○ (사업규모) 142개(개발 109개, 진흥 33개) ○ (지원조건/수행) 지자체보조(국비 50%) / 전남, 광주, 부산, 울산, 경남(40개 시군)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이 계속 저조한 가운데 예산이 크게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2025년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향후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관광인프라 및 관광거점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에 수반되는 각종 행정절차(지방투・융자심사, 각종 인・허가, 부지 확보, 건축 심의 등)의 사전 이행이 필요함.

그런데 2023년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예산 55억원이 전액 교부되지 않고 불용된 것에 이어, 2024년에는 본예산 277억 7,800만원 중 214억 1,400만원만 지자체에 교부되어 그 중 실집행액이 81억 8,100만원(실집행률 38.2%)에 그쳤으며, 2025년에는 8월말 기준 본예산 788억 2,400만원 중 610억 3,2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지자체의 실집행액은 168억 5,700만원(실집행률 22.7%)으로 집행이 매우 부진한 상황임.

[연도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지자체)						
	본예산	집행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3년	5,500	-	5,500	-	-	-	-	-	-	-
2024년	27,778	21,414	6,364	21,414	-	21,414	8,181	13,233	-	38.2
2025년	78,824	61,032	-	61,032	13,233	74,265	16,857	-	-	22.7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는 2025년 상당한 수의 사업이 사전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을 626억 6,400만원(79.5%) 증액 편성하였음.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전행정절차 등이 지연되어 2025년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 집행관리를 강화하는 등 향후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문화예술진흥기금】

<지 출>

12.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개선책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청년의 문화예술 분야 관람료를 지원하여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K-예술·콘텐츠에 대한 미래 관객 확보 및 국내시장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191억 4,600만원(112.6%) 증액된 361억 4,600만원이 편성되었음.[31]

[2026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문화예술향유지원	280,581	290,581	329,638	49,057	17.5
청년문화예술패스	17,000	17,000	36,146	19,146	112.6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현재 2년간('24~'25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중으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19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 매칭 지방비 최대 5만원)을 예술 분야 공연·전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32]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본사업으로 추진되는 2026년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19~20세 성년초기 청년에게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국비 10~15만원(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매칭 지방비 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청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이용 분야에 영화를 추가할 예정임.[33]

---

31)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향유지원(1765-301)(문화정책관)

32) 당초 계획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국악, 전시 등 순수예술 분야로 제한되었으나, 이용률이 저조하자 2024년 11월 22일부터 이용 분야에 대중음악 장르(콘서트, 페스티벌)을 추가하였음.

33) 문화체육관광부는 청년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청년의 볼거리 확충을 위해 이용 분야에 영화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지원금: 348억 8,300만원 - 수도권 142억 3,500만원(10만원×142,350명), 비수도권 206억 4,800만원(15만원×137,650명) ○ 사업운영비: 12억 6,3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2026년 연도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주요내용 비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지원대상	ㅇ **19세 청년 16만명**		ㅇ **19~20세 청년 28만명**
지원규모	ㅇ **1인당 10만원** ※ 지방비 정액 5만원 임의 매칭		ㅇ **1인당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 지방비 정액 5만원 의무 매칭
예산(안)	○ 170억원	○ 170억원	○ 361억 4,600만원
발급기간 및 횟수	○ 2024.03.28.~11.30.	○ 1회차 : 2025.03.06.~05.31. 2회차 : 2025.07.07.~11.30.	○ 2회 분할 발급(발급기간 미정)
선정방식	○ 선착순	○ 선착순	○ 선착순
미사용 지원금 회수	○ 미적용	○ 1회차 발급기간 발급 후 6.30.까지 사용내역이 전혀 없는 사용자에 한해 지원금 회수 조치하고, 회수한 인원만큼 재발급	○ 2025년과 동일
예매처 변경 여부	○ 불가능	○ 발급회차별 소정 기간 동안 패스 전액 미사용자에 한해 본인 희망시 1회만 협력예매처 변경 기회 부여	○ 상시 변경 가능
이용범위	○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전시 ※ '24.11.22.부터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추가		○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발레, 무용, 합창, 국악, 전시, **음악 콘서트·페스티벌** ※ **영화** 추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검토의견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2026년 이용분야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본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지금까지의 집행실적을 보면 당초 목적인 청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형성 및 소비 유도를 달성하기 위한 집행률 제고 등 개선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정책적 환류를 추진하고,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티켓 양도나 현금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 사업은 성년초기 청년에게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감수성·창의성을 배양하고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2025년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협력예매처 공모, 지자체 대상 설명회, 관련 고시 제정 등 사업 준비절차를 거쳐 2024년 3월 28일부터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을 시작하였는데, 이용률이 저조하자 사용기간을 2025년 2월말까지로 연장하면서 2024년 11월 22일부터 이용분야에 대중음악 장르(콘서트, 페스티벌)를 추가하였으나, 그럼에도 2024년 사업의 최종 실적이 신청률 79.8%, 이용률 55.4%, 집행률 34.1%에 그쳐 부진하였음.

[2024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최종 이용 실적]

(단위: 명, 백만원)

대상인원 (A)	신청인원 (B)	신청률 (B/A)	이용인원 (C)	이용률 (C/B)	바우처 예산 (D)	이용금액 (E)	집행률 (E/D)
160,000	127,706	79.8%	70,812	55.4%	16,000	5,455	34.1%

주) 2025년 2월말 기준, 이용금액은 국비 집행액(매칭 지방비 제외)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한편, 2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인 2025년에도 8월말 기준 신청인원이 10만 7,286명으로 지원대상 16만명의 67.1%에 불과하고, 이용금액은 62억 5,600만원으로 바우처 예산 160억원의 39.1%에 그치고 있어, 여전히 집행이 부진한 측면이 있음.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추진 현황]

(단위: 명, 백만원)

대상인원 (A)	신청인원 (B)	신청률 (B/A)	이용인원 (C)	이용률 (C/B)	바우처 예산 (D)	이용금액 (E)	집행률 (E/D)
160,000	107,286	67.1%	90,729	84.6%	16,000	6,258	39.1%

주1) 2025년 8월말 기준, 이용금액은 국비 집행액(매칭 지방비 제외)
2) 신청인원 107,286명 중에서 1회차 발급인원은 86,713명, 2회차 발급인원은 20,573명임
(1회차 발급인원 86,713명 = 당초 발급인원 123,052명 - 6월말까지 전액 미사용·회수된 인원 36,339명)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신청인원 중 이용인원은 84.6%로 비교적 양호한 것처럼 보이지만, 2025년 1회차 발급기간('25.3.6.~5.31.)에 패스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123,052명 중 36,339명(29.5%)이 6월말까지 전액 미사용함에 따라 회수 조치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용률 또한 63.2%에[34]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4) 전체 신청인원 143,625명(= 8월말 기준 신청인원 107,286명 + 회수인원 36,339명) 대비 이용인원 90,729명

이와 같이 사업에 대한 청년의 호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이용분야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본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의 문화격차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나, 지역의 문화향유활동 저조는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저해로 다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청년을 미래 관객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연령을 상향하고, 지원금을 인상하는 것이라 설명함.

이와 함께 절대적인 지역의 공연·전시 부족 문제를 이 사업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시범사업이라는 한계점으로 다양한 이용처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여 2026년부터는 지역 공연·전시를 다수 보유한 예매처 등을 추가 선정하고, 지방극장을 활용한 영화·공연·전시 실황 등 다양한 볼거리를 확충하여, 전지역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이용률을 높여나갈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당초 이 사업을 추진했던 목적이 공연 및 전시 등 순수예술에 사용가능한 문화예술 관람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었던 점,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가 낮아 이용분야에 대중음악 장르 및 영화 관람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이와 같은 사업방식이 청년의 문화예술 취향형성 및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식인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처음부터 대중음악 장르 이용이 가능했던 2025년의 장르별 이용현황을 보면, 콘서트 분야 이용금액이 48.8%로 거의 절반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뮤지컬 분야에서 30.9%가 이용되고 있어, 향후 이용 분야에 영화 관람까지 추가될 경우 순수예술 분야보다 콘서트·영화·뮤지컬 분야에서 대부분 이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 장르별 이용현황]

(단위: 원, 건, %)

구분	2024년				2025년 8월말			
	이용금액		이용건수		이용금액		이용건수	
	금액	비율	건수	비율	금액	비율	건수	비율
클래식	1,043,981,537	13.1	14,070	11.1	680,940,150	7.5	9,029	7.4
콘서트	**900,062,491**	**11.3**	**8,051**	**6.3**	**4,414,004,574**	**48.8**	**36,033**	**29.6**
전시	347,967,443	4.4	20,119	15.8	539,525,984	6.0	29,422	24.2
연극	833,049,058	10.4	29,887	23.5	520,947,343	5.8	16,347	13.4
뮤지컬	**4,684,907,907**	**58.6**	**52,298**	**41.1**	**2,799,048,743**	**30.9**	**29,565**	**24.3**
무용	184,972,700	2.3	2,682	2.1	88,768,708	1.0	1,248	1.0
국악	3,729,400	0.0	170	0.1	3,603,400	0.0	183	0.2
합계	7,998,670,536	100.0	127,277	100.0	9,046,838,902	100.0	121,827	100.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이와 같이 청년 접근성이 다른 장르에 비해 높은 대중음악 및 영화 분야로 지원이 집중될 경우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취향 형성 및 소비를 유도한다는 당초 정책효과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용률,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어느 한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패스를 사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임.

또한 설령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이라는 목적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생계·일자리·교육·주거 등 다른 청년 정책과 비교하여 지원 효과가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뿐만 아니라 청년 친화 지원 방식인 온라인 발급·지원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온라인상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이용한 티켓 예매·발급 후 이를 양도하거나 현금화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35)36)]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사업의 집행률 제고 등 개선책을 마련하고, 향후 정책적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 결과를 환류할 필요가 있다고 봄.

35) 2025년 3월 YES24 회원계정 판매 1건, 회원계정의 타인 양도 1건 등 총 2건의 금전 거래를 적발(총 30만원(건당 15만원))하여, 사용 금액을 강제 취소처리 및 전액 회수하고 부정거래 행위자 2명에게 조치결과 공문을 발송하였음.

36)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등 절차만 거치면 패스를 발급받아 예매처에 등록된 공연·전시를 선택하여 예매할 수 있어, 이러한 점에 대해 이용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취지는 성인초기 청년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 분야를 선택하여 예매하고 경험함으로써 자발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함. 다만, 부정사용 금지에 대한 안내강화, 상시 온라인 모니터링 등 사전 차단 위주로 철저히 예방하고, 적발 시 전액환수 등 보조금법 등에 따라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참고] 청년문화예술패스 양도 및 현금화 관련 검색 결과(검색일: '25.9.4.)



【영화발전기금】

<지 출>

13.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사업(신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사업은 부산기장촬영소 내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설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163억 5,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7)]

[2026년도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영화정책지원	16,496	43,596	28,099	11,603	70.3
영상제작시설 구축 운영	-	-	16,639	16,639	순증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	-	16,353	16,353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시설구축비 및 부대경비: 130억 6,500만원
- 장비비 114억 6,900만원(LED Wall, 미디어 서버, 카메라 시스템 등), 설치공사비 9억 2,200만원(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비, 서버룸 시공비 등 스튜디오 내 장비 설치비), 플랫폼 구축 4억 7,800만원, 시설부대경비 1억 9,600만원

○ 에셋라이브러리 구축: 19억 7,200만원

○ 예비비: 13억 1,600만원
- 신기술 기반 특수장비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 가능성, 물가 상승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구축비, 시설부대경비 합계의 10% 내외 산정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7) 영화발전기금-영화정책지원(1261-302)(콘텐츠정책국)

나. 검토의견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사업은 스튜디오 설비가 구축될 부산기장촬영소의 공사 일정 및 유사 사업의 추진 사례를 볼 때,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 계획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 발주 및 계약 등 사전 절차를 2026년 4월까지 빠르게 수행하여, 이후 5월부터 8월까지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스튜디오 설비를 구축하여 11월부터 시범운영을 한다는 계획임.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 구축 사업 추진일정(안)]

○ ('25.10.~'26.1.) 버추얼 스튜디오 용역 발주를 위한 사전 조사 및 계획 수립
○ ('26.2.~'26.3.) 조달청 용역 발주
○ ('26.4.) 구축 업체 계약
○ ('26.5.~'26.8.) 구축 방식에 따른 보강 공사 및 서버실 추가 설치 공사 실시
○ ('26.8.~'26.10.) LED 패널, 센서, 라이트, 서버, 오퍼레이터 설비 구축
○ ('26.10.) 최종 구축 완료
○ ('26.11.~'27.3.) 운영 관련 온보딩 프로그램 실시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가 구축될 부산기장촬영소가 2024년 5월 2일 착공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중으로 2026년 8월 29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동 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현재 계획하고 있는 2026년 5월~8월 스튜디오 공사 추진이 곤란해질 가능성이 있음.

[부산기장촬영소 공사 및 운영 일정(안)]

○ ('24.5.2.) 착공
○ ('26.8.29.) 준공(공사기간 850일)
○ (사용 승인 후~'26.12.) 시범운영
○ ('27.~) 정상운영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대전 스튜디오 큐브 내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38] 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7개월('24.4.~'24.10.), 스튜디오 구축에

38) 일반회계-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1432-300)

6개월('25.3.~'25.8.)이 소요되어 개관식 및 기술시연회를 2025년 11월말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 첫해인 2024년의 실집행률이 1.7%에 불과했던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4년~2025년 대전 스튜디오 큐브 내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사업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4년	12,500	12,500	12,500	-	12,500	209	12,291	-	1.7
2025년	12,500	12,500	8,750	12,291	21,041	13,605	-	-	64.7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따라서 부산기장촬영소 공사 일정 및 유사 사업의 추진 사례를 볼 때,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026년 계획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광진흥개발기금】

<지 출>

14.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신규): 신규 관광객 유입 및 재방문 효과 극대화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여행 국민에게 여행 지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 한도)으로 사후 환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6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9)]

[2026년도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내관광 역량 강화	42,780	105,439	64,193	21,413	50.1
국민관광지원	26,886	43,286	42,186	15,300	56.9
지역사랑 휴가지원	-	-	6,500	6,500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2026년 시범사업으로 인구감소지역 84개(광역시 소재 구 제외) 중 20개를 공모하여 지자체별 10억원(국비 3억원, 지방비 7억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고, 2026년 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임.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환급 지원금: 60억원(20개 지자체×3억원)
○ 운영비: 5억원(20개 지자체×2,400만원+직접 사업비 2,000만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9) 관광진흥개발기금-국내관광 역량 강화(4264-309)(관광정책국)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개요]

○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84개(광역시 소재 구 제외) 중 20개 공모 - '26년 시범사업 추진(20개소), '27년 본사업 추진(단계적 확대) ○ (예산구조) '26년 총 지원금 200억원(국비 60억원 + 지방비 140억원) - 20개 지자체 환급지원금 총 10억원(국비 3억원, 지방비 7억원) * '26년 시범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거리에 따른 가산 지원 등 지자체 차등보조 검토예정 ○ (환급체계) 인구감소지역 외 거주하는 개인 또는 단체 여행객에게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단체 20만원 한도, 개인 10만원 한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한 신규 관광객 유입 및 재방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행시기·환급조건 및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기한·사용처 등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면밀히 설계하는 한편, 별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 매력을 높이고 관광 관련 소비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칭 지방비 확보 및 선행사업의 미비점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26년 2차례에 걸쳐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공모할 계획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공모), 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 및 통합 홍보·마케팅 등 역할을 수행하고, 각 지자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환급·관리 주체로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추진 일정(안)]

○ ('25.9. ~ '25.10.) 지자체 대상 예산설명 및 의견수렴 ○ ('25.10. ~ '25.12.) 사업 세부 방식 및 공모계획 확정 ○ ('26.1. ~ '26.3.) 지자체 설명회 및 1차 공모 ○ ('26.4. ~ '26.6.) 1차 사업추진 ○ ('26.6. ~ '26.8.) 2차 공모 ○ ('26.8. ~ '26.11.) 2차 사업추진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환급기준 여행경비는 단체(2인 이상)는 20만원, 개인은 10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금액의 50%가 환급(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 한도)되고, 대상 업종은 검토 중이나 중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관광(여행) 관련 업종(식음료, 입장료·관람료, 숙박 등)으로

제한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단체와 개인을 구별하여 사전 신청을 받고, 소비영수증(특정 결제수단 제한 등 검토 중)과 인증 사진을 첨부한 여행 후기를 포함하여 정산요청을 받을 예정으로, 정산신청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하고, 환급 상품권의 사용기한은 지급연도 3개월 범위 이내로 검토 중으로, 기한 내 미사용 상품권은 말소 처리되어 환수한다는 계획임.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인구감소지역으로의 방문 및 관광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역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친지 방문 등으로 자연스럽게 지역을 찾는 과정에서 추가 혜택만 챙기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상대적으로 관광 매력이 약한 지역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입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별 편차가 클 수 있으며, 환급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차 재방문을 하기보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상품권을 현금화하거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업을 통해 당초 계획한 신규 관광객 유입 및 재방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행시기·환급조건 및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기한·사용처 등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면밀히 설계하는 한편, 별도의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의 관광 매력을 높이고 관광 관련 소비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40]

40) 이러한 지적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친지 방문이 급증하는 시기인 연휴와 명절을 제외하는 등 지자체별 경비가 지원되는 여행 기간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환급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바 앱을 통해 발급되는 모바일 상품권(정책수당, 타인에게 선물이 불가능)으로 지급하여 우려 사항을 예방하고자 하며, 공모를 통해 관광 잠재력과 매력이 있어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15. 외래관광객 한국형 통합관광패스 시범운영 사업(신규):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단계적 추진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외래관광객 한국형 통합관광패스 시범운영’**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교통수단과 주요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디지털 기반 한국형 통합 관광패스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2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1)]

[2026년도 외래관광객 한국형 통합관광패스 시범운영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	35,143	35,143	36,330	1,187	3.4
관광 편의성 제고	5,213	5,213	10,813	5,600	107.4
외래관광객 한국형 통합관광패스 시범운영	-	-	2,800	2,800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이 대한민국 전역을 쉽고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교통 통합 이용권, 전국 단위 주요 관광지 입장권, 쇼핑 및 체험 할인권 등을 통합한 모바일앱 기반 기간형/구간형 통합 관광패스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2026년 시범운영 후 2027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임.

[외래관광객 한국형 통합관광패스 시범운영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교통비 할인정산: 8억원
- (열차, 버스, 공항철도 등) 1인당 정부 지원액 평균 20,000원 × 4만장
○ 관광지 입장권 할인정산: 8억원(1인당 정부 지원액 평균 20,000원 × 4만장)
- (케이블카, 놀이공원 등 민간 운영 유료 관광지) 1인당 정부 지원액 평균 20,000원 × 4만장
○ 판촉 및 홍보 프로모션: 5억원
○ 시스템 구축 및 사업 운영비: 7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1) 관광진흥개발기금-외래관광객유치 관광기반 조성(4361-306)(관광정책국)

[외래관광객 한국형 통합관광패스 시범운영 사업 개요]

○ (대상) 외국인 관광객 전용(단기 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만 구입 가능)
○ (추진일정) '26년 시범운영 후 '27년부터 본격 시행
○ (운영방식) 모바일앱 기반 기간형 / 구간형 통합패스(QR 또는 NFC 방식)
○ (지원내용) 교통 통합 이용권, 관광지 입장권, 쇼핑 및 체험 할인권 등

구분	주요 기능	연계 기관
교통 이용권	· 철도(KTX, SRT, ITX, 무궁화호 등), 도심공항철도,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 선박(연안여객선) 등 연차별로 확대 검토	코레일, SR, 고속버스·시외버스, 공항철도
관광지 입장권	· 전국 단위 주요 관광지·전시·공연·체험권 통합	지자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모바일 인증	· QR/NFC 기반 전자패스 발급 및 실시간 인증	별도 구축
할인쿠폰 제공	· 지역숙박·식당·상점 할인 바우처 제공	지자체 협업

○ (콘텐츠) 지역추천 여행코스, 다국어 관광정보, 실시간 교통 정보 제공
○ (결제) 글로벌 간편결제, 해외카드 등
○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단계별 확대)
○ (판매금액) (예시) 3~5일권 기준 10~15만원 내외 책정 등 검토 예정
○ (추진체계) 국토교통부(코레일),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방안 마련

대상	주체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
한국관광공사	· 사업운영(패스 판매 및 관리, 제휴업체 관리, 민원 응대 등)
국토교통부	· 코레일, SR, 고속버스 등 광역교통 연계 협조
국가유산청	· 전국 국가유산 입장 지원 협조
지자체	· 지자체 보유 관광자원 및 시설의 가맹점 참여
민간기업	· 렌터카, 테마파크 할인혜택 제공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통합관광패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2026년 시범사업을 서둘러 운영하기보다, 우선 외국인관광객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정적인 통합 시스템의 설계·구축 및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한 제휴처 확보에 집중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 후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컨소시엄을 설립하고 모바일 앱 및 정산 시스템 등 플랫폼을 개발한 후, 7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준비·운영하고, 이후 12월에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환류한다는 계획임.

[2026년 외래관광객 한국형 통합관광패스 시범운영 사업 추진일정(안)]

컨소시엄 설립 및 플랫폼 개발 ('26. 2. ~ 6.)	시범사업 준비 및 운영 ('26. 7. ~ 11.)	성과 분석 및 환류 ('26. 12.)
· 컨소시엄 구성 및 출범 · 모바일 앱, 정산시스템 개발	· 시범사업 대행업체 선정 · 시범사업 공식 개시	· 시범사업 성과 분석 및 개선 환류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그런데 통합관광패스의 주요 지원내용과 관련하여, 철도(KTX, SRT, ITX, 무궁화호 등), 도심공항철도, 고속·시외버스, 시내버스, 지하철 등 교통 통합 이용권 추진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및 코레일 등과, 전국 단위 주요 관광지·전시·공연 등 입장권 및 할인권 지원을 위해서는 국가유산청,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과, 지역 숙박·렌터카·식당·상점 할인 등과 관련하여서는 지자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결제·정산 방법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따라서 주요 기관 간 협의, 참여 민간기업의 유치 및 협의가 우선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 시스템 구축, 통합관광패스의 종류 및 가격 책정, 사전 홍보 및 고객센터 운영 준비 등에도 각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특히 전국 단위의 교통 통합 이용권, 관광지 입장권, 할인 정산 등을 하나의 결제·정산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일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 컨소시엄 설립 및 플랫폼 개발 완료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재 철도, 고속버스 등 교통망 연계 및 할인 혜택 부여 등을 위해 코레일, 공항철도, 티머니, 고속버스 운송조합 등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및 관광지 입장권 할인 등을 위해 국가유산청 및 지자체와도 협의를 진행하는 중으로, 연말까지 세부 운영체계 및 정산구조 확정과 참여기관과의 MOU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임.

또한 하나의 시스템에서 모든 교통수단 예약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시스템 구축은 상당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초기단계에서는 패스를 구입하면 부여받는 QR 코드 등을 통해 코레일, 티머니 등 각 교통 시스템에서 별도로 예약결제하고 운영 대행 사업자가 정산을 총괄하는 방식을 검토 중으로, 시범 사업 단계에서 사업의 운영방식, 효과성 등을 검증하고, 시스템 등도 점진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장기적으로 통합관광패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사업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교통 시스템에서 별도로 예약결제하는 방식 등으로 급하게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시스템 등을 고도화시키기보다, 처음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통합관광패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다양한 교통수단 및 관광지 입장권 등을 예약·이용할 수 있도록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결제시스템을 면밀하게 설계하고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이와 함께 통합관광패스를 통해 제공되는 전국 단위의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및 할인 혜택, 지역 숙박·렌터카·식당·전시·공연·상점 할인 바우처 제공 등 초기 라인업을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2026년 연내 시범사업 운영을 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우선 주요 기관 간 역할 및 정산 체계를 명확히 수립하고, 결제·발권·정산·고객센터를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며, 전국의 다양한 제휴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실제 통합관광패스의 본격적인 판매 및 운영은 단계적으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국민체육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계정)】

<지 출>

16.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신규): 부상·사고 예방 및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맞춤형 스포츠강좌를 운영하여 건강한 노년의 삶과 활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7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2)]

[2026년도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145,629	145,629	134,479	△11,150	△7.7
맞춤형 생활체육 활동지원	28,759	28,759	29,805	1,046	3.6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	-	7,500	7,500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지역 어르신의 수요와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스포츠강좌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우수 기획사업을 선정해 지원하려는 것으로, 17개 시·도에 대한 자치단체보조(보조율 50%) 방식으로 추진됨.

어르신들은 거주지 주변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에서 열리는 스포츠 강좌를 무료로 수강하게 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를 통해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 활력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함.

42) 국민체육진흥기금-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5161-301)(체육국)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75억원 - 2억원 × 75개 프로그램 × 50% * 2억원 = 5만원(시간당 강사료)×10시간×40개반×10개월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소득무관) * 수혜자 수 100만명(연 인원 기준) = 35명×10개월×40개반×75개 프로그램 ○ (사업규모) 75개 프로그램 * 서비스공급처: 지정스포츠클럽, 지역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양로원 자치센터 등 ○ (사업방식) 지자체 보조(보조율 5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나. 검토의견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운동 중 부상·사고 및 지역 불균형·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는 한편, 단계적 자부담 도입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민간 실버 스포츠 시장이 다양화·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어르신의 체육종목 및 프로그램 수요와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체감형 스포츠활동 지원을 통해 노년층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사업을 2026년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였음.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활력 증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안전 및 프로그램 품질 관리가 되지 않으면 기대효과가 반감될 수 있음.

따라서 운동 중 부상·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년·만성질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체육지도자를 확보하는 한편, 운동 전·후 건강상태 확인, 연령대별·체력 수준별 프로그램 난이도 조정, 현장 응급대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스포츠강좌가 국민체육센터 등 지역 공공체육시설 및 노인복지관 등에서 주로

제공됨에 따라 시설 및 이동 수단이 부족한 농촌·소도시에서는 접근성이 낮아 지역 불균형·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보 접근성 문제로 상당수의 어르신이 사업을 모르거나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고령층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절차도 쉽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은 상대적으로 건강하고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는 어르신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바, 스포츠강좌 무료 제공이 민간의 노인 대상 스포츠강좌 시장을 잠식하고, 장기적으로 낮은 단가·무료 사업 중심 확대로 민간 공급을 축소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무료로 어르신들이 다양한 체육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되, 일정기간 이후로는 소액의 자부담을 도입하면서 지속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사업을 설계하여,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민간의 고령층 대상 스포츠강좌 시장이 오히려 다양화·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봄.

17.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최근 대출실적을 고려한 융자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융자금을 전대하여 국내 체육 관련 업체의 생산, 연구 및 사업운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액 대비 1억 4,000만원(0.1%)이 증액된 2,416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43)]

[2026년도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	248,057	163,730	248,057	-	-
스포츠산업 융자	241,507	157,180	241,647	140	0.1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을 통해 감액 조정된 2025년 8월말 기준 수정계획액 1,571억 8,000만원 대비 844억 6,700만원(53.7%) 증액된 규모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부터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 사업을 직접융자 방식으로 일원화할 계획임에 따라[44)] 중단되는 신규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계획안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스포츠산업 융자: 2,416억 4,700만원
- 신청건수 385.4 × 건당 627백만원*
* ’21~’24년 4개년 기성고 융자 집행 건당 평균 금액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3) 국민체육진흥기금-스포츠산업금융지원(융자)(5365-300)(체육국)

44)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융자와 이차보전 두 가지 방식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직접융자 사업은 19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차보전 사업은 2023년부터 신규 추진되었음. 그런데 체육기금의 경우 안정적인 자체수입재원을 보유하고 있어 여유자금 규모가 상당한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재정 절감을 위해 이차보전 방식의 대출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26년부터 신규 이차보전을 없애고 직접융자 방식으로 일원화할 계획임(이차보전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 높은 금융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기금 원금이 소진되어 중장기적인 기금 재정의 확보 측면에서는 원금회수와 이자수입이 가능한 융자 대비 불리함).

나. 검토의견

스포츠산업 융자 사업은 최근 대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부터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 사업을 직접융자 방식으로 일원화할 계획임에 따라, 중단되는 신규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고려하여 융자금 계획액을 2,416억 4,700만원으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스포츠산업체에 대해 직접융자 또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실행된 연간 총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2,289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이 실행된 후 2023년~2024년에는 1,900억원대로 감소하였고, 2025년에는 8월말 기준 약 1,200억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전년보다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

[2020년~2025년 8월말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연간 대출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직접융자 실행액	이차보전 대출실행액	합계
2020년	126,100	-	126,100
2021년	136,100	-	136,100
2022년	228,900	-	228,900
2023년	76,100	115,002	191,102
2024년	112,351	79,570	191,921
2025년 8월말	61,573	58,097	119,670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히 최근의 월별 대출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 비해 4분기 대출실적이 감소하는 추세이고, 2024년 대비 2025년의 대출 수요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2024년~2025년 8월말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월별 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직접융자	'24년	-	5,259	10,033	13,927	10,190	13,113	11,203	12,484	12,190	8,754	7,991	7,207
	'25년	-	7,485	2,273	12,250	10,973	8,337	9,956	10,299				
이차보전	'24년	-	7,740	16,816	14,520	8,421	10,515	3,800	7,742	3,418	4,028	2,570	-
	'25년	-	5,050	13,996	13,371	10,097	4,544	6,467	5,382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26년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융자금 예산은 정책변화, 대출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계획액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은 640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3.5%) 감소함.

예산은 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4.2%) 감소한 반면, 기금은 109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함.[1)]

[2026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554	554	531	△23	△4.2
기 금	109	109	109	-	-
총수입	663	663	640	△23	△3.5

문의 : 김혜진 예산결산조사관 khj3685@assembly.go.kr (02-6788-5692)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은 1조 4,624억원으로 전년 대비 750억원(5.4%) 증가함.

예산은 1조 2,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6억원(4.3%) 증가하고, 기금은 1,649억원으로 전년 대비 214억원(14.9%) 증가함.

[2026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2,439	12,451	12,975	536	4.3
기 금	1,435	1,435	1,649	214	14.9
총지출	13,874	13,886	14,624	750	5.4

나. 예산안

2026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억원(△4.2%) 감소함.

[2026년도 국가유산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545	545	529	△16	△2.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9	9	2	△7	△77.8
합 계	554	554	531	△23	△4.2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2,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6억원(4.3%) 증가함.

[2026년도 국가유산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2,143	12,155	12,539	396	3.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96	296	436	140	47.3
합 계	12,439	12,451	12,975	536	4.3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1개 기금(국가유산보호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026억원으로 전년 대비 336억원(19.9%) 증가함.

[2026년도 국가유산청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국가유산보호기금	1,690	1,690	2,026	336	19.9
합 계	1,690	1,690	2,026	336	19.9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국가유산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4개(799억 4,100만원)의 신규 사업이 편성됨.[2)]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사업은 국가유산보수정비 총액계상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연도별 재정투입 규모 및 완료 소요 등 사전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분리 편성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6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유산 지능형 첨단보존 기술개발(R&D)’ 사업은 국가유산 분야 AX 기반 지능형 보존·복원 기술 개발, 국가유산 데이터 기반 분석·진단 표준 정립 및 보존·진단 기술의 체계화 및 기술 확산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4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자율)’과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세종)’ 사업은 국가주도의 전 국토 대상 매장유산 정밀 지표조사 및 토지이음과 연계하여 국민의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4억 7,400만원과 4억 6,6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6년도 국가유산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국가유산보존기반구축	66,581
2	국가유산 지능형 첨단보존 기술개발(R&D)	4,42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자율)	8,474
4	매장유산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세종)	466
총지출		79,941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국가유산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사업, ‘국가유산긴급보수’ 사업 등 총 14개임.[3)]

[2026년도 국가유산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국유유산관리	1,514	3,138	1,624	107.3
2	기후변화대응국가유산보존관리 기술개발(R&D)	4,328	9,591	5,263	121.6
3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772	2,323	1,551	200.9
4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45,992	63,443	17,451	37.9
5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33,471	49,476	16,005	47.8
6	사적관리	3,417	8,195	4,778	139.8
7	매장유산보존	4,278	8,336	4,058	94.9
8	국유문화유산위탁관리지원	2,777	4,245	1,468	52.9
9	명승·전통조경 보존관리	1,200	3,280	2,080	173.3
10	무형유산보호	9,513	58,251	48,738	512.3
11	수중유산발굴및보존처리	11,682	16,021	4,339	37.1
[국가유산보호기금]					
12	국가유산긴급보수	4,484	10,792	6,308	140.7
13	국가유산채널구축운영	3,322	4,583	1,261	38.0
14	일반문화유산조사및보존관리지원	10,664	14,184	3,520	33.0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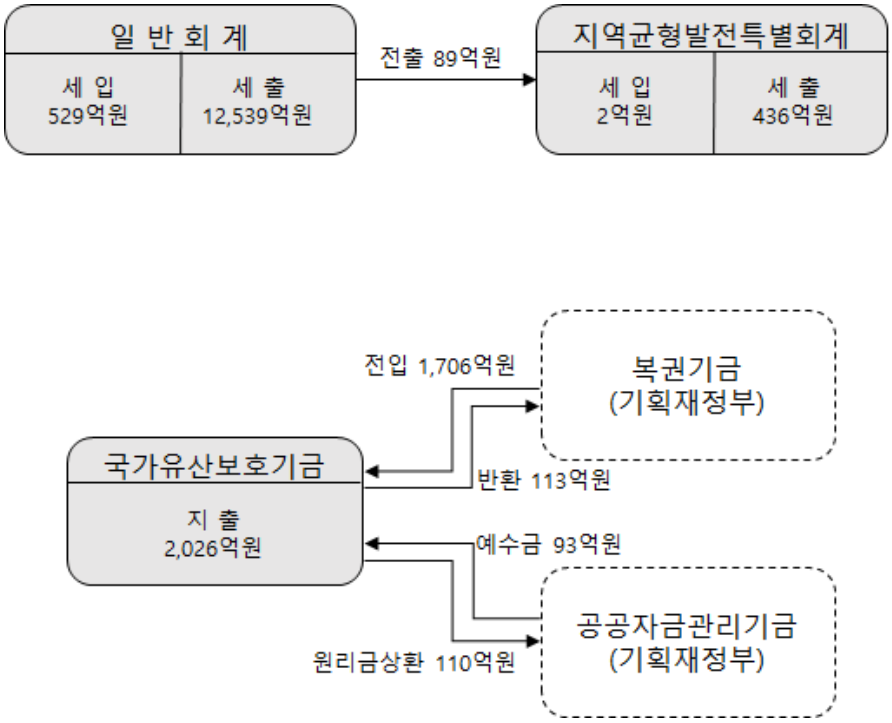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국가유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유산보호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89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국가유산보호기금은 복권기금으로부터 1,706억원을 전입받고 113억원을 전출하며,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93억원을 예수받고 110억원을 원리금 상환함.

[국가유산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미래 기후 위기·재난 대비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 및 K-헤리티지 확산을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국가유산 재난안전 및 활용진흥 분야에 중점투자를 확대하고, 국제사회 내 글로벌 문화강국 실현 및 국제위상 강화를 위해 국내 최초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국가유산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 안내판 디자인 개발, 안내판 정비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완료되어야 실제 안내판 정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정비대상 안내판 선정 및 안내판 문안정비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경복궁 국가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사업은 향후 추진될 복원정비 사업을 고려하여 경복궁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람객의 편의가 최대한 향상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셋째,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업은 준비기획단 구성 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을 도출할 계획이나 행사 규모를 고려하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사업: 사업 추진일정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사업은 국민 및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국가유산의 정보와 가치를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안내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8억 9,500만원(553.1%) 증액된 57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	45,992	45,992	63,443	17,451	37.9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885	885	5,780	4,895	553.1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2,400건×2,242,000원(평균단가) = 53억 8,000만원**
-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업체 견적 평균, 조달청 나라장터 안내판 설치사업 단가
* 부분 보수: 종합안내판(대형) 500만원, 권역안내판(중형) 300만원, 개별안내판(소형) 100만원
* 신규설치/전면교체: 종합안내판(대형) 3,000만원, 권역안내판(중형) 2,000만원, 개별안내판(소형) 300만원
○ **국가유산 안내판 운영기반 정비: 1식×4억원 = 4억원**
- 실태조사, 모니터링, 디자인 개발, DB구축, 정비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등 1식

자료: 국가유산청

4) 일반회계-국가유산 교육활용 진흥(1133-301)(유산정책국)

국가유산청은 국민들이 안내판을 통해 국가유산이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하는 자산이자 문화시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고,[5] 일반국민 및 외국인들도 국가유산의 가치와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안 감수체계도 개선하고자,[6] 2027년까지 새롭게 정비된 안내문안을 반영하여 교체가 시급하고 관람객이 많이 찾는 안내판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임.

이를 위해 2026년~2027년 국가지정 등록유산 2,860개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비 및 교체가 필요한 안내판 현황을 파악한 후,[7] 세계유산지역 등 일반국민이 많이 접하는 국가유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안내판을 정비해나갈 계획으로,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2026년~2027년 연차별 소요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연차별 예산		
	2026년	2027년	합계
국가유산 안내판 운영기반 정비	400	400	800
국가유산 안내판 종합정비 (안내판 수)	5,380 (2,400개)	3,820 (2,256개)	9,200 (4,656개)
합 계	5,780	4,220	10,000

자료: 국가유산청

나. 검토의견

국가유산 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사업은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 안내판 디자인 개발, 안내판 정비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완료되어야 실제 안내판 정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고, 정비대상 안내판 선정 및 문안 정비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 (제도) 예규 수준 → 법률 제정(책임관, 디자인/표기/감수 표준화, 실태조사 등),
(점검) 개별·산발적 → 전담기관(국가유산진흥원) 주기적 모니터링, 원스톱 대응

6) (국문) 전문용어/지자체별 편차 → 역사교사, 작가, 기자(문화) 등 감수 및 표준화,
(외국어) 비전문가 직역 → 국내거주 원어민, 유네스코 전문가 등 감수 참여

7) 국가지정 등록유산 및 안내판 현황

(단위: 개)

구 분	대상유산	안내판 합계	종합안내판	권역안내판	개별안내판
국가지정	2,860	4,867	664	200	4,003

주) 국가유산청 전자행정시스템의 안내판 현황에 따르며, 무형유산, 실내위치 등 안내판 미설치 대상 유산 제외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의 안내판 정비와 관련된 사업은 안내판 정비 실태조사 및 DB 구축('00~'18), 알기 쉬운 안내판 문안 정비('18~'21), 지정번호 삭제('22~'23), 국가유산 체계 전환 용어 정비('25), 보수정비 총액사업 등 다양한 사업(직접, 지자체보조, 민간경상보조)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5년간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은 다음과 같음.

[최근 5년간 안내판 정비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건)

연도	세부사업	내역사업	주요내용	지정유산 건수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2021	문화유산 활용 진흥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안내판 정비	17개 시도 584 (국가 185, 시도 399)	2,931	2,931	2,209
2022	문화유산 활용 진흥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안내판 정비	16개 시도 587 (국가 161, 시도 426)	2,500	2,463	1,802
2023	문화유산 활용 진흥	문화유산 관람환경 개선	지정번호 가림조치 등	15개 시도 1,431 (국가 475, 시도 957)	831	831	742
2025	국가유산교육 활용 진흥	국가유산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	문화재 용어 변경 등	7개 시도 321 (국가 321)	885	379	86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그럼에도 2026년도 안내판 정비 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전년 대비 553.1% 증액)한 이유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안내판은 기본적으로 옥외에 설치되어 직사광선 등에 의한 훼손이 일어나고 학술연구,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용어 및 문안정보 변경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최근 내용 부실, 노후 및 훼손, 외국어 표기 오류, 어려운 전문용어 표현 등 국가유산 안내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함.

이와 같이 안내판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하고 새롭게 정비된 안내문안을 반영하여 국가지정 등록유산 전체에 대해 종합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안내판 정비 사업은 일반적으로 실태조사, 대상선정, 문안정비, 안내판 제작, 안내판 설치, 모니터링 순으로 진행되는데, 국가유산청은 2026년 '국가유산 안내판 운영기반 정비' 연구용역을 통해 안내판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디자인 개발, 정비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따라서 이 연구용역을 통해 실태조사, 안내판 디자인 개발, 안내판 정비 및 설치 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완료되어야 실제 안내판 정비 작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안내문안 감수체계 또한 표준화·강화할 계획인 점을 고려하면 정비 대상 안내판을 선정한 후 각 안내판의 문안을 정비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2026년~2027년 정비할 전체 작업량의 절반 이상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다소 과다하게 계상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8] 안내판 운영기반 정비 연구용역 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안내판 종합정비 예산 규모를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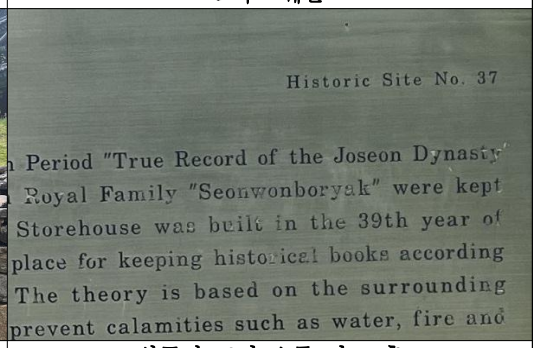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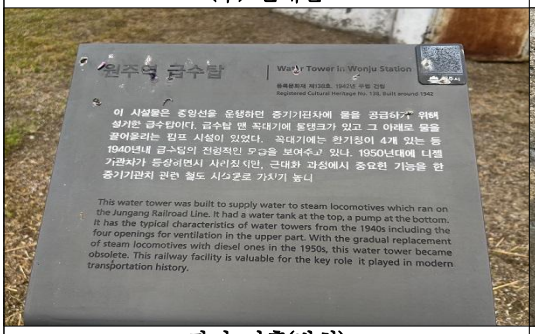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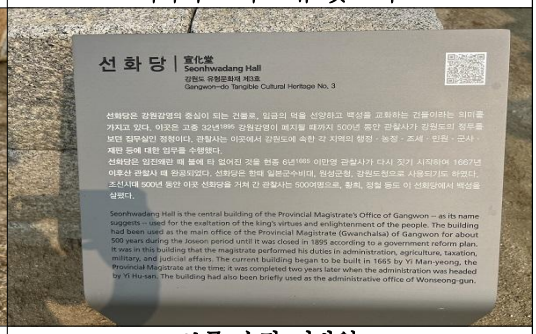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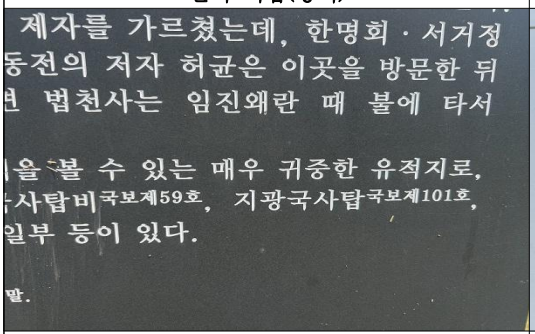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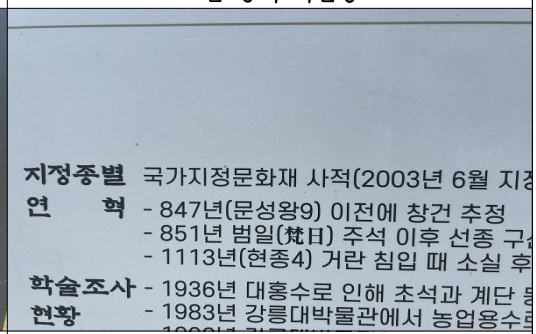
8) 2026년~2027년 연차별 소요예산(안)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연차별 예산		
	2026년	2027년	합계
국가유산 안내판 운영기반 정비	400	400	800
국가유산 안내판 종합정비 (안내판 수)	**5,380 (2,400개)**	**3,820 (2,256개)**	**9,200 (4,656개)**
합 계	5,780	4,220	10,000

자료: 국가유산청

[참고] [정비대상 안내판 사례]

<table>
<tr><td> 
</td><td>  </td></tr>
<tr><td>훼손 방치(미관 저해)</td><td>노후 · 훼손</td></tr>
<tr><td> 
</td><td> 
</td></tr>
<tr><td>(구) 안내판</td><td>외국어 표기 오류 및 노후</td></tr>
<tr><td> 
</td><td> 
</td></tr>
<tr><td>관리 미흡(방치)</td><td>보물 승격 미반영</td></tr>
<tr><td> 
</td><td> 
</td></tr>
<tr><td>지정번호 가림조치 미반영</td><td>국가유산 용어 미반영</td></tr>
</table>

자료: 국가유산청

2. 경복궁 국가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사업(신규): 복원정비 사업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경복궁 국가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사업은 경복궁 내 국가유산 문화상품 활용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9)]

[2026년도 경복궁 국가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유산진흥원지원	20,330	20,330	20,876	546	2.7
경복궁 국가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	-	800	800	순증

이 사업은 현재 경복궁 매장 내 휴게시설이 10석에 불과하여 쉴 공간이 부족하고, 공간협소로 인해 전통문화상품 전시·판매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경복궁 동편 주차장 인근에 편의시설 및 국가유산 상품관을 조성하여 내·외국 관광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10)]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할 계획임.

---

9) 일반회계-국가유산진흥원지원(1133-302)(유산정책국)

10) 경복궁 편의시설 현황 및 개선 계획

구분	현황	개선
위치	경복궁 내 수정전 앞	경복궁 동편 주차장 인근
건축면적	141.76㎡(43평)	약 1,000㎡(300평) 2개층 예상
매출	30억원('24년 경복궁 기준)	100억원('27년 예상)
주요기능	· 전통문화상품 판매 · 음료 및 다과 판매	· 전시, 미디어아트 등 복합문화공간 · 음료 및 다과 판매 등 휴게시설 · 전통문화상품 및 특화상품 판매, 팝업 매장 운영 등 유통 플랫폼 기능
문제점	· 휴게공간 부족으로 관광객 편의 저하 · 경복궁 연계 복합문화체험 기능 불가 · 공간협소로 인한 일반 전통문화상품 전시·판매의 한계 발생	· 휴게공간 확충으로 만족도 향상 · 궁중다과 및 음료 제공으로 다각적 전통문화체험 기회 마련 · 국가유산 활용 전시, 미디어아트관 등 설치로 경복궁 연계 볼거리 제공 · 국가유산 문화상품 판매 및 소상공인 유통 플랫폼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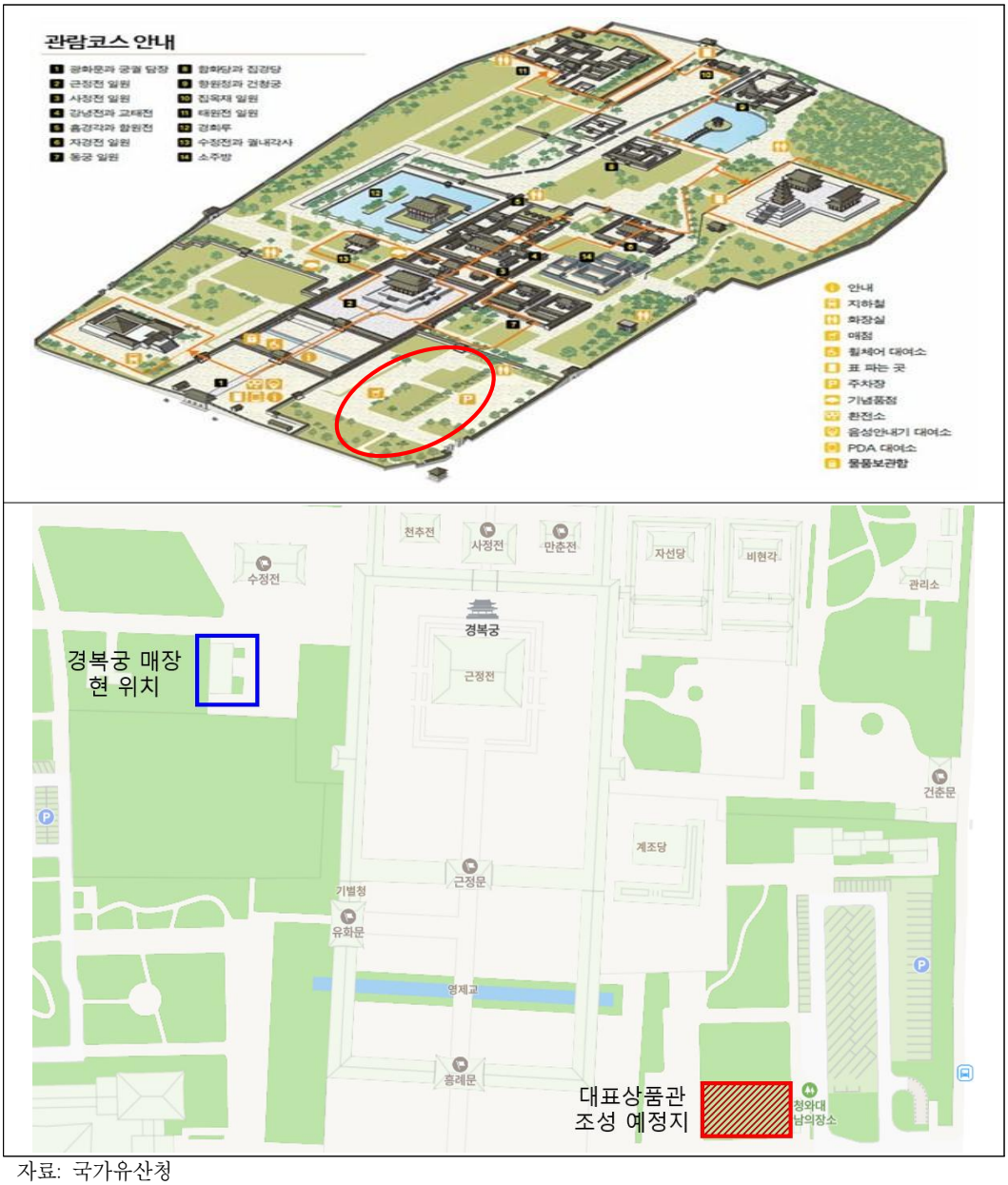
자료: 국가유산청

[경복궁 국가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설계비 8억원 - 공사비 160억원 × 5%(설계요율) = 8억원 * 건축면적 약 1,000㎡(300평, 2개층) 예상

자료: 국가유산청

[경복궁 국가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위치]



자료: 국가유산청

나. 검토의견

경복궁 국가유산 대표상품관 조성 사업은 향후 추진될 복원정비 사업을 고려하여 경복궁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람객의 편의가 최대한 향상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문화상품에 대한 국내외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11] 궁능 관람객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12] 2026년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을 기획하였음.

상품관은 경복궁 동편 주차장 권역에 조성할 예정으로, 국가유산청은 해당 부지가 주차장 및 매표소와 가까워 관람 전후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관람객 동선 측면에서 자연스럽고 효율적이며, 지하에 주차장 등 현대적 건축물이 이미 조성되어 발굴조사가 생략 가능한 부지로 판단된다고 설명함.

다만, 경복궁은 '경복궁 1차 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1990년부터 2010년까지 광화문을 포함한 총 89동의 건축물이 복원되었고, 현재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부터 2045년까지 2차 복원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상품관 조성 사업 예정지는 고종 시기 오위도총부가 위치했던 자리임.[13]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에 따른 복원 실적 및 계획]

고종 당시	기존	1차 기본계획 (1990~2010년)	2차 기본계획 (2011~2045년)	합계
500여동	36동 복원	89동 복원	80동 복원	205동 복원
고종 당시의	7.2%	17.8%	16%	41%

자료: 국가유산청

오위도총부 복원은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 중 마지막 단계인 5단계에 해당하여 2039년에 복원정비 사업을 시작할 예정으로, 총 12동의 건물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복원 면적은 향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오위도총부 권역 복원·정비 기본계획과 복원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임.

따라서 상품관 조성 사업은 향후 추진될 복원정비 사업을 고려하여 경복궁의 역사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람객의 편의가 최대한 향상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

11) 국가유산진흥원 문화상품 매출: ('20년) 약 40억원 → ('24년) 약 120억원(80억원 증가)

12) '24년 기준 경복궁 연간 관람객 수가 644만명(외국인 200만명)으로, 세계적 관광지인 바티칸박물관 수준이나 국가유산 방문을 기념할 문화상품, 휴게실, 화장실 등 편의공간은 부족함.

13) 오위도총부 복원 예정지에는 현재 경복궁 동편 주차장 및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연결통로 등이 위치하고 있음.

3.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업(신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업은 세계유산 관련 최대 국제행사인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통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유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과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78억 5,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4)]

[2026년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	33,471	33,471	49,476	16,005	47.8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	-	17,852	17,852	순증

국가유산청은 2026년 7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부산 BEXCO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행사는 본회의(11일간)·사전행사(2건, 각각 8일간, 10일간) 및 다양한 부대행사(공연, 전시, 투어 프로그램 등)로 진행되고, 규모는 협약가입국 196개국 대표단 등 약 3,000명이 참석할 예정임.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행사장 및 회의장 조성, 사전행사, 공연·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168억 8,200만원 ○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위한 의무분담금 납부: 9억 7,000만원

자료: 국가유산청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요]

○ (기간) 2026. 7. 12. ~ 7. 29. (18일간) - 본회의(7.19. ~ 29.), 사전포럼(Young Professionals’ Forum 7.12 ~ 21. / Site Managers’ Forum 7.16. ~ 23.) ○ (장소) 부산 BEXCO ○ (규모) 협약가입국 196개국 대표단 등 3,000여명 참석

자료: 국가유산청

14) 일반회계-세계유산등재 및 보존관리(1134-304)(유산정책국)

나. 검토의견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사업은 준비기획단 구성 후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을 도출할 계획이나 행사 규모를 고려하면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음.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6~7월경 개최되는 세계유산협약 가입국가 간 정부간위원회로, 연 1회 회의를 통해 세계유산 등재, 보존·관리 상황 심의 및 권고, 세계유산 관련 정책 등을 의결하며, 협약총회에서 선출된 21개 위원국(통상 4년 임기)이 의결권을 가짐.

주요 참가자는 유네스코사무총장(정상급), 세계유산위원회 21개 위원국 대사(장·차관급 등), 협약가입국(196개국) 등으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개최국은 의장국으로 선출되고, 의장국은 회의 주재, 의제(안) 사전 협의, 회의 결정문 사전 검토 등을 진행함.

이 행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국가유산청은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세계유산 등재 및 유산의 해석·설명 분야에서 주변국과의 이슈 및 잠재적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세계유산 관련 갈등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나라의 리더십과 발언권을 강화한다는 계획임.

회의 개최를 위해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일반용역비 168억 8,200만원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행사장 조성에 36억 1,500만원, 사전포럼 운영에 17억 5,100만원, 주최국 공식행사에 34억원, 초청경비 18억 9,500만원, 홍보 등에 13억 1,200만원, 운영 인력 인건비 5억 6,900만원, 수송·교통비 1억 3,900만원 및 기타경비 42억 100만원으로 구성됨.

[2026년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반용역비 세부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내용	산출금액
○ 행사장 조성 - 회의장(본회의, 부대행사실 등): 2,449백만원 - 사무공간(사무총장, 유네스코 사무국 등): 174백만원 - 임차비(장소 임차, 보안검색시설 등): 992백만원	3,615
○ 사전포럼(의무) 운영비 - World Heritage Young Professionals' Forum: 819백만원 - World heritage Site Managers' Forum: 932백만원	1,751
○ 주최국 공식행사 - 공식만찬·케이터링: 733백만원, 개폐회식: 709백만원, 문화행사·투어: 1,958백만원	3,400
○ 초청경비 - 항공료: 455백만원, 숙박비: 950백만원, 일식비: 490백만원	1,895

(단위: 백만원)

세부내용	산출금액
○ 홍보/인쇄/제작비 - 온라인 및 미디어 홍보: 730백만원, 홍보인쇄물 및 영상 제작: 209백만원 - 기타 홍보(참가자 등록물품, 피복제작 등): 373백만원	1,312
○ 운영인력 인건비 - 행사기획 및 운영: 126백만원, 동시통역 및 현장 지원: 443백만원	569
○ 수송/교통비 - 공항 영접 및 환송: 31백만원, 의전용 차량: 39백만원, 셔틀버스: 57백만원 등	139
○ 기타경비 - 통신 지원비: 28백만원, 보험료: 58백만원, 행사 예비비: 264백만원 - 백서발간: 100백만원, 선언문 국제포럼: 200백만원 - 조달 수수료: 110백만원,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3,441백만원	4,201
합계	16,882

자료: 국가유산청

이 행사는 세계유산 관련 최대 국제행사로, 우리의 정책과 입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2026년 세계유산위원회 성과물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한 안건 조율 등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준비할 필요가 있고, 본회의(11일간) 외에 사전행사(2건, 각각 8일간, 10일간) 및 60여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되는 행사 특성상 준비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참여가 중요한바, 준비할 업무량이 많고 활동범위가 넓음.

2025년 10월 기준 행사를 준비할 준비기획단 구성을 위한 근거 규정(대통령 훈령)이 제정된 상황이며, 국가유산청은 이를 바탕으로 부산광역시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기관(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속의 공무원 등을 파견 요청하여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사업 추진일정은 전담조직 설치 후에 도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이 사업이 18일간 196개 대표단 등에서 3,00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것임을 고려하면 2026년 7월 회의 개최까지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므로, 국가유산청은 준비기획단이 구성되면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사업: 실시간 영상연계 확대 사업 참여 독려 및 영상 관제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사업은 자연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상황실 운영 및 재난대응 상황관리를 위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원(1764.7%) 증액된 12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음.[15)]

[2026년도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	772	772	2,323	1,551	200.9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68	68	1,268	1,200	1764.7

이 사업의 2026년 예산안에는 분산된 국가유산 재난안전 관련 정보와 현장 데이터를 통합하여 신속·정확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유산 실시간 영상연계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재난안전관리 디지털 플랫폼 구축: 5억원
- 국가유산 방재정보 통합시스템 고도화(3억 4,000만원), 재난관제 솔루션 구입(1억 6,000만원)

○ 국가유산 실시간 영상연계 확대: 3억원

- 3백만원×100개소=3억원

○ 안전상황실 인프라 개선 및 운영비: 4억 6,800만원
- 영상감지장치, 보안장비 등(2억 5,000만원), 네트워크 증설(5,000만원), 공공요금(1억 2,400만원) 등

자료: 국가유산청

15) 일반회계-국가유산예방관리강화(1132-301)(유산정책국)

나. 검토의견

국가유산 재난대응 관리 사업은 국가유산 소유자가 실시간 영상연계 확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소수 인력으로 영상 관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청은 현재 CCTV가 설치된 국가유산 1,550개소(동산 제외) 중 368개소만(24%) 안전상황실에 연계되어 실시간 상황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2026년부터 매년 약 100개소의 국가유산 현장에 설치된 CCTV의 영상장치 데이터를 안전상황실과 연계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CCTV가 설치된 국보, 보물 중 미연계 대상(402개)을 우선적으로 연계하고, 2030년 이후에는 화재 등 재난에 빠른 조치가 필요한 목조유산(사적, 국민, 천기, 명승, 등록) 위주로 연계할 예정임.

[국가유산 실시간 영상연계 확대 사업 계획(안)]

연도	2026	2027	2028	2029	2030
사업대상	101개소 (국보 18개소 + 보물 83개소)	101개소 (국보 17개소 + 보물 84개소)	100개소 (국보 17개소 + 보물 83개소)	100개소 (국보 17개소 + 보물 83개소)	100개소 (사적, 국민, 천기, 명승, 등록)
비고	2026년 ~ 2029년 CCTV가 설치된 국보, 보물(동산 제외) 모든 개소 연계				2030년 ~ 목조유산 위주 연계

자료: 국가유산청

그런데 국가유산 현장에 설치된 CCTV 등 영상장치의 데이터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어 「개인정보호보법」 등에 따른 소유자 등의 사전 동의와 고지 절차가 필요한바, 국가유산 소유자가 데이터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또한, 실시간 위험징후 감시를 위해 CCTV 영상과 전기화재 예방 ICT 관리시스템 등을 모니터링하는 국가유산청 안전상황실의 운영 인력이 현재 5명(관리계장 1명, 사업 담당 인력 2명, 상황관리 전담인력 2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가유산 실시간 영상연계가 확대되더라도 이상징후를 즉시 탐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소유자가 실시간 영상연계 확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 활용 등을 통해 관제 효율을 향상하여 소수 인력으로 영상 관제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5.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 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은 규제 지역인 국가지정유산 내·외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 경관 향상과 함께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9억 5,000만원(247.5%) 증액된 6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사적관리	3,417	3,417	8,195	4,778	139.8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2,000	2,000	6,950	4,950	247.5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국가유산 내 지정 및 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마을(36개소)을 대상으로[17)] 국가유산과 주변 경관을 살리면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단체 자본보조(보조율 50%) 사업임.

16) 일반회계-사적관리(1231-301)(역사유적정책관)

17) 사업대상 36개소 마을 현황

구 분	종류	국가유산명
국가유산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 내 주민이 거주하는 경우 (21)	사적(13)	서울 한양도성, 서울 풍납동 토성,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포항 장기읍성, 김해 봉황동 유적, 김해 예안리 고분군, 함안 말이산 고분군, 함안 가야리 유적, 청주 상당산성, 신봉동고분군, 논산 노강서원, 순천 낙안읍성, **완도 청해진 유적***
	명승(6)	가야산 해인사 일원, 울주 반구천 일원, 두륜산 대흥사 일원, 담양 명옥헌 원림, 담양 소쇄원,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
	천연기념물(2)	담양 관방제림, 홍도 천연보호구역
국가유산 지정구역(보호구역 포함)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마을이 있는 경우 (15)	사적(12)	사천 늑도 유적, 광주 신창동 유적, 남한산성, 수원화성, 금정산성, 홍성 홍주읍성, 보령 충청수영성, **태안 안흥진성***, 울주 언양읍성, 강화산성, **나주 나주읍성***, **남원 남원읍성***
	명승(2)	**예천 회룡포***,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 논
	천연기념물(1)	마라도 천연보호구역

주) * 2024년 국가유산 경관개선 대상지 5개소

자료: 국가유산청

2024년 예산에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5개소에 대해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수행을 위한 5억원이 편성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 1차년도 정비사업, 2026년에 2차년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25년 예산 20억원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는 6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경관개선 정비 지원: ('25) 20억원 → ('26) 69억 5,000만원 - ('25) 5개소 × 8억원×50% → ('26) 5개소 × 27억 8,000만원×50%

자료: 국가유산청

나. 검토의견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은 당초 2024년 추진 완료할 계획이던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2025년까지 수행되는 중으로 보조사업자의 실집행이 부진한 가운데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집행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마을 5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이후 지방비 확보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이 2025년까지 수행되는 중으로, 태안군·나주시·완도군의 경우 2025년 9월말에 최종결과물이 제출될 예정이고 남원시·예천군은 토지매입 협의 등으로 인해 용역이 중지된 상황임.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 지자체별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일	계약명	발주액	계약액	계약기간	최종결과물 제출일
태안군	'24.9.25.	태안 안흥진성 국가유산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200	200	'24.9.25. ~ '25.9.30.	'25.9.30.
남원시	'24.12.24.	남원 남원읍성 국가유산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200	195	'24.12.24. ~ '25.6.21.	토지매입 협의 중으로 용역 중지
나주시	'24.10.14.	나주 나주읍성 국가유산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200	183	'24.10.14. ~ '25.9.30.	'25.9.30.
완도군	'24.11.25.	완도 청해진 유적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수립	200	170	'24.12.2. ~ '25.9.30.	'25.9.30.
예천군	'25.2.26.	예천 회룡포 국가유산 경관개선 가이드라인 작성	200	180	'25.3.6. ~ '25.9.1.	주민협의 중으로 용역 중지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이에 따라 2025년 8월말 기준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이 저조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산청은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을 49억 5,000만원(247.5%) 증액 편성하였음.

[2025년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지자체)						2026년 예산안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집행부진 사유	
태안군	1,234	1,234	1,234	-	1,234	202	16.4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현상변경 허가 등 필요 절차 이행	2,500
남원시	176	176	176	100	276	49.5	17.9	토지매입 협의 지연	800
나주시	210	-	-	8.5	8.5	-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필요절차 이행	1,700
완도군	380	380	380	40.5	420.5	-	-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필요절차 이행	1,000
예천군	-	-	-	100	100	100	100.0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일정 순연	950
합계	2,000	1,790	1,790	249	2,039	351.5	17.2		6,950

주 1) 2025년 8월말 기준
2) 예천군의 경우 가이드라인 마련 용역 추진일정 순연('24→'25년)에 따라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25년 설계·공사비를 교부하지 않았음

자료: 국가유산청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추진 전망 및 사업 취지를 감안하여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18)]

18) 2025년도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 지자체별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자	국가유산명	2026년 예산안	주요 사업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충남 태안군	태안 안흥진성	2,500	○ 가이드라인(기본계획)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승인(5월) ○ 설계완료(9월말) 및 착공(11월)
전북 남원시	남원 남원읍성	800	○ 가이드라인(기본계획)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승인(5월) ○ 토지매입 지연에 따라 계획변경('25년) ○ 설계('26년 상), 공사착공('26년 하) 예정
전남 나주시	나주 나주읍성	1,700	○ 가이드라인(기본계획)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승인(8월) ○ 설계완료(9월말) 및 착공(11월)
전남 완도군	완도 청해진 유적	1,000	○ 가이드라인(기본계획)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승인(5월) ○ 설계완료(9월말) 및 착공(11월)
경북 예천군	예천 회룡포	950	○ 가이드라인(기본계획) 수립 중('25년 12월 완료) ○ 설계('26년 상), 공사착공('26년 하) 예정
	계	8,026	

자료: 국가유산청

6.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 사업: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19]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예술인 행복주택, 생활SOC가 결합된 무형유산 특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5억 2,800만원(260.1%) 증액된 35억원이 편성되었음.[20]

[2026년도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무형유산보호	9,513	9,513	58,251	48,738	512.3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	972	972	3,500	2,528	260.1

이 사업은 밀양시와 전주시를 보조사업자로 하는 자치단체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각 지자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예술마을 내 전수교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추진됨. 2026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5차년도 공사비 및 감리·부대비 35억원(밀양시 20억원, 전주시 15억원)이 편성된 것임.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당초) 2021년~2023년 → (변경) 2021년~2027년
○ 사업방식: 지자체자본보조(밀양시, 전주시, 보조율 50%) 후 각 지자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사업 추진
○ 총사업비: 945.4억원(전주시 555억원, 밀양시 390.4억원)
○ 사업규모
- 밀양시: 대지면적 6,948㎡, 건축연면적 9,463㎡
- 전주시: 대지면적 4,600㎡, 건축연면적 5,017㎡

자료: 국가유산청

19) 국토교통부와 국가유산청은 2020년 8월 20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지원 사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시와 밀양시에 무형유산 특화 도시재생을 추진하였음.

20) 일반회계-무형유산보호(1431-301)(무형유산국)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 사업 국비 예산지원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밀양	1,500	410	2,164	572	572	2,000	2,332	9,550
전주	1,500	510	2,000	400	400	1,500	1,940	8,250
내용	3,000	920	4,164	972	972	3,500	4,272	17,800
	설계 및 공사비	공사 및 감리비 (1차년도)	공사 및 감리비 (2차년도)	공사 및 감리비 (3차년도)	공사 및 감리비 (4차년도)	공사 및 감리비 (5차년도)	공사 및 감리비 (6차년도)	

자료: 국가유산청

나. 검토의견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 사업은 통합공사 추진으로 행정절차 이행에 오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이 실집행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어 왔으므로, 향후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무형유산 예술마을의 전수교육관 건축은 당초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행복주택 사업과 별개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지자체가 LH와의 위수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수교육관을 분리 발주할 경우 공사비 증가, 안전 문제 등의 이유가 우려되어 통합 발주하기로 협의하였음.

그 결과 전수교육관 건축을 포함한 전체 도시재생·행복주택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공공심의, 친환경 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오래 소요되어 일정이 지연되었고, 교부된 예산이 LH 단계에서 실집행되지 못하고 계속 이월되어 왔음.

[연도별 무형유산 예술마을 조성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주체(LH)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밀양	2021년	1.500	1.500	-	1,500	-	1,500	-
	2022년	410	410	1,500	1,910	33	1,877	1.7
	2023년	2,164	2,164	1,877	4,041	548	3,493	13.6
	2024년	572	572	3,493	4,065	702	3,363	17.3
	2025년	572	572	3,363	3,935	260	(추진중)	6.6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사업시행주체(LH)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전주	2021년	1.500	1,500	-	1,500	-	1,500	-
	2022년	510	510	1,500	2,010	386	1,624	19.2
	2023년	2,000	2,000	1,624	3,624	241	3,383	6.7
	2024년	400	400	3,383	3,783	203	3,580	5.4
	2025년	400	400	3,580	3,980	2,100	(추진중)	52.8

주) 2025년 8월말 기준
자료: 국가유산청

이러한 사업추진 경과를 고려할 때, 국가유산청은 2026년 예산안 편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어 연례적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21]

21)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밀양시는 2025년 8월, 전주시는 2024년 12월에 각각 공사에 착수하여 2025년도에는 선급금 지급 등으로 80~90% 이상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7.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사업: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간직한 고유 특성을 유적 정비 및 유적간 연계, 향유공간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경관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 6,800만원(24.7%) 증액된 12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22)]

[2026년도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고도 보존 및 육성	25,108	25,108	31,679	6,571	26.2
역사문화권 정비·진흥	13,033	13,033	19,283	6,250	48.0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9,983	9,983	12,451	2,468	24.7

이 사업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23)]에 따라 역사문화권[24)]을 종합적으로 정비·육성하려는 것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정비사업비를 지원하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사업임.

이 사업은 2023년 역사문화권 정비 선도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4개소(나주·해남·강릉·함안)에 3년간('24~'26) 국비 총 242억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임. 이를 위해

2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고도 보존 및 육성(3237-309)(역사유적정책관)

2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4) 역사문화권 현황(총 9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중원, 예맥, 후백제

2024년~2025년 예산에 각각 18억원 및 99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3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12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25)]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강릉) 60억 5,000만원×국비 50% = 30억 2,500만원
○ (나주) 60억 5,000만원×국비 50% = 30억 2,500만원
○ (함안) 68억 1,800만원×국비 50% = 34억 900만원
○ (해남) 59억 8,400만원×국비 50% = 29억 9,200만원

자료: 국가유산청

나. 검토의견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사업은 당초 2024년 추진할 계획이던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5년 하반기에 수행됨에 따라 실집행이 부진한 가운데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예산 18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기획재정부는「역사문화권정비법」지원근거 미비[26)]를 이유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하였고, 이에 국가유산청은 2024년 5월 28일「역사문화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27)] 이후 2024년 9월 12일 예산이 배정되었음.

25) 2024년~2026년 연도별 예산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지자체(문화권)	사업명	총사업비	2024년 (기본・실시설계)			2025년 (정비 1차년도)			2026년 (정비 2차년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강원 강릉(예맥)	강릉 초당동 유적	12,150	900	450	450	5,200	2,600	2,600	6,050	3,025	3,025
전남 나주(마한)	나주 복암리 고분군	12,150	900	450	450	5,200	2,600	2,600	6,050	3,025	3,025
경남 함안(가야)	함안 말이산 고분군	12,150	900	450	450	4,432	2,216	2,216	6,818	3,409	3,409
전남 해남(마한)	해남 읍호리 유적	12,000	882	441	441	5,134	2,567	2,567	5,984	2,992	2,992
합계		48,450	3,582	1,791	1,791	19,966	9,983	9,983	24,902	12,451	12,451

자료: 국가유산청

26) 역사문화권정비법은 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별도 정함이 없었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사업 비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같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4년에 추진하려던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25년 하반기에 수행되는 중으로,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이 저조하여 연례적인 실집행부진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사업 지자체별 기본·실시설계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약일	계약명	발주액	계약액	계약기간
나주	'25. 2. 5.	나주 역사문화권 특화경관 설계용역	504	489	'25. 2. 5. ~ '25.10. 2.
	'25. 9.12.	나주 역사문화권 탐방센터 설계용역	168	168	'25. 9.12. ~ '26. 1.11.
해남	'25. 6.30.	해남 읍호리유적 역사문화권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875	857	'25. 6.30. ~ '25.12.31.
강릉	'25. 4.11.	강릉 초당동 유적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역사문화환경 특화경관 설계용역	677	596	'25. 4.11. ~ '25.12. 5.
함안	'24.12.11.	말이산고분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설계	900	900	'24.12.11. ~ '25.11.15.

자료: 국가유산청

[2025년 역사문화권 기초단위 정비 사업 보조사업자 등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국가유산청		보조사업자(지자체)			사업 수행기관			실집행액 (C)	실집행률 (C/A 또는 C/B)
	예산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A)	실집행액 (재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B)	실집행액		
나주	2,600	2,600	445	3,045	410				410	13.5
해남	2,567	2,567	441	3,008	2,896	-	2,896	753	753	26.0
강릉	2,600	1,650	450	2,100	208				208	10.0
함안	2,216	2,216	-	2,216	2,216	447	2,663	765	765	28.7
계	9,983	9,033	1,336	10,369	5,730	447	5,559	1,518	2,136	20.6

주 1) 2025년 9월말 기준
2) 해남군과 함안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따라 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음
3) '실집행액(C)'은 보조사업자 또는 사업 수행기관 등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실집행액임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7)「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1조의2 신설)
제21조의2(정비사업의 비용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업 비용을 지원 받는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비구역 내 국가유산의 조사 · 연구 · 발굴 · 복원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
2. 정비구역 내 역사문화환경 정비 · 육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4억 6,800만원(24.7%) 증액된 124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은 연내 공사착공(선금 70% 지급) 및 기 교부된 예산의 수시 집행관리를 통해 집행률을 제고할 계획으로, 정비사업은 편의시설·보호울타리·안내판 설치 등 비교적 공사 난이도가 낮아 착공 후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 지연의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었던 1차년도 정비사업이 사실상 2026년에 추진되고, 그 결과 2026년 예산으로 추진될 2차년도 정비사업 또한 순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이 추가로 지연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국가유산보호기금】

<지 출>

8.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사업: 사업 관리·감독 철저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사업은 다량의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민간 다량소장처의 효과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거점 다량소장처에 학예인력 배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3억 6,000만원(100.0%) 증액된 7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28)]

[2026년도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일반문화유산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	10,664	10,664	14,184	3,520	33.0
문화유산 다량소장처 보존관리 지원	1,758	1,758	2,145	387	22.0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360	360	720	360	100.0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재)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불교중앙박물관)을 보조사업자로 하는 민간경상보조(보조율 100%)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거점 다량소장처를 현재 10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음.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25년) 3억 6,000만원 → (’26년) 7억 2,000만원
- (’25년) 3,600만원×10개소 = 3억 6,000만원 → (’26년) 3,600만원×20개소 = 7억 2,000만원

자료: 국가유산청

28) 국가유산보호기금-일반문화유산 조사 및 보존관리 지원(1236-304)(문화유산국)

나. 검토의견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사업은 현재 10개소인 거점 다량소장처를 2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예산안이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준비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량소장처는 국가지정문화유산뿐만 아니라 비지정문화유산 또한 다량으로 소장한 곳으로, 국가유산청은 2025년 61개 민간 다량소장처의 효과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소장자·관리자 대상 문화유산 관리교육, 항온항습기 가동비 등 경상경비 지원 및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사업은 61개 다량소장처 중 학예인력이 배치된 10개의 거점 다량소장처를 통해 해당 권역 내 다량소장처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유산 다량소장처의 안정적인 보존 환경 및 운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거점 다량소장처 역할 강화 사업의 주요 학예업무]

① 관리기관 시설점검 ② 관리기관 소장품 목록 구축(성보e-곳 성보관리시스템 활용) ③ 관리기관 보존처리 필요 유물 조사 ④ 기타 관리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일상 업무 ⑤ 특별전시 또는 교육프로그램

자료: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은 2026년 거점 다량소장처를 20개소로 확대하기 위해 이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100.0%) 증액된 7억 2,0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관리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거점 다량소장처별 학예인력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2~3개소에 불과하여, 다량소장처 61개소의 문화유산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점 다량소장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25년 다량소장처 현황을 살펴보면, 통도사·범어사·월정사 성보박물관 및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등 일부 다량소장처에 문화유산이 집중되어 있고, 절반 이상의 다량소장처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300개 미만으로 비교적 작은 규모이며,[29] 현재 각 다량소장처별로 관리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바, 거점 다량소장처를 현재의 2배 규모로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29) 문화유산 100개 미만: 13개소, 100개 이상 200개 미만: 10개소, 200개 이상 300개 미만: 8개소 등

[2025년 다량소장처별 문화유산 수량 및 관리인력 등 운영 현황]

(단위: 명, 개)

연번	권역	기관명	보존시설		문화유산 수량				관리인력		운영 형태
			분류	준공	합계	국가 지정	지방 지정	비지정	학예	일반	
1	강원	**월정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19	4,356	3	12	4,341	6	4	상시
2		수타사 성보박물관	전시관	2005	60	2	4	54	-	2	상시
3		신흥사 유물전시관	전시관	2017	105	3	6	96	-	1	상시
4		낙산사 의상기념관	전시관	2000	57	3	4	50	-	1	준비
5	서울	불교중앙박물관	박물관	2007	3,027	21	6	3,000	4	4	상시
6		수국사 수장고	수장고	2021	37	1	6	30	-	1	제한
7	경기	용주사 효행박물관	박물관	2005	299	1	17	281	-	2	상시
8		중앙승가대 수장고	수장고	2017	109	1	-	108	-	2	제한
9		청계사 수장고	수장고	2018	56	1	5	50	-	1	제한
10		봉녕사 세주묘엄박물관	박물관	2012	2,140	-	2	2,138	1	4	상시
11	충청	법주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24	823	8	12	803	2	1	상시
12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박물관	2012	4,991	-	7	4,984	2	3	상시
13		**마곡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21	497	1	7	489	2	-	상시
14		**수덕사 근역성보관**	박물관	2022	1,303	11	6	1,286	3	1	상시
15		개심사 보장각	수장고	2016	340	14	2	324	-	1	제한
16		무량사 성보관	수장고	2022	173	6	10	157	-	1	제한
17	경상	**직지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1995	3,053	9	4	3,040	2	-	준비
18		용문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06	116	7	1	108	1	-	준비
19		**은해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04	346	4	1	341	1	2	상시
20		**동화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00	1,050	10	15	1,025	1	1	상시
21		파계사 보장각	수장고	2015	311	3	4	304	-	1	제한
22		용연사 보장각	수장고	2017	72	1	-	71	-	1	제한
23		불국사 박물관	박물관	2018	146	3	-	143	2	7	상시
24		기림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06	264	3	-	261	-	2	상시
25		불영사 성보관	박물관	2009	72	1	3	68	-	2	제한
26		**보경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14	117	2	1	114	1	-	상시
27		오어사 유물전시관	전시관	1999	14	1	-	13	-	1	상시
28		봉정사 성보관	박물관	2004	112	5	1	106	-	1	제한
29		부석사 박물관	박물관	2010	197	3	-	194	-	1	준비
30		장말손 유물전시관	수장고	2021	316	5	-	311	-	1	제한
31		**해인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02	1,959	14	9	1,936	4	1	상시
32		청곡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16	154	2	2	150	-	1	준비
33		쌍계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02	291	6	6	279	-	2	준비
34		옥천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1998	499	2	13	484	-	2	준비
35		통도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1999	9,938	23	48	9,867	6	3	상시
36		표충사 호국박물관	박물관	2003	379	4	13	362	4	1	상시
37		범어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21	6,683	2	60	6,621	4	3	상시
38		은하사 보장각	수장고	2000	64	-	1	63	-	1	제한
39		화방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20	316	-	16	300	-	1	준비

(단위: 명,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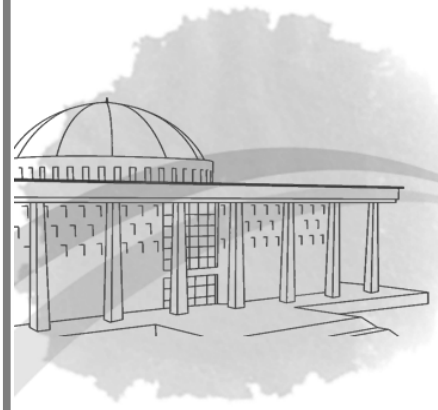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연번	권역	기관명	보존시설		문화유산 수량				관리인력		운영 형태
			분류	준공	합계	국가 지정	지방 지정	비지정	학예	일반	
40	전라	금산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1998	683	3	1	679	-	1	준비
41		선운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1998	236	4	9	223	1	3	상시
42		충간공보물제651호 박물관	박물관	2013	414	1	-	413	1	1	상시
43		고희영정외 문중유물관	박물관	2000	7	1	-	6	-	1	준비
44		부안김씨 종중 문중유물관	박물관	1988	65	1	-	64	-	1	제한
45		동국사수장고	수장고	2016	387	1	-	386	-	1	제한
46		**송광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16	3,573	31	10	3,532	6	1	상시
47		보림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13	253	3	-	250	-	1	준비
48		선암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00	1,653	9	2	1,642	-	2	준비
49		**화엄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13	255	3	-	252	2	1	상시
50		태안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23	36	2	-	34	-	1	준비
51		흥국사 의승수군유물전시관	박물관	2003	219	6	2	211	-	2	준비
52		백양사 고불성보관	박물관	2004	307	1	9	297	1	2	상시
53		불갑사 수다라성보관	박물관	2009	115	2	6	107	-	2	상시
54		용화사 묵담유물관	전시관	2004	450	1	-	449	-	1	제한
55		대흥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12	3,672	7	4	3,661	-	1	상시
56		도갑사 도선국사성보관	박물관	1999	501	1	-	500	-	3	준비
57		무위사 성보박물관	박물관	2021	32	2	-	30	-	5	상시
58		천은사 수장고	수장고	2021	182	7	1	174	-	1	제한
59		미암 박물관	박물관	2011	347	1	-	346	1	1	상시
60		황진가고문서전시관	전시관	2015	219	1	-	218	-	2	상시
61		심곡사 수장고	수장고	2022	69	1	4	64	-	1	제한
합계		61개소			58,517	275	352	57,890	58	99	

주 1) 2025년 10개 거점 다량소장처(학예인력 배치 기관) 볼드체 및 음영 표기

2) 상시: 운영중인 기관, 제한: 수장고로만 사용 등으로 필요시 공개, 준비: 일시적인 휴관・리모델링・보수 등

자료: 국가유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은 14조 6,555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030억원(12.3%) 증가함.

예산은 9조 4,97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384억원(16.4%) 증가하고, 기금은 5조 1,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646억원(5.4%) 증가함.[1)]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81,592	81,592	94,977	13,384	16.4
기 금	48,932	48,932	51,578	2,646	5.4
총수입	130,524	130,524	146,555	16,030	12.3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은 20조 35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2,934억원(6.9%) 증가함.

문의 : 강영옥 예산결산조사관 kang052@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예산은 10조 6,4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39억원(1.6%) 증가하고, 기금은 9조 3,89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295억원(13.7%) 증가함.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04,818	108,396	106,457	1,639	1.6
기 금	82,598	84,089	93,893	11,295	13.7
총지출	187,416	192,485	200,350	12,934	6.9

나. 예산안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은 총 7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6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18조 9,425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766억원(12.3%) 증가함.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13	213	223	10	4.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40,055	144,213	162,544	22,489	16.1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430	430	430	-	-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	0.3	0.3	0.4	0.1	32.4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5	35	110	75	216.7
양곡관리 특별회계	27,925	27,925	26,117	△1,808	△6.5
합 계	168,659	172,817	189,425	20,766	12.3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6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25조 6,324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045억원(8.0%) 증가함.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72,595	77,102	64,872	△7,723	△10.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22,813	126,040	146,511	23,698	19.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5	165	168	3	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624	13,898	18,496	4,872	35.8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57	157	159	2	1.3
양곡관리특별회계	27,925	27,925	26,117	△1,808	△6.5
합 계	237,279	245,287	256,324	19,045	8.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개 기금(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지관리기금, 축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1조 4,949억원으로 전년 대비 9,989억원(9.5%) 증가함.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농지관리기금	23,289	23,289	27,802	4,513	19.4
양곡증권정리기금	5,509	5,509	3,890	△1,619	△29.4
축산발전기금	10,254	10,254	11,215	961	9.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826	5,053	5,298	472	9.8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31,045	31,045	31,124	79	0.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978	27,255	30,481	4,503	17.3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4,059	4,059	5,139	1,080	26.6
합 계	104,960	106,463	114,949	9,989	9.5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13개(3,555억 1,0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촌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69개) 중 7개 군을 공모·선정하여 약 24만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703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값을 지원하여 근로자 밥값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9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국가농업 AX 플랫폼	70,500
2	직장인 든든한 한끼	7,94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	노지스마트농업ICT 융복합확산	10,300
4	스마트농업 첨단산업밸리조성	200
5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농업)	67,500
6	AX기반지능형농작업협업산업화기술개발(R&D)	6,975
7	첨단바이오기술기반수요연계형그린바이오소재산업화기술개발(R&D)	6,900
8	합성화학기반K-신작물보호제글로벌산업화(R&D)	1,500
9	농생명자원기반국가필수의약품원료공급망대응기술개발(R&D)	6,000
10	반려동물난치성질환극복기술개발(R&D)	2,775
11	지속가능한 저탄소축산확산을위한기술개발(R&D)	3,0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0,337
13	농업농촌국민체감AX전환기술개발(R&D)	1,575
총지출		355,51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농업재해보험 사업, 재해대책비 사업, 맞춤형농지지원 사업, 농식품바우처 사업 및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사업 등 총 43개임.[3)]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식물검역검사및수출촉진	19,690	26,834	7,144	36.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115,668	163,715	48,047	41.5
3	농업재해보험	801,929	887,089	85,160	10.6
4	재해대책비	160,000	250,000	90,000	56.3
5	농업자금이차보전	681,878	729,661	47,783	7.0
6	농식품모태펀드출자	55,000	70,000	15,000	27.3
7	농촌고용인력지원	27,288	39,916	12,628	46.3
8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구축	4,186	14,476	10,290	245.8
9	농식품 해외시장 진출	51,289	63,602	12,313	24.0
10	농식품글로벌경쟁력강화	92,729	115,751	23,022	24.8
11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7,908	76,538	18,630	32.2
12	농식품바우처	38,100	73,991	35,891	94.2
13	여성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6,500	9,640	3,140	48.3
14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1,989	4,555	2,566	129.0
15	데이터기반스마트농업확산지원	4,152	8,012	3,860	93.0
16	첨단정밀육종활용고부가산업화기술개발(R&D)	6,375	10,375	4,000	62.7
17	K-수직농장세계화프로젝트(R&D)	6,150	8,200	2,050	33.3
18	경제동물용의약품및의료기기고부가화기술개발(R&D)	6,375	8,500	2,125	33.3
19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6,750	9,275	2,525	37.4
20	자원순환형그린바이오기술개발(R&D)	1,500	2,000	500	33.3
21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4,068	5,416	1,348	33.1
22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조성사업	1,000	5,000	4,000	400.0
23	반려동물연관산업해외수출산업화	2,720	8,595	5,875	216.0
24	농업기반시설 치수능력확대	8,850	13,250	4,400	49.7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B)	증감 (B-A)	(B-A)/A
25	기후변화대응지능형농업기반 관리기술개발(R&D)	4,312	7,063	2,751	63.8
26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3,119	4,830	1,711	54.9
27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조성	1,278	10,185	8,907	696.9
28	동물복지축산인증제활성화	441	742	301	68.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04,501	130,380	25,879	24.8
30	배수개선	485,164	641,051	155,887	32.1
31	농촌유휴시설활용지역활성화	1,555	2,270	715	46.0
32	토양개량제사업(제주)	1,077	1,697	620	57.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33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융자)	458,246	510,000	51,754	11.3
34	비축지원	812,532	898,394	85,862	10.6
35	도매유통활성화지원(융자)	115,400	146,000	30,600	26.5
36	농산물산지유통활성화	29,387	46,477	17,090	58.2
37	농산물온라인거래활성화	14,868	30,387	15,519	104.4
38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융자)	2,400	7,234	4,834	201.4
[농지관리기금]					
39	맞춤형농지지원(융자)	1,113,440	1,807,690	694,250	62.4
40	농지연금(융자)	246,877	276,629	29,752	12.1
41	새만금지구개발	51,516	176,000	124,484	241.6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2	축사시설현대화(융자)	95,959	106,761	10,802	11.3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3	공익기능증진직불	2,953,622	2,969,914	16,292	0.6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농산물가격안정기금·농지관리기금 등 7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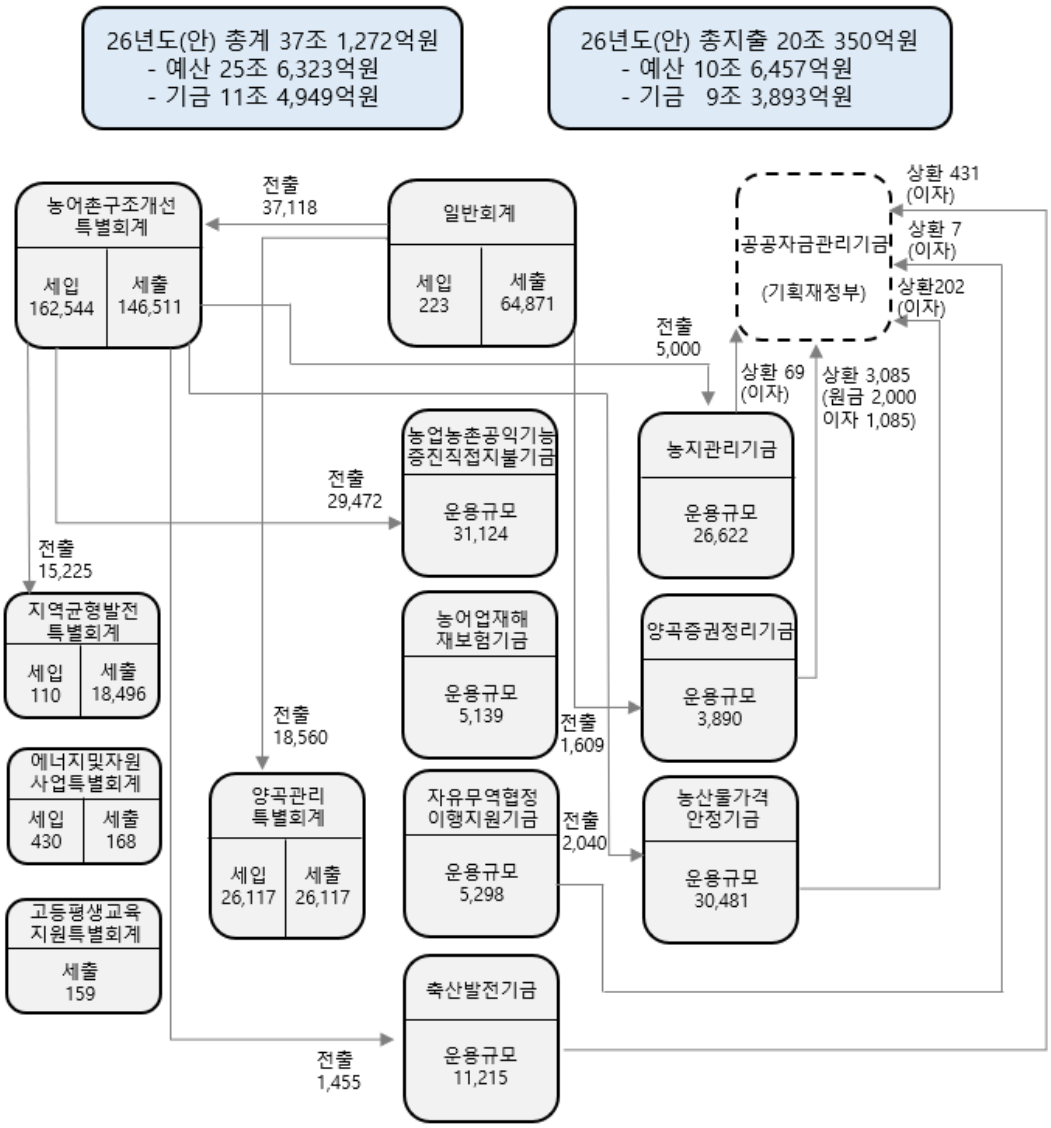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3조 7,118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로 1조 8,560원, 양곡증권정리기금으로 1,609억원이 각각 전출되었음.

또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조 5,225억원, 축산발전기금 기금으로 1,455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기금으로 2조 9,472억원, 농지관리기금으로 5,000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2,040억원 전출되었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서 구조개선사업계정으로 3조 8,100억원이 전출되었음.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양곡증권정리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2,000억원의 예수원금이 상환되었으며, 1,085억원의 예수이자가 상환되었음.

또한 축산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431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202억원, 농지관리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69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으로 7억원 예수이자가 상환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수산발전기금 제외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 대비 6.9%(1조 2,934억원) 증가한 20조 350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는데,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등 정부의 핵심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식량안보 및 유통구조 혁신, 국민 먹거리 돌봄 강화,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AI 기반의 농업 스마트화 등에 집중 투자되고 있음.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전략작물직불 예산·농식품 바우처 예산이 각각 1,756억원, 359억원 증액되었고, 농가 소득안전망과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농업수입안정보험·농작물재해보험·재해대책비가 각각 674억원, 175억원, 900억원 증액되었음. 청년농의 안정적 농지 확보 등을 위한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이 6,943억원 증액되었고,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1,380억원 편성되었음. 또한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조성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1,703억원이 편성되었고, 농촌공간 정비 예산이 474억원 증액되었음.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보조예산을 지원받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예산에 자체 매칭자금을 더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촌소멸 대응 및 농촌공간 조성사업 등의 공사용역을 위탁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미집행 수탁자금 약 2조원을 일반 보통예금에만 단순 예치함으로써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기대 이자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금을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기타재산이자수입’에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둘째,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은 내역사업 간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정하고 지원기간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수혜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2026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예산안은 7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4년간 투자대기성 자산의 과다 보유, 2026년 회수 예정 재원, 자펀드 결성-실투자 간 시차에 따른 집행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자금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은 본사업 전환에 따라 2024년 대비 25.6배 증

액된 2,078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낮은 가입률로 8월말 현재 집행액이 302억 1,800만원(집행률 14.5%)에 그치고 있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2,751억 8,100만원은 이러한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69개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0.3%에 불과하고, 지방비 매칭비율이 6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한국농어촌공사 미집행 수탁자금(약 2조원)의 보통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손실 문제

가. 개 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조예산(지자체 + 민간)은 농촌소멸 대응, 농촌공간 조성, 청년농업인 육성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대 등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6년 전체 보조예산은 전년 대비 5,760억원(6.4%) 증가한 9조 6,832억원이 편성되었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중 보조 예산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안)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	17,378	17,461	17,427	18,318	18,438	20,594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32,981	31,022	35,653	36,851	38,173	40,634
민간자본보조 (320-07)	11,167	10,935	10,517	10,995	11,039	10,075
민간경상보조 (320-01)	19,079	21,484	23,098	22,444	23,422	25,529
계	80,605	80,902	86,695	88,608	91,072	96,832

주) 본예산액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지자체 및 민간)가 국고보조금 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의 국고 반납분이 계상되는 세입항목인 ‘기타재산이자수입’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4억 4,000만원(67.9%)이 증가한 85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4)]

4) 일반회계/농어촌구조개선·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정책기획관)

[2026년도 일반회계 등 3개 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248	248	375	127	51.2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4,518	4,518	7,325	2,807	62.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자율)		303	303	694	391	129.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지원)		-	-	115	115	순증
계		5,069	5,069	8,509	3,440	67.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지자체와 민간에 대한 보조예산은 원칙적으로 집행 소요 발생 전까지 e나라도움(한국재정정보원)에서 통합 관리·운용되고 있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을 e나라도움에서 전액 인출한 뒤 자체 매칭자금을 합하여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위탁하였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해 집행이 지연되고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그 보조금 재원을 한국농어촌공사 계좌에 단순 예치만 하고 있다는 점임.

즉,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된 재원은 보조금(국비+지방비)이므로, 보조금 법령이나 위·수탁 협약상 한국농어촌공사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지시나 상호협의 없이는 임의로 자금을 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2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이 보통예금에 단순 예치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고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한국농어촌공사가 미집행 수탁자금 약 2조원을 보통예금에만 단순 예치함으로써 매년 수백억원의 기대 이자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장·단기 금융상품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기타재산이자수입'에 반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다수 지자체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예산에 자체 매칭자금을 더해, 전문인력과 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에 농촌소멸 대응 및 농촌공간 조성사업 등을 위탁하고 있음.

특히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의 지방이양과 농어촌 인프라 구축 확대에 따라 관련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농어촌정비사업 전문기관인 공사의 대행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주요 사업별 농식품부 → 지자체 → 공사 위탁현황 및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농식품부 → 지자체 보조예산		지자체 → 한국농어촌공사 위탁		한국농어촌공사 집행실적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말 이월	2024년말 이월
농촌용수개발사업	8,000	8,000	264,723	214,931	32,541	35,032
일반농산어촌개발·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	553,867	517,360	629,682	750,345	800,308	842,663
재해대책비	40,000	80,000	307,980	141,747	7,219	104,003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108,000	104,121	98,661	62,193	83,009	56,640
임대형스마트팜사업	60,000	31,000	56,620	56,506	73,552	57,080

주) 재해대책비는 농림축산식품부 세부사업 재해대책비가 아닌 행정안전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지자체로부터 수탁한 사업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그러나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지역개발 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과 계획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집행이 부진한 상황에서도, 지자체가 사업 초기에 공사에 자금을 과도하게 교부하거나, 국비 미집행 지적을 회피하기 위해 보조금을 공사로 일괄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사의 연도말 미집행 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보면 2024년말 기준 공사의 미집행 잔액 2조 1,338억원 중 86%인 1조 8,217억원이 지자체 수탁자금임.

[공사의 연도말 미집행잔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연도말 미집행잔액	21,923	21,923	21,495	21,338
(지자체 수탁자금)	(18,006)	(19,656)	(18,462)	(18,217)

주) 한국농어촌공사의 결산보고서 기준임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그러나 공사는 약 2조원의 막대한 자금을 보통예금 형태로 단순 예치하고 있어, 정기예금(연 3%)으로 운용했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연간 약 580억원의 이자수익이 사실상 손실되고 있음.

이와 대조적으로 보조금을 통합 관리하는 한국재정정보원(e나라도움)은 MMDA(Money Market Deposit Account) 운용 등을 통해 2024년 평균 3.54%의 이자수익을 창출한 바 있음.[5)]

[한국농어촌공사의 자금 운용에 따른 수익 비교]

보통예금 (연 0.1% 가정)	정기예금 (연 3% 가정)
2조 × 0.1% = 20억원	2조 × 3% = 600억원 수익 *** 보통예금 대비 580억원 증가**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가 간접보조사업자[6)]라는 지위 때문에 운용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고 손실 방지 차원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며, 그간 잘못된 운용 지시로 막대한 국고 손실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특히 공사는 발주 중심의 업무가 대부분이므로 선금·중도금·잔금 지급 일정이 비교적 예측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집행 자금을 장·단기로 운용하면 상당한 이자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가장 이월액이 많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중심지, 기초)의 경우 지구 429개소 전부 현재 보통예금으로 관리 중임. 다만 예외적으로 2020~2021년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지구가 1개소 있었음.

6)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수탁하는 사업은 「보조금관리법」 제34조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0조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간접보조사업자인 공사는 보조금을 수탁받아 집행만 하는 주체이므로 자체 운용은 제한된다는 입장임.

【일반회계】

<세 출>

2. 국가 농업 AX플랫폼 사업(신규): 출자 근거 및 회수 절차 보완 등

가. 개 요

‘국가 농업 AX플랫폼’ 사업은 출자를 통해 총괄 SPC[7]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설립하고, 민·관 공동 출자로 온실·축사 스마트팜 등 사업별 SPC를 추가로 설립하여 AI 기술을 농업분야로 확산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0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6년도 국가 농업 AX플랫폼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 농업 AX플랫폼	-	-	70,500	70,500	순증

이 사업은 2030년까지 민·관 공동 출자로 총 2,900억원(정부출자 1,400억원, 민간출자 1,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6년 예산안은 국가 농업 AX 플랫폼 총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출자금 700억원과 운영지원금 5억원으로 구성됨.

[국가 농업 AX플랫폼 사업 개요]

○ **(2026년도 예산안)**
- 국가 농업 AX 플랫폼 총괄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출자금 700억원
- 플랫폼 운영지원을 위한 보조금 5억원

○ **(사업기간 및 사업규모)** 2026년~2030년, 총 2,900억원(정부출자 1,400억원, 민간출자 1,500억원)
○ **(추진방식)** 공모를 통해 민간참여자 선정,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7)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 SPC):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만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립하는 회사임.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는 민자도로 건설을 위해 SPC를 설립하고, 건설·운영 후 청산

8) 일반회계-국가 농업 AX플랫폼(2220-300)(농식품혁신정책관)

* 컨소시엄은 농업경영체, 농식품・농산업 기업, 민간 금융기관, 해외 유통채널, 지자체 등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 농업 AX플랫폼 사업을 위한 출자 근거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농업법”) 제19조[9]를 제시하였으나, 해당 조항은 국가가 자회사인 특수목적법인(스마트팜 SPC) 설립을 위한 재정지원(출자) 근거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특히 2030년까지 총 1,400억원 규모의 출자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출자금 회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규사업인 ‘국가 농업 AX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농어촌공사(자회사인 총괄 SPC 설립)에 700억원을 출자하면서, 그 근거로 「스마트농업법」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공기관 등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를 제시하였음.

그러나, 동 조항은 공공기관 등에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 또는 지원’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가가 한국농어촌공사에 별도의 법인(자회사) 설립을 위한 ‘출자’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허용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10]

---

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스마트농업 관련 산업 육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6조(자본금 및 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고, 전액을 국가가 출자(出資)한다.
② 국가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조성한 토지 또는 농업기반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10) **출연**은 국가가 무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형태이고, **지원**은 보조금, 융자, 세제 혜택, 컨설팅・교육 등 광범위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의미

또한 SPC 존속기간 도과 이후 감자절차 등 출자금 회수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회수 방안을 사전에 확정할 필요가 있음.[11]

둘째, 민간참여자 범위에 지자체·도시공사 등 공공부문을 포함하고 있는데, 만약 공공부문의 출자지분이 대부분을 차지할 경우 순수 민간부문은 형식적인 참여에 그칠 가능성이 있으며, 더욱이 필요 시 정책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1,600억원을 충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정부 의존적 구조로 인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순수 민간 출자 최소 조성비율을 명시하는 등 실질적 민간참여를 확보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 농식품기업, 해외유통채널, 민간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 외에 지자체와 도시공사까지 민간참여자로 포함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민간자본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 시장기반을 조성하려는 정책형 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기관을 민간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업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1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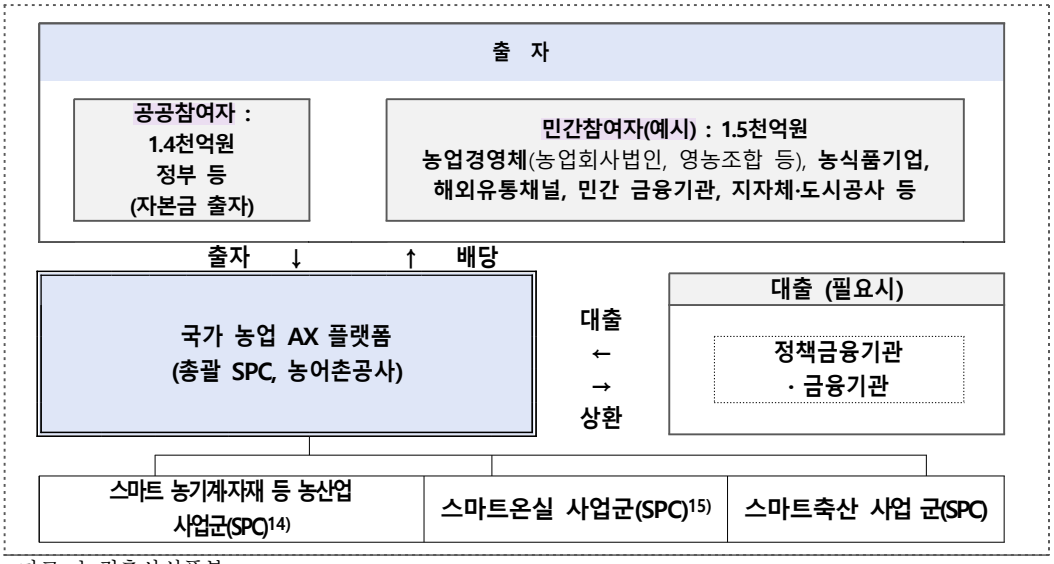
---

11) (출자금 회수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 공모 과정에서 적정 존속기간을 설정하고, 일부 우선주 참여나 매수청구권 설정 등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높이며, 구체적인 회수 방식은 사업 시행합의서에 명시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출자이후 감자절차)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례(2023년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정부 출자금 100억원 반납)를 근거로 별도 규정이 없어도 감자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만 원활한 감자절차를 위해 정부 출자 지분에 대한 별도 회계 처리, 한국농어촌공사 정관 내 감자 관련 조항 신설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임.

12) 일부 국가 펀드사업의 경우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민간참여자로 허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수익 창출을 전제로 한 투자형 재원조달 구조에서 초기 투자 위험을 완화하고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반면에 이 사업은 공공 인프라 구축과 민간 지원을 수행하는 정책형 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공기관을 민간으로 분류하는 것은 사업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13) 농식품부는 이 사업을 펀드 출자가 아닌 공사 출자사업으로 편성한 사유로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펀드 출자는 일반적으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며, 첨단기술 확산 등 정책목표를 강제하기에 한계가 있음.
- 공사 출자를 통한 사업별 SPC 설립은 민간의 자본 투입을 촉진하면서도, 공공성 등 정책적 목표 실현에 효과적임.

[국가 농업 AX플랫폼 사업구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연도별 투자계획(안)에 따르면 필요 시 정책금융기관 대출(1,600억원)로 투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만약 순수 민간부문의 출자가 계획에 미달될 경우 정부 재원과 정책금융기관 대출로 자금을 충당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방식은 이자비용 부담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사업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경우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이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게 될 우려도 있음.

따라서 민간출자 최소 조성비율을 명확히 설정하고, 공공재원 의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해 보임.

14) 스마트 농기계・자재 등 농산업 사업군(SPC) : 농업・농촌이 직면한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전문 인력이 첨단 장비(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등)를 활용한 농작업 대행 지원. 농산업센터는 ①첨단 농기계 장비 구비, ②농작업 대행 인력 고용・위탁(농협 농작업대행단 등) ③ 농작업 대행단 교육을 통해 서비스 제공

15) 스마트팜 사업군(SPC): AI기술을 활용해 재배・사육과정 전반을 정밀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첨단시설 조성 (민간참여자 중 농업법인·농업인이나 전문성을 갖춘 농업경영인이 스마트팜 SPC를 운영)

[국가 농업 AX플랫폼 연도별 투자계획(안)]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출자	재정	700	175	175	175	175	1,400
	민간	300	300	300	300	300	1,500
	소계	1,000	475	475	475	475	2,900
대출(필요시)		-	**400**	**400**	**400**	**400**	**1,6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셋째, 국가 농업 AX플랫폼 사업은 사업수행절차가 다단계로 복잡하여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특히 특정 기업이 SPC에 출자하면서 동시에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임.

이 사업은 다단계 사업수행 절차(농림축산식품부 → 총괄 SPC → 개별 SPC → 용역 발주 → 기업 → 농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단계별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책임성 확보와 발주 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는지를 사전에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별 SPC에 지분을 가진 기업이 동시에 해당 SPC의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발주의 객관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신규): 내역사업 간 지원대상·지원기간 일치 필요 등

가. 개 요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은 시범 선정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향후 3년간(’26~’28) 아침값 또는 점심값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밥값 부담 경감과 외식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9억 4,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직장인 든든한 한끼	-	-	7,948	7,948	순증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	-	1,948	1,948	순증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	-	6,000	6,000	순증

내역사업인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시범 선정된 각 2개 산단, 총 34개소의 근로자 3,740명에 대하여 월 4만원(국비 100%)을 지원하는 것임.

또 다른 내역사업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선정된 근로자 5만명을 대상으로, 회사 인근 식당에서 점심 결제 시 결제금액의 20%를 할인해 주되 월 4만원 한도(국비 50%)로 지원하는 것임.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 민간경상보조(320-01): 1,948백만원 - **식비: 1,795백만원** **(3,740명×4만원×12개월)** - 운영비: 153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1,000백만원 - (운영비) 홍보 및 신청·접수 시스템 구축 등 800백만원 - (연구용역비) 사업지침 마련 및 효과분석 등 200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5,000백만원 - **식비: 5만명×4만원×5개월×50%(국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6) 일반회계-직장인 든든한 한끼(2837-300)(식품산업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신규사업인 직장인 든든한 한끼 사업은 내역사업 간 지원대상과 지원기간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원대상을 중소기업 근로자로 한정하고, 지원기간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 중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이하 “아침밥 지원”) 사업은 다른 내역사업인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이하 “점심밥 지원”) 사업과 달리 지원대상에 중견기업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는데,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자체 복지 역량이 비교적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7]

또한 지원기간을 살펴보면, 아침밥 지원 사업은 12개월로 1년 내내 운영되는 반면, 점심밥 지원 사업은 신청·접수 시스템 구축 기간 등을 고려하여 5개월로 제한되어 각각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음.[18]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이 아침과 점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나, 두 사업의 수혜기간이 달라 근로자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지원기간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내역사업간 지원대상과 지원기간 등 비교]

구분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 대상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근로자** - 공동식당 운영 등 산단 내 기업으로 한정	중소기업 근로자에 한정
지원 기간	**12개월**	**5개월**(사업준비 기간 등을 감안)
지원 단가	4만원/1개월(2,000원×20일)	외식업종에서 결제한 금액의 20% (월 4만원 한도, 국고 2만원 + 지방비 2만원)
지원 인원	3,740명(산단 34개소×110명*) * 업체 평균 식수인원	5만명(12개 이상 산단을 보유한 인구감소지역 중 선정된 지자체의 중소기업 종사자 수 83,566명×신청률(70%) = 약 5만명)
선정 방법	34개소*(17개시도×2개소) * 2028년까지 102개소로 확대	인구감소 지역 내에 속하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경우 공모 거쳐 선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재구성

17)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파일럿 사업을 중견기업을 포함한 산업단지 입주기업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음. 중견기업이 산업단지 내 공동식당을 활용하여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산단 입주기업 중 중견기업만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임.

18) 농식품부는 아침밥 지원의 경우 기운영 중인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운영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내년도에 빠른 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다만, 점심밥 지원은 사업 신청·접수 시스템 구축 및 카드사·디지털 식권 업체 등 지출 유관기관과 협의를 위한 사전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둘째, 점심밥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근로자 지원이 주목적이나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할 경우, 非인구감소지역이 선정되는 등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수혜 여부가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점심밥 지원 사업은 2021년 10월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이 가운데 12개 이상 산단을 보유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되,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 매칭여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 非인구감소지역 지자체도 지원대상으로 확대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이 사업은 좋은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신청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준비와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시범사업의 특성상 지원대상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업의 수혜자는 전국 중소기업 근로자의 0.3%에 불과하여 시범사업 기간(3년)동안 소외되는 대다수 근로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임.

아침밥·점심밥 지원 대상은 2026년 약 5.4만명으로 시작하여 2028년까지 6.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나, 이는 우리나라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 1,911만명[19]의 0.3%~0.4% 수준에 불과함.

특히 산업단지 지역에 속하지 않은 근로자는 아침밥 지원 사업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며, 재정여건상 점심밥 지원 사업도 점진적으로 시행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수 근로자의 소외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19)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중소벤처기업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세 출>

4.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신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 환수 검토 등

가. 개 요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은 AI기술을 접목한 농식품 분야 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통하여 농어촌 현장 문제를 해결하고 농축산식품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7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0]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	-	67,500	67,500	순증

2026년도 계획을 보면 1년 내 즉시 개발 가능한 제품에 대해서는 30억원을,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의 경우에는 2년간 지원하되 매년 각 15억원을, 보조사업자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선정된 기업에 지원할 예정임.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지원내용) 1~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 (지원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
○ (지원방법) 농림축산식품부(민간경상보조) → 농업기술진흥원(보조사업자) → 기업지원
○ (지원유형) Type1: 15개社: 30억×15개=450억원
Type2: 15개社: 15억×15개=225억원), 2년 지원

주) 지원대상의 ‘공모를 통해 선정된 프로젝트’란 ①정부가 제시한 분야・주제에 대해, ②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용화 할 제품・서비스를 신청・제안하고, ③심사・평가를 거쳐 선정된 상용화 지원과제를 의미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2220-301)(농식품혁신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국가가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 및 농가 의무 공급·중소기업 확산 등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농업분야 AI 제품·서비스를 1~2년 내 신속 개발하여 상용화하는 것으로, 기업의 생산 제품·서비스에 대한 직접 지원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은 전부 개발 업체에 귀속되는 구조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그린바이오·푸드테크 등을 대상으로 총 30개 프로젝트[21]를 선정하고 1차년도인 2026년도에 제품당 15~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인데,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상당한 수익을 얻는 경우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22]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구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Type1: 15개社 ('26년 30억*15개=450억원)	▸1년內 즉시 개발 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품목 ▸1년('26년)간 제품당 30억원 지원 (민간부담 20%별도)
Type2: 15개社 ('26년 15억*15개=225억원)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품목 ▸2년('26~'27년)간 제품당 30억원 지원(민간부담 10~20%별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I 제품·서비스의 특성상 지원 대상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직접적인 상용화 성과와 더불어 유지·보수 등 사후적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농가 의무 공급·중소기업 확산 등 공공성 확보 방안 및 해당 수익의 일부를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1) 프로젝트 선정 대상은 스마트 농업(스마트 재배·생육관리, 데이터 통합·지능형 의사결정 지원, 자율주행·자동화 농기계 등), 그린바이오(종자, 동물용 의약품, 미생물, 곤충 등), 푸드테크(식물기반식품 제조기술, 간편식 제조기술, 식품프린팅 기술, 외식 푸드테크 기술 등) 등 농식품부 업무 전반임.

2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둘째, 이 사업은 정부지원과 별도로 ‘민간부담 20%’를 설정하고 있으나, 대·중소기업 간 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고 기업별·제품별 지원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한 부담률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대기업의 경우 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사업은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만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여러 부처의 프로젝트에 중복 참여할 가능성이 높음. 이와 관련하여 제품당 30억원 지원한도가 기업당 총한도인지, 또는 개별 제품별 지원 한도인지가 불명확하여 특정 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별·제품별 지원 한도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이 사업은 각 부처의 소관 업무에 따라 개별 세부사업으로 추진되는바, 타부처와 중복될 수 있는 농촌 의료·농촌 교통·물류 등 서비스 과제의 경우에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사업을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5~8 단계 기술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농산업·농촌서비스·식품산업 전반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할 계획임

그러나 TRL 단계별 지원대상을 보면, 농산업 분야는 병해충 탐지·스마트팜 제어· 자율주행 트랙터 등 농가 현장 적용이 즉시 가능한 기술이 중심인 반면, 농촌서비스·식품산업 분야는 ‘농촌 맞춤 교통 서비스’, ‘AI 원격 진료 시스템’, ‘물류창고 스마트 포장 시스템’ 등과 같이 교통·의료·물류 등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따라서 타 부처 사업과 중복될 우려가 있는 과제는 중복 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대상 예시]

단계	설명	예시		
		농산업	농촌서비스	식품산업
TRL6	실제 운용 환경 유사 수준의 시제품 시험 (파일럿 규모)	특정 지역 농가에 AI 병해충 탐지 카메라 설치·시험	군단위에서 **농촌 맞춤 교통 서비스** 파일럿 운영	**대형마트 물류창고에서 스마트 포장 시스템**

단계	설명	예시		
		농산업	농촌서비스	식품산업
				시험
TRL7	실제 운용 환경에서의 시스템 시연 (시범적용단계)	실제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에 AI 제어 시스템 설치・시연	**농촌 보건지소에서 AI 원격 진료 시스템 시범운영**	실제 **식품공장 생산라인에 AI 공정 제어 시스템** 적용
TRL8	실제 시스템 완성 및 인증(실제 환경에서의 검증 완료)	농가에서 상용가능한 수준의 자율주행 트랙터 인증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 교통 AI 서비스** 공식 채택	HACCP 인증을 받은 AI 기반 식품안전 관리시스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 투자 여력 등을 고려한 출자금 규모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은 스마트농업 등 농식품 신산업과 청년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농식품 투자조합을 조성·운영하는 모태펀드에 출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0억원(27.3%) 증가된 700억원이 편성되었음.[23)]

[2026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55,000	55,000	70,000	15,000	27.3

2026년도 출자금 세부내역은 청년기업 성장펀드에 대한 출자금 200억원과 2026년에 신규로 조성되는 스마트농업혁신성장펀드 출자금 500억원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일반출자금(460-01) : 55,000백만 원	일반출자금(460-01) : 70,000백만 원
○ 청년기업 성장펀드 (33,600백만원) - 창업초기 5,600백만원(7,000×출자 80%) - 사업화 16,000백만원(20,000×출자 80%) - 후속투자유치 12,000백만원(20,000×출자 60%)	○ 청년기업 성장펀드 (20,000백만원) - - 사업화 10,000백만원(2개×10,000×출자 50%) - 후속투자유치 10,000백만원(20,000×출자 50%)
○ 스마트농업펀드 10,700백만원(17,833×출자 60%)	-
○ 푸드테크펀드 10,700백만원(17,833×출자 60%)	-
-	○ 스마트농업혁신성장펀드 (50,000백만원) - 50,000백만원(5개×20,000×출자 5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식품모태펀드 출자(1150-345)(농업정책관)

나. 검토의견

2026년도 농식품모태펀드 출자예산안은 7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최근 4년간 투자대기성 자산의 과다 보유, 2026년 회수 예정 재원, 자펀드 결성-실투자 간 시차에 따른 집행 지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자금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4)]

먼저, 농식품모태펀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연말 기준으로 매년 1,500억원 이상(농식품 계정: 1,300억원)을 투자대기성 자산으로 보유하였으며, 2024년의 평균 잔액도 1,872억원(농식품계정: 1,535억원)에 달하였음.

[농식품모태펀드 결산보고서상 연말기준 투자대기성 자산 보유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년말 보유	2022년말 보유	2023년말 보유	2024년말 보유
현금 (A)		489	335	215	172
단기투자상품 (정기예금 등) (B)		1,275	1,670	1,730	1,400
계 (A + B)		**1,764**	**2,005**	**1,945**	**1,572**
	(농식품)	**(1,528)**	**(1,765)**	**(1,706)**	**(1,313)**
	(수산)	(236)	(240)	(239)	(259)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모태펀드 월별 평균 잔액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식품투자계정	**1,477**	**1,891**	**1,873**	**1,535**
수산투자계정	279	263	287	337
합 계	1,756	2,154	2,160	1,87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4) 2022년 12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관계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전제로 농식품모태펀드의 기능(농업정책보험금융원 소관)을 한국벤처투자로 이관하는 논의를 진행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간 업무 기능 이관조건(①한국벤처투자 이사회 농식품부 참여 보장, ②농식품 계정 별도 신설, ③농식품 계정 전담운용팀 신설, ④전담 지원조직 신설 요구 등) 및 효과적인 모태펀드 운영체계 관련 논의를 지속하였으나, 현재까지 이관조건 관련하여 부처 간 이견이 있다는 의견임.
- 또한, 농식품모태펀드 이관에는 법률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서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모펀드 출자 이후에도 신규 자펀드 결성과 실제 투자 집행 사이에 구조적 시차[25]가 존재하여 당해연도 예산 투입이 즉시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고, 2025년 중 펀드 청산 등에 따른 회수액 규모가 5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에도 회수 예정 재원 규모가 최소 3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6년도 출자금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실제 농식품투자계정의 자펀드 투자 현황을 보면, 2024년에 농림축산식품부 출자액 550억원 및 회수액 등으로 조성된 2,173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민간 투자금 포함)되었지만 실제 투자액은 1,878억원에 그쳤고, 그 결과 연말(12.31.) 기준 농식품투자계정에는 이전 연도의 자펀드 결성 후 미투자액과 아직 자펀드 결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집행 자금 등을 포함하여 총 1,313억원의 투자대기성 자금이 남았던 것으로 파악됨.

참고로 2025년도 모태펀드 출자예산 550억원의 집행 현황을 보면, 8월말까지 자펀드에 출자된 예산액은 226억원이나 실제 투자액은 전무한 상황임.

[농식품모태펀드 농식품투자계정 연도별 자펀드 결성액·투자액 등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농식품투자계정 자펀드 결성액	정부	1,526	1,235	1,206
	농식품부출자	400	400	550
	회수금 등[1]	1,126	835	656
	민간	1,005	773	967
	계	**2,531**	**2,008**	**2,173**
농식품투자계정 자펀드 투자액[2]		**1,246**	**1,297**	**1,878**
자펀드 투자 후 농식품모태펀드 농식품투자계정 잔액(12.31. 기준)		**1,765**	**1,706**	**1,313**

주 1) 회수금 및 회수 예정액
2) 자펀드는 4년 투자, 4년 회수 구조로 회수는 4년에 걸쳐 진행
3) 해양수산부 소관 수산투자계정은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신규 결성펀드 투자현황]

(단위: 억원)

구분	농식품부 출자액	민간	결성총액	8월말까지 투자액	자펀드수	운용사
2025.8.	226	154	380	-	3	3개 선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5) 자펀드가 결성되더라도 운용사는 통상 4년의 투자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주식·지분 등을 인수하기 때문에 실제 투자 집행까지 시차가 발생함.

6.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인증수요 증가에 따른 일부 비용 자부담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은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을 통하여 저탄소 농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4,800만원(37.7%) 증가된 49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2026년도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4,068	4,068	5,416	1,348	33.1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3,583	3,583	4,931	1,348	37.7

이 사업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수행하는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축산물품질평가원·축산환경관리원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저탄소 축산물인증제로 구분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 민간경상보조(320-01) : 3,583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4,931백만원
- 농산물: 2,270백만원 = 582건×3.9백만원×100%	- 농산물: 2,496백만원 = 640건×3.9백만원× 100%
- 축산물: 1,313백만원 = (217건×5.9백만원 ×100%) + (축산물품질평가원 신규 1명 인건비 32백만원, 6개월분)	- 축산물: 2,435백만원 = (400건×(4.3+1.6백만원) ×100%)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건비 71백만원) + (축산환경관리원 추가인건비 3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2240-312)(동물복지환경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현재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비용[27]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으나, 판로 확대를 위한 인증신청이 증가하고 있고 인증비용도 건당 390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일정 매출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기본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 한해 자부담을 부과하여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농축산 농가가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저탄소 농법 확산을 위해 인증 취득 및 갱신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음.

인증마크는 친환경·우수관리인증(GAP)[28]을 받은 농산물 중 65개 품목[29]을 대상으로,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농업기술[30]을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에 부여됨.

최근 대형 유통업체들이 ESG 경영 강화와 지속가능한 유통구조 확립을 목표로 저탄소 농산물 취급을 확대하고 할인행사[31]를 추진하면서, 생산 농가들의 판로 확대를 위한 인증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32]

실제로 저탄소 농산물 인증 건수는 전년 대비 72.3% 증가한 7,741건, 저탄소축산물은 전년 대비 2.8배 증가한 311건으로 나타났음.

---

27)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이 농산물 1건당 평균 390만원, 축산물은 590만원에 달함.

28) 우수관리인증(Good Agricultural Practices, GAP):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포장단계까지 위해요소(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110개 항목의 관리기준을 엄격하게 심사하는 인증

29) 식량작물(벼, 옥수수, 감자 등 7개품목), 채소(배추, 당근, 호박 등 27개 품목), 과수(사과, 배, 포도 등 15개 품목), 특용약용작물(인삼, 녹차, 새송이버섯 등 9개 품목), 임산물(밤, 대추, 참나물 등 7개 품목)

30) 비료절감기술, 농기계에너지절감, 난방에너지절감, 논의 물관리(논물로 인한 유기물 분해과정에서의 탄소배출을 저감하는 목적), 농자재 재활용 등 기술

31) “6개 유통사, 저탄소 농산물 최대 50% 할인”(농민신문, 2024. 11. 7.)

32) 대형마트, 백화점 등 9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판매량이 매년 증가하여 최근 5년간 63,520톤, 3,707억원의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인지도 조사에서도 다른 국가인증제도 만큼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이러한 생산·소비 추세를 볼 때, 향후 인증에 참여하는 농가와 소비 기반이 모두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2025.8.6.)
* 농식품 국가인증제도 소비자 인지도 조사(202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결과: 저탄소농산물인증 84.8%, 가공식품 및 음식점 등 원산지인증 88.8%, 전통식품 품질인증 82.5% 등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사업 인증(신청) 현황]

(단위: 호)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산물	신규인증(신청)	1,220(2,029)	2,848(3,868)	1,520(1,806)	2,703(3,203)
	갱신인증(신청)	1,984(2,056)	2,049(2,141)	2,684(2,687)	4,147(4,538)
	유효 인증농가	5,753	8,098	9,085	11,028
축산물	신규인증(신청)	-	-	71(112)	190(311)
	갱신인증(신청)	-	-	-	-
	유효 인증농가	-	-	71	26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따라 정부의 인증 심사예산의 증가도 불가피한 상황인바, 타 인증사례와 같이 일정 매출 이상 농가에 대하여는 일부 심사비용을 자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상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은 신청수수료(기본수수료+인증심사비+제경비+출장여비)로 약 660만원을 징수하며, 중소기업의 경우 여러 항목 중 제경비[33]를 면제함.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대 환경표지 인증제 비교]

구분	저탄소 농산물 인증제 (농업기술진흥원, 농식품부)	환경표지 인증제 (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목적	저탄소 소비의 활성화로 저탄소 생산을 유도하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추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기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시행근거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 * 법률상 직접적 근거 없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등
대상품목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임산물 65개 품목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 따른 대상 제품
인증 수수료	해당 없음	신청수수료 (기본수수료 5만원+인증심사비+제경비+출장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66조와 농식품부 고시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은 일반적 시책 수준에 불과해 인증 취소·제재 등 집행

33) 직접 비용 외에, 심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경비 (예: 심사자료 관리, 행정지원, 시스템 사용료, 인증위원회 운영비, 우편·통신비 등)

력이 미흡하고, 최근 탄소중립·ESG 경영 확산에 따라 인증제의 수요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환경표지 등 타 제도처럼 별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적 운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근거로 「탄소중립기본법」 제66조[34] 및 농식품부 고시[35]를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정부가 녹색제품 사용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한 일반 규정일 뿐, 인증제도를 직접 규율하는 근거로는 한계가 있음.

그 결과 인증 절차 위반, 허위·거짓 인증, 인증마크 무단 사용 등 위법 사례에 대한 인증취소나 제재 조치를 취하기 어려움.

특히 최근 탄소중립 및 ESG 경영이 강조되면서 인증제도의 수요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인증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취소 절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36]

---

3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① **정부는** 재화의 생산·소비·운반 및 폐기(이하 "생산등"이라 한다)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의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에 에너지 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이 합리적으로 연계·반영되도록 하고 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공개·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이하 "녹색제품"이라 한다)의 사용·소비의 촉진 및 확산**을 위하여 재화의 생산자와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그 재화를 생산하는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양에 대한 정보 또는 등급을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5)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농식품부고시)**

3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에 환경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② 인증기관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내용과 다른 재료와 제품에 환경성적표지를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7. 노지 스마트농업ICT융복합확산 사업(신규): 솔루션 도입비 단계적 편성 및 컨소시엄 책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노지 스마트농업ICT융복합확산' 사업은 주요 노지작물 주산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전환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 솔루션을 확산시켜 농업 현장의 공통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3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7]

[2026년도 노지 스마트농업ICT융복합확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노지 스마트농업ICT융복합확산		-	-	10,300	10,300	순증
	스마트 기반조성	-	-	2,400	2,400	순증
	솔루션 도입	-	-	7,600	7,600	순증
	기술역량 제고	-	-	300	300	순증

이 사업은 3개년으로 추진 중이며, 1차년도인 2026년에는 품목별 주산지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공통 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도입, 교육을 통한 기술역량 제고, 통신망 및 재해예방 시설 등 스마트 기반 조성을 주요 지원내용으로 하고 있음.

[노지 스마트농업ICT융복합확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민간자본보조(320-07)
- 스마트 기반조성 (2,400백만원) 1,600백만원×국비 60%×1년차 50%× 5개소

○ 민간경상보조(320-01)
- **데이터수집·분석, 자동관수, 환경제어 등 솔루션 도입 (7,600백만원)**
  · 7,600백만원×국비 50%×1년차 40%×5개소
- 기술역량 제고 (300백만원)
  · 솔루션 활용 교육, 기술애로 컨설팅 등 : 300백만원×국비 50%×1년차 40%×5개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노지 스마트농업ICT융복합확산(2220-399)(농식품혁신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노지 스마트농업ICT융복합확산 사업은 솔루션 도입비로 76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시설원예와 달리 노지작물의 경우 솔루션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1차년도에는 적용 가능성 검증과 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고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스마트 기반조성 24억원, 솔루션 도입 76억원, 기술역량 제고 3억원 등 총 103억원으로 편성됨.

사업 첫해임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관수제어, 농기계 자율주행 키트 등 기초 솔루션과 AI 기반 병해충 예찰, 생육 자동측정 등 특화 솔루션 도입에 76억원(연부율 40%)[38]이 배정되었음.

[노지 스마트농업ICT융복합확산 사업 개요]

<table>
<tr><th rowspan="2">구 분
(2026년 예산)</th><th colspan="2">2026년</th><th rowspan="2">2027년</th><th rowspan="2">2028년</th></tr>
<tr><th>상반기</th><th>하반기</th></tr>
<tr><td>스마트 기반 조성
(24억원)</td><td colspan="2">전기・통신, 관・배수 시설
등 공통 기반 조성</td><td>방제・재해예방 시설
등 품목기반 조성</td><td>-</td></tr>
<tr><td rowspan="2">솔루션 도입
(76억원)</td><td colspan="3">관수 등 기초 솔루션 도입</td><td>-</td></tr>
<tr><td>-</td><td colspan="3">생육정보 자동측정 등 특화형 솔루션 보급</td></tr>
<tr><td rowspan="2">기술역량 제고
(3억원)</td><td rowspan="2">데이터 활용
사전교육</td><td colspan="2">기초 솔루션 활용교육</td><td>기초 솔루션 기술애로 컨설팅</td></tr>
<tr><td>-</td><td>특화 솔루션 활용교육</td><td>특화 솔루션
기술애로 컨설팅</td></tr>
</tabl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현재 스마트농업 산업의 주력은 축산과 시설원예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지작물용 솔루션은 전체의 약 2% 수준에 불과함.[39]

이와 같이 노지작물 분야에서는 솔루션의 효과와 농가의 수용 가능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곧바로 대규모 솔루션 관련 구입비를 투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바, 작물별 솔루션이 농가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증을 거쳐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지역별 농작 형태나 재배 규모에 대한 수요조사와 데이터 표준화가 미흡한 상

38) 76억원(데이터수집・분석, 자동관수, 환경제어 등 솔루션 도입비) = 76억원×국비 50%×**1년차 40%**×5개소

39) 한국농업기술진흥원(2025),「2024년 스마트농업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태에서 일률적으로 솔루션을 도입할 경우, 장비 활용률이 낮아지거나 유지보수 부담만 증가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1차년도에는 기존 솔루션을 주요 작물과 매핑(mapping)[40] 하여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작물별 특성에 맞춰 보완·개선하는 타당성 조사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이 사업은 지자체·스마트팜 관련 기업·연구기관·주산지 농업경영체 등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체계이므로, 사업 초기부터 참여자의 투자 비율·역할·수익 배분을 명확히 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주산지 농업경영체·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연구기관·지자체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공모를 통해 5개소를 선정하고, 3년간 총 245.5억원(2026년 103억원)을 지원할 계획임.

[노지스마트농업ICT융복합확산 사업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연차별 투자 계획			
		2026	2027	2028	계 (1개소)
합 계		19,800	15,850	11,850	47,500 (9,500)
국비 (재원)	소계	10,300	8,325	5,925	24,550 (4,910)
	- 스마트 기반조성(60%)	2,400	2,400	-	4,800
	- 솔루션 도입(50%)	7,600	5,700	5,700	19,000
	- 기술역량 제고(50%)	300	225	225	750
지방비	소계	6,340	5,155	3,555	15,050
	- 스마트 기반조성(40%)	1,600	1,600	-	3,200
	- 솔루션 도입(30%)	4,560	3,420	3,420	11,400
	- 기술역량 제고(30%)	180	135	135	450
자부담	소계	3,160	2,370	2,370	7,900
	- 솔루션 도입(20%)	3,040	2,280	2,280	7,600
	- 기술역량 제고(20%)	120	90	90	3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0) 솔루션 목록과 작물 목록을 대응시켜 적용 가능성을 정리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조의 특성상 사업 추진 과정에서 책임이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해관계 충돌이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사업 신청 단계에서부터 참여자의 투자 비율, 역할과 책임, 수익 배분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고려하여 컨소시움을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에 스마트농업 기업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부적정 거래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8.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수출 지원센터 사업(신규): 전문인력 중심 운영체계 마련과 핵심시설 위주로 건립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수출지원센터'** 사업은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 전문경영 교육 등을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1]

[2026년도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수출지원센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농산업수출활성화	9,562	9,562	11,409	1,847	19.3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	-	2,250	2,250	순증

이 사업은 공모로 광역지자체 1곳을 선정하고 2028년까지 450억원(국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 전문경영 교육 등을 위한 수출지원센터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국형글로벌스마트팜수출지원센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총사업비) 450억원(국비 225, 지방비 225)
- '26년: 22.5억원 = 450억원×10%*×국비50%
※ 연부율 :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70%

○ (시행주체) 광역지방자치단체(공모로 선발)

○ (사업내용)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팜 홍보 및 비즈니스 지원, 전문경영 교육 등을 위한 국내 유일 스마트팜 수출 플랫폼 조성
- (핵심시설) 스마트팜 관련 제품·모형 상설 전시관, 스마트팜 홍보관·시연장, 수출상담실
- (부대시설) 수출 전문 교육실, 창업지원 오피스, 세미나실, 회의실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산업수출활성화(2260-375)(농식품혁신정책관)

나. 검토의견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는 국가 차원의 수출 홍보·지원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센터 건립은 전시관·홍보관·시연장 등 핵심시설에 집중하고, 교육시설이나 창업지원실 등 부대시설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경남·상주·김제·고흥)가 해외 바이어 대상 실증·시연·홍보 기능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어, 총 450억원(국비 225억원, 지방비 225억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임.[42)]

이 센터는 공모를 통해 광역자치단체 1곳에 설치될 예정이나, 특정 지자체 중심으로 인력과 시설이 편중될 경우 전문성 부족과 운영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국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거점형 시설로 조성하고,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상주, 김제, 고흥, 밀양)와의 기능적 연계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인력 확보와 운영비 자립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출지원센터는 해외 바이어가 다양한 스마트팜 시설과 장비를 직접 비교·검토하고 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는 종합 수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므로, 공모 단계에서부터 KOTRA 등 수출지원 공공기관과의 협업 방안을 필수 조건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센터 운영비를 세미나실 대여나 오피스 대여를 통해 자체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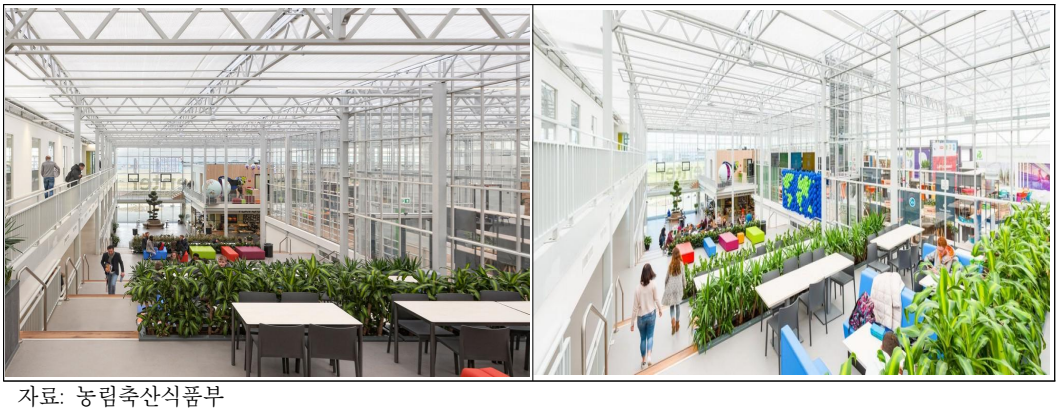
그러나 센터 건립 시에는 스마트팜 제품·모형 상설 전시관, 시연장·수출상담실 등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육실·창업지원 오피스·세미나실 등 부대시설은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농업 유관기관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중복 투자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임.

참고로,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로 네덜란드 World Horti Center가 있음.

---

42) 2024년 스마트팜 수출·수주액은 2023년 2.96억불에서 18.6%가 감소한 2.41억불에 그침. 다만 수주건수(11건 → 18건)와 수주대상국(9개국 → 12개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당초 「스마트팜 플랜트 수출 확대방안」(2019)에서는 2025년까지 수출규모 3억달러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최근 추세를 보면 동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네덜란드 World Horti Center 전시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낮은 가입률로 인한 집행부진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收入) 감소위험을 보험방식으로 관리하여 농가 경영안정 및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73억 6,400만원(32.4%) 증가된 2,751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43)]

[2026년도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농업재해보험	801,929	801,929	887,089	85,160	10.6
농업수입안정보험	207,817	207,817	275,181	67,364	32.4

이 사업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가격 하락과 수확량 감소를 모두 반영하여 가입연도 수입이 평년수입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 이루어짐.[44)]

대상 품목은 2025년 15개[45)](본사업 9개, 시범 6개)에서 2026년 20개[46)]로 확대됨.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 민간경상보조(320-01) - ’25년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207,817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26년 보험료 및 운영비 지원 275,181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업재해보험(1031-300)

44) 농작물재해보험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를 보상하는 데 반하여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보험임.

45) 2025년 본사업 9개: 콩, 고구마, 가을감자,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시범사업 6개: 벼, 가을무, 가을배추,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46) 2026년: 2025년 + 5개 (사과・배・파는 확정, 2개는 미정)

나. 검토의견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예산은 본사업 전환에 따라 2024년[47] 대비 25.6배 증액된 2,078억 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낮은 가입률로 8월말 현재 집행액이 302억 1,800만원(집행률 14.5%)에 그치고 있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2,751억 8,100만원은 이러한 추이를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예산(2,078억 1,700만원)이 2024년(81억원) 보다 25.6배 급증한 것은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9개 품목[48]을 2025년에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신규 6개 품목[49]을 시범사업으로 추가함에 따른 것임.

그러나 2025.8월말 기준 대부분 품목의 가입률이 목표치(25%)에 미달해 집행액이 302억 1,800만원(집행률 14.5%)에 그치고 있음. 특히 고구마는 9.2%, 옥수수는 2.9%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하였음.

[2025년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예산 집행현황 및 가입률]

구분	목표 가입률	8월말 기준 실제 가입률
예산	207,817백만원	30,218백만원(14.5%) 집행
본사업 9개 품목 가입률	**25%** (콩, 고구마, 가을감자,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판매완료: 콩 19.4%, 고구마 9.2%, 옥수수 2.9%**
		판매 진행 중 품목(9.21 기준) : 양배추 13.8%, 가을감자 13.7%
		향후 판매 예정 품목 : 양배추 9월, 가을감자 9월, 보리・마늘・양파 10~11월, 포도 11월
시범사업 품목 가입률	**15%** (벼, 가을무, 가을배추, 단감, 복숭아, 감귤)	**판매완료: 벼 19.3%, 감귤(만감류) 1.3%**
		판매 진행 중 품목 가입률(9.21 기준) : 가을무 7.1%, 가을배추 22.9%
		향후 판매 예정 품목 : 가을무・가을배추 9월, 단감・복숭아 11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7) 2024년 집행실적

2024년 예산	2024년 가입실적	2024년 보험금 지급
81억원	총 9개 품목 2,649ha, 3,297 농가 가입, 가입률 3.9%	총 9개 품목 1,872 농가에 보험금 약 63억원 지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8) 콩, 고구마, 가을감자, 보리, 옥수수, 마늘, 양파, 양배추, 포도

49) 벼, 가을무, 가을배추, 단감, 복숭아, 감귤(만감류)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은 농업인들이 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구조에서, 수입안정보험은 보장 범위는 넓으나 보험료 부담이 높아 농작물재해보험보다 가입 유인이 낮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이처럼 낮은 가입률과 저조한 예산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 2,751억 8,100만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50]

참고로 2025년 6월 기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6개, 2024년 12월말 기준 가입률은 54.4%이고, 재해 발생이 상대적으로 많은 과수의 경우에는 가입률이 높음.

[마늘 농가 실제 사례 비교]

(단위: 원, %)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과거수입형	기대수입형
보험가입금액(A)	3,800,000	**3,800,000**	**3,800,000**
순보험요율(B)	6.21	**8.11**	**11.52**
순보험료(A*B)	235,000	**308,000**	**438,000**
농가부담(20%)	47,000	**61,600**	**87,600**

주 1) 사업지역: 00군, 재배품종: 난지형-대서종
2) 보험가입금액: 380만원(기준가격 3,804원/kg, 가입수확량 1,000kg)
3) 재해보험과 수입보험 모두 농가가 전체 순보험료의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
4) 재해보험과 수입보험의 기준가격 동일(다만, 기대수입형의 경우 수확기 기준가격 변동 가능)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대 수입안정보험 비교]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24) 73개 → ('25) 76개	('24) 시범사업 9개 → ('25) 시범사업 6개, 본사업 9개
보상 기준	자연재해로 인해 당해연도 수량이 평년수량의 60~90% 미만으로 감소	자연재해로 인한 수량 감소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해 품목별 수입이 평년수입의 60~85% 미만으로 감소
보장수준	60%, 70%, 80%, 85%, 90%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60%, 70%, 80%, 85% 중 농가가 가입 시 선택
지원내용	순보험료 중 약 50% 국비, 약 30% 지방비	순보험료 중 약 50% 국비, 약 30% 지방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0) 농식품부는 10월현재 보리・마늘・양파 등 판매 중이거나 향후 판매예정될 상품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세 출>

10.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신규): 실질적 사업효과를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은 농어촌지역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여 농촌지역의 전반적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8억 4,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1)]

[2026년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농촌고용인력지원	27,288	27,288	39,916	12,628	46.3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	-	6,848	6,848	순증

이 사업은 2021년 10월 기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5개 구를 제외한 84개 시군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음.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예산안 세부내역]

○ 인건비(지자체경상보조, 국비 50%): 6,048백만원
- 84개 시군×144백만원*×50%
* 144백만원 = 관리·운영비 24백만원 + 수거 인건비 120백만원(48일*21명*12만원/일)

○ 운영비(민간경상보조, 농어촌공사, 국비 100%): 800백만원
- 지자체별 수거·관리 점검·평가, 산불 등 재해 시 동원, 우수사례 발굴·포상, 깨끗한 농촌 캠페인 등 홍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고용인력지원(1140-333)(농업정책관)

나. 검토의견

첫째,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이나, 대상지역의 면적이 방대하여 소규모 투입 인력(21명)만으로는 사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간헐적 순회 방식에 의존할 경우 실질적 수거 효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 쓰레기 수거 인건비(국비 50%)를 지원하는 것임. 그러나 대부분의 인구감소지역은 면적이 넓고(강원·경북 등 대다수 군이 서울면적보다 넓음) 마을·농지가 분산되어 있어 소규모 인력만으로는 상시 발생하는 쓰레기를 적시에 처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또한 21명이 월 4회, 연간 총 48일 순회하며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계획이나, 쓰레기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므로 이와 같은 간헐적 순회 방식으로는 대응 지연이나 처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1일 12만원)는 산림청 산림재난대응단 등 유사 사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으며, 지자체 운영관리비로 이미 10억 800만원[52]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담기관 운영비 8억원을 별도로 계상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산림청 등 타 기관 사례를 참조하여 전담기관 운영비를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 쓰레기 지원사업의 인건비 단가로 1일 8시간 기준 12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산림청 재난대응단·숲가꾸기 패트롤 등 유사 공공일자리와의 형평성, 지역 임금 수준, 작업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 단가로 재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대 산림청 일자리 사업 비교]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농어촌 쓰레기 수거지원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 패트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재난대응단)
1일 단가	12만원	9.1만원	9.1만원	9.1만원
주 업무	쓰레기 수거	도로변, 농경지 산림정비	산림훼손 등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예방 및 대응
운용기간	48일(1.6개월)	250일(8.1개월)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2) 84개 시군 × 2,400만원 × 국비 50% = 10억 800만원

또한 전담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운영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담 인건비·쓰레기 처리지원비·홍보비 등임.

그러나 이미 지자체 운영관리비로 10억 800만원(개별 지자체당 2,400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산림청 일자리 사업 등 유사 사업도 별도 전담기관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아울러 「폐기물관리법」상 쓰레기 수거·지원은 지자체 사무에 해당하므로, 전담기관 인력 채용 및 수거지원·홍보 등을 위한 별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임.

[한국농어촌공사 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직접비	외주용역비	100	· 우수사례 경진대회, 실태조사, 만족도 조사, 캠페인 홍보 등
	기타직접비	320	· 사업주체(지자체,참여자) 교육 및 전문가 회의 (30백만원) · 재해(폭우·폭설·산사태 등) 시 농어촌 쓰레기 수거 인력 지원 동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 290백만원* * (연 4회 × 차량 동원 36대/회당 × 200만원/회당)
인 건 비		210	· 전담관리기관 3인(4대 보험 포함)
경 비		140	· 현장 점검, 참여주체 교육, 회의 참여 등 (25백만원) · 기타 자료집, 홍보자료 제작 등 (80백만원) · 복리후생비, 교육훈련비, 전화료 등 (35백만원)
일반관리비		30	· ((직접비-외주용역비)+인건비+경비)× 5%이내
계		8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1.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청년농 우선공급 취지에 배치되는 사업 운영방식 개선 필요

가. 개 요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후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 촉진을 위해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1년~10년간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9,300만원(2.4%) 증가된 296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53)]

[2026년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농지이양은퇴직불	28,968	28,968	29,661	693	2.4
경영이양직불 ('97~'20년 기존약정자)	9,284	9,284	5,966	△3,318	△35.8
농지이양은퇴직불 ('24년부터 신규가입)	15,473	15,473	19,891	4,418	28.6
사업운영비	4,211	4,211	3,804	△407	△9.7

내역사업인 **‘경영이양직불’** 사업은 2021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직불금 지급단가가 상향되고 가입 가능 연령과 지급 기한이 확대된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으로 개편·확대되었음.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경영이양직불 ('97~'20 기존약정자)	○ 9,284백만원	○ 5,966백만원
농지이양은퇴직불 ('24년부터 신규가입)	○ 15,473백만원 - (매도) 14,490백만원 = 기존 5,100 + 신규 9,390 - (매도조건부임대) 983백만원 = 기존 612 + 신규 371	○ 19,891백만원 - (매도) 18,537백만원 = 기존 9,840 + 신규 8,697 - (매도조건부임대) 1,354백만원 = 기존 983 + 신규 371)

5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지이양은퇴직불(1070-302)

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사업운영비	○ 4,211백만원	○ 3,804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종전 사업보다 지급단가와 지급가능 연령을 높인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이 2024년에 신규 추진되었으나, 고령농의 참여율이 낮아 사업 집행이 부진하고, 농지 공급 대상자 중 청년농[54]이 아닌 일반농 비중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먼저 이 사업의 2024년 실집행률은 16.7%에 불과하였고, 2025년에는 집행률이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40% 미만 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고령농의 영농복귀를 원천차단하고 청년농 육성을 전제로 추진된 매도조건부임대의 경우에도 공급대상자 중 일반농 비중이 상당하다는 문제가 있음.[55]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24년부터 신규가입) 실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			2025.6			2026 예산안
	예산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예산액	6월말 실집행	실집행률	
매도	9,000	1,942	21.6%	14,490	5,711	39.5%	18,537
매도 조건부 임대	3,600	152	4.3%	983	222	22.6%	1,354
소계	12,600	2,094	16.7%	15,473	5,933	38.4%	19,89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이양직불 대 농지이양은퇴직불('24~) 내역사업 비교]

구분	경영이양직불('97~'23)	농지이양은퇴직불('24~)
사업목적	○고령농 소득안정, 영농규모화 촉진	○고령농 은퇴유도 및 소득안정, 청년농 농지공급으로 세대전환
지급단가	○면적(ha)당 지급	○면적(ha)당 지급

54) 청년농: 만 18세이상 ~ 만40세 미만으로 독립 영농경력 3년이하(부모 농가 종사 기간은 제외)인 농민

55) 이 내역사업의 집행 부진사유는 ① 고령농들이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및 은퇴직불형연금 등을 수급하려면 농업경영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농협조합원 회원자격 박탈, 각종 농업 관련 지원 배제 및 지역사회에서의 고립감 등 물리적·심리적 불이익이 있는 점, ②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및 은퇴직불형연금의 경우 분할지급형으로만 가능하여 목돈 선호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고, ③ 농지는 자산으로 인식되어 상속 경향이 크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구분	경영이양직불('97~'23)	농지이양은퇴직불('24~)
	- 매도: 월 27.5만원(**연 330만원**) - 임대: 월 21만원(**연 250만원**)	- 매도: (분할) 월 50만원(**연 600만원**), (일시) 10년 4,200만원(차감율 30%) - 매도 조건부 임대: 월 40만원(**연 480만원**)
가입연령	○65세 이상, **74세 이하**	○65세 이상, **84세 이하**
이양방법	○매도, 임대	○매도, 매도조건부임대(농지연금과 연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이 사업을 통한 농지 매도는 한국농어촌공사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도 허용되고 있으나, 개인 매도분의 경우 청년농에게 매도하는 비율이 전체 면적 기준 46.1%[56]에 그치고 있으며 매도조건부임대에서도 청년농이 아닌 일반농 비중이 32.2%에 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청년농에게 농지 공급이 보다 집중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4년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을 통한 농지이양 현황]

구분	지급액	면적 (고령농 양도)	소유자(양수자)[3]			
			농어촌공사	청년농	일반농 등	계
매도[1]	1,942백만원	930ha	817ha	52ha	61ha	930ha
매도 조건부 임대[2]	152백만원	84ha	84ha	(57ha)	(27ha)	84ha
계	2,094백만원	1,014ha	901ha	52ha	61ha	1,014ha

주 1) 고령농은 공사를 통해 청년농·일반농 등에게 매도하거나 공사·개인에게 직접 매도가 가능하며, 공사는 매수한 농지를 청년농·일반농에게 임대
2) 고령농은 공사를 통해 청년농·일반농 등에게 임대 가능(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연계)
※ 청년농이 1순위이나, 신청자 없으면 일반농에게도 임대
3) 현재 소유권자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매도 조건부 임대의 경우 ()안 수치는 임차인 기준으로 작성한 수치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재구성

한편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을 위한 사업운영비로 2025년 42억 1,100만원, 2026년 38억 400만원이 별도로 편성·집행되고 있으나, 대상 농가[57] 대비 참여율이 매우 낮고, 이에 따라 농지이양면적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56) 은퇴직불 가입자가 한국농어촌공사가 아닌 개인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는 청년농에게 우선 매도하라는 조건 없이 ①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 ②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에게 매도하면 되기 때문임.

57) 통계청의 「2024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전체 농가경영주(97만3703명) 가운데 70세 이상은 49만 4,809명으로 50.8%를 차지함. 2024년 중 농지이양은퇴직불 참여자 비중은 70세이상 기준으로 볼 때 0.4%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12.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한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농촌 지역에 필요한 기초생활기반을 확충하여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87억 5,600만원(△3.7%) 감소된 4,937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58)]

[2026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농산어촌개발	512,509	512,509	493,753	△18,756	△3.7

이 사업은 4개의 내역사업(▲읍·면 소재지 등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시군역량강화, ▲어촌지역 중심지와 주변지역 등에 대한 권역단위거점개발)으로 구성되어 있음.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493,753백만원
- 농촌중심지활성화 (201,206백만원)
· 112개소 × 2,566백만원 × 국비 70% = 201,206백만원
- 기초생활거점조성 (226,886백만원)
· 379개소 × 855백만원 × 국비 70% = 226,886백만원
- 시군역량강화 (23,897백만원)
· 98개소 × 343백만원 × 국비 70% =23,897백만원
- 권역단위거점개발 (41,764백만원)
· 40개소 × 1,492백만원 × 국비 70% = 41,764백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5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일반농산어촌개발(4180-360)(농촌정책국)

나. 검토의견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의 최근 3년간 지자체 기준 실집행률은 약 70%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 결산보고서를 보면 대규모 이월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 가능 수준에서의 예산 편성 노력과 지자체의 실집행 현황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리·점검 강화가 필요해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수행을 위해 120개 지자체에 보조금을 집행하였고, 지자체 실집행률을 2023년 64.6%, 2024년 70.0%로 보고하였음.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기준(120개 시군)					
	예산액	교부액(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 현액 (C=A+B)	집행액(D)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2년	572,859	493,637	182,353	675,990	**472,361**	197,567	6,062	**69.9**
2023년	547,918	553,867	197,567	751,434	**485,256**	255,110	11,068	**64.6**
2024년	565,350	517,360	255,110	772,470	**540,732**	222,258	9,480	**7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지자체가 보고하는 집행액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단순 위탁된 금액, 즉 실제 집행하지 못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단순히 보유하고 있는 자금까지 포함하고 있어 실제 집행액과는 차이가 존재함.[59)]

구체적으로 수탁사업자인 한국농어촌공사의 결산보고서를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사비 집행 과정에서 2023년말 기준 8,004억원, 2024년말 기준 8,427억원이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이 사업은 주민 의견 반영 절차로 인해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매년 이월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음.

따라서 단순히 예산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실제 집행 가능성을 반영한 합리적 예산 편성과 함께, 집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임.

59) 120여개 지자체 중 80여개 지자체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을 의뢰(동 공사가 공사발주 및 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 80여개 지자체는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국고(70%)에 지자체 부담금(30%)을 더한 사업비 전체를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위탁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3.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신규): 낮은 재정자립도와 지방비 매칭비율 과다 측면을 고려한 보완대책 마련 필요 등

가. 개 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은 농어촌 주민의 국토 관리와 지역사회 유지 등 공익적 활동에 대해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703억 3,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0]

[2026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	-	170,337	170,337	순증

이 사업은 당초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69개[61] 중 지역 여건 및 추진 의지 등을 토대로 6개 군을 공모로 선정하여 2년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음.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10.20.(월) 보도자료를 통해 ’26~’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결과 7개 군(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음.[62] 이에 따라 사업대상 지역은 7개 군으로 확대되었음.

---

6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4135-300)(농촌정책국)

61)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출생률, 고령・유소년・생산가능인구 등을 종합 고려하여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며, 2021년 10월 최초로 89개 시・군・구가 지정됨. 이 중 농어촌 지역에 속하는 군 단위는 69개임.

62)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49개 군(71%)에서 사업을 신청하였고, 지역 소멸위험도 및 발전 정도, 지자체 추진계획의 실현 가능성,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사회서비스 확대 등)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고 발표함.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6년도 예산안)**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1,700억원* (사업비)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중 6개 군(23.7만명)×15만원×12개월×40%(국비) - 민간경상보조(320-01) : 3억 3,700만원 (운영비) ○ **(지원내용)** 개인당 월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 **(지원대상)** 일정 기간(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첫째,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군 69개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15.6%에 불과한바, 이 사업의 경우 지방비 매칭비율이 60%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대상은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중 도시 5개 구와 15개 시(도농복합시 14개, 일반시 1개)를 제외한 농어촌지역 69개 군임.

2026년도 사업대상은 2025.10.20(월)에 공모로 선정된 7개 군 약 22.4만명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1,644억원과 지방비 2,091억원 등 총 4,417억원으로 추정됨.[63]

특히 재원 분담 비율이 국비 40%, 지방비 60%로 설정된 상황에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자체가 매년 약 299억원(2,091억원÷7개 군)을 안정적으로 확보·부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64]

[평균 재정자립도]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도시 5개구 제외)	도농복합시 15개	농어촌 지역 69개군
15.8%	16.9%	15.6%
*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 = 도시 5개구 + 시 15개(도농복합시 14개, 일반시 1개) + 농어촌 지역 군 69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3) 이를 69개 군 272만 명으로 확대하는 경우, 매년 국비 2조원, 지방비 2.9조원 등 총 4.9조원의 예산이 소요됨.

64)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의 활용 가능한 재원 확보(지방소멸대응기금, 지역자원시설세 등)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 추진 중에 있다는 의견임.
- 지방소멸대응기금: 지방소멸 및 지역 인구감소 대응 추진을 위한 지자체 자주재원 및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목적 재원으로 연 1조원 규모를 지역별 배분(지방기금법)
-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생산 전력 등에 과세하는 목적세(지방세법)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현황]

시·도	인구감소지역
부산(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함평군, 담양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진도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개)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주) 이탤릭 & 볼드: 도시(5개 구), 밑줄: 시(도농복합시 14개, 일반시 1개), 무표시: 농어촌 지역 군 69개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둘째, 시범사업 시행에 있어 지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지역 활동을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본 사업 전환 여부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책 성과를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타 지역 주민이 주민등록 이전이나 일시적 거주를 통해 기본소득을 수령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경우, 정책 목표가 왜곡되고 예산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지급 대상자의 실제 거주 및 지역 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또한 시범지역에서 나타나는 성과가 산업 구조, 재정 여건, 사회적 수용성 등 해당 지역의 특수성에 기인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함.[65]

65)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기본소득 정책효과분석 중간평가 결과**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정책추진 이후 인구증가 및 삶의 질 향상, 질병평균 보유수 감소, 공동체 의식 향상 등 대부분 지표 전반 긍정적 변화 나타남. 다만, 실거주・외국인・수급자 관리, 신청・접수 시스템 부재 등 행정적 부담 증가, 청산

나아가 본 사업 전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득 보전 효과에 그치지 않고, 인구 유출 억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지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경기도 기본소득 실시사례(연천군 청산면)에서 보듯이 연 매출 기준에 따라 농협 경제사업장 등이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될 경우 주민 불편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시범사업 설계 과정에서 농촌 생활여건을 반영하여 사용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66]

면 공동체 기반 미흡, 정책효과 인과성 연관 규명 부족(인구·사업체 증가) 등 한계점도 있었다는 의견임.

구 분	주 요 성 과
인구 및 정주효과	• 연천군 청산면 인구증가 - 정책도입前 3,895명('21.12) → 정책도입後 4,068명('24.12)(173명 증가, 4.4%↑) - '21년 이후 유사 접경지역(14개 읍면) 대비 유일하게 인구증가* * 연천군 청산면(173명↑/4.4%↑), 인제군 기린면(62명↑/1.2%↑) • 도 내 인접지역 외에도 타 시도 도시지역에서의 전입 발생(별도 조사) - (타시도→청산) 서울시 267명, 인천시 75명, 강원도 65명 순 - (경기도→청산) 연천군 380명, 동두천시 148명, 의정부시 116명 순
삶의 질 향상	• 삼죽면 대비 청산면 주민 행복 및 삶의 질 만족도 증가 - 청산면 주민 질병 평균 보유수 19.7% 감소* * '22년) 1.3개/명 → '25년) 1.0개/명(삼죽면은 1.4개/명으로 동일) • 공동체 의식 향상(사회적 교류 증가 주민역량 강화* 등) * 지역 유적지 정비, 청산면 이야기 지도 제작, 주민 그림 전시회 등
지역경제 활성화	• '22년~'24년 기본소득 사용금액 총 169억원 중 청산면 관내 소비 156억원(92.5%), 사업체 관내 재지출 11억원(6.56%) 효과 - 정책 투입에 따른 지역경제 순환효과 분석결과 1.0 이상으로 효과 입증 * 지역경제파급효과 분석(LM3) 결과 : '22년) 2.02 → '23년) 1.99 → '24년) 1.97 • 신규 사업체 39개소 증가(지역화폐 사용가능업체 19개소), 산업 다양성 증대 등 * 사업체수/산업다양성 : (도입前) 255개소→(도입後) 279개소(9.4%↑) / 미용실, 숙박시설, 편의점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66)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시범사업에서는 연 매출 12억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지역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됨. 이 기준을 이 사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농협 경제사업장(농자재·유류 판매 등)에서 지역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함.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용처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토대로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지 출>

14. 수급조절지원 사업: 사업비 분담비율 및 사업담당기관 재조정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수급조절지원’** 사업은 과수·채소 생산자가 재배면적 조절·출하정지·출하장려 등 수급조절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4억 4,500만원(6.9%) 증가된 22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67]

[2026년도 수급조절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	11,472	11,472	32,559	21,087	183.8
수급조절지원주)	(21,116)주)	(21,116)주)	22,561	1,445	6.9

주) 기존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3031-326) 사업을 폐지하면서 2026년에 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3033-369)의 내역사업으로 신규 편성함.

2026년에는 지원대상이 기존 채소에서 과수까지 확대되었으며, 주산지별 재배면적 조정과 생육관리 등을 지자체 수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이유로 예산 비목이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되었음. 또한 농협 분담률(20%)은 0%로 조정된 반면 국비 및 지방비 분담률이 각각 10%가 증가되었음.

67) 농안기금-농산물안정생산공급지원(3033-369)(유통소비정책관)

[수급조절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2025년 당초	2026년 계획안
○ **민간경상보조**(320-01): 21,116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22,561백만원
- **채소**가격안정지원: 20,716백만원 **농협 사업비** (652천톤×940.6천원/톤×조성률 9%×**국비 30%** = 16,559백만원) + **산지유통인 사업비** {(140천톤×657.8천원/톤×조성률 9%×**국비 50%**) + 행정비용 13백만원 = 4,157백만원}	- **과수채소**가격안정지원: 55,502백만원×**국비 40%** = 22,200백만원
- 유통협약·명령지원 (400백만원) 1,600톤×250천원/톤×국비 100%	- 유통협약·명령지원: 360백만원×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첫째, 농림축산식품부는 수급조절지원 사업의 낮은 가입률[68]로 인한 집행부진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농협 분담률을 0%로 조정하고 시행주체를 농협·농수산식품유통공사[69]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자체 운영역량에 대한 우려와 농협 이탈에 따른 책임성 약화 측면을 고려할 때 정부의 변경계획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수급조절지원 사업 계획안은 세출예산 비목을 민간경상보조에서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로 변경하고, 농협 사업의 경우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을 각각 40%로 상향하는 대신 농협 분담률을 0%로 조정하였음.[70]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변경의 사유로, 주산지별 재배면적 조정과 생육관리 등 지자체 수급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광역단위 수급관리센터 및 주산지협의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함.

또한 기존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은 참여 농협에 직접적인 혜택은 미미한 반면 정률

68)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가입률: (2021) 15.5% → (2022) 16.5%→ (2023) 17.7% → (2024) 17%

69) 농협 조합원이 아닌 산지유통인에 대한 사업비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대행하여 관리

70) (2025년) **국비 30%, 지방비 30%, 농협 20%**, 자부담 20%
(2026년(안)) **국비 40%, 지방비 40%, 농협 0%**, 자부담 20%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非농협조합원)의 경우 산지유통인 분담률

(2025년) **국비 50%, 산지유통인 50%, 지방비 0%** (단 지자체 사업참여 희망 시 최대 30% 부담 가능)
(2026년(안)) **국비 40%, 산지유통인 60%, 지방비 0%** (단 지자체 사업참여 희망 시 최대 40% 부담 가능)

부담만 발생하여 농협의 경영부담이 누적되고, 사업량 증가에 따라 그 부담액도 확대되면서 가입률 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농협 분담을 면제하였다는 의견임.[71]

그러나 수급조절은 품목·시기별 시장 판단, 유통망 관리, 출하조정의 신속한 집행 능력을 필요로 하는데, 사업전담기관이 그동안 사업을 담당했던 농협·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유통 경험·현장 네트워크가 부족한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관리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음.

더욱이 최근 3년간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정산 결과, 농협의 실부담액[72]은 2022년 23억원, 2023년 26억원, 2024년에 2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단순히 조성액만을 기준으로 농협의 경영부담을 강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연도별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수행기관별 사업비 조성 현황 등]

(단위: 백만원)

구분	농협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합계	국비	지방비	농협 (실 부담액)	농업인	합계	국비	산지유통인 (실 부담액)
2022	66,201	21,107	19,860	18,264 (2,341)	6,969	7,600	3,800	3,800 (1,370)
2023	73,171	21,951	22,055	21,310 (2,616)	7,855	9,874	4,942	4,932 (1,417)
2024	80,052	24,422	24,534	23,285 (1,966)	7,810	9,874	4,942	4,932 (2,40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특히 재배면적 조절·생육 관리·출하조절 등 수급조절을 통한 채소·과수 가격 안정은 특정 농가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 전체의 안정으로 이어져 농협 조합원의 공동이

71) 농림축산식품부는 낮은 가입률이 지속되고 있는 사유로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이 예비비적 성격의 사업으로 가격등락시 발동되는 수급안정 대책 수요에 따라 사업비가 집행되고, 사업물량이 확대(2017년 36만톤 → 2024년 64만톤)되면서 주산지 농협의 부담액(20%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물량 확대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으로 설명함.

72) <사업비 조성 및 실부담>
- 수급불안 시 신속한 대책 이행을 위해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유통인 등이 참여하는 품목별 주산지협의체(또는 유통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비를 사전 공동 조성(주산지협의체(또는 유통협의체) 계좌로 입금), 조성액 중 주체별 실부담한 금액을 제외하고 환급
- 실부담액은 조성된 사업비 중 실제 집행된 금액
- 국비는 2024년부터 연례적 보조사업자 이월 최소화를 위해 사전조성하지 않고 수급대책 발동으로 공동기금 지급 사유 발생 시 사후매칭하여 집행

익과 직결되고, 분담 완전 면제는 농협의 책임성·자발적 수급조절 참여를 약화시켜 장기적 정책효과를 저해할 우려가 크므로 농협이 최소한의 분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농협 분담률은 부담 가능한 최소 수준을 유지하되, 재무 여건이 취약한 단위조합에는 감면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사업 참여의 책임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수급조절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채소 외에 과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나, 그동안 낮은 가입률로 집행이 부진하였고 가격하락 보전 기능이 농업수입안정보험과 중복됨에 따라 가입수요가 추가로 감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73]

지원대상 확대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상·재해의 빈발, 과수 주산지의 이동 및 생육 저하 등으로 과수 생산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제시하였는바, 정책적 필요성은 인정됨.

그러나 채소 부문의 경우 평년 생산량 대비 가입률이 18% 미만에 머물고 집행률 또한 2024년 9.7%, 2025년 8월말 기준 12.6%에 불과할 정도로 사업 실적이 저조하였음.

이와같은 낮은 가입률의 제고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집행 부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2026년도 계획안이 편성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사업은 가격 보전 기능 면에서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과 중복되고 있으므로, 면적조절·출하정지 등 수급조절 기능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음.

---

73) -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에 의한 **수량감소 및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보험대상 품목의 수입 감소를 보전함.
- 수급조절지원사업(종전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 주산지 위주로 조직화되는 주요 노지채소와 과수에 대해 공급과잉시 도매시장 평년가격의 80%를 기준으로 **가격하락**을 보전함.

[연도별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사업수행기관	계획액	실집행액	실집행률
2022	농협, aT	45,145(농협 42,145, aT 3,000)	5,032	11.2%
2023	농협, aT	55,190(농협 50,248. aT 4,942)	5,341	9.7%
2024	농협, aT	55,190(농협 50,248. aT 4,942)	5,357	9.7%
2025.8	농협, aT	20,716(농협 16,559, aT 4,157)	2,616	12.6%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수급조절지원 사업 대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비교]

구분	수급조절지원 사업(종전 채소가격안정지원)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
목적	○주요 노지채소·과수 수급안정 **○농가소득 안정**	○**농가소득 안정**
사업비 (보험료)	○참여농가 20% 분담, 미사용된 사업비는 돌려 받음	○보험가입금액과 보장수준에 따라 보험료 납부, 보험금 지급이 발동되지 않아도 보험료 반납되지 않음
사업 발동요건	○평년가격의 80%아래로 가격하락 → 차액보전 ○평년가격보다 가격상승 → 조기출하 비용 지원	○기준가격 × 기준수확량 × 보장수준 > min(기준가격, 수확기 가격) × 수확량
참여주체	○주산지협의체(생산자단체, 농협,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사업계획 마련하고 농림부 승인받음 ○주산지 단위 참여 조직화	○개별 농가
대상품목	○채소 및 과수(2026년 추가)	○2025년 15개, 2026년 20개 품목
본사업	○2017년 시행	○2025년 시행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셋째, 수급조절지원 사업(기존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은 2026년도 계획안에 채소 외에 과수를 추가하면서 사업명이 변경되고 있으나, 채소와 과수는 작형·저장성 등 특성이 상이하고 같은 사업에 함께 편성하는 것은 각 품목별 실적을 검증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사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채소는 단기 작형으로 저장성이 낮아 가격 변동 폭이 큰 반면, 과수는 다년생 작물로 저장성은 있으나 가격 폭락 시 피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두 품목은 상이한 특성을 가짐.

특히 채소는 그간 집행률 부진 지적을 계속 받아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두 품목을

동일한 사업 내에 구분 없이 편성하는 것은 각 품목별 실적 검증과 성과평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사업으로 각각 관리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수급조절지원 사업 편성내역]

2025년 당초	2026년 계획안	별도 분리(안)
○ **채소**가격안정지원: 20,716백만원	○ **과수채소**가격안정지원: 22,200백만원	○ **채소**가격안정지원
-	-	○ **과수**가격안정지원

【농지관리기금】

<지 출>

15.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사업목적이 다른 사업은 별도 내역사업으로 분리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고령은퇴농 및 비농업인(상속)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 필요한 융자를 제공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545억원(68.0%) 증가된 1조 6,170억원이 편성되었음.[74)]

[2026년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B-A)/A
	당초 (A)	수정			
맞춤형농지지원(융자)	1,113,440	1,113,440	1,807,690	694,250	62.4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962,500	962,500	1,617,000	654,500	68.0

이 사업의 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청년농의 농지 임대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지원 등을 목적으로 농지은행의 매입 대상 토지 규모가 전년 2,500ha에서 4,200ha로 확대되고 있음.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구분	2025년 당초	2026년 계획안
기타민간융자금 (450-04)	○ 농지매입금액: 960,575백만원 = (385백만원/ha×2,500ha) - (훼손농지 복구비 1,925백만원)	○ 농지매입금액: 1,613,766백만원 = (385백만원/ha×**4,200ha**) - (훼손농지 복구비 3,234백만원)

74) 농지관리기금-맞춤형농지지원(융자)(1160-350)(농업정책관)

구분	2025년 당초	2026년 계획안
민간자본보조 (320-07)	○ 훼손농지복구비: 1,925백만원 = 농지매입금액(960,575백만원)×0.2%	○ 훼손농지복구비: 3,234백만원 = 농지매입금액(1,617,000백만원)×0.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청년농 정착과 농지시장 안정을 위해 장기·저임대료로 농지를 임대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 목적에 '재생에너지 확산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본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성과관리와 집행책임을 혼선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고 매입규모·임대대상·임대료를 구체화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청년농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장기 임대함으로써 초기자금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2010년 도입된 이래, 장기·안정적인 임대와 낮은 임대료라는 구조적 장점으로 농지이용구조 개선과 농지시장 안정에 기여하였음.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및 청년농 임대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한국 농어촌공사	융자금 수령	743,087	765,000	1,070,000	803,413
	융자금 집행	743,021	764,939	1,069,969	760,128
매입실적(ha)		1,707	1,727	2,386	1,654
전체 임대실적(ha) (A)		3,505	3,580	4,108	2,007
청년농 임대실적(ha) (B)		2,354	2,608	3,063	1,259
	비중 (B/A)	67.2%	72.8%	74.6%	62.7%

주) 임대실적은 전년 매입 농지 및 재임대 농지까지 포함한 실적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런데 2026년 계획안에는 본래 사업목적에 '재생에너지 확산 지원'이 새로이 추가되었음.

농지매입을 통한 재생에너지 입지 제공은 청년농 대상의 저임대 농지공급이라는 본래 목표와 취지상 다소 차이가 있으며, 특히 영농형 태양광처럼 일부 농업 병행이 가능하더라도 임대실적이 농업용과 재생에너지용으로 혼재될 경우 성과지표가 왜곡되고 집행책임이 불명확해질 수 있음.

따라서 재생에너지 확산 목적의 농지매입·임대가 필요하다면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청년농 보급중심의 사업으로 지속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2025년 당초 계획 대 2026년 계획안 비교]

2025년 당초 계획	2026년 계획안
○ 농지매입규모: 2,500ha	○ 농지매입규모: 4,200ha
○ 목적: 청년농 3만명 육성, 벼 외 타작물재배 촉진 등	○ 목적: 청년농 농지 임대 수요 증가, **재생에너지 확산 지원**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지 출>

16. 전략작물 직불 사업: 수요기반 없는 전략작물 확대 정책 재검토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전략작물 직불’** 사업은 식량자급률 증진, 쌀 수급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756억원(72.0%) 증가된 4,196억원이 편성되었음.[75)]

[2026년도 전략작물 직불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공익기능증진직불	2,953,622	2,953,622	2,969,914	16,292	0.6
선택형공익직불	320,135	320,135	516,427	196,292	61.4
전략작물 직불	244,000	244,000	419,600	175,600	72.0

2026년 계획안의 전략작물 대상에는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등이 신규 품목으로 추가되었고, 기존품목 단가 및 면적이 조정되었음.

[전략작물 직불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 전략작물직불 (244,000백만원) - (동계) : 밀 31,000백만원(=31천ha×100만원), 식량작물 11,000백만원(=22천ha×50만원), 조사료 31,000백만원(62천ha×50만원)	○ 전략작물직불 (419,600백만원) - (동계): 좌 동

75)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공익기능증진직불(1071-302)(농업정책관)

2025년 계획	2026년 계획안
- (하계): **두류 56,000백만원(=28천ha×200만원), 가루쌀 32,000백만원(=16천ha×200만원), 조사료 50,000백만원(=10천ha×500만원), 옥수수 4,000백만원(=4천ha×100만원), 깨 3,000백만원(=3천ha×100만원)**	- (하계): **두류 44,000백만원(=22천ha×200만원), 가루쌀 16,000백만원(=8천ha×200만원), 조사료 110,000백만원(=20천ha×550만원), 옥수수 9,000백만원(=6천ha×150만원), 깨 9,000백만원(=6천ha×150만원)**
- (하계): 추가	**- (하계): 수급조절용벼 100,000백만원(=20천ha ×500만원), 알팔파 5,000백만원(=2천ha×250만원), 수수 4,800백만원(=2천ha×240만원), 율무 5,000백만원(=2천ha×250만원), 메밀 4,800백만원(=2천ha×240만원)**
-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 26,000백만원(=26천ha×100만원)	- (이모작): 동계 밀·조사료 / 하계 두류·가루쌀·**조사료 39,000백만원 (=39천ha**×100만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나. 검토의견

2026년도 전략작물 직불사업 계획안에서 수급조절용 벼[76] 등을 추가하면서 최근까지 확대를 추진하던 논콩[77]과 가루쌀[78]의 수매면적을 축소한 것은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향후 전략작물 확대는 명확한 수요처 확보와 수입산 대체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도에 수급조절용 벼·알팔파[79]·수수 등을 새로이 추가하면서, 논콩의 수매면적을 기존 28천ha에서 22천ha로, 가루쌀을 16천ha에서 8천ha로 축소하고 있음. 이는 국산 논콩의 가격이 수입산보다 높아 소비가 위축되면서 비축물량이 소화되지 못하고 재고가 크게 늘어난 상황 등을 반영한 조치로 보임.

76) 논에서 기존대로 벼를 재배하면서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하고, 평시에는 가공·수급조절용으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여 밥쌀 시장에서 격리하되, 흉작에는 밥쌀 전환으로 수요에 대응

77) 논에 재배하는 콩으로, 주로 식량작물 대체와 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재배되며, 국산 두부·장류 등의 원료로 쓰임.

78) 도정 없이 바로 제분이 가능하도록 육종된 쌀 품종으로, 빵·과자·면 등 밀가루 대체 가공식품 원료로 활용되며, 쌀 소비 확대와 수입 밀 대체를 목적으로 개발됨.

79) 콩과 다년생 사료작물로 단백질 함량이 높아 사료용으로 널리 이용됨.

[전략작물 직불사업 대상품목 및 수매면적 축소 등 현황]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품목추가	가루쌀, 콩, 하계조사료	옥수수(신규)	깨(신규)	수급조절용벼·알팔파·수수·율무·메밀 (신규)
단가인상 (1ha당)		**두류·가루쌀 100→200만원**	밀 50→100만원, 하계조사료 430→500만원	조사료·옥수수·깨 각 50만원 인상 및 수매면적 확대
수매면적 축소				**두류 28→22천ha, 가루쌀 16→8천ha**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2023년부터 논콩과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논콩은 논 지형의 특성상 기계화를 통한 파종·수확이 용이하며, 높은 지원 단가(1ha당 최대 400만원[80])까지 더해져 재배 면적이 빠르게 확대되었음.

그 결과 2024년 전략작물 직불금 1,478억원 중 32.8%에 해당하는 485억원이 논콩 재배 농가에 지급될 정도로 집중되었음.[81]

[전략작물 직불 예산 및 신청 면적 현황]

(단위: 천ha)

연도	구분	하계			동계		
		가루쌀	논콩	조사료	밀	조사료	기타
2023년	예산	2	**18**	7	12	60	28
	신청	2.2	**20**	7.4	9	68	26
2024년	예산	10	**22**	9	24.5	62	25
	신청	8	**26**	9.1	8.5	73.3	22.5
2025년	예산	16	**28**	10	31	62	22
	신청	10.2	**35.0**	14.5	9.0	71.6	21.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80) 논콩의 경우 동계작물 전략작물직불금 + 이모작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경우 1ha당 최대 400만원이 지급됨

81) 정부 논콩 수매면적(천ha): 18('23년) → 22('24년) → 28('25년) → 20('26 계획안)

[2024년 전략작물직불금 품목별 집행액 및 집행비중]

(단위: 억원, %)

연도	구분	총계	하계					동계			
				가루쌀	논콩	조사료	옥수수		밀	조사료	기타
2024	집행액	1,478	991	156	485	300	50	487	38	345	104
	비중	100%	67.1	10.6	32.8	20.3	3.4	32.9	2.6	23.3	7.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그러나 국산 논콩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요처를 확보하지 못하고, 수입산 대비 가격경쟁력을 보완할 대체 전략도 부재한 상황에서 재배 확대만 추진된 결과, 재고가 누적되고 보관·관리·처분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적자가 발생하였음.

[2025.8말 기준 주요 전략작물 수매량/판매량/재고량]

(단위: 천톤)

구분	논콩			밀			가루쌀		
	수매량	판매량	재고량	수매량	판매량	재고량	수매량	판매량	재고량
2023년	32.5	2.5	18.9	18.9	5.3	41.0	6.9	-	6.9
2024년	49.8	4.0	34.7	17.9	6.8	52.1	20.7	6.9	20.7
2025.8	-	7.8	79.0	19.3	10.2	59.1	-	2.6	18.1

주 1) 콩 수매량 : n년 12월 ~ n+1년 3월까지 수매
2) 가루쌀 재고량은 2025.11월까지 주정용 등으로 전량 판매 예정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정부는 뒤늦게 2026년 수매면적 축소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미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재배를 확대해 온 농민들의 손실은 불가피한 상황임.[82)]

따라서 향후의 전략작물 정책은 단순한 면적 확대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비처 확보, 수입산 대체 가능성 검증, 재고·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이러한 실패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전 검증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82) '청년농'이 '논콩' 한다면, 말려야할까 권해야할까? (한국영농신문, 2025.9.13.)

농촌진흥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은 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3.4%) 감소함.[1)]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46	146	141	△5	△3.4
총수입	146	146	141	△5	△3.4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은 1조 1,325억원으로 전년 대비 710억원(6.7%) 증가함.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0,615	10,615	11,325	710	6.7
총지출	10,615	10,615	11,325	710	6.7

문의 : 강영옥 예산결산조사관 kang052@assembly.go.kr (02-6788-5713)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3.4%) 감소함.

[2026년도 농촌진흥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20	120	116	△4	△3.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1	11	8	△3	△27.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5	15	17	2	13.3
합 계	146	146	141	△5	△3.4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조 1,325억원으로 전년 대비 710억원(6.7%) 증가함.

[2026년도 농촌진흥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9,409	9,409	9,952	543	5.8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68	68	85	17	25.0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1,138	1,138	1,288	150	13.2
합 계	10,615	10,615	11,325	710	6.7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농촌진흥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2개(491억 4,5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대체단백특화시장맞춤형원료화(R&D)’ 사업은 국산 생물자원(식물, 곤충 등)을 기반으로 하여 대체 단백 소재의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원료화 및 특화시장 창출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8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특용작물유래천연활성바이오소재생산및활용기술개발(R&D)’ 사업은 농생명 자원의 신가치 창출과 그린 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밀 농업 및 세포배양·합성생물학 등 최신 생명공학 기술을 활용하여 유용물질 최적 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5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농촌진흥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개발(R&D)	4,025
2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활용기술개발(R&D)	4,200
3	국경이동성해충의국제발생예측및방제기술개발(R&D)	2,000
4	가축생산비절감정밀사양최적기술개발및고도화(R&D)	3,000
5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7,800
6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R&D)	1,770
7	지능형농업로봇핵심기반기술개발(R&D)	2,950
8	대체단백특화시장맞춤형원료화(R&D)	7,800
9	특용작물유래천연활성바이오소재생산및활용기술개발(R&D)	7,500
10	농작업안전관리기술및웨어러블편이장비개발(R&D)	3,000
11	농업농촌국민체감AX전환기술개발(R&D)	2,100
12	AI기반생체·정서반응형농업활동서비스플랫폼개발(R&D)	3,000
총지출		49,145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농촌진흥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사업, ‘현장맞춤형밭농업기계고도화(R&D)’ 사업,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경감기술실용화(R&D)’ 사업 등 총 18개임.[3)]

[2026년도 농촌진흥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과수디지털농업실증연구소기반구축	630	1,223	593	94.1
2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경감기술실용화(R&D)	7,900	10,533	2,633	33.3
3	신소득유망아열대작물실증센터 기반구축	3,610	7,084	3,474	96.2
4	치유농업확산센터 기반구축	3,291	12,686	9,395	285.5
5	현장맞춤형밭농업기계고도화(R&D)	4,440	12,403	7,963	179.3
6	밀자급률도약생산소비연계핵심기술개발(R&D)	4,400	5,867	1,467	33.3
7	원예작물수급안정을위한이상기상대응기술고도화(R&D)	6,000	8,000	2,000	33.3
8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2,400	3,200	800	33.3
9	노지스마트농업활용모델개발(R&D)	3,750	5,000	1,250	33.3
10	농생명마이크로바이옴혁신기술기반구축(R&D)	4,000	5,333	1,333	33.3
11	농산부산물Eco순환기술개발(R&D)	5,000	6,667	1,667	33.3
12	축산자원개발부이전사업(R&D)	40,254	53,138	12,884	32.0
13	농작업재해예방(보조)	3,020	5,070	2,050	67.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4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R&D, 보조, 지역자율)	1,448	5,128	3,680	254.1
15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R&D, 보조, 지역지원)	6,316	9,624	3,308	52.4
16	지역특화작목연구기반고도화(R&D, 보조, 지역지원)	280	600	320	114.3
17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R&D, 제주, 지역지원)	204	590	386	189.2
18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제주)	1,900	2,600	700	36.8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 간 거래는 없음.

[농촌진흥청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단위 : 억원)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전체 사업 중 R&D 사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임. 110개 세부사업 중 절반에 가까운 50개가 R&D 사업으로, 금액으로는 1조 1,325억원 중 6,238억원(55.1%)임.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총 93개 사업 중 46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 14개 사업 중 4개 사업이 R&D 사업임.

2026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농촌진흥청은 대다수 농가가 고령·영세하여 구매·기술활용 여력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특정 기관·기업이 성과를 독점하면 현장 확산이 제한될 우려가 큰 공공성이 높은 신규 R&D 사업의 경우에는 과제 공고 및 협약 단계에서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고 연구개발협약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둘째,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 신규 R&D 사업의 경우 간접비가 적정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실제 연구개발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협약 단계에서 간접비 총액 상한과 합리적인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여 사업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셋째,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사업은 사업관리예산을 포함한 32억원 전액이 연구개발활동비(360-05)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직접적인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사업관리예산은 기획평가관리비(360-06)로 분리 계상하고, 그 산정비율도 다른 R&D 사업 수준에 맞게 축소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 사업의 2024년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비로 3억 1,6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운영비로만 전체 사업비의 16.6%에 달하는 10억원이 집행되었는데, 농가 기술보급과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비중을 높이고 홍보비 등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이월·재이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연부율을 설정하고 단계적 집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농촌진흥청 R&D 예산: 신규 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농림축산식품 R&D 중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의 2026년도 R&D 예산안은 6,238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5억 8,100만원(10.0%) 증가함.

직전 2년간(2024년 △23.5%, 2025년 △2.6%) 감소세가 이어졌던 것과 달리, 2026년에는 증가세로 전환됨.[4)]

[농촌진흥청 R&D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R&D 예산			
	시험연구비 (210-13)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기타 비목	계
2021	178,392	232,275	249,463	660,130
2022	188,437	250,042	274,797	713,276
2023	182,744	234,922	343,509	761,175
2024	137,082	147,842	297,364	582,288
2025	149,805	134,709	282,731	567,245
2026(안)	169,512	173,452	280,862	623,826

자료: 농촌진흥청

2026년 R&D 예산안의 주요 증가 사유는 신규로 12개 R&D 사업이 추가되면서 491억 4,500만원이 새롭게 편성되었기 때문임.

4) 산업화·사업화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345억 5,900만원(15.2%) 증가한 2,612억 2,800만원이며, 국가 전체 R&D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조 7,000억원(19.3%) 증가한 35조 3,000억원임.

[농촌진흥청 2026년 신규 R&D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6년 예산안			연구내용
	시험 연구비 (210-13)	연구개발 활동비등 (360-05)	계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 기술개발(R&D)	767	3,258	4,025	농업 자원 ·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및 국가·지역단위 건전성·지속 가능성 평가기술 개발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 활용기술개발(R&D)	1,470	2,730	4,200	기후변화 대응 내재해성 생명공학작물의 안전성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종자시장 진출 지원 및 국내 작물재배환경 안전관리
가축생산비절감정밀사양 최적기술개발및고도화(R&D)	1,000	2,000	3,000	정밀영양 기반 축종별 사양관리 기술 개발 고도화 및 영양학적 가치평가를 통한 사료 소재 발굴
AI기반작물모니터링 및 진단플랫폼개발(R&D)	1,950	5,850	7,800	빅데이터·AI 모델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로 지능형 영농관리 서비스 실현을 통한 농업생산 안정성 확보 및 생산성 향상
AI기반생체・정서반응형농업 활동서비스플랫폼개발(R&D)	1,000	2,000	3,000	고립・은둔, 우울 등 정신건강 문제 완화를 위해 인간-반려식물 교감 시그널 측정 분석기술 개발 등 반려식물을 활용한 인간-식물 상호작용 심리 케어 시스템 개발
데이터기반농업관측을위한 위성영상활용기술개발(R&D)	515	1,255	1,770	위성영상을 활용한 작황 모니터링, 농경지 변화 감시, 재해 대응, 해외 작황 분석을 포함한 핵심 기술 개발
지능형농업로봇 핵심기반기술개발(R&D)	590	2,360	2,950	지능형 농업로봇의 핵심기반 기술(시각 지능화, 센서 융합기술 등) 확보 및 표준 개발
대체단백특화시장 맞춤형원료화(R&D)	2,110	5,690	7,800	국산 생물자원(식물, 곤충 등) 기반 대체 단백소재의 차별화된 고부가 원료 개발과 특화시장 창출을 위한 맞춤형 기술 개발
특용작물유래천연활성바이오소재 생산및활용기술개발(R&D)	1,750	5,750	7,500	농생명자원의 신가치 창출과 그린바이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밀농업 및 세포배양・대사경로를 활용한 유용물질 최적생산기술 개발
농업농촌국민체감 AX전환기술개발(R&D)	380	1,720	2,100	빈집・유휴시설 활용 등 농촌 재생 및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AIaaS(서비스형 인공지능) 핵심 기술 개발
농작업안전관리기술 및 웨어러블편이장비개발(R&D)	450	2,550	3,000	농작업 보조 능동형 웨어러블 장치, 첨단기술 활용 농작업 개인보호・안전편이 장비 등 농업현장 맞춤형 스마트 안전편이장비 개발
국경이동성해충의국제발생 예측및방제기술개발(R&D)	1,000	1,000	2,000	주요 국경 이동성 해충을 대상으로 스마트 예찰 표준 개발, 예측 모델개발로 국제 이동성 해충 감시체계 강화와 선제적 방제 기술 개발
계	12,982	36,163	49,145	

자료: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R&D는 크게 자체 고유연구사업과 공동연구사업으로 구분됨. 고유연구사업은 농촌진흥청 소속 4개 국립연구기관에서 농업과학기반·작물시험·원예특작시험·축산시험 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이고, 공동연구사업은 산업계·학계·출연연과 협력하여 타 분야 기술을 접목하고 첨단 농업기술을 개발·실용화하는 방식임.

2026년 신규 12개 R&D는 모두 공동연구사업에 해당되며, 첨단 기술의 융합·신속한 현장 적용·상용화 촉진을 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

[농촌진흥청 고유연구사업 대 공동연구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구분	전체 R&D예산 (A+B)	자체 R&D 예산 (고유연구사업) (A)	공동연구사업			
			시험연구비 (210-13)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기타1)	계 (B)
2023년	761,175	391,728	62,853	234,922	71,672	369,447
2024년	582,288	333,765	36,660	147,842	64,021	248,523
2025년	567,245	327,234	35,742	135,829	68,440	240,011
2026년	623,826	333,431	53,166	174,472	62,757	290,395

주 1) 보조금(330-01, 330-03), 국제부담금(340-02), 공사비(420-03), 자산취득비(430-01) 등
자료: 농촌진흥청

나. 검토의견

첫째, 농촌진흥청은 대다수 농가가 고령·영세하여 구매·기술활용 여력이 낮은 현실을 고려하여, 특정 기관·기업이 성과를 독점하면 현장 확산이 제한될 우려가 큰 공공성이 높은 신규 R&D 사업의 경우에는 과제 공고 및 협약 단계에서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는 점을 사전에 공지하고 연구개발협약에 반영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청은 2026년도 신규 R&D 사업을 모두 공동연구사업[5]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5)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연구개발과제를 내·외부로 각각 분리하여 선정평가를 진행하고, 과제협의회*를 통해 하나의 주관과제로 결합하여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함.

* 과제협의회의 운영
- 목적: 선정평가시 제안된 내용의 반영여부, 내-외부공동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지정등 선정된 과제의 협약 및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협의
- 주관: 과제수행부서장 / 협조: 사업담당부서
- 참여: 선정된 과제의 연구자

이 중 내부 과제[6]는 시험연구비(210-13) 비목으로 집행되고, 외부 과제[7]는 연구개발활동비(360-05)로 집행됨.

2026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고유연구사업(자체 R&D 예산)은 459개 과제에 3,334억 3,100만원이며, 공동연구사업은 601개 과제에 2,903억 9,500만원이 계획되고 있음.

[농촌진흥청 고유연구사업 대 공동연구사업 추이]

(단위: 백만원, 개)

구분	전체 R&D예산		자체 R&D 예산 (고유연구사업)		공동연구사업			
					과제수			예산(B)
	과제수	예산(A+B)	과제수	예산(A)	주관연구기관 (농진청)	주관연구기관 (외부)	계	
2023년	1,531	761,175	512	391,728	404	615	1,019	369,447
2024년	1,143	582,288	422	333,765	293	428	721	248,523
2025년	1,006	567,245	462	327,234	220	324	544	240,011
2026년	1,060	623,826	459	333,431	-	-	601	290,395

자료: 농촌진흥청

연구성과 소유권 규정을 보면, 고유연구사업과 달리 공동연구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8]에 따라 원칙적으로 성과를 창출한 기관에 부여됨.

이로 인해 농촌진흥청 R&D 사업 중 농가 확산 등 공공적 활용이 필요한 과제임에도 특정 기관이나 기업이 성과를 독점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2025년 기준 공동연구사업 544개 중 34개(6% 수준)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소유로 공지·관리하고

6) 수행기관: 국립농업과학원 등 소속 연구기관

7) 수행기관: 산업체·대학·출연연 등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안보 및 공공 이익 차원에서 필요할 경우 과제 공모 단계에서 성과의 국가소유를 사전에 명시하겠다는 의견임.[9)]

2026년에는 모두 공동연구사업인 12개의 신규 R&D 사업이 추진되어 2030년까지 총 3,246억 5,3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므로, 공공성이 강하고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의 경우 성과 소유권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를 협약 단계에서 반영하는 등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구과제 공모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사전 공지한 사업]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비고
신품종 지역적응연구(R&D)(1133-302)	신품종개발공동연구	품종 육성 기술 개발을 위한 작목·품종별 재배현황 통계 구축 연구(1과제)
	농업생명자원국가관리기관운영	농업생명자원 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관리기관 운영(5과제)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 구축(R&D)(1133-308)	기후변화완화및저탄소농업기술개발	국가 고유 온실가스 흡수계수 개발, 감축 이행평가 등(6과제)
	농업부문생산환경변동예측및평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적지 및 생산성 영향 평가(1과제)
중점관리병해충선제대응및피해경감기술실용화(R&D)(1133-429)	병해충디지털예찰예측기술개발	병해충 영상 진단 빅데이터 및 데이터 공유 기술 확대(1과제)
농자재관리 및 평가(R&D)(1134-300)	소면적작물농약직권등록	농약직권등록시험 및 저항성 연구 등(17과제)
국가농경지환경자원관리기술개발(R&D)(1136-325)	공익적기능확산기술개발	전국 농경지 토양특성검정 및 비옥도 평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평가지표 개발(2과제)
농산부산물Eco순환기술개발(R&D)(1147-432)	농산부산물원료화기반구축	농산부산물의 통합정보 구축(1과제)

자료: 농촌진흥청

9)「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둘째,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 신규 R&D 사업의 경우 간접비[10]가 적정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실제 연구개발에 투입되어야 할 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농촌진흥청은 협약 단계에서 간접비 총액 상한과 합리적인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여 사업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농촌진흥청의 2026년 신규 R&D 중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은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등 5개임.

[농촌진흥청 2026년 신규 R&D 사업 중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 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6년 예산안
국가농업환경종합관리기술개발(R&D)	2026~2030	25,493	4,025
기후변화대응생명공학작물활용기술개발(R&D)	2026~2032	37,800	4,200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2026~2030	49,400	7,800
대체단백특화시장맞춤형원료화(R&D)	2026~2030	49,400	7,800
특용작물유래천연활성바이오소재생산및활용기술개발(R&D)	2026~2030	47,500	7,500

자료: 농촌진흥청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에 따라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면, 직접비 외에 기관별 간접비를 지급해야 함.

그러나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동일한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더라도 간접비 총액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음. 전체 사업 예산에서 간접비 비중이 과도하면 실제 연구개발에 투입되어야 할 자원이 줄어들고, 연구 성과의 효율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 공고나 협약 단계에서 간접비 총액 상한과 적정 비율을 사전에 설정하고, 간접비 집행 내역에 대한 투명한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과다한 간접비 지출을 방지하고 연구개발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르면, 간접비는 공통경비 성격의 인력지원비(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실 안전・보안・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등), 성과활용지원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정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이 포함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간접비 비율]

(단위: %)

구분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부설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부설연구소	전문생산 기술 연구소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최소	5.00	5.00	5.00	5.00	16.11	5.19	17.10
최대	26.02	19.26	30.19	29.70	25.85	32.20	36.80

자료: 농촌진흥청

셋째,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식량·원예특작 3개 과학원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전문연구원(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중도퇴직률이 20% 이상으로 과다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R&D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연구인력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임.

농촌진흥청은 「전문연구원 운영규정(훈령 제1446호)」에 따라 국내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연구역량 배양 등을 위해 기간제 전문연구원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으며, 이들은 품종 개발, 스마트팜 기술 등 중요한 핵심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3년간 국립농업과학원을 비롯한 3개 소속기관에서 전문연구원의 중도퇴직률이 21%~24.9%에 달하면서 연구과제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11]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인력현황 및 중도퇴직률]

(단위: 명)

구 분	총원	본청	농업과학원	식량과학원	원예특작과학원	축산과학원
박사 후	202	-	94	28	49	31
석사 후	109	2	48	42	2	17
계	311	2	142	70	51	48
최근 3년간('22~'24) 중도퇴직률	-		**24.9%**	**21.5%**	**21.0%**	**10.4%**

자료: 농촌진흥청

11)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전문연구원 제도를 통해 국내·외 석·박사 학위 취득자를 농업 R&D 과제에 참여시켜 경력과 연구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전문연구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임. 또한 전문연구원 참여 연구과제는 연구책임자가 과제기획, 연구수행 등 핵심 업무를 주도하여 전문연구원 퇴사로 인한 연구의 연속성이나 성과품질에는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임.

【일반회계】

<세 출>

2.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사업: 사업관리예산의 기획평가관리비로 분리 계상 및 적정 금액 반영 필요

가. 개 요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사업은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기반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해 농업과학 기초·기반 분야 R&D에 참여할 전문인재를 양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원(33.3%) 증가한 32억원이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2,400	2,400	3,200	800	33.3

이 사업은 토양·식물영양·병원균생태·해충 및 잡초생태 4개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5년간(2025년~2029년) 추진될 예정이며, 2025년에 공모를 통해 12개 과제(8개 대학)가 신규로 선정되었으며, 2026년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됨.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400백만원 - (신규) 12개 x 267백만 x 9/12개월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3,200백만원 - (계속) 12개 x 267백만 x 12/12개월

자료: 농촌진흥청

12) 일반회계-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1136-365)(연구정책국)

나. 검토의견

2026년도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사업은 사업관리예산을 포함한 32억원 전액이 연구개발활동비(360-05)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직접적인 연구개발활동이 아닌 사업관리예산은 기획평가관리비(360-06)로 분리 계상하고, 그 산정비율도 다른 R&D 사업 수준에 맞게 축소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올해 착수되었으며, 농촌진흥청은 2025년도 예산 24억원 중 21억 6,000만원을 대학의 인재양성 연구개발활동비로 지원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2억 4,000만원은 사업관리비[13] 성격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배정하였음.

[농업기초기반전문기술인재양성(R&D) 사업 2025년 예산 집행현황]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편성	집행	
ㅇ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400**백만원 - 12개 x **267백만** x 9/12개월	ㅇ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2,160**백만원 - 12개 x **240백만** x 9/12개월	ㅇ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3,200백만원** - (계속) 12개 x **267백만** x 12/12개월
-	**ㅇ 기획평가관리비: 240백만원**	-

기획평가관리비란 '연구개발출연금의 기획·공고·선정·협약·정산·평가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데, 정부는 최근 2021년 예산안 편성부터 R&D 기획평가관리비의 투명성 제고와 규모 파악을 위해 별도의 비목인 기획평가관리비(360-06)를 신설하였음.

이러한 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다른 R&D 사업인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활동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연구개발활동비(360-05)로 편성하고, 사업관리비는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로 분리 편성하였으며, 관리비 산정비율도 5.5% 수준을 적용하고 있음.[14]

---

1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부처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 또는 국가재정법 및 기관 설립 근거법에 의거 특정 목적의 기능, 업무 및 사업관리를 위탁·위임받은 기관이 사업관리를 함.

14)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R&D) (1147-330)의 2026년도 예산안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 17,808백만원
- 연구개발기획평가관리비(360-06) : 900백만원 **(17,808백만원×5.5%)**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비 총 32억원 전액을 연구개발활동비(360-05)로 편성하였으므로, 사업관리예산은 기획평가관리비(360-06)로 분리하여 계상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앞서 살펴본 타 R&D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가 5.5%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비율을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사업(신규): 농가 보급 확대를 위한 연구성과의 국가소유 확대 검토 등

가. 개 요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사업은 빅데이터·AI 기반의 식량작물·과수·시설원예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진단 플랫폼 개발로 지능형 영농관리 서비스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15)]

[2026년도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 (R&D)	-	-	7,800	7,800	순증

이 사업은 AI 기술을 농업 현장에 접목하여 작물생육 상태 진단, 수량·품질 예측, 지능형 농작업 의사결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5년(2026년~2030)이며, 총 사업비는 494억원임.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6년 예산안
ㅇ 노지 작물 생육 진단 자동화를 위한 AI 모델 개발 - (신규) 6개 x 780백만 x 9/12개월 = 3,510백만원
ㅇ 시설원예 작물 생육 진단 자동화를 위한 AI 모델 개발 - (신규) 3개 x 1,040백만 x 9/12개월 = 2,340백만원
ㅇ 표준기반 농업용 개방형 AI 플랫폼 개발 및 활용 - (신규) 3개 x 867백만 x 9/12개월 = 1,950백만원

자료: 농촌진흥청

15) 일반회계-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R&D)(1136-383)(연구정책국)

나. 검토의견

첫째, 신규 사업인 AI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플랫폼 개발 사업은 연구성과의 국가 소유를 합리적 수준으로 확대하여, 표준 데이터셋·플랫폼 소프트웨어 등 공공재적 인프라와 필수적 응용 서비스를 다수 농가가 비용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94억원 규모로, 산업체·대학·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사업 형태로 추진될 예정임.

2025년 기준 농촌진흥청의 공동연구사업은 544개 과제가 수행되고 있지만, 이 중 국가 소유로 관리되는 과제는 34개로 6% 수준에 불과함.

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에서 연구성과 소유권을 원칙적으로 성과를 창출한 기관에 부여하고, 국가 소유는 국가안보나 공익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임.[16)]

1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농촌진흥청 공동연구사업 과제 현황]

(단위: 개)

과제수			국가소유
주관연구기관(농진청)	주관연구기관(외부)	계	
220	324	544	34

자료: 농촌진흥청

그러나 이 사업은 기존에 사람이 직접 수집하던 작물 생육데이터를 AI와 자동화 장비로 수집·분석하고, 이를 개방형 표준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큼.

우리 농업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할 때, 고령·영세 농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첨단 기술을 정부 지원(보조금) 없이 자율적으로 도입·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생육진단·품질·수량 예측 데이터와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농가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므로, 민간 독점 형태로 귀속될 경우 정부 재정부담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17)18)]

따라서 연구성과의 소유 구조를 국가와 민간 간 적절한 분담 구조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표준화 데이터셋과 플랫폼 소프트웨어와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소유·관리하여 개방성을 보장하고, 응용 서비스는 민간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농가가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적 조건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7) 향후 다수 농가에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연구개발비에 더해 장비 보급·유지관리·교육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크며, 성과 소유권까지 민간에 귀속될 경우 로열티나 사용료 부담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음.

18)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4).「세계농업」. 제27호 봄호, p26.
"세계 각국의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농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가 있으나 개별 현장에서 이를 구현하는 데는 몇 가지 장애물이 있다. 높은 초기 투자 비용, 낮은 기술 수용성 등이다. 인공지능 솔루션은 중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일 수 있으나 초기 투자 비용이 매우 높을 수 있어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 농업 기업과 중소규모 농업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본 투입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이 당분간 어려울 수 있으며, 영세소농과 개발도상국은 더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공지능의 도입, 적용 및 유지 비용이 하락하거나 정부 보조금 또는 민간 투자와 같은 자금 조달 자원을 확보할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AI 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플랫폼 개발 사업의 성과지표는 기존 R&D 사업과 동일하게 논문·특허·기술이전 등 전형적 지표에 국한되어 있으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 사업의 핵심 목표인 표준화된 데이터 구축량과 AI 모델 정확도 향상률 등을 반영하는 차별화된 지표 설정이 필요해 보임.

이 사업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농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표준 데이터셋 축적과 작물 생육진단의 자동화를 위한 AI 모델 개발이 핵심 목표이므로, 성과지표 또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AI기반작물모니터링및진단플랫폼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노지 작물 생육 진단 자동화를 위한 AI 모델 개발 ('26년 예산안: 3,510백만원)	■ 노지 식량작물 생육 계측·진단 기술 및 AI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주요 노지 대면적 식량작물 생육진단, 수량성 예측 및 특성분석 AI모델 개발 ■ 노지 과수 생육진단 기술 및 AI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빅데이터 활용 과수 실시간 품질 및 수량 예측 AI 기술 개발 ■ AI 기반 노지 식량작물·과수 지능형 농작업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시설원예 작물 생육 진단 자동화를 위한 AI 모델 개발 ('26년 예산안: 2,340백만원)	■ AI 기반 작물 생육지표 계측 및 생체센서 연계 융합데이터 생성 기술 개발 ■ 융합데이터 기반 작물 생장 단계별 진단·처방 자동화 기술 개발 ■ 작물 재배 의사결정을 위한 적정 생육상태 정보 및 환경제어 연계기술 개발
표준기반 농업용 개방형 AI 플랫폼 개발 및 활용 ('26년 예산안: 1,950백만원)	■ 개방형 농업 데이터 허브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기술 개발 ■ 작물 생육 진단·예측 기반 AI 농업 제어 플랫폼 개발 ■ 주요 작물(시설·노지) 지능형 영농관리솔루션 개발 및 실증

자료: 농촌진흥청

예를 들어 대표 작물별 표준화된 데이터셋 구축 규모, 대표 작물별 AI 모델의 예측 정확도 향상률 등을 구체적 성과지표로 설정할 수 있음.

이러한 지표는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성과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검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성과를 명확하게 제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AI기반 작물 모니터링 및 진단플랫폼 개발 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6	2026년 목표치 산출근거
SCI논문 (단위: 건, 누적)	목표	신규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최종 목표치인 10건을 기준으로 연차별 목표치 설정
	실적	-	
기술 이전 (단위: 건, 누적)	목표	신규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최종 목표치인 10건을 기준으로 연차별 목표치 설정
	실적	-	
소프트웨어 등록 (단위: 건, 누적)	목표	신규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최종 목표치인 15건을 기준으로 연차별 목표치 설정
	실적	-	
특허 등록 (단위: 건, 누적)	목표	신규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최종 목표치인 10건을 기준으로 연차별 목표치 설정
	실적	-	
표준화 등록 (단위: 건, 누적)	목표	신규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최종 목표치인 12건을 기준으로 연차별 목표치 설정
	실적	-	

자료: 농촌진흥청

4.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 사업: 홍보비 등 운영비 지출 최소화 노력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농가 현장에 농업기술을 보급·확산하고, 이를 통해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59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	17,444	17,444	17,076	△368	△2.1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	5,904	5,904	5,904	-	-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학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술지원·시연회 등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2026년은 18개 과제가 추진될 계획이며 사업 수행기관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임.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ㅇ 민간위탁사업비(320-02) 82백만원 × 18과제 × 4개 권역 × 100% = 5,904백만원	좌 동

자료: 농촌진흥청

19) 일반회계-농업기술협력지원(보조)(2131-300)(농촌지원국)

나. 검토의견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 사업의 2024년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비로 3억 1,700만원을 지출하는 등 운영비로만 전체 사업비의 16.6%에 달하는 약 10억원이 집행되었는데, 농가 기술보급과 전문교육을 수행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비중을 높이고 홍보비 등 운영비 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농가에 대한 기술보급 혁신을 지원하고, 농업 현안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사업 수행 체계는 농촌진흥청이 기본계획을 수립·총괄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공고 및 위탁 관리·운영을 담당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음.

2024년에는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여 44개 과제 중 22개 과제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 대상 교육·현장지원 실적은 총 210건(현장교육 68건, 컨설팅 131건, 시연회 11건)이 수행됨.

한편, 2024년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운영비로 약 10억원(홍보비 3억 1,700만원·임차료 2억 2,500만원·진흥원 귀속 수수료 2억 5,000만원 등)이 지출되었고, 선정된 대학에는 49억원이 지원되었음.

[2024년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사업 운영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고
일반수용비	201	84	
임차료	200	225	
국내여비	45	19	
행사비	130	35	
일반용역비	-	49	성과용역
광고선전비	**100**	**317**	
위탁수수료(간접비)	295	250	진흥원에 귀속되는 수수료
기타	29	24	
계	1,000	1,003	

자료: 농촌진흥청 자료 재구성

그러나 홍보비의 경우 집행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초 계획(1억원)보다 3배를 초과하여 집행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 향후에는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운영성 경비를 절감하고, 농가 교육과 기술보급을 담당하는 대학 지원사업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202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총 59억 400만원만 편성되어 있어 2024년과 2025년의 집행 사례와 같이 집행 단계에서 약 10억원 규모의 사업운영비를 별도로 분리·지출할 계획으로 보임.

이러한 편성·집행 방식은 예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대학지원사업비와 사업운영비를 명확히 구분·계상하여 관리하는 개선이 필요함.[20]

20) 일반적으로 위탁사업의 사업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5% 내외 수준이며, R&D 기획평가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3~5% 수준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5.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 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 개정을 통한 연례적 집행부진 해소 필요

가. 개 요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은 농업기술센터 등 지방 농촌진흥기관을 농업기술보급과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기술보급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2억 3,200(3.8%) 증가한 607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58,500	58,500	60,732	2,232	3.8

이 사업은 지방농촌진흥기관(도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기반조성[22)] 시설 구축 및 장비구입비를 국비 50%로 지원하는 내용임.

[농업기술산학협력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ㅇ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 농촌지도기반조성 117,000백만원 × 50%	ㅇ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농촌지도기반조성 121,464백만원 × 50%

자료: 농촌진흥청

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보조, 지역자율)(2233-300)(농촌지원국)

22) 과학영농종합시설, 교육시설, 종합검정실, 실증포장, 미생물배양시설, 실습체험시설 등

나. 검토의견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은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1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이월·재이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연부율을 설정하고 단계적 집행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23]

이 사업의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은 예산현액 888억 1,300만원 중 546억 5,800만원(61.5%)을 집행하였고, 2023년은 예산현액 864억 5,100만원 중 443억 1,300만원(51.3%), 2024년은 예산현액 1,082억 7,400만원 중 501억 6,100만원(46.3%)이 집행되는 등 매년 실집행률이 감소 추세에 있음.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연도별 예산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농촌진흥청		지자체 기준					
	예산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 현액(C)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D/C)
2022년	63,342	65,893	22,920	88,813	54,658	32,755	1,400	**61.5**
2023년	53,696	53,696	32,755	86,451	44,313	40,689	1,449	**51.3**
2024년	67,585	67,585	40,689	108,274	50,161	57,239	874	**46.3**

자료: 농촌진흥청

특히 2024년에는 10억원 이상 이월된 사업이 14개에 달했으며, 이 중 10개 사업은 2025년 6월 말 기준 집행률이 30% 미만에 그쳐 재이월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2024년 결산 결과 이월액이 10억원 이상 사업현황]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이월액	'25.6월 말 집행액		
경기	포천	농업인 종합교육관 건립 공사	2,115	10	-	-
강원	태백	과학영농시설 농업인학습관 신축	1,418	400	-	-
	홍천	농산업 창업교육관 신축	1,001	882	-	-

23) 지역자율계정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예산의 편성과정을 살펴보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도농업기술원으로 예산을 신청하고, 도농업기술원은 사업목적 부합유무, 사전절차 이행 유무 등을 검토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요구액을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각 시·도에서 시군 자체 우선 순위 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신청함.

(단위: 백만원)

시도	시군	사업명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이월액	'25.6월 말 집행액		
충북	기술원	스마트 농업기계 실습장 조성	1,800	82	-	-
충남	논산	과학영농 종합분석센터 건축	1,484	-	1,300	-
전북	정읍	정읍시 치유농업관	1,500	-	-	-
	임실	과학영농시설 구축	1,693	1,693	-	-
전남	도원	지역특화과수지원센터 건립	3,390	426	1,630	470
	무안	무안군 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	2,900	322	2,565	5,000
경북	경주	과학영농실증교육관 건립	2,445	1,759	4,000	-
	칠곡	미래농업복합지원센터 조성	1,216	367	-	-
경남	창원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4년차)	3,828	223	2,684	-
	통영	과학영농시설 이전(2년차)	1,800	75	800	500
	사천	과학영농시설 확대 조성	1,944	285	-	-

자료: 농촌진흥청

이에 대해 농촌진흥청은 교육・실증시설 등 대규모 건축사업 증가에 따른 행정절차 장기화, 사업 부지・계획 변경 등을 집행부진 사유로 제시하면서, 향후 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여 행정절차(부지 선정, 인허가 등)가 사전에 완료된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다년차 사업은 연차별・공정별 필수 소요금액만 반영하겠다는 의견임.

지역자율계정 예산이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예산편성상 자율성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음.

그러나 집행 부진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 개정 시, 단순한 절차 개선에 그치지 말고 1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연부율을 설정하여 단계별 집행을 의무화하는 등 추가적인 보완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은 4,368억원으로, 전년 대비 93억원(2.2%) 증가함.[1)]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4,275	4,275	4,368	93	2.2
총수입	4,275	4,275	4,368	93	2.2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은 3조 47억원으로 전년 대비 3,878억원(14.8%) 증가함.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6,169	30,840	30,047	3,878	14.8
총지출	26,169	30,840	30,047	3,878	14.8

문의 : 강영옥 예산결산조사관 kang052@assembly.go.kr (02-6788-5687)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조 2,3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0억원(7.9%) 증가함.

[2026년도 산림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985	985	1,020	35	3.6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9,756	10,937	10,625	869	8.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19	719	725	6	0.8
합 계	11,460	12,641	12,370	910	7.9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4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조 4,916억원으로 전년 대비 8,587억원(23.6%) 증가함.

[2026년도 산림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1,881	26,551	24,750	2,869	13.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9,756	10,937	10,625	869	8.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973	4,982	8,816	4,843	121.9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19	719	725	6	0.8
합 계	36,329	43,189	44,916	8,587	23.6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산림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5개(132억 8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일반회계 사업 중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R&D)’,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R&D)’,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은 산림 분야 현안 연구를 위한 것이며,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지원’ 사업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운영을 위한 것으로 35억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사업 중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사업은 경제적 기반 및 경력이 부족한 청년 임업인에게 임산업 진입 장벽 완화 및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산림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산림분야 그린바이오 미래형 가치사슬 기술개발(R&D)	5,747
2	산림 지식재산 기반 유레카 기술개발(R&D)	1,200
3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2,500
4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지원	3,51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250
총지출		13,208

한편 산림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사방사업’, ‘산사태재난경계피난’,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사업 등 총 8개임.[3)]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2026년도 산림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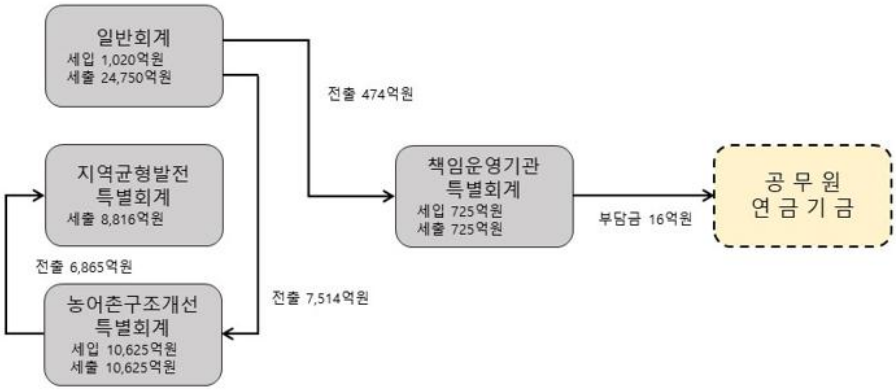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사방사업	278,373	318,548	40,175	14.4
2	산사태재난경계피난	21,642	32,347	10,705	49.5
3	산림생물다양성증진	15,828	22,674	6,846	43.3
4	스마트산림재해대응(정보화)	947	3,865	2,918	308.1
5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3,967	6,349	2,382	60.0
6	산사태현장대응기술개발(R&D)	4,445	5,926	1,481	33.3
7	청사시설관리	3,011	4,061	1,050	34.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	새만금수목원조성	24,150	87,822	63,672	263.7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산림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각각 7,514억 4,700만원, 473억 6,500만원이 전출되었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6,865억원 4,100만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부담금 16억원 3,700만원이 전출되었음.

[산림청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 주요 특징은 산림재난 대응 강화예산이 전년대비 43.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기후변화 및 지역소멸 대응, 산림경영 · 산업 활성화, 국민복지 증진사업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산림청은 매년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조림・임도시설・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경영사업의 유지 및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언론과 시민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은 꾸준하게 이들 사업의 집행성과와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중립적인 기관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산림경영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산림청은 내년에 신설되는 한국산림재난공단 보조예산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 기관만을 반영하고, 편입되는 협회들의 수입・지출은 제외하였으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산림재난방지법」 제64조의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공단에 편입되는 모든 협회들의 자체수입과 가용재원을 포함한 전체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여 예산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음.

셋째, 2026년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이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림보호지원단 2개 조직체제로 개편되었으나, 신설되는 산림재난대응단의 규모(9,272명), 고용기간 확대(10개월) 및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기존 산림보호지원단(64명, '26년 예산안 15억 2,300만원)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넷째, 공・사유림을 대상으로 복구조림 예산 집행 시 산불방지를 위한 조림정책이 필요하므로, 활엽수・혼효림 비중 확대를 지자체 조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조림·임도시설·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경영 정책에 대한 객관적 분석 필요

가. 개 요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의 원인분석과 대책수립 과정에서 조림・임도시설・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정책과 재정투자 방향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주요 쟁점은 산림경영 예산이 목재 생산성 향상보다는 산불・산사태 등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임.[4)]

2026년도 산림경영과 관련된 주요 예산안을 보면, 조림이 전년대비 168억 1,300만원(15.6%) 증가한 1,245억 3,500만원, 임도시설이 26억 6,200만원(0.9%) 증가한 2,866억 2,200만원, 숲가꾸기가 97억 3,800만원(4.1%) 증가한 2,489억 4,7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2026년도 조림·임도시설·숲가꾸기 등 산림경영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조림	조림(자율)	81,280			105,138	23,858	29.4
	조림(제주)	978			797	△181	△18.5
	조림(세종)	198			243	45	22.7
	조림(지원)	25,266			18,357	△6,909	△27.4
	소계	**107,722**			**124,535**	**16,813**	**15.6**
임도시설	임도시설(자율)	92,579			99,567	6,988	7.5

4) 2025년 8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가 열렸고, 정부・학계・시민단체・임업계가 참여하여 산림경영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단위: 백만원, %)

구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본예산 (A)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임도시설(지원)	190,049	100,825		185,411	△4,638	△2.4
	임도시설(제주)	280			280	-	-
	임도시설(세종)	1,052			1,364	312	29.7
	소계	**415,616**	**100,825**		**427,870**	**2,662**	**0.9**
숲가꾸기	숲가꾸기(자율)	158,394	1,000		164,805	6,411	4.0
	숲가꾸기(세종)	373			389	16	4.3
	숲가꾸기(제주)	1,702			1,770	68	4.0
	숲가꾸기(지원)	78,740			81,983	3,243	4.1
	소계	**239,209**	**1,000**		**248,947**	**9,738**	**4.1**

자료: 산림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나. 검토의견

조림・임도시설・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경영 사업의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조림을 통한 산림자원 육성, 임도시설을 통한 산림재해 대응, 숲가꾸기를 통한 산불 예방 등 각 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 성과 및 정책적 타당성 측면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론이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되고 있음.

첫째, **‘조림’**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산림피해지 복원을 자연복원과 활엽수림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산사태 위험이 크거나 활엽수 출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합리적 수준에서 인공조림이 불가피하며, 산주가 침엽수를 선호할 경우에는 내화수림대[5] 조성을 병행하여 생태적 기능과 경제성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방침임.

그러나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당초 복원계획과 달리 복원조림 비율이 달라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예컨대 활엽수 위주의 복원을 계획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산주의 요구나 경제성 논리로 침엽수 식재 비중이 확대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이는 산주가 경제성이

5) 내화수림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수종을 띠 모양으로 심어 만든 숲

높은 침엽수를 선호하거나 단기간 성과를 중시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로, 복원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또한 인공조림 시 활엽수 수종 기준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합리적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에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있음. 아울러 산림복원 의사결정 과정이 목재생산 등 산업계 이익을 우선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복원정책도 기존 조림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조림복원 대 자연복원]

조림복원 및 경제성 강조	자연복원 및 활엽수 강조
한국 산림 토양 특성상 침엽수가 초기 정착에 유리. 침엽수가 송이 및 목재 채취 등 경제적 이용가능성이 높음	침엽수는 산불에 취약함. 활엽수·혼효림은 수분 증발 억제, 토양 보전 효과가 커서 산불 확산 억제, 산사태 예방에 유리
동일 수종으로 조림하면 숲 관리, 병해충 방제, 목재 생산계획 수립이 효율적	자연천이를 통한 복원과 활엽수 확대는 생태적 회복력 및 다양성 강화를 촉진
산불 피해지에 빠르게 숲을 조성해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녹지 경관을 신속히 회복	탄소흡수·생물다양성·수자원 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침엽수 단순림보다 큼
〈산림청 의견〉 ○ 생태적 특성, 산업계 수요, 재해안전성을 모두 고려한 복원을 추진 중임 - 산불피해지 복원은 자연복원·활엽수림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최종 결정됨 * 현행 복원방식(최근 5년간) : 자연복원 69%, 조림복원 31%(조림복원 중 활엽수 50%) - 피해목으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 활엽수 출현이 불충분한 경우 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림복원 불가피 - 산주 요구로 침엽수를 식재하는 경우 내화수림대 조성 병행 등으로 생태·경제성 제고	

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 개최「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내용 및 산림청 의견 재구성

둘째, **'임도시설'**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임도가 산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며 산불 확산과 무관하고, 산불 대응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산사태는 강우·지형·지질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으며, 다만 부실시공 시에는 임도가 취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임도 설치와 산사태 발생 간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배제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산불 확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산림청이 임도를 사회기반시설로 보아 경제성 논리를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

[임도시설 확대 필요 대 반대의견]

임도시설 확대 필요	임대시설 확대 반대
임도가 있으면 진화차량·장비 접근이 빨라져 산불 초기 대응력이 강화되고, 산사태·산림재해 시 긴급 복구도 용이해짐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하여 산불이 더 빨리 확산될 수 있고, 절개지·노출지 증가로 집중호우 시 산사태·토사 유출 위험이 커짐
간벌·벌목한 목재를 임도를 통해 경제적으로 반출할 수 있어, 임업 경영성과를 높이고 국산 목재 경쟁력 강화에 기여	임도 건설 과정에서 산림 단절, 서식지 파괴, 토양 침식이 발생함
숲가꾸기, 조림, 병해충 방제 등 각종 산림관리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가능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실제 산불 예방 효과나 목재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제한적임
〈산림청 의견〉 ○ (산사태·산불) 임도는 산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며, 산불 확산과는 관계없음(산불대응에 유리) - 산사태는 강우가 직접적 원인으로 지형·지질·인위적 활동 등이 복합 작용하여 발생 - 부실시공이 있을 시 임도가 산사태 취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임도 자체가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님 - 바람은 대기 차원의 대류 현상으로,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결과 임도와 풍향·풍속 간 연관관계는 없음 ○ (경제성) 임도는 산림경영·재난대응·지역관광 등 다목적 SOC임 - 임도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산림경영, 산불재난 대응, 휴양·레포츠 등 관광자원, 농·산촌지역 교통연결 등의 편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임업선진국과 같이 임도 설치가 선행되어야 산림경영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음	

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 개최「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내용 및 산림청 의견 재구성

셋째,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산림청은 이 사업을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해 숲을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정의하면서 산불예방 효과가 크다고 강조함. 다만 숲가꾸기 후 산물(숲가꾸기 작업 후에 생겨난 부산물)이 수집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산불 연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한계는 인정하고 있음.[6)]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숲가꾸기의 산불 예방 효과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충분하지 않고, 벌목 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비판 및 경제적·생태적 균형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

6) 국립공원공단(2024),「지리산 하동 산불발생지 생태계 피해·위험 모니터링」.

[숲가꾸기 사업 유지 필요 대 축소 입장]

숲가꾸기 유지 필요	숲가꾸기 축소
숲가꾸기를 통해 고품질 목재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어, 임업 경쟁력 강화 햇빛·공간·양분을 확보해 나무 생장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고, 병충해에 강한 건강한 숲 유지	숲가꾸기 사업이 경제림 육성과 고부가가치 목재 생산에 치중되어 있고, 산불 예방·산사태 방지·탄소 흡수원 확대 등 공익적 기능이 상대적으로 소홀
밀생림(나무가 빽빽한 숲)을 솎아내면 산불 확산을 막고, 임내 가연물(마른 가지·낙엽 등)을 줄여 화재 위험을 완화	숲가꾸기의 이름으로 실제는 간벌·벌목이 확대되어 산림 훼손이나 생물다양성 저하를 초래
<산림청 의견> ○ 숲가꾸기는 목적에 따라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하여 숲을 원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사업임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에 따라 산림의 6대 기능(목재생산림, 수원함양림, 산지재해방지림 등)에 따라 숲의 수종 구성, 개별 나무의 성장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숲가꾸기를 추진 중 - 숲가꾸기는 산불연료제거* 및 숲의 건조화 방지**로 산불을 예방하는 효과가 큼 * 산불 심각성 최대 72%↓('24, 미국), ** 빗물차단 손실량 38%, 증산량 20% 이상 감소('22, 산림과학원) - 다만, 숲가꾸기 후 산물을 수집하지 않으면 산불의 연료가 될 수 있어 제거 필요 ※ 향후 생활권 중심으로 산불위험지역 대상 산불예방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확대(30→60%)를 추진할 계획	

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 개최「산림경영 논쟁 관련 토론회」내용 및 산림청 의견 재구성

결론적으로, 산림청은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조림·임도시설·숲가꾸기 등 주요 산림경영사업의 유지 및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언론·시민단체 및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이들 사업의 집행성과와 타당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7], 조속히 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과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산림경영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7) "산불 피해 복구의 실상...세금 들인 결과가 이겁니까?", KBS(2025.7.15.) / "불타는 숲의 진실 - 숲가꾸기, 임도 그리고 수의계약", MBC(2025.7.13.) / "또 불거진 임도 논란… '효율 vs 환경' 접점은?", KBS(2025.5.6.) / "붉은 재앙 - 타버린 산, 사라진 책임", MBC(2025.4.29.) / "산림청 직격한 국립공원공단··임도 부족? 오히려 바람길 역할", MBC(2025.4.17.).

2. 효율적 재정운용 및 성과관리를 위한 내역사업 정비 필요

가. 개 요

정부 세출예산은 기능을 중심으로 부처-분야-부문-프로그램(항)-단위사업(세항)-세부사업(세세항)-내역사업으로 분류되며, 경비 성질을 기준으로 목-세목으로 구분됨. 이 중 '세목'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세목 간 조정은 목 범위 내에서 예산을 상호 이동하는 것을 의미함.[8)]

산림청은 산불방지대책·산림생물다양성증진 등 주요 세부사업에서 매년 다수의 세목조정을 실시해 왔으며,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도 연례적이고 과다한 세목조정에 대한 시정 요구가 반복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나. 검토의견

산림청은 반복된 과다 세목조정으로 국회 시정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회 심사단계에서 비목별로 적정 예산을 재편성하고, 서로 목적이 다른 내역사업들로 구성된 세부사업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연례적인 세목조정 문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산림청은 세목별 집행 수요를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채, 매년 과다한 세목조정을 통해 국회가 심의·의결한 예산 구조를 변경하여 집행해 왔음.

2024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도 산불방지대책사업(99건), 임도시설사업(82건), 산림생물다양성증진사업(38건) 등 주요 세부사업에서 다수의 세목조정이 발생하였음.

세목간 조정의 경우 예산의 이·전용과는 달리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산림청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집행이 가능함.

그러나 과다한 세목조정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는 것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해당 사업비목을 과다하게 변경한다는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회는 2022년·2023년도 결산 의결 과정에서, 산림청의 세목조정 건수가 연간 2천건을 초과하고, 조정 규모도 170억~190억원대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세목별

8)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시정요구한 바 있음.

[과다한 세목조정 관련 국회 시정요구 내역]

구분	국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2023년 결산	과다한 세목조정 지양	ㅇ [지적사항] 산림청이 2023회계연도에 세목 간 조정한 건수는 총 1,971건이고, 금액은 176억 5,800만원임 ㅇ [시정요구사항] 산림청은 비목별로 집행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비목별로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국회에서 심사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여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준수할 것	제도개선
2022년 결산	연례적 과다한 세목조정 지양 필요	ㅇ[지적사항] 최근 3년간 세목조정 현황을 보면, 2020년 2,004건, 136억 9,700만원 → 2022년 2,347건, 198억 8,600만원으로 세목조정 건수 및 규모는 증가추세인바, 이는 비목별 집행소요를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여 비목별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ㅇ[시정요구사항] 산림청은 국회에서 정한 비목별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연례적으로 과다한 세목 조정을 지양할 것	제도개선

그러나 2026년도 산림청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세목별 사업비 편성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합리적 내역사업 분류 및 세목별 편성의 정밀화가 시급함.

따라서 산림청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단계에서 10개 이상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된 단일 세부사업들을 복수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는 한편, 비목별로 적정 예산을 재편성하여 과다한 세목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또한 일부 실·국에서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을 집행함에 있어 별도의 내부 결재 절차 없이 세목조정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내부관리지침을 통해 관리·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세목조정이 많은 대표적 세부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집행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예산안	내역 사업수	세목조정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산림생물다양성증진 (일반, 1934-300)	14,258	15,828	22,674	19개	101건	136건	122건	38건
산불방지대책 (일반, 2332-300)	53,086	57,869	78,250	20개	194건	243건	168건	99건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4년 집행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예산안	내역 사업수	세목조정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산림재해일자리사업 (일반, 2331-301)	104,830	108,707	111,619	2개	166건	220건	166건	38건
산림헬기 도입·운영 (일반, 2333-300)	94,158	93,858	193,826	20개	58건	82건	40건	15건
사방사업 (일반, 2334-300)	249,885	278,373	318,548	10개	60건	58건	72건	41건
조림 (농특, 1534-300)	115,911	107,722	124,535	9개	89건	108건	70건	42건
숲가꾸기 (농특, 1534-302)	239,677	240,209	248,947	2개	104건	91건	78건	44건
임도시설 (지특, 1536-302)	177,556	290,874	185,411	10개	148건	217건	200건	82건

주) 조림과 숲가꾸기는 2026년부터 농특에서 지특으로 이관됨.
자료: 산림청 제출 자료 재작성

【일반회계】

<세 출>

3.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지원 사업(신규): 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공단 보조예산 편성 필요

가. 개 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지원’ 사업은「산림재난방지법」제58조[9]에 따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방지를 위한 연구·조사와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전담하기 위해 설립되는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공단”)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5억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지원	-	-	3,511	3,511	순증

한국산림재난공단은 기존 산림청 산하(유관)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 및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하여 내년 2월에 설립될 예정이며, 통합되는 기관의 인사·조직·자산은 한국산림재난공단에 포괄 승계될 계획임.[11]

---

9)「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 (시행: 2026.2.1.)
제58조(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설립등)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및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공단“이라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10) 일반회계-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지원(2336-300)(산림재난통제관)

11)「산림재난방지법」법률 제20751호 부칙
제3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산림재난 관련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1.「사방사업법」제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치산기술협회

2026년 예산안에는 모니터링센터 인원(30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만 반영되었으며, 나머지 기존 협회인력의 인건비와 사업비는 각 협회의 자체 재원으로 충당될 계획임.

[한국산림재난공단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6년 예산안	비고
인건비	2,192	한국임업진흥원 내 산림병해충·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인원(30명) 및 관련되는 사업의 공단 이관에 따른 비용 반영
경상경비	504	
사업비	1,025	
자체수입	△210	
계	3,511	

자료: 산림청

[한국산림재난공단 설립 추진 경과]

ㅇ 추진실적
- 「산림재난방지법」 제정(2025.1.31.)
- 공단 설립위원 위촉 및 공단 설립위원회 구성(2025.2.28.)
  · 위원구성(7명) : 외부 6명, 내부 1명 / 운영 : 정기(2개월)
- 공단 설립추진단 구성(2025.3.10.)
  · 산림청 차장을 단장으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통합예정기관으로 구성
- 공단 설립위원회 및 설립추진단 회의 개최
  · 의결안건: 정관, 이사회운영규정,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복무규정, 감사규정, 임원보수규정, 사무관리규정, 여비규정, 법인카드 운영규정

ㅇ 향후 계획
- 공단의 인사·복무·직제·보수 등 규정 및 시행세칙 마련(2025.11월)
- 대표자 결정 및 설립등기, 고용 등 승계, 설립위원회 해산(2026.1월)
- 공단 설립 및 「산림재난방지법」 시행(2026.2.1.)

자료: 산림청

2. 「산림보호법」 제27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3. 「산림보호법」 제3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4.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4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나. 검토의견

산림청은 한국산림재난공단 보조예산[12]을 산정함에 있어 모니터링센터 관련 인건비 등만 반영하고 공단에 편입될 나머지 협회들의 수입·지출은 제외하였으나,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림재난방지법」 제64조[13]의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공단에 편입되는 모든 협회들의 자체수입과 가용재원을 포함한 전체 수입과 지출을 감안하여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산림재난방지법」 제64조에서는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지차기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산림재난공단의 보조예산을 심사함에 있어서도 모든 수입과 지출을 반영한 소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그러나 산림청은 2026년도 한국산림재난공단 지원 보조금을 산정하면서, 모니터링센터 관련 인건비(30명)·경상경비·사업비만을 합산하여 총 37억 2,100만원을 필요액으로 산출하고, 여기서 모니터링센터 자체수입 2억 1,000만원을 차감한 35억 1,100만원만을 보조예산으로 편성하였음.

즉 한국산림재난공단에 통합될 협회들의 인건비·사업비 및 자체수입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기관지원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산림재난방지법」의 총계주의에 따른 예산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산림재난공단 지원 사업 예산안 제출내역]

구분		2026년 예산안
인건비	모니터링 센터	2,192백만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누락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경상경비	모니터링 센터	504백만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누락

12) 산림청에 따르면, 산하 공공기관 중 한국임업진흥원만 수지차 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관리 중이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도 수지차 보전기관에 준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한국산림재난공단의 수지차 보전기관 지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는 의견임.

13) 「산림재난방지법」
제64조(예산과 결산) ① 공단은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2026년 예산안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사업비	모니터링 센터	1,025백만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누락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자체수입	모니터링 센터	△210백만원
	한국치산기술협회	누락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계		3,511백만원

자료: 산림청

4.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산림보호지원단 존치 필요성 검토 등

가. 개 요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9억 1,200만원(2.7%) 증가한 1,11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6년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산림재해일자리	108,707	108,707	111,619	2,912	2.7

이 사업은 2026년부터 기존의 단기 일자리(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와 장기 일자리 중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통합하여 「산림재난방지법」 제13조[15)]에 따른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일원화하면서 단기 일자리는 폐지하고, 산림보호지원단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으로 개편함.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개월)	77,836	-
	산사태현장예방단 (5개월)	5,727	-
산림재해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0개월)	23,661	-
	산림보호지원단 (10개월)	**1,483**	**1,523**
산림재난대응단(10개월)		**-**	**110,096**
계		110,732	111,619

자료: 산림청

14) 일반회계-산림재해일자리(2331-301)(산림재난통제관)

15) 「산림재난방지법」
제13조(산림재난대응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재난 피해의 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제41조제2항에 따른 산사태현장예방단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도 산림재해일자리 사업이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림보호지원단 2개 조직 체제로 개편되었으나, 신설되는 산림재난대응단의 규모(9,272명), 고용기간 확대(10개월) 및 업무성격을 고려할 때 기존 산림보호지원단(64명, '26년 예산안 15억 2,300만원)을 별도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산림청은 산림재난 예방 및 대응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6년부터 기존 산불전문예방진화대(6개월), 산사태현장예방단(5개월),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10개월)을 통합하여 산림재난대응단(10개월)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1,100억 9,600만원이 편성됨.

이는 기존에 시기별·기간별로 분산 운영되던 민간 지원 인력을 연중 10개월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함으로써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보임.

[산림재난대응단 신설 체제]

구분	2025년				2026년
종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폐지)	산사태현장예방단 (폐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폐지)	→	산림재난대응단 (신설)
주요임무	산불예방 및 봄·가을 산불조심기간 산불진화 및 잔불 정리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및 피해예방 조치, 산사태 발생지 현지 확인, 응급복구 지원	산림병해충 예비관찰 및 발생조사, 돌발 병해충 등 발생지 긴급 방제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연중 대응
사업기간	2003~2025	2013~2025	2009~2025		**2026~**
인원	11,864명 (국 1,841명 / 지 10,023명)				9,272명 (국 340 / 지 8,932)
	9,604명 (국 1,405 / 지 8,199)	760명 (국 108 / 지 652)	1,500명 (국 328 / 지 1,172)		
운영기간	**6개월 (단기)**	**5개월 (단기)**	**10개월 (장기)**		**10개월 (장기)**
임금(1일)	80,240원	80,240원	80,240원		90,560원
보조율	40%	40%	50%		40%

자료: 산림청

한편 통합조직인 산림재난대응단과 별도로 기존의 산림보호지원단은 계속 운영할 계획인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지원단은 전국 국유림관리소에 64명(사무소 당 3~4명)이 배치되어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활동, 산림 훼손

의심지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고 함.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림보호지원단 비교]

구분	산림재난대응단(신설)	산림보호지원단
주요임무	산림재난(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연중 대응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계도 및 산지정화 활동 등
사업기간	2026~	2007~계속
인원	9,272명 (국가 340 / 지자체 8,932)	64명 (국가 64)
운영기간	10개월(장기)	10개월(장기)
임금(1일)	90,560원	82,560원
보조율	40%	-

자료: 산림청

그러나 단기로 운영되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6개월), 산사태현장예방단(5개월)이 장기 일자리(10개월)로 전환됨에 따라, 산불이나 산사태 예방기간 전후에도 해당 인력이 산림보호지원단이 수행하는 기능과 업무를 일정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설되는 산림재난대응단 인력이 9,272명(국가직 340명 / 지방직 8,932명)에 달하고 고용기간도 10개월이므로, 기존의 산림보호지원단이 담당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산림 내 불법행위 감시, 입산통제 및 산지정화 활동 등의 업무는 산불·산사태 방지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산림재난대응단이나 산림보호지원단 모두 산림청 국유림관리사무소의 지휘·통제 하에 운영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산림보호지원단을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령화로 인한 진화업무의 비효율적 운용과 안전사고 문제는 통합되는 산림재난대응단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기존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직접일자리사업으로 운영되면서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함에 따라 고령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 대응 과정에서 안전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16)]

이러한 지적에 대해 산림청은 2026년부터 통합운영될 산림재난대응단 사업을 일자리 사업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17)]하였으나, 현행 유지 결정(8.26.)됨에 따라 계속 일자리 사업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임. 다만, 고용기간 확대(10개월) 및 임금 인상으로 역량 있는 인력의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임.

그러나 산불 진화 업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단순히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전사고 위험과 재난대응 역량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인력 구성현황]

(단위: 명)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합계
산사태현장예방단	12	20	41	215	469 (62.0%)	757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19	23	49	217	1,311 (81.0%)	1,619
산불전문예방진화대	60	139	527	1,649	7,071 (74.9%)	9,446

주)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2025년 8월말 현원 기준,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봄・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나누어 운영하여 2025년 2월말 현원 기준

자료: 산림청

16) 평균 61세・최고령 81세…산불 최전선에 선 위험한 노인들(노컷뉴스, 2025.3.25.) /매년 산불 덩치 커지는데…진화대 95%는 비전문 인력인 현실(한겨레, 2025.4.2.) / 대형화 되는 산불…진화 인력 전문화 시급(KBS뉴스, 2025.4.2.)

17) 두차례에 걸친 고용노동부와 협의(일자리사업 제외) 결과 현행 유지 결정(1차 6.23., 2차 8.26.)

5.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신규): 산불 등 재난예방 목적으로 사업목표 변경 검토

가. 개 요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은 목재 생산성 증진을 위한 AI기반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 기술 개발로 벌채 접근성을 향상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	-	2,500	2,500	순증

이 사업은 ‘AI 기반 임도 노선 선정 및 설계 기술개발’과 ‘AI 기반 임도 유지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로 구성됨.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구분	2026년 예산안
AI 기반 임도 노선 선정 및 설계 기술개발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신규) 4개 × 416.7백만원 × 9/12개월 = 1,250백만원
AI 기반 임도 유지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 (신규) 4개 × 416.7백만원 × 9/12개월 = 1,250백만원

자료: 산림청

18) 일반회계-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1544-328)(산림산업정책국)

나. 검토의견

신규사업인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은 당초 목재 운반 효율성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기획되었으나, 최근 대형 산불 발생으로 임도의 정책적 역할이 단순한 생산 기반에서 재해 대응 인프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개발 목표를 산불 대응 및 산림재해 예방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에 대한 사전 기획보고서[19]와 국회에 제출된 사업설명 자료에서는 사업추진 목적으로 "임도는 목재생산 효율성에 직결되는 핵심 산림경영 인프라로 자원의 이동과 순환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임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제시하고 있음.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 내용]

구분	사업 내용
AI 기반 임도 노선 선정 및 설계 기술개발	AI 기반 목재 운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임도망 계획, 임도 노선 선정 및 설계 기술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임도 구축의 신속성·정확성 제고 위한 기술개발
AI 기반 임도 유지관리 및 활용 기술개발	실시간 임도 품질진단 및 유지보수 예측, 임도 훼손지 비탈면 안정화 기술 등 AI 기반 유지관리 자동화 기술개발

자료: 산림청

그러나 임도의 용도로 본래 목재 운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컸지만, 최근에는 산불 대응·진화 활동, 산림재해 예방·대응이 중요한 정책적 목표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를 "목재 운반" 뿐만 아니라 "산불 대응 및 산림재해 관리"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20]

19)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2025).「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최적화 기술개발 기획보고서」, 2025년 6월.

20) 산림청은 임도 설계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 시 목재 운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산불 방지 등 다각적 요소를 반영하겠다는 의견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지역지원계정)】

<세 출>

6. 조림 사업: 활엽수·혼효림 비중 확대 필요 등

가. 개 요

‘조림’ 사업은 목재·바이오매스 등 산업용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조성, 산림재해 시 예방을 위한 큰나무조림, 산림재해피해지복구조림 및 산불예방을 위한 내화수림대조성 등을 하려는 것으로, 자율계정과 지원계정 등을 합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8억 1,300만원(15.6%) 증가한 1,245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조림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조림(자율)	81,280	81,280	105,138	23,858	29.4
조림(제주)	978	978	797	△181	△18.5
조림(세종)	198	198	243	45	22.7
조림(지원)	25,266	25,266	18,357	△6,909	△27.4
계	107,722	107,722	124,535	16,813	15.6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자율계정에서 산림재해피해지복구조림과 내화수림대조성 예산이 증가하였고, 자율·지원계정 모두 경제림조성 예산은 감소한 반면 큰나무조림 예산은 증가하였음.

2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조림(자율)(1534-303)·조림(지원)(1534-300)(산림산업정책국)

[조림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보조율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조림(자율)	**경제림조성**	60%	**42,402**	**34,258**
	큰나무조림	50%	12,493	22,244
	지역특화조림		10,564	12,251
	산림재해피해지 복구조림		3,330	23,190
	내화수림대조성		**3,000**	**3,705**
	선도산림경영단지	60%-70%	9,491	9,491
	소계		73,814	105,138
조림(제주)	**경제림조성**	60%	**28**	**18**
	큰나무조림	50%	482	482
	지역특화조림		468	297
	소계		978	797
조림(세종)	**경제림조성**	60%	138	148
	큰나무조림	50%	60	95
	소계		198	243
조림(지원)	**경제림조성**	-	9,428	6,024
	큰나무조림		4,859	6,317
	밀원수림조성		2,000	2,000
	조림사업운영비		1,699	1,699
	선도산림경영단지		2,317	2,317
	K-포레스트관건립		4,963	-
	소계		25,266	18,357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첫째, 공·사유림을 대상으로 복구조림 예산 집행 시 산불방지를 위한 조림정책이 필요하므로, 활엽수·혼효림 비중 확대를 지자체 조림평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자율계정 산림재해피해지복구조림 예산이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7배 증액(33억 3,000만원 → 231억 9,000만원) 되었음.

구체적인 집행계획에 대해 산림청은 2025년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 복구를 위해 현재 지자체 단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조림수종 및 복원방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의견이나, 사유림의 경우 산주들이 경제성을 중시하여 침엽수 식재를 선호

하는 경향이 강해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위주의 복원사례가 반복될 우려가 있음.

최근 10년간 경제림 조성의 연도별 수종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침엽수와 활엽수의 비율은 각각 55.7%와 44.3%였으나, 2024년에는 침엽수와 활엽수 비율이 각각 62.2%와 37.8%로 나타나는 등 송이·목재 채취, 관리 편의성 등 경제적 이용가능성이 높은 침엽수림의 비중이 증가하였음.

[최근 10년간 경제림 조성 연도별 수종 현황]

(단위: ha)

연도	2015	2018	2021	2024
ㅇ 침엽수	12,926(55.7%)	14,584(63.1%)	12,625(61.3%)	10,600(62.2%)
소나무	5,341	3,587	2,715	2,667
편백	4,597	5,746	4,532	3,643
낙엽송	1,332	4,206	4,721	3,874
잣나무	647	293	188	100
해송	265	296	146	51
침엽수기타	744	456	323	265
ㅇ 활엽수	10,252(44.3%)	8,505(36.9%)	7,974(38.7%)	6,443(37.8%)
상수리나무	1,540	1,088	1,054	924
백합나무	2,115	1,520	1,239	1,338
자작나무	1,169	1,040	1,302	910
헛개나무	696	515	460	416
활엽수기타	4,732	4,342	3,919	2,855
합 계	23,178	23,089	20,599	17,043

자료: 산림청

그러나 최근 산불 예방이 산림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복구조림을 하는 경우에도 산불 확산 방지에 유리한 활엽수 및 혼효림 식재를 확대하여 산림회복력과 생태적 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22)]

산림청도 활엽수 식재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나, 산불피해 강도·피해지 입목의 소생 가능성·작업 여건·산주의 희망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민관협의회를 통해 복원 수종 및 방법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산주의 경제적 선호에 따라 침엽수 위주의 식재가 반복되는

22) 산림청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삼나무 꽃가루 피해 완화와 생물다양성 증진을 목적으로 활엽수 조림을 점차 늘리고 있으며, 중국 역시 2000년대 이후 신속한 녹화, 생태복원, 사막화 방지를 위해 활엽수 조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활엽수·혼효림 비중 확대를 집행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자체 조림평가(공·사유림)에 의무 반영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조림 및 산림생태복원 비교]

구분		복구조림	산림생태복원
근거		산림기본법 제6조 산림자원법 제10조 산림보호법 제43조	산림자원법 제2조제10항
목적		경제림 등 산림자원조성	산림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의 회복
대상지		일반 피해지	보호구역 등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피해지
사업절차	타당성평가 ↓	-	실행
	설계,시공 ↓	실행	실행
	모니터링 ↓	활착율 조사(당년도)	최소 10년
	사후관리	숲가꾸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름
피해목 처리		모두베기 위주의 벌채	필요시 소규모 군상 벌채
식생기반 조성		-	토사유출방지, 토양개량 등
복원재료		경제수, 소득작물	자생식물, 자연재료
복원방식		산주 의견 반영 적지적수, 단일 수종 (묘목식재 위주)	참조생태계 선정, 다층구조, 혼효림 조성(움싹, 매토종자, 파종, 식재 등)

자료: 산림청

둘째, 자율계정의 내역사업인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은 50% 보조율에 37억 500만원, ‘경제림 조성’은 60%에 342억 5,8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산불대응력 강화를 위해 내화수림대[23] 보조율을 상향하고 투입되는 절대 예산 규모도 내역사업간 구조조정을 통해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목재·바이오매스 등 산업용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 조성사업의 국고보조율은 60%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조림(자율)사업에 342억 5,800만원이 편성됨.

반면 대형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은 국고보조율이 50%로

23) 내화수림대: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불에 잘 타지 않는 수종을 띠 모양으로 심어 만든 숲

경제림보다 10%p 낮고, 예산규모도 37억 500만원에 불과하여 경제림 조성사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임.

따라서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율을 상향하고, 투입되는 예산 규모도 내역사업간 합리적인 구조조정으로 점진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24)]

[조림(자율)사업의 경제림조성 대 내화수림대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보조율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조림(자율)	**경제림조성**	**60%**	42,402	34,258
	내화수림대조성	**50%**	3,000	3,705

자료: 산림청

24) 이에 대해 산림청은 최근 대형산불 발생 이후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고보조율 확대를 통한 사업 활성화는 필요하나 보조율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과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7. 임도시설 사업: 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과학적 분석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적정예산 반영 필요

가. 개 요

‘임도시설’ 사업은 임도를 설치하여 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자율계정과 지원계정 등을 합하여 전년대비 26억 6,200만원(0.9%) 증가한 2,866억 2,200만원이 편성되었음.[25)]

[2026년도 임도시설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임도시설(자율)	92,579	92,579	99,567	6,988	7.5
임도시설(지원)	190,049	290,874	185,411	△4,638	△2.4
임도시설(제주)	280	280	280	-	-
임도시설(세종)	1,052	1,052	1,364	312	29.7
계	283,960	384,785	286,622	2,662	0.9

이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세부내역을 보면, 자율・지원계정 모두 산불진화임도 예산은 증가한 반면, 간선임도[26)]는 감소하였고, 산림청이 직접 집행하는 지원계정을 보면 신규 내역사업인 ‘2027년 설계비’에 68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임도시설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보조율	2025년 예산 (당초)	2026년 예산안
임도시설 (자율)	간선임도	70%	70,909	60,770
	산불진화임도	**70%**	**21,670**	**38,797**
	소계		92,579	99,567
임도시설 (지원)	간선임도	-	22,240	11,120
	산불진화임도		**135,270**	**139,868**
	작업임도		4,576	2,288
	2027년 설계비		-	**6,818**

2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임도시설(자율)(1537-301)・임도시설(지원)(1536-302)(산림산업정책국)・임도시설(제주)(1537-301)・임도시설(세종)(1536-301)

26) 간선임도: 지역 내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집약・수송하기 위해 주요 노선을 따라 개설하는 임도로, 목재 생산과 유통의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함.

	구조개량 등		27,963	25,317
	소계		190,049	185,411
임도시설 (제주)	간선임도	70%	280	280
	소계		280	280
임도시설 (세종)	간선임도	70%	585	780
	산불진화임도	70%	457	584
	소계		1,052	1,364

자료: 산림청

나. 검토의견

임도시설과 관련하여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산림청 임도밀도 산정의 부정확성, 산사태 유발 및 산불 바람길 역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한 과학적 분석을 조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임도시설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6년 임도시설(자율·지원 등) 예산은 임도가 산사태를 유발하거나 바람길 역할로 산불을 확대시킨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6억 6,200만원이 증가한 2,866억 2,200만원임.

특히 2026년 예산에는 2027년 사업량을 미리 설계 완료하겠다는 계획으로 '2027년 설계비' 68억 1,800만원이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가하여 편성되었음.

① 임도밀도와 관련하여, 산림청은 2024년 말 기준 전국 임도밀도가 4.3m/ha(국가임도 5.5, 지방임도 3.8)에 불과하므로, 2030년까지 총 34,892km를 확충하여 5.5m/ha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연구보고서[27]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일본 등과 마찬가지로 임도뿐만 아니라 산림 내 고속도로·국도·지방도·농로 등 모든 도로를 포함하는 경우 임도밀도는 한국(51m/ha) 〉 오스트리아(37m/ha) 〉 일본(24.1m/ha) 순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반론이 있음.

② 임도의 산사태 유발문제에 대해, 산림청은 "산사태는 강우가 직접적 원인으로 지형·지질·인위적 활동 등이 복합 작용하여 발생하며, 부실시공[28]이 있을 시 임도가

27) 홍석환·안미연, 「산림도로 밀도 현황분석 및 고찰」 한국환경생태학회지 39(1) p 74~81, 2025.

28) 감사원의 「2025년 산림사업 관리·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국에 설치된 1,531개 임도 가운데 135개 임도를 점검한 결과, 103곳(전체의 76%)에서 법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산사태 취약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임도 자체가 산사태를 유발하는 것은 아니다.” 는 입장임.

그러나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산사태 9,656개소 중 인위적 요인이 35.9%를 차지하고, 이 중 임도로 인한 산사태 사례가 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음.[29)]

③ 임도의 산불 유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립공원공단은 “임도는 임내보다 평균 풍속이 1.3~2.4배 높으므로 바람길 역할을 하고 임도와 이격거리가 가까울수록 산불 피해가 높았다” 고 지적하였음.[30)]

이에 대해 산림청은 “풍향에 대한 분석 없이 풍속만을 고려하였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분석 데이터의 각 구역·기간 별로 임도와 임내 간 풍속의 대소 관계도 일관적이지 않아 임도가 바람길 역할을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음.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기관별로 상반된 주장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중립적인 기관을 통해 임도밀도의 적정성, 산불 확산 가능성, 산사태 유발 실태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임.

참고로, 감사원은 「산림사업 관리·감독실태」 감사보고서에서 물량 위주의 임도 확충 정책의 문제, 공사 관리인력이 부족한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 관행, 산사태 방지를 위한 구조물 미시공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음.[31)]

---

29)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재난관리를 위한 임도의 영향 분석 연구 결과보고(1차)」, 2024. 12.

30)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재난관리를 위한 임도의 영향 분석 연구 결과보고(1차)」, 2024. 12.

31) 감사원의 「2025년 산림사업 관리·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2023년 전국에 설치된 1,531개 임도 가운데 135개 임도를 점검한 결과, 103곳(전체의 76%)에서 법정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해양수산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은 1조 1,18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60억원(△16.8%) 감소함. 예산은 4,185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4억원(△36.2%) 감소한 반면, 기금은 7,00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원(1.7%) 증가함.[1)]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6,559	6,559	4,185	△2,374	△36.2
기 금	6,890	6,890	7,004	114	1.7
총수입	13,449	13,449	11,189	△2,260	△16.8

문의 : 김선영 예산결산조사관 olive114@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은 7조 3,2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471억원(8.1%) 증가함.

예산은 6조 1,8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999억원(3.3%) 증가하고, 기금은 1조 1,429억원으로 전년 대비 3,473억원(43.6%) 증가함.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59,859	61,298	61,858	1,999	3.3
기 금	7,956	7,956	11,429	3,473	43.6
총지출	67,815	69,254	73,287	5,471	8.1

나. 예산안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은 총 5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89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870억원(△17.0%) 감소함.

[2026년도 해양수산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4,231	4,231	892	△3,339	△78.9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322	322	501	179	55.6
교통시설 특별회계	17,715	18,141	17,459	△682	△3.7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38	38	27	△11	△28.9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50	50	33	△17	△34
합 계	22,357	22,782	18,912	△3,870	△17.0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조 4,970억원으로 전년 대비 669억원(△0.9%) 감소함.

[2026년도 해양수산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34,203	34,711	32,372	△1,831	△5.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6,711	17,641	16,461	△250	△1.5
교통시설 특별회계	17,715	18,141	17,459	△256	△1.5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618	618	576	△42	△6.8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6,392	6,392	8,102	1,710	26.8
합 계	75,639	77,503	74,970	△669	△0.9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1개 기금(수산발전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1조 1,6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397억원(41.4%) 증가함.

[2026년도 해양수산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수산발전기금	8,204	8,204	11,600	3,397	41.4
합 계	8,204	8,204	11,600	3,397	41.4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해양수산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23개(1,785억 2,6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산학연 역량을 집결하여 유망 AI 융합분야에서 1년 ~ 2년 내에 성과 도출이 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5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수산물 계약생산지원(융자)’ 사업은 김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회원조합(가공공장) 간 생산 및 가공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08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해양수산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기후위기 대응 자연산 참다랑어 양식전환 기술개발(R&D)	3,007
2	스마트수산업 응용기술 국산화 및 실증연구(R&D)	5,017
3	항만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활동 지원	1,702
4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해수)	45,000
5	국가 어업 AX플랫폼	10,200
6	해양자원 탐사를 위한 무인체계 기술개발(R&D)	2,100
7	북극新항로 개척을 위한 친환경 쇄빙컨테이너선 개발(R&D)	3,700
8	해양연구선(온누리호) 대체건조사업(R&D)	2,700
9	해양 글라이칸 활용 맞춤형 케어소재 산업화(R&D)	2,100
10	해양생물 유래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노화 극복기술개발(R&D)	4,850
11	민군경 AI 기반 해양영상 융복합 분석기술 개발(R&D)	3,500
12	공해생물다양성 보존(R&D)	1,000
13	해저공간 관리체계 구축 핵심기술 개발(R&D)	1,600
14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기반 해양환경누적영향평가 및 의사결정지원 기술개발(R&D)	2,0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15	탄소제로 수중데이터센터 표준모델 개발(R&D)	6,400
16	해양수산 융합형 전문인력양성사업(R&D)	3,700
17	양식생물 생물보안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R&D)	1,600
18	자율주행차 해상수출입서비스 기술개발(R&D)	1,400
19	해양수산부 부산이전	32,238
[농특회계]		
20	연근해어선 안전관리 기술개발(R&D)	1,500
[교특회계]		
21	화물차 중량정보 플랫폼 구축 및 육상-항만 연계 실증사업(R&D)	400
[지특회계]		
22	해양배터리 특화 데이터 허브 플랫폼 구축 기술 개발(R&D)	2,000
[수발기금]		
23	수산물계약생산지원(융자)	40,812
총지출		178,526

한편, 해양수산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차세대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양식등재해대책비’ 등 총 51개임.[3)]

[2026년도 해양수산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우수해양생태계 보호	11,596	26,412	14,816	127.8
2	방제선 건조 및 운영	5,218	13,697	8,479	162.5
3	어업지도관리	44,891	58,315	13,424	29.9
4	어선원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2,124	4,164	2,040	96.0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5	수협지도경제사업활성화	2,900	8,275	5,375	185.3
6	항만서비스 산업 선진화 지원	1,470	4,450	2,980	202.7
7	세월호 인양 및 추모사업 지원	10,468	14,609	4,141	39.6
8	친환경선박 보급 촉진	10,350	16,500	6,150	59.4
9	해양모태펀드	0	20,000	20,000	순증
10	독도 지속가능이용 및 관리	9,125	12,254	3,129	34.3
11	해양지명조사 및 알리기	4,093	6,600	2,507	61.3
12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R&D)	7,861	61,079	53,218	677.0
13	해양수산 딥테크 육성 기술개발(R&D)	4,125	8,350	4,225	102.4
14	해양블루테크미래리더양성프로젝트(R&D)	4,350	5,780	1,430	32.9
15	해양무인시스템실증시험·평가기술개발(R&D)	8,314	10,808	2,494	30.0
16	국제사회IUU어업 예방을 위한 원양어선전자모니터링기술개발(R&D)	3,000	5,400	2,400	80.0
17	수산업현장맞춤형기술고도화사업(R&D)	1,700	3,260	1,560	91.8
[농특회계]					
18	수산물해외시장개척	54,563	78,198	23,635	43.3
19	소비지유통시설 지원	375	3,000	2,625	700.0
20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6,006	8,295	2,289	38.1
21	양식수산물 전략품목 육성	7,512	18,030	10,518	140.0
22	수산부산물 자원순환 기반구축	2,481	5,993	3,512	141.6
23	어업인삶의질향상	3,652	5,596	1,944	53.2
24	양식등재해대책비	25,000	49,310	24,310	97.2
25	국가어항	337,786	368,773	30,987	9.2
26	양식장임대	5,832	6,832	1,000	17.1
27	수산종자산업 디지털혁신 기술개발(R&D)	3,700	8,260	4,560	123.2
28	유수식 디지털양식 혁신기술개발(R&D)	7,140	9,380	2,240	31.4
29	대체해조육및수산배양육기술개발(R&D)	4,120	6,880	2,760	67.0
30	어업인안전보험	2,243	4,006	1,763	78.6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교특회계]					
31	부산항 신항만(1단계)	21,312	32,199	10,887	51.1
32	부산항 진해신항	434,650	462,181	27,531	6.3
33	광양항(3단계)	145,505	170,496	24,991	17.2
34	인천북항	3,100	13,465	10,365	334.4
35	포항영일만신항(1단계)	9,180	111,186	102,006	1,111.2
36	동해신항	99,960	117,505	17,545	17.6
37	광양(여천)항	23,165	46,196	23,031	99.4
38	여수신북항	4,327	15,409	11,082	256.1
39	기타항만 재개발	7,591	28,036	20,445	269.3
40	표지시설	42,866	55,563	12,697	29.6
[에특회계]					
41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23,050	39,000	15,950	69.2
[지특회계]					
42	연안정비	87,210	114,203	26,993	31.0
43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16,222	22,850	6,628	40.9
44	화순항	8,842	18,769	9,927	112.3
45	제주일반항건설	32,009	43,782	11,773	36.8
[수발기금]					
46	해양생태계 서식처 기능개선 복원사업	5,260	19,076	13,816	262.7
47	수산물유통정보조사	771	1,271	500	64.9
48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융자)	131,286	153,500	22,214	16.9
49	피해보전직불금	1,000	1,783	783	78.3
50	원양어선안전관리	9,000	12,000	3,000	33.3
51	기금연구용역비	20	43	23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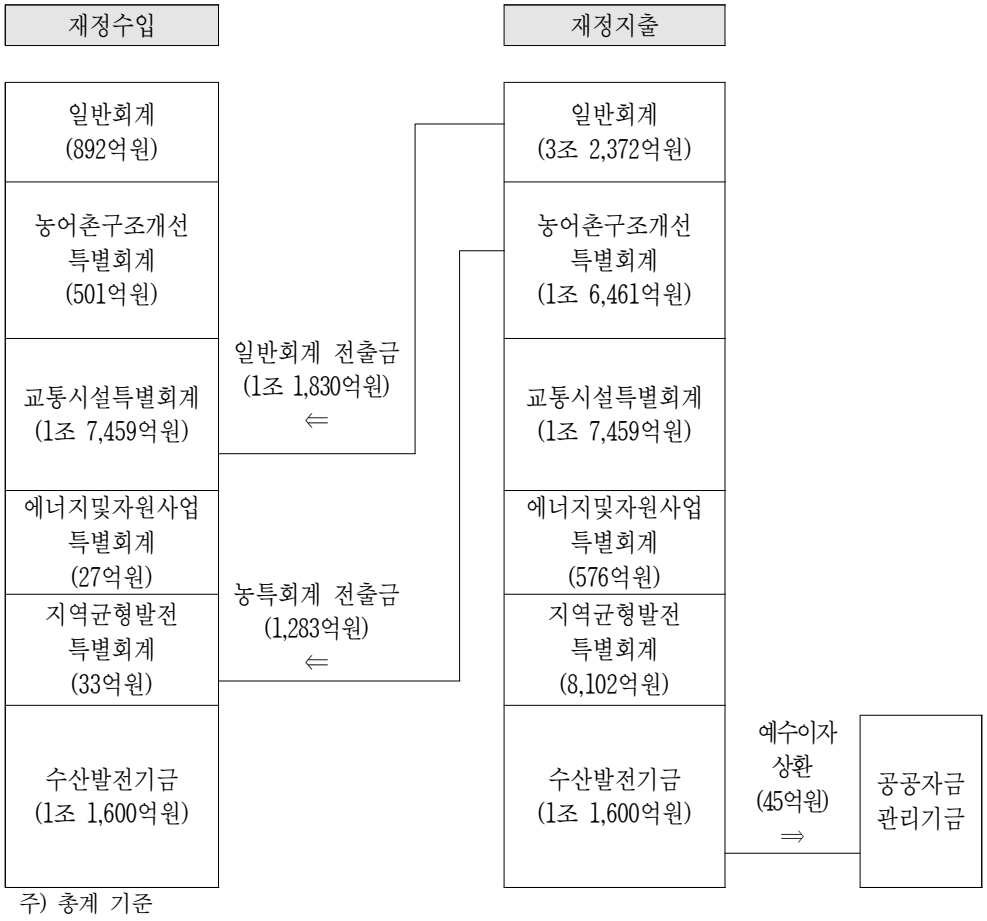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수산발전기금 1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로 1조 1,830억원 전출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283억원이 전출될 예정임.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수산발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5억원 예수이자 상환이 계획되어 있음.

[해양수산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경쟁력 있는 수산업, 활력 넘치는 어촌,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 해양산업, 굳건한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조성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사업은 주목적 투자대상이 기존 해양모태펀드와 동일하므로 해양모태펀드의 투자여력을 적극 활용하고, 자펀드 조성 시 주목적 의무투자비율을 정부출자비율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은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 투자할 SPC 구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도지구 대상지를 우선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이후에 SPC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SPC 설립을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출자할 계획이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출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수행주체 또는 예산비목의 변경이 필요함.

셋째,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사업은 선사의 사업 참여 의향과 신조 선박의 종류, 척수 등 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바탕하여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넷째,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은 보증금제 시행 이전에 생산된 기존 어구 반납량이 예상치의 10%에 미치지 못하므로 반납 수량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여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사업(신규): 출자 규모 및 주목적 의무투자비율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사업은 수도권 기업에 편중된 투자비율 분산 및 지방 해양기업의 민간투자 유치 확대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해양모태펀드	-	-	20,000	20,000	순증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	-	20,000	20,000	순증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200억원 - 바다생활권 특화 계정 子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200억원

자료: 해양수산부

이 사업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모태펀드 내에 바다생활권 특화 계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주목적 투자대상은 해양신산업, 전통산업 혁신분야의 지방소재 해양분야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이며,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5년간 2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출자하여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임.

4) 일반회계-해양모태펀드(2031-313)(해양정책실)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사업 개요]

○ 관리기관: 한국벤처투자 ○ 정부출자: 1,000억원(2026년 ~ 2030년) ○ 주목적 투자대상: 해양신산업, 전통산업 혁신분야의 지방소재 해양분야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 운용구조: 정부출자 → 펀드조성(민간출자 포함) → 투자 → 회수 및 청산 → 재출자

주 1) 해양신산업 분야: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전략」(해양수산부, 2022. 12.)에서 지정한 중점 육성 대상 신산업 분야(친환경・첨단 선박, 스마트 블루푸드, 해양레저관광,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자원)
2) 전통산업 혁신 분야: 해운・조선・항만과 같은 전통산업에 4차 산업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전통산업 혁신 성장 분야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첫째, 바다생활권 특화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해양신산업, 전통산업 혁신분야로 기존 해양모태펀드와 동일하므로 해양모태펀드의 투자여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2026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이전에도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여 해양신산업, 전통산업 혁신분야에 투자해 왔음.

[해양모태펀드와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비교]

구분	해양모태펀드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목적	**유망 해양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성장 지원	**지방소재 해양분야**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
주목적 투자대상	**해양신산업, 전통산업 혁신분야에 중점 투자**	**좌동**
조성규모	정부출자 1,000억원(2019 ~ 2024)	정부출자 1,000억원(2026 ~ 2030)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모태펀드는 해양수산부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000억원을 출자하여 조성한 것으로, 2025년 8월말 현재 결성된 자펀드는 9개, 결성 규모는 1,522억원(정부 1,000억원, 민간 522억원), 투자금액은 882억 8,400만원임.

그런데 9개의 자펀드 중 투자가 진행 중인 5개 자펀드의 결성액, 납입금액 및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면 해양모태펀드의 투자여력은 457억 6,600만원으로 추계되는데, 이는 신규 출자하려는 바다생활권 특화펀드 200억원보다 큰 규모임.

[해양모태펀드 자펀드 현황]

(단위: 백만원)

자펀드명	결성일	존속 기간	투자 기간	결성 규모 (A)	투자 금액 (B)	잔존 금액 (C=A-B)	운용 비용 (D)	투자 여력 (C-D)
캐○○○○조합	2019. 8.	8년	8년	14,500	13,302	1,198	1,450	△252
에○○○○조합	2019. 1.	8년	8년	15,000	12,301	2,699	1,500	1,199
B○○○○조합	2020. 6.	8년	4년	15,500	13,100	2,400	1,550	850
인○○○○조합	2020. 12.	8년	8년	14,300	11,600	2,700	1,430	1,270
해○○○○조합	2021. 11.	8년	3년	14,300	11,737	2,563	1,430	1,133
마○○○○조합	2022. 12.	8년	4년	30,000	10,300	19,700	3,000	16,700
비○○○○조합	2023. 11.	8년	4년	20,000	7,250	12,750	2,000	10,750
서○○○○조합	2024. 6.	8년	4년	21,600	7,194	14,406	2,160	12,246
2○○○○조합	2024. 6.	8년	3년	7,000	1,500	5,500	700	4,800
합계				152,200	88,284			**45,766**

주) 운용비용은 결성규모의 10%로 임의 추산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수산기업의 75.4%가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5] 기존 해양모태펀드의 수도권 외 투자비율은 44.8%로 낮아 이를 확대하기 위한 신규 펀드를 조성한다는 설명임.

[해양모태펀드(해양계정) 자펀드 투자내역]

(단위: 백만원, %)

지역	투자금액	비율
수도권	46,500	52.7
비수도권	39,590	44.8
해외	2,194	2.5
합계	88,284	100.0

자료: 해양수산부

그러나 기존 해양모태펀드와 신규로 조성하려는 바다생활권 특화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이 동일하므로, 지방소재 해양기업에 대한 투자 시 기존 해양모태펀드 투자여력의 적극적 활용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해양수산기업 199,567개사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은 48,986개(24.6%), 광역시 소재 기업은 38,944개(19.5%), 지방 소재 기업은 111,637개(55.9%)라는 설명임.

둘째,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는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본 참여를 유도하여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자펀드 조성 시 주목적 의무투자비율을 정부출자비율보다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정부는 자펀드 결성 시 결성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펀드가 일반 투자처보다는 주목적 투자대상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임.

그런데 기존 해양모태펀드의 주목적 의무투자비율은 60% ~ 65%로, 2024년에 결성된 2개 자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정부출자비율보다 낮음.

[해양모태펀드 자펀드의 정부출자비율 및 주목적 의무투자비율]

(단위: 백만원, %)

자펀드명	결성일	결성규모 (A)	정부출자금 (B)	정부출자비율 (B/A)	주목적 의무투자비율
캐○○○○조합	2019. 8.	14,500	10,000	69.0	60
에○○○○조합	2019. 1.	15,000	10,000	66.7	60
B○○○○조합	2020. 6.	15,500	10,000	64.5	60
인○○○○조합	2020. 12.	14,300	10,000	69.9	60
해○○○○조합	2021. 11.	14,300	10,000	69.9	60
마○○○○조합	2022. 12.	30,000	20,000	66.7	60
비○○○○조합	2023. 11.	20,000	13,000	65.0	60
서○○○○조합	2024. 6.	21,600	13,000	60.2	65
2○○○○조합	2024. 6.	7,000	4,000	57.1	65

자료: 해양수산부

모태펀드의 조성목적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해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액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할 때, 신규로 조성하는 바다생활권 특화펀드는 주목적 의무투자비율을 정부출자비율보다 높게 설정해야 사업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6)]

6)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신규로 조성할 바다생활권 특화펀드의 정부출자비율 및 주목적 의무투자비율은 기존 해양모태펀드[정부 최대 출자비율 70%, 주목적 의무투자비율(60% ~ 65%)]를 기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여전히 주목적 의무투자비율이 정부출자비율보다 낮은 문제가 있음.

2.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은 해양수산 분야의 신속한 AI 전환 촉진을 위해 1년 ~ 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6년도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	-	45,000	45,000	순증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 450억원
- (유형1) 5개 과제 × 30억원 = 150억원
- (유형2) 20개 과제 × 15억원 = 300억원

자료: 해양수산부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10개 부처가 참여하여 300개 제품에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AX-Sprint 300 사업의 일환으로, 10개 부처의 신규사업으로서 2026년 ~ 2027년 2년간 총 8,815억원이 편성될 계획임.

[10개 부처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개, 억원)

부처	물량	총사업비	국비지원	부처	물량	총사업비	국비지원
산업부	65	2,625	2,100	복지부	31	975	780
중기부	45	1,687.5	1,350	해수부	25	937.5	750
국토부	29	1,450	1,160	국방부	30	833.3	750
농림부	30	1,125	900	환경부	15	750	600
과기부	20	1,000	800	식약처	10	187.5	150

자료: 부처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재가공함

7) 일반회계-AI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2031-320)(해양정책실)

사업 유형은 1년 내에 즉시 개발 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 가능한 과제(유형1)과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프로젝트로 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과제(유형2)로 구분됨.

단년도 과제인 유형1은 특정 기술이 아이디어 단계에서 실제 상용화 단계까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인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 단계) 6단계 이상으로, 시작품이 제작된 과제임.

2개년 과제인 유형2는 TRL 4단계 이상의 제품에 대한 기술적·실험적 가능성이 증명되어 프로토타입이 제작된 단계임.

[TRL 체계도]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25개 과제에 750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단년도 과제인 유형1은 2026년에 30억원을, 2개년 과제인 유형2는 2026년부터 2년간 매년 15억원씩을 지원한다는 계획임.

나.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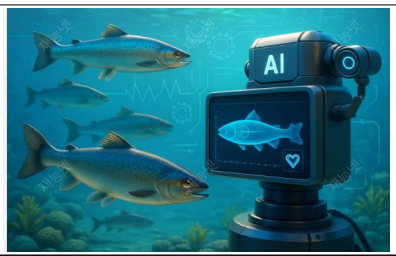
이 사업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지원대상 선정 기준, 사업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해양수산 분야의 신속한 AI 전환 촉진을 위해 1년 ~ 2년 내 성과도출이 가

능한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50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지원할 과제 수를 25개로 산정했는데, 이는 2025년 해양수산 분야 R&D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이 제출한 AI 제품화 과제(26개)를 참고한 결과라고 설명하였음.

[해양수산 분야 AI응용제품 후보군(예시)]

분야	제품 및 서비스	개 요	Type구분 (현TRL단계)
해사 항만	AI 위험감지 수중관제시스템 	ㅇ (제품 개요) 수중통신·생체신호 감지·구조요청 위치전달 장치 등을 통합한 AI 위험감지 수중관제시스템 ㅇ (지원 필요성) 중작업은 사고 발생 시 치명적 결과로 이어지며 기존 장비로는 한계가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과 해양산업 현장의 안전 보장을 위해 본 시스템의 조기 현장 적용이 시급	Type2 (TRL5)
해양 환경	AI 기반 해양쓰레기 수거 로봇 	ㅇ (제품 개요) 항만·연안·하천 등에서 부유성 쓰레기 실시간 탐지 및 자동수거 로봇 ㅇ (지원 필요성) 국내 해양쓰레기 방치 문제 해결과 안전한 수거·관리, 탄소중립·ESG 정책 연계, 글로벌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AI 기반 무인 수거 로봇 제품화가 필요	Type1 (TRL7)
수산	유전체 진단 기술 기반 멀티모달 AI 어류 질병 조기 예측 시스템 	ㅇ (제품 개요) 양식장 현장에서 신속 대응 가능한 진단기기 및 키트와 행동패턴 및 외부 이미지 등을 활용한 질병 조기 진단 시스템 ㅇ (지원 필요성) 질병 폐사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시간 판독 및 조기 예측이 매우 중요	Type2 (TRL 4)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구체적인 사업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사업의 경우 1차년도 사업과 2차년도 사업의 기술성숙도 등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면서도 과제별 지원액은 동일하게 30억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비 30억원의 지원액이 연구과제별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소요액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신규): 이사 지원비 집행 시 철저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및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주·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22억 3,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6년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	-	32,238	32,238	순증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2025년 내에 완료할 예정임. 2025년에 청사 임차 보증금 및 시설 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비비 867억원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고, 2026년 예산안에는 청사 임차료, 세종청사 원상복구비, 직원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전월세 지원비와 이주·이사지원비 등이 편성되어 있음.

8) 일반회계-해양수산부 부산 이전(7041-303)(운영지원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소요예산: 2025년 예비비 867억원, 2026년 예산안 322억원 편성>

○ 임차 청사 확보 및 운영: 예비비 134억원, 2026년 177억원
(예비비) 보증금 등 청사확보 및 운영 준비 등
- IM빌딩 및 협성타워 보증금(30억원), 관리비(9억원), 장·차관 관사 확보(6억원), 청사 이사(7억원) 등 55억원
- 물품구입(13억원), 구내식당·체력단련실 구축(5억원), 어린이집 신설(10억원), 청사관리(미화·보안 등, 39억원), 개청식 행사(5억원) 등 79억원
(2026년) 건물·시설 유지, 업무지원 등
- 건물 임차료(29억원), 관리비(27억원), 공공요금(18억원), 청사관리(미화·보안 등 48억원), 어린이집 운영(8억원), 국내여비(44억원) 등
○ 청사 공사: 예비비 246억원, 2026년 32억원
(예비비) 설계 및 공사비 등
- 실시설계(4억원), 건축·통신·소방·전기 공사(199억원), 통합감리(6억원), 정보통신실 및 해사안전상황실 이전(38억원)
(2026년) 세종청사 원상복구 등
- 세종청사 원상복구 등(10억원), 바다네비 이전(22억원)
○ 정주여건 조성: 예비비 487억원, 2026년 113억원
(예비비) 직원관사 및 전월세 지원, 교통 지원 등
- 직원관사 확보(478억원), 전월세 지원(5억원), 이주·이사 지원(1억원), 교통 지원(통근버스·KTX 등, 3억원)
(2026년) 전월세 지원, 교통 지원 등
- 전월세 지원(32억원), 이주·이사 지원(44억원), 교통지원(통근버스·KTX 등, 37억원)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부산으로 이전하는 본청 근무 직원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이사 지원 비용이 과다 청구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본청 청사를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직원들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원관사 및 전월세 지원, 이주비 지원, 이사비 지원, 교통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음.

직원관사는 혼자 이전하는 직원들이 거주하는 용도로, 해양수산부는 오피스텔 등 367채(1인 1채)를 예비비(무형자산 440목)를 활용하여 확보 중이며, 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 생활에 필요한 가전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일부 관사에는 예비비 중 자산취득비를 활용하여 거주에 필수적인 비품을 구비할 계획임.

전월세 지원은 4년간 전세 보증금 대출 이자(이차보전) 또는 월세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대출은행 또는 임차인에게 관련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임.

이주비는 직원 1인당 20만원씩(부부 공무원은 50% 감액) 2년간 지원하고, 이사비는 1인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함.

교통 지원은 셔틀버스 운영과 KTX 할인 지원으로 나뉘는데, 셔틀버스는 주중에 직원관사 - 청사를 오가는 버스와 주말에 부산 - 세종 등지를 오가는 버스가 운영되고, KTX 할인은 주말에 셔틀버스 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KTX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부산으로의 이전이 갑작스럽게 결정되어 충분한 준비기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생활 기반을 이전해야 하는 직원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성은 있으나, 이사 지원비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이사 지원비의 경우 본청 소속 직원(공무원, 청년인턴, 공무직 등) 835명 중 휴직·파견자 등을 제외한 772명이 2026년에 전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약 27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원 금액은 1인당 5톤 트럭 기준 340만원이며, 5톤을 초과하는 경우 6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데, 추가 지원 예상 인원은 154명임.

[이사 지원비 편성 내역]

(단위: 천원, 명)

구분	내용	단가	인원	금액
이사 지원	5톤 실비	3,400	772	2,624,800
	(5톤 초과 시 7.5톤까지 추가 지원)	(600)	(154)	(92,400)
	합계		**772**	**2,717,200**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에서 이사비 추가 지원 예상 인원을 154명으로 산정한 이유는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으로의 이전을 응답한 직원이 615명이었고, 이 중 혼자 이전은 461명, 가족동반이전은 154명이었기 때문임.

이사 비용은 이동 거리, 짐의 양, 인력 투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보통 5톤 이사는 중대형 가구나 많은 짐을 운반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침대, 식탁, 소파,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건조기 등 대형 가전·가구가 포함된 경우에 적합한 이사임.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 등 생활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관사에 비치할 계획이므로, 관사에 입주하는 직원은 대형 가전·가구를 이삿짐에 포함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사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1인 가구라도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활물품의 규모가 큰 경우가 있고, 관사에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침대, 책상, 책장, PC 등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짐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임.[9)]

해양수산부의 설명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예산안에 편성된 이사 지원비는 전 직원이 모두 5톤 이상 규모로 이사하는 것을 가정하여 편성되었고, 5톤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5톤 미만의 이사임에도 실제 비용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9) 해양수산부는 부산시에서 가족관사 100채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이후 가족과 함께 이주하겠다는 직원이 늘어나고 있다고도 설명하였음.

4.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신규): 사업계획 구체화 및 예산 집행방식 검토 필요

가. 개 요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은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선(先) 출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0)]

[2026년도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 어업 AX 플랫폼	-	-	10,200	10,200	순증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 102억원
- **정부 출자금: 100억원**
- 사업감독・관리비: 2억원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AI 혁신을 위해 10만평 규모의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1개소를 2025년 12월까지 선정할 계획임.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는 스마트 수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첨단 임대양식장 등이 조성될 예정으로, 이 사업은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 투자할 SPC를 결성하기 위한 것임.

사업수행방식은 해양수산부가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에 출자하고, 공단이 해당 출자금을 이용하여 SPC에 출자하는 형태임.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통해 SPC가 결성되면, 공단이 시설 기반 구축・운영 지원 및 사업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수협은 어업인 지역대표로 참여하여 회원 조합 출자, 산업전문성 제공, 어업인 이해관계 조정, 판매유통망 및 금융 조달 지원 등의 역할을

10) 일반회계-국가 어업 AX 플랫폼(2035-305)(수산정책실)

수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체계(안)]

(가칭)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SPC

출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수산업협동조합**	**민간기업A (양식)**	**민간기업B (유통/가공)**	**민간기업C (기술/정보)**
역할	정부출자 대리 시설구축/운영지원	양식어가 대표 산업전문성 제공	양식장 시설운영 생산총괄	SPC 생산물 브랜딩, 유통/가공 총괄	산업관련 정보 수집-가공-분석-가공
유인	정책목표 달성	어가소득 증대	생산단가 절감 (규모의 경제)	안정적 원물 확보 (전방 통합)	기술/데이터 판매권 선점
극복과제	출자자 분쟁 조정	기존 어가의 반대	양식생물 폐사	수요예측 실패	수요처 부족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첫째,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은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 투자할 SPC 구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선도지구 대상지를 우선 확정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이후에 SPC 구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2025년 말까지 선정할 예정인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 투자할 SPC 구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일반적으로 민간에서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수요, 성장 가능성, 수익성, 지속 가능성 등 실질적 판단 근거를 필요로 함. 하지만 현재 제시된 계획은 '스마트 수산업 빅데이터 플랫폼', '스마트 아쿠아팜 테스트베드', '첨단 임대양식장 조성' 등의 개략적 구상에 머물러 있어, 선도지구의 세부 사업구조나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

또한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선도지구 대상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나 2025년 10월 현재 선도지구 선정 공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11)]

11) 해양수산부는 2025년 8월 22일과 10월 20일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안건 상정·심의를 통해 자금 출자 근거 등을 보강하였으며, 2025년 9월에 기재부, 과기부, 농식품부를 포함한 2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산·학·연·관 '스마트수산업추진단'을 발족하여 선도지구 선정을 준비 중이나, 아직 선정 공고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라는 설명임.

따라서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후 민간 참여 유인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SPC 출자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국가 어업 AX 플랫폼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출자하는 방식이나,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출자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수행주체 또는 예산비목의 변경이 필요함.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가 공단에 출자하면, 공단이 해당 출자금을 이용하여 SPC에 재출자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음.

그런데 공단은 「어촌·어항법」 제57조[12]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법률 제57조제4항은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여 공단은 공법상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출연재산으로 구성됨.[13]

---

12) 「어촌·어항법」
제57조(한국어촌어항공단의 설립) ①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 관련 기술의 개발·연구,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의5(자금의 조달 등)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2. 제58조제1항 각 호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행정자치부 -「지방세법」 제176조(세율) (안건번호 06-0075, 회신일자 2006-06-12)
1. 질의요지 (생 략)
2.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유가증권, 현금 기타 재산의 형식으로 출연하여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출자금 또는 자본금을 갖지 아니하고, 더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금이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포함된다는 「지방세법」상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출연금을 출자금 또는 자본금으로 간주하여 법인균등할의 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균등할에 따라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7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의 수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법인

공단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말 기준 기본재산은 712,575,567원으로, 박00 등 개인 22명의 출연금 438,575,567원, 정부자본 보조금 274,0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어촌어항공단 기본재산 명세서(2024년)]

(단위: 원)

구분	적요			금액
기본재산	출연금			438,575,567
	순번	성명	금액	
	1	배00	63,045,000	
	2	박00	58,000,000	
	3	손00	45,200,000	
	(생 략)			
	22	김00 외	7,741,087	
	합계		438,575,567	
	정부자본보조금			274,000,000
합계				712,575,567

자료: 한국어촌어항공단

또한 법률 제58조의5제1항은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 사업수익금,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으로 조달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정부가 공단에 제공하는 자금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한정됨.

따라서 공단은 출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정부 출자가 가능한 기관으로 사업수행주체를 변경하거나 예산편성 비목을 공단에 지원이 가능한 출연금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 사업은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에 투자하는 SPC 구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만큼 출연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공단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별도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수익이 발생하거나 SPC 청산 시 국고에 반납하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자금관리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가지는 영리법인과 출연금으로 기본자산이나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및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구분되고,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은 법인의 구성원인 자연인으로 구성될 뿐 법인의 존립과 재산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한편,「사내근로복지기금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하고, (중 략) 기금은 사업주가 출연하는 일정한 재산을 근거로 하여 성립되는 재단법인과 유사한 법인이라고 할 것이고, 더구나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기금이 재단법인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인 비영리법인은 출연금으로 법인의 존립근거인 기본재산을 조성하지만,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재산을 갖지는 아니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도 그 수익금으로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충당하는 출연금을 가질 뿐이고 자본금이나 출자금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5.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사업: 선종별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가. 개 요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사업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군수물자 및 국가물자의 원활한 해상 수송체계 유지를 위해 국적 필수 선박 및 선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억 1,500만원(9.5%) 증액된 82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14)]

[2026년도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7,493	7,493	8,208	715	9.5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82억 800만원
- 국가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82억 8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이 사업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15)]

14) 일반회계-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6133-303)(해운물류국)

15)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및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여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 중 선박의 규모, 선령(船齡) 및 수송 화물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 등의 신청을 받아 해당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국제선박등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선박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한 선박
제13조(손실보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소집 및 수송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2. 제5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제한 명령에 따라 선박소유자등의 임금 부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업무종사 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전시 및 비상사태 시 군수물자나 전략물자・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제철원료 등 국가안보 및 국민생활에 중요한 물자를 운송할 수 있는 해상 수송능력을 확보하는 것임.

해양수산부는 이를 위해 국적선박과 국적선원을 확보하고 외국인 선원의 승선 수를 제한하는 등의 준비 조치를 하는데,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되면 한국인 선원이 10명 이상으로 제한되고, 비상시 선박동원명령에 응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함.

이 사업은 비(非)국가필수선박은 한국인 선원 최소 8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나, 국가필수선박은 한국인 선원을 최소 10명 이상 고용하여야 하여 한국인 선원 승선 의무에 따른 손실[국가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수와 非국가필수선박(지정국제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 수의 차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것임.

[국가필수선대제도 운영 사업 개요]

○ (지정기준) 국제총톤수 1만톤 이상이며 선령 20년 미만인 선박 中 군수품·양곡·원유·액화가스·석탄 또는 제철원료 운송선

○ (지정절차) 매년 지정계획에 따라 선사의 신청을 받아 지정

① 필수선박 지정계획 확정 (전년도 12월 5일까지)	⇨	② 지정신청(선사) 및 지정완료(해수부) (전년도말)	⇨	③ 필수선박 임무수행 (당해연도 1.1~12.31)	⇨	④ 손실보상 기준 산정 고시, 보상금 신청 및 지급 (당해연도말)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필수선박 지정선사		필수선박 지정선사		해양수산부장관 한국해양진흥공사 ↔필수선박 지정선사

○ (지정규모) 2004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략물자의 안정적 수송을 위해 필요한 최소규모인 88척의 선대를 유지

○ (의무사항)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 시 국가필수선박의 승선기준은 '척당 한국인 선원 10명 이상'으로 국가필수선박 한국인 승선제도 도입

- 非 국가필수선박의 경우 외국인 선원은 8명까지 승선 가능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국가필수선박 지정목표는 88척으로 총 지정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유조선·가스선·컨테이너선 등 주요 선종의 지정률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선종별 지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5조제2항[16]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척수를 88척으로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매년 「국가필수선박 지정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목표 척수 88척을 선종별로 나누어 선종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음.

[필수선박 지정 현황]

(단위: 척)

구 분	2022	2023	2024	2025
국가필수선박 지정목표	88	88	88	88
국가필수선박 지정	88	88	88	88

자료: 해양수산부

전체적인 지정 목표 척수 달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선종별 목표 지정 척수를 살펴보면, 유조선의 경우 2022년 목표 척수는 12척인데 6척만 지정되어 실제 지정 척수가 목표 척수에 크게 미달하였음.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25년에도 목표 대비 75%만 지정된 상황임. 가스선과 컨테이너선도 연례적으로 목표 대비 지정 척수가 부족함.

[국가필수선박 선종별 지정 현황]

(단위: 척)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목표	지정
벌크선	24	30	24	29	24	29	24	29
유조선	12	6	12	8	12	9	12	9
가스선	21	19	21	20	21	20	21	18
컨테이너선	20	21	20	19	20	18	20	19
자동차선	11	12	11	12	11	12	11	13
합 계	88	88	88	88	88	88	88	88

자료: 해양수산부

16) 「국가필수선박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계획의 수립) ② 제1항제2호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목표 척수는 88척으로 한다. 다만, 지정 목표 척수는 비상사태 시 소요 척수, 선대 규모, 이해관계자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국가필수선대제도는 해상물동량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상운송이 마비되면 국가경제에 큰 타격이 오게 되므로 외국선박이나 외국선원이 주로 운영하는 선박에 의존할 경우 운송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민 생존과 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물자의 안정적 수송 경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임.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국가필수선대제도의 국가안보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선종별로 국가필수선박 지정목표 척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 입>

6. 기타경상이전수입: 최근 수납액 증가 추세를 반영한 세입 증액 검토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연체료 및 반환금 등이 수납되는 세입과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4억 8,300만원(63.8%) 증가한 371억 8,200만원이 편성되었음.[17)]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22,699	22,699	37,182	14,483	63.8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 기타경상이전수입: 371억 8,200만원
- 국고보조금 정산잔액 반납금 등: 371억 8,2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기타경상이전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 세입예산안은 최근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이므로 증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등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납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기타경상이전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의 최근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연례적으로 세입예산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기타경상이전수입(59-596)(운영지원과)

과소 계상되고 있음.

특히 2025년의 경우 9월말 현재 이미 세입예산 226억 9,900만원의 2배 가량인 435억 400만원이 징수결정되고 316억 7,500만원이 수납되었음.

[기타경상이전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 수납 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2	19,252	19,252	-	19,252	25,690	18,670	97.0	72.7	7,019	-
2023	21,395	21,395	-	21,395	32,035	19,332	90.4	60.3	12,704	-
2024	22,037	22,037	-	22,037	48,537	37,182	168.7	76.6	11,355	-
2025. 9.	22,699	22,699	-	22,699	43,504	31,675	139.5	72.8	11,829	-

자료: 해양수산부

기타경상이전수입에는 주로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등이 수납되고 있는데 최근 구조개선사업계정의 보조금 등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예산 규모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집행잔액 등의 반납액도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18)]

[2021년 ~ 2025년 민간 및 지방자치단체이전 주요비목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연도	2021	2022	2023	2024	2025
민간이전	314,172	303,708	363,510	480,352	488,979
지방자치단체이전	136,527	200,562	225,292	206,033	117,027
합계	**450,699**	**504,270**	**588,802**	**686,385**	**606,006**

주) 민간경상·자본보조, 민간위탁, 법정민간대행, 자치단체경상·자본보조 등 집행잔액 반납이 주로 발생하는 비목 예산액을 집계한 것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않고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안을 2024년 수납액과 동일한 371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5년 9월말 기준 징수결정액의 85.4%에 불과한 규모이므로 최근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2026년도 세입예산액을 적정 규모로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이 세입과목의 2024년 미수납액은 113억 5,500만원으로 이 중 109억 8,200만원은 관계기관의 예산 부족에 따라 미수납되었음.

18) 통상 전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차년도에 반납되는데 2025년의 경우 전년대비 예산이 감소하였으나 과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큰 규모임.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 관계기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 현황]

(단위: 백만원)

납부의무기관	미수납액	미수납 내역
전라남도	5,705	2023년 유해생물 구제, 2019년 어업기반정비, 2016년 수산ICT융합 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경상남도	1,470	2021년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경상북도	1,003	2023년 유해생물 구제, 2017년 자율관리어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충청남도	838	2021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보급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전북특별자치도	772	2019년 연근해어선감척, 2023년 생분해어구 보급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인천광역시	517	선어회가공공장 시설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환수액
울산광역시	328	2023년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강원특별자치도	212	2023년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기타(부산, 충북 등)	137	2023년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합계	10,982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에는 그 규모가 더욱 증가하여 9월 기준 미수납액 118억 2,900만원 중 113억 7,000만원이 관계기관 예산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였으므로,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미수납액을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025년 기타경상이전수입(구조개선사업계정) 관계기관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 현황(2025. 9.)]

(단위: 백만원)

납부의무기관	미수납액	미수납 내역
전라남도	5,131	2018년 축제식 2모작 복합양식시설, 2022년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 집행잔액 등
경상남도	2,377	2021년 친환경개체굴생산시설, 2019년 유해생물(해파리) 구제 집행잔액 등
충청남도	889	해양표유류 혼획저감어구 보급, 2021년 생분해어구 보급 등
전북특별자치도	990	2023년 생분해어구 보급, 2023년 수산장비임대활용 등
부산광역시	653	2022년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등
인천광역시	549	선어회가공공장 시설지원 등 국고보조사업 환수액
경상북도	486	2023년 유해생물(해파리, 적조) 구제 등
강원특별자치도	185	2023년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 2021년 생분해어구보급 등
경기도	86	2022년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 2023년 수산물 상생할인
기타(제주, 충북)	24	2021년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어구 등
합계	11,370	

자료: 해양수산부

<세 출>

7.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실집행률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은 전국의 노후한 위판장 시설을 저온·친환경 위판장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8,000만원(9.4%)이 증액된 56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19)]

[2026년도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	6,006	7,683	8,295	2,289	38.1
저온·친환경 위판장	5,130	5,130	5,610	480	9.4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4년 선정 4개소 3년차 사업비: 45억 6,000만원
- 대형 2개소: 28억 5,000만원 = 60억원(대형) × 50%(보조율) × 47.5%(연차별 지원비율) × 2개소
- 중형 2개소: 17억 1,000만원 = 30억원(중형) × 60%(보조율) × 47.5%(연차별 지원비율) × 2개소

○ 2025년 선정 1개소 2년차 사업비: 5억 7,000만원
- 소형 1개소: 5억 7,000만원 = 20억원(소형) × 60%(보조율) × 47.5%(연차별 지원비율) × 1개소

○ 2026년 신규 선정 4개소 1년차 사업비
- 대형 2개소: 3억원 = 60억원(대형) × 50%(보조율) × 5%(연차별 지원비율) × 2개소
- 중형 2개소: 1억 8,000만원 = 30억원(중형) × 60%(보조율) × 5%(연차별 지원비율) × 2개소

자료: 해양수산부

1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3040-317)(수산정책실)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개소당 총사업비와 보조율은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연차별 지원비율은 1차년도 5%, 2·3차년도 47.5%·47.5%임.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규모별 총사업비 및 사업비 분담 규모]

사업규모(총사업비)	사업비 분담(비율)		
	국비	지방비	자부담
대형(60억원)	30억원(50%)	18억원(30%)	12억원(20%)
중형(30억원)	18억원(60%)	9억원(30%)	3억원(10%)
소형(20억원)	12억원(60%)	6억원(30%)	2억원(10%)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실집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므로 보다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함.

이 사업은 2023년에 4개소, 2024년에 5개소, 2025년에는 1개소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2023년에는 교부된 금액이 전액 이월되었고, 2024년은 16.9%가 집행되었으며, 2025년 집행률은 8월말 현재 16.3%임.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 예산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A)	전년도 이월액 (B)	교부 현액 (C=A+B)	집행액 (D)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D)
2023	600	480	480	-	480	-	480	-	-
2024	11,940	9,510	9,510	480	9,990	1,691	8,299	-	16.9
2025. 8.	5,130	3,840	3,840	8,299	12,139	1,980		-	16.3

자료: 해양수산부

사업지별 사업진행상황을 보면 2023년 사업지로 선정된 4개소의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나, 군산시수협 비응위판장은 2025년 8월에야 공사계약이 체결되었음.

2024년 사업지로 선정된 5개소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하동군수협 노량위판장만 공사업체 선정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실시설계(준비) 단계로 예

산집행률은 0% ~ 11.8%임.

특히 제주시수협 본소위판장과 서천서부수협 활어위판장은 실시설계 중이고, 서천서부수협 선어위판장은 실시설계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으로, 2025년 연내에 공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지별 사업진행상황(2025. 10.)]

(단위: 백만원, %)

선정연도	위판장	사업기간	총사업비	국비				이월액, 불용액 발생 사유	사업 진행상황
				지원총액	교부액 (A)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023	서산수협 안흥항 위판장	2023 ~ 2025	6,000	3,000	3,000	1,814	60.5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2023. 9. 편성)	공사 중 (2025. 3. ~)
	보령수협 활어위판장	2023 ~ 2025	3,000	1,800	1,800	408	22.7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2023. 12. 편성)	공사 중 (2025. 7. ~)
	강진군수협 마량위판장	2023 ~ 2025	3,000	1,800	1,800	1,554	86.3	지방재정투자심사(2023. 10. 완료)로 사업지연	공사 중 (2025. 5. ~)
	군산시수협 비응항 위판장	2023 ~ 2025	6,000	3,000	3,000	150	5.0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2023. 12. 편성)	공사계약 완료 (2025. 8.)
2024	제주시수협 본소위판장	2024 ~ 2026	3,000	1,800	945	45	2.5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2024. 12. 편성)	실시설계 중 (2025. 6. ~)
	서천 서부수협 활어위판장	2024 ~ 2026	6,000	3,000	1,140	-	0.0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2024. 12. 편성)	실시설계 중 (2025. 10. ~)
	하동군수협 노량위판장	2024 ~ 2026	2,000	1,200	1,200	630	52.5	지자체 인허가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 순연	공사업체 선정 완료 (2025. 7.)
	고성군수협 대진항 위판장	2024 ~ 2026	3,000	1,800	945	111	11.8	지자체 예산 편성 지연 (추경예산 2024. 12. 편성)	실시설계 공모 완료 (2025. 8.)
	서천 서부수협 선어위판장	2024 ~ 2026	6,000	3,000	105	-	0.0	보조사업자 선정 지연 (2024. 12.)으로 예산 자체 이월(해수부)	실시설계 준비 중
2025	모슬포수협 활어위판장	2025 ~ 2026	2,000	1,200	42	-	0.0		사업지 선정 (2025. 7.)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 예산안에 2024년 선정 4개소의 3년차 사업비 45억 6,000만원, 2025년 선정 1개소의 2년차 사업비 5억 7,000만원을 비롯하여 2026년 신규로 선정할 4개소의 1년차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이 사업은 사업대상지 선정 후 지자체 예산편성 지연,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연례적 집행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8.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의 적정 규모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전체 어업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특화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6,100만원(△13.7%) 감액된 10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20]

[2026년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어업인 삶의 질 향상	3,652	3,652	5,596	1,944	53.2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1,172	1,172	1,011	△161	△13.7

이 사업은 근골격계에 부담이 많이 가는 맨손·나잠어업에 주로 종사하는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 질환 검사, 골밀도 검사, 심혈관계 질환 검사, 난청(소음) 검사 등 특화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검진비: 5억 3,600만원
- 54세·66세 검진비: 2,648만원(331명 × 160,000원 × 국비 50%)
- 51세 이상(54세·66세 제외): 4억 8,610만원(4,861명 × 200,000원 × 국비 50%)
- 병원선 검진: 2,400만원(300명 × 80,000원 × 국비 100%)

○ 행정비: 4억 7,500만원
-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1억 1,500만원
- 어업인보건센터 운영비: 3억 6,0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어업인 삶의 질 향상(3440-312)(수산정책실)

나. 검토의견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최근 4년간 실제 수검인원 수를 고려할 때 목표 수검인원이 적정하게 설정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한편, 수검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시작 첫 해인 2022년부터 신청인원이 저조하여 2022년 11월에 대상자 연령을 확대(50세부터 69세까지 → 45세 이상)하였음에도 실제 수검인원이 목표에 크게 미달(36.8%)하였고, 2023년에도 수검률이 37.4%에 불과하여 수검실적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2024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과의 연령기준 통일 등을 위하여 수검대상 연령을 기존 45세 이상에서 51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수검대상 인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수검 목표치를 11,764명으로 크게 상향하였고, 예산도 전년 대비 13억 1,600만원(354.7%) 증액된 16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해양수산부는 수검률 제고를 위하여 2024년 9월에는 병원선을, 11월에는 검진버스를 운영하였으나 실제 수검인원은 계획인원의 11.5%인 1,350명에 그쳤음.

2025년에는 목표 수검인원을 8,246명으로 하향조정하였으나 여전히 2025년 9월 현재 계획 대비 10.1% 수준인 833명만 수검하는 데 그치고 있음.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목표 수검인원 및 실제 수검인원]

(단위: 명, %)

연도	목표 수검인원(A)	실제 수검인원(B)	수검률(B/A)
2022	1,500	552	36.8
2023	1,800	674	37.4
2024	11,764	1,350	11.5
2025. 9.	8,246	833	10.1
2026(안)	5,500		

자료: 해양수산부

목표 수검인원 대비 실제 수검인원이 적음에 따라 이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7.9%에 지나지 않았고, 2025년 9월 기준 28.5%로 부진한 상황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4	1,687	1,030	1,030	-	1,030	640	-	390	37.9
2025. 9.	1,172	710	710	-	710	334			28.5

자료: 해양수산부

또한 해양수산부는 사업연도 초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데, 2022년 ~ 2025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검 희망자가 사업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사업 목표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022년 ~ 2025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 수요조사 결과]

(단위: 명)

연도	2022	2023	2024	2025
부산광역시	-	-	180	108
인천광역시	-	-	39	39
울산광역시	-	61	-	50
경기도	-	-	107	84
강원특별자치도	273	52	98	32
충청남도	1,000	127	604	390
전북특별자치도	484	107	330	357
전라남도	-	559	1,605	1,605
경상북도	680	-	646	307
경상남도	450	64	839	352
제주특별자치도	566	-	402	165
수요조사 합계(A)	3,453	970	4,850	3,489
목표 수검인원(B)	1,500	1,800	11,764	8,246
목표인원과 수요조사 차이(B-A)	△1,953	830	6,914	4,757

자료: 해양수산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수검인원 수요조사 결과 도출된 수검 희망자 수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수준으로 수검 목표치를 하향조정하고, 예산안도 이에 맞추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이 사업의 실적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주된 원인은 도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어업인이 많아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해양수산부에서 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4년부터는 검진버스와 병원선을 활용하고, 2025년부터는 검진병원을 확대하였으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사업 목표는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해양수산부는 의료기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교통시설특별회계】

<세 출>

9.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미집행 이월액 및 총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은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국내 기술 중심의 항만자동화 기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02억 8,400만원(1,088.0%) 증액된 658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광양항(3단계)		145,505	145,505	170,496	24,991	17.2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5,541	5,541	65,825	60,284	1,088.0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기반시설 공사비: 658억 2,500만원
- 설계비: 조사측량비 1식(1억 2,500만원)
- 공사비: 652억원[부지조성 1식(기존포장 및 구조물 제거 등), 상부기능시설 공사 1식(자동화 장치장 조성, 포장, 상수·우수·오수처리 시설 등)]
- 감리비: 5억원(41.6백만원 × 12개월)

자료: 해양수산부

이 사업은 광양항 3-2단계 부두에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는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규모는 7,603억원이나 국고에서 50%, 여수광양항만공사가 50%의 재원을 부담하므로 국고 부담 총사업비는 3,801억 4,200만원임.

21) 교통시설특별회계(항만계정)-광양항(3단계)(5050-316)(항만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사업내용		광양항 3-2단계(4선석)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대상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항 3-2단계 부두 일원
사업기간		2022년 ~ 2029년(최초 2022년 ~ 2026년)
사업추진주체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사업규모	선석	4선석(1,300m, 4,000TEU 3선석, 2,000TEU 1선석)
	세부계획	① 하역능력: 136만TEU/연 ② 상부기능시설: 자동화 장치장(16 Block) 조성, 상·하수도시설, 전기·통신 시설 등 ③ 하역장비: 원격안벽크레인(C/C) 8대, 자동이송장비(LAGV) 44대, 야드크레인(ARMGC) 32대 등 ④ 운영시스템: 통합운영시스템(TOS) 1식
총사업비		7,603억원
재원조달		국고 50%, 민자 50%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사업 지연으로 인해 보조사업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유보되어 있는 누적 이월금이 상당한 규모임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및 연례적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최초 계획 시에는 2026년 12월 완공예정이었으나 총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공사 유찰 등에 따라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어 2025년 10월 현재 2028년 완공 및 2029년 정식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계획 대비 추진 실적]

구 분		최초 계획	실제 추진 현황	지연 사유
부지 선정		2020. 10.	2020. 10.	해당 없음
기본계획 수립		2020. 12.	2020. 12.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2021. 2.	2021. 2.	
공공기관 예타면제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2022. 2.	2022. 2.	
장비	ARMGC	2023. 9. ~ 2028. 5.	2024. 8. ~ 2029. 7.	사업 순연
	AGV	2023. 7. ~ 2028. 6.	2024. 9. ~ 2029. 8.	
	DTQC	2023. 11. ~ 2027. 11.	2025. 1. ~ 2029. 1.	
기반 시설	현장설명회	2023. 12.	2025. 2.	
	제영향평가	2023. 7. ~ 2024. 11.	2023. 7. ~ 2025. 12.	
	기본설계	2023. 12. ~ 2024. 4.	2025. 2. ~ 2025. 6.	
	기본설계 심의	2024. 5.	2025. 8.	
	실시설계	2024. 6. ~ 2024. 10.	2025. 12. ~ 2026. 3.	
	실시설계 수의시담	2024. 11.	2026. 4.	
본공사 착수		2024. 12.	2026. 5.	
본공사 완공		2026. 12.	2028. 5.	

자료: 해양수산부

사업지연에 따라 실집행률도 저조하여 2022년에는 보조사업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에 45억 9,9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29.3%인 13억 4,600만원만 집행되었고, 2023년 및 2024년에는 실집행실적이 전무하였음. 2025년의 경우도 전년도 이월액 1,422억 600만원과 2025년 예산액 55억 4,100만원 등 1,477억 4,7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9월말 현재 이월액 290억 9,200만원만 집행된 상황이며, 특히 2025년에 교부된 55억 4,100만원은 전액 미집행되었음.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실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연 도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교부 현액	집행액 (C)			
2022	4,599	4,599	4,599	4,599	-	4,599	1,346	4,599	1,346	3,253	-	29.3
2023	69,000	69,000	69,000	69,000	3,253	72,253	471	69,000	-	71,782	-	-
2024	81,584	81,584	81,584	81,584	71,782	153,366	11,160	81,584	-	142,206	-	-
2025. 9.	5,541	5,541	5,541	5,541	142,206	147,747	29,092	5,541	-			-

자료: 해양수산부

그 결과 2025년 9월말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집행 보조금이 1,186억 5,500만원에 이르는데, 2025년 추가 집행예상액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상당 규모의 예산이 2026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 기반시설공사 및 장비 제작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전년도 이월 예산이 전액 집행될 것으로 보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부지조성, 상부 기능시설 공사)을 위한 자금 확보가 필요하여 총사업비 관리계획에 따라 658억 2,500만원을 편성했다는 설명이나,

이 사업은 항만자동화 기술 실증을 위하여 추진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진해신항의 스마트항만화도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사업 지연 및 연례적 집행 부진에 따른 상당 규모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사업 연차별 사업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비고
	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기타	
2022년(1년차)	4,599	2,782	1,817			-	기초자료조사 및 타당성평가
2023년(2년차)	69,000	68,476	474		50	-	총사업비 협의 등
2024년(3년차)	81,584	80,984	-	500	100	-	ARMGC, AGV 착수
2025년(4년차)	5,541	3,281	-	1,937	60	263	DTQC 및 우선시공분 착수
2026년(5년차)	65,825	65,200	-	500	-	125	기반시설공사 착수
2027년(6년차)	87,767	86,667	-	1,000	25	75	기반시설공사 및 장비 제작
2028년(7년차)	65,826	65,292	-	437	35	62	사업 준공
합계	380,142	372,682	2,291	4,374	270	525	-

주) 총사업비 중 국고부담분(보조율 50%)만 기재한 것임
자료: 해양수산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 출>

10.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사업(신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한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사업은 민간기업의 북극항로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친환경 쇄빙·내빙선을 신규 건조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2)]

[2026년도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	23,050	23,050	39,000	15,950	69.2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11,000	11,000	순증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110억원
- 쇄빙·내빙선 건조비 4,000억원 × 2.75%(보조율)

자료: 해양수산부

쇄빙선(碎氷船, icebreaker)은 얼음을 직접 깨며 항로를 개척하는 선박으로, 남극해와 북극해처럼 얼어있는 바다에서도 독자적인 항해가 가능한 선박을 말함.

쇄빙 원리는 선체가 빙판 위에 올라가 중량을 이용하여 빙판을 깨뜨리는 방식이며, 얼음을 쉽게 깰 수 있도록 선형의 돌출부가 없는 경사진 선수형상을 하고 있음. 쇄빙선은 독자적인 항해뿐 아니라 다른 선박을 위해 항로를 개척하거나 얼음에 갇힌 선박을 구조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함.

2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글로벌 저탄소선박 정책 대응 지원(6133-328)(해운물류국)

내빙선(耐氷船, ice-strengthened vessel / ice navigation vessel)은 자체적인 쇄빙 능력은 없으나 쇄빙선의 항로를 따라 쇄빙선이 깨어 놓은 얼음 조각을 밀며 항해하거나 계절적으로 얼음이 녹아 개방된 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선박임.

내빙선은 빙해(ice field) 또는 유빙(broken ice)에 견디면서 운항할 수 있도록 일반 상선에 비해 외벽 철판의 두께를 강화하거나 흘수선의 상부/하부를 보강하는 등 내빙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함.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자료: 극지연구소

나. 검토의견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사업은 선사의 사업 참여 의향과 신조 선박의 종류, 척수 등 업계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바탕하여 사업 추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민간 선사가 쇄빙선이나 내빙선을 새로 건조할 경우, 선가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임.

해양수산부는 북극항로 운송 루트 개발 및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쇄빙·내빙선이 필요하나 쇄빙·내빙선은 특수 도료 및 특수후판 사용, 특수 열처리 등으로 인해 일반 선박보다 가격이 높아 정부 보조를 통해 사업 촉진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지원대상은 북극항로 개발 및 시범 운항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쇄빙·내빙선을 신조하는 업체이며, 2026년 예산안은 쇄빙·내빙선 1척 건조비를 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건조비의 2.75%를 보조하는 것으로

산출하여 편성되었음.

[친환경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계획]

○ (사업목적) 북극항로 운송 루트 개발 및 안전한 항해 지원을 위한 쇄빙·내빙선 신조 시 선가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자격) 북극항로 개발 및 시범 운항 등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쇄빙·내빙선을 신조하는 업체 - 북극항로 개발 참여 및 신조선을 개발 사업에 사용한다는 조건 부여 필요 ○ (사업내용) 북극항로 운항 지원을 위한 쇄빙·내빙선 신조 시 선가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 지원 ○ (예산안) 110억원(건조비 4,000억원 × 2.75%)

자료: 해양수산부

이 사업의 추진 절차를 살펴보면, 먼저 선사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고,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선정된 선사와 조선소 간에 쇄빙선 또는 내빙선 건조 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즉, 이 사업은 선사의 사업 참여 의향, 선사가 신조하려는 선박의 종류에 따라 지원 규모, 보조율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이므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10월 중 국내 선사들을 대상으로 북극항로 시범운항 관련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우는 등 사업 참여에 대한 수요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해양수산부는 쇄빙·내빙선의 평균 건조비용을 약 4,000억원으로 추정하고, 같은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외항선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 사업'의 보조율(2025년 2.8%)을 참조하여 보조율을 2.75%로 정하였음.

그러나 실제로 쇄빙·내빙선의 건조비용은 선종, 구조, 크기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과거 사례를 보면 3,300억원에서 6,000억원 사이로 폭넓게 분포함.[23] 특히 쇄빙선은 저온용 특수강 사용, 두꺼운 얼음을 깨기 위한 고출력 엔진 탑재 등으로 인해 내빙선보다 훨씬 높은 단가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쇄빙·내빙선 신조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사들의 사업 참여 의사와 신조하려는 선박의 종류, 척수, 사양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바탕하여 면밀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23)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언론보도 등으로 파악해 볼 때, 쇄빙선의 선가는 3,300억원에서 6,000억원 사이로 추정되고, 내빙선은 2024년 건조된 내빙등급을 보유한 LNG운반선의 경우 건조비용이 2억 6438만 달러(약 3,700억원)이라고 함.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 출>

11. 어촌신활력증진(자율)·어촌신활력증진(제주) 사업: 집행실적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자율)’** 사업은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맞춰 경제·생활·안전 기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7억 8,200만원(△6.1%) 감액된 1,969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24)]

‘어촌신활력증진(제주)’ 사업은 2025년까지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과 동일한 내역사업이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자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서 제주도를 분리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억 3,000만원(33.9%) 증액된 6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25)]

[2026년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제주)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어촌신활력증진(자율)	218,525	218,525	196,923	△21,602	△9.9
어촌신활력증진(자율)	209,705	209,705	196,923	△12,782	△6.1
어촌신활력증진(제주)	4,795	4,795	6,425	1,630	33.9
합계	214,500	214,500	203,348	△11,152	△5.2

이 두 사업(이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어촌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3가지 사업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 8월 현재 124개소가 선정되었음.

2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어촌신활력증진(자율)(3345-300)(수산정책실)

2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어촌신활력증진(제주)(3306-300)(수산정책실)

사업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형1)은 경제플랫폼을 조성하는 것으로 재정지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어촌의 경제·생활 중심 역할을 하는 어촌 경제거점 조성을 목표로 함. 사업내용은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시설 조성, 연결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이며, 민간투자 100억원 이상을 유치한 경우 개소당 300억원을 지원함.

(유형2)는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으로, 어촌의 정주·경제환경 개선을 통해 자립형 어촌 조성을 목표로 함. 사업내용은 문화·돌봄·복지 등 생활서비스 제공 거점 구축, 어촌공동체 소득 창출을 위한 제조·가공·판매시설 지원 등이며, 개소당 100억원을 지원함.

(유형3)은 노후된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선착장·방파제 등 접안시설 확충, 대합실·매표소 등 여객 편의시설 개선 등이며, 개소당 50억원을 지원함.

[2023년 ~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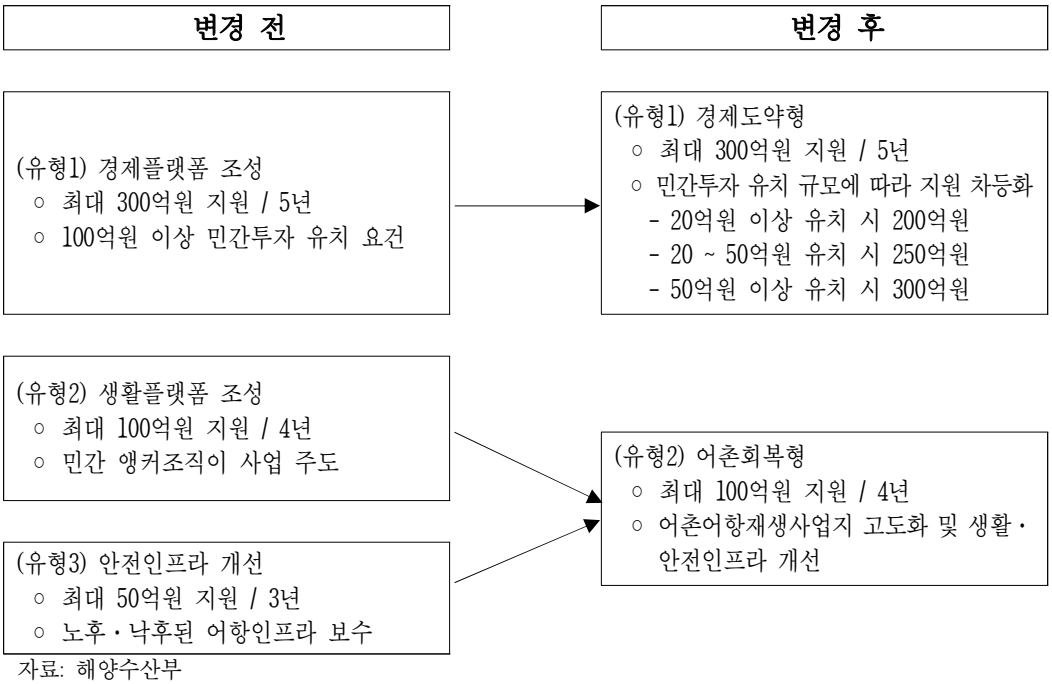
구분	(유형1) 경제플랫폼	(유형2) 생활플랫폼	(유형3) 안전인프라
지원대상	국가어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지방어항, 어촌정주어항, 소규모항포구 및 배후마을	어촌정주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마을
사업목표	어촌 경제거점 조성	어촌마을의 생활서비스 제공 등 정주여건 개선	소규모 어항의 최소 안전 수준 확보
사업수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 민간투자자 연계	지방자치단체 * 민간앵커조직 연계	지방자치단체
사업기간	5년 (2024년까지는 4년)	4년	3년
사업비	총 사업비: 400억원 이내 (민간 100억원 이상) 재정지원: 300억원 이내 (국비 50%, 지방비 50%, 자부담 별도)	총 사업비: 100억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자부담 별도)	총 사업비: 50억원 이내 (국비 70%, 지방비 30%)
추진방식	대상 거점어항 주변(5㎞, 5분 이내) 민간투자 사업을 기반으로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연계하여 시너지 창출 재정지원은 소득·복지 복합시설 및 주거 등 생활인프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	어항을 중심으로 마을간 교류, 주요 이용시설을 고려해 '어촌생활권'을 구분하고, 돌봄·복지 등 생활서비스 제공 어촌 앵커조직(민간)이 현장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발굴·해결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 개선
사업지 선정	17개소	45개소	62개소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026년부터 이 사업의 방식을 기존 3가지 유형에서 2가지 유형으로 개편할 계획임.

(유형1)은 민간 투자유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민간투자 유치 부담을 완화하고, (유형2)와 (유형3)는 통합하여 어촌어항재생사업지 고도화 및 생활·안전인프라 개선을 병행하며 최대 100억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설명임.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개편 내용]



자료: 해양수산부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유형별 분류]

구분	(유형1)(경제도약형)	(유형2)(어촌회복형)
지원대상	국가어항(무역항·연안항 어항구 포함), 지방어항 및 배후지역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 어촌마을
사업목표	재정·민간사업 간 연계를 통한 경제거점 조성	어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수행 주체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사업기간	5년(2%, 8%, 10%, 40%, 40%)	4년(5%, 10%, 40%, 45%)
사업비	최대 300억원	최대 100억원
추진방식	대상 거점어항 주변(5km 내외) 민간투자 사업을 기반으로 재정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복수의(2 ~ 3개) 어항을 중심으로 마을 간 교류, 주요 도입시설을 고려해 '어촌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을 기준으로 사업 추진
기존 2023~2025년 유형과의 비교	민간투자 유치 규모에 따라 지원 차등화	어촌어항재생사업지 고도화와 어촌 내 생활·안전인프라 개선 병행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자율) 사업의 2026년 예산안에는 기존 사업지에 대한 계속사업비 1,858억 7,300만원과 2026년 신규 선정 사업지 32개소의 사업비 110억 5,000만원 등 1,969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어촌신활력증진(제주) 사업의 경우 기존 사업지에 대한 계속사업비 55억 3,100만원과 2026년 신규 선정 사업지 2개소의 사업비 8억 9,400만원 등 64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2026년 예산안의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예산 총액은 2,033억 4,800만원임.

[어촌신활력증진(자율) 사업 및 어촌신활력증진(제주)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어촌신활력증진(자율)>
○ 2023년 계속사업비 1,061억 6,500만원
- (유형1) 210억 2,000만원(84억 800만원 × 5개소 × 국비50%)
- (유형2) 851억 4,500만원(40억 5,500만원 × 30개소 × 국비70%)
○ 2024년 계속사업비 552억 3,400만원
- (유형1) 73억 3,100만원(29억 3,200만원 × 5개소 × 국비50%)
- (유형2) 159억 8,000만원(25억 3,700만원 × 9개소 × 국비70%)
- (유형3) 319억 2,300만원(26억 8,300만원 × 17개소 × 국비70%)
○ 2025년 계속사업비 244억 7,400만원
- (유형1) 76억 9,000만원(21억 9,700만원 × 7개소 × 국비50%)
- (유형2) 32억 1,500만원(9억 1,900만원 × 5개소 × 국비70%)
- (유형3) 135억 6,900만원(16억 1,500만원 × 12개소 × 국비70%)
○ 2026년 신규사업비 110억 5,000만원
- (유형1) 9억원(6억원 × 3개소 × 국비50%)
- (유형2) 101억 5,000만원(5억원 × 29개소 × 국비70%)

<어촌신활력증진(제주)>
○ 2024년 계속사업비 35억 1,300만원
- (유형2) 15억 8,800만원(22억 6,850만원 × 1개소 × 국비70%)
- (유형3) 19억 2,500만원(27억 5,000만원 × 1개소 × 국비70%)
○ 2025년 계속사업비 20억 1,800만원
- (유형3) 20억 1,800만원(14억 4,140만원 × 2개소 × 국비70%)
○ 2026년 신규사업비 8억 9,400만원
- (유형1) 5억 4,400만원(10억 8,800만원× 1개소 × 국비50%)
- (유형2) 3억 5,000만원(5억원 × 1개소 × 국비70%)

자료: 해양수산부

나. 검토의견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실집행단계에서 과도한 유보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실집행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의 실집행실적을 보면, 2023년에는 사업 초기임을 감안하여도 실집행률이 24.2%에 불과하고 305억 4,4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유형	해양수산부			최종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유형1)	6,953	6,953	6,518	6,518	-	6,518	1,285	6,518	1,285	**5,233**	-	**18.5**
(유형2)	20,972	20,972	20,384	20,384	-	20,384	4,536	20,384	4,536	**15,848**	-	**21.6**
(유형3)	13,716	13,716	13,716	13,716	-	13,716	4,253	13,716	4,253	**9,463**	-	**31.0**
합계	41,641	41,641	40,618	40,618	-	40,618	10,074	40,618	10,074	**30,544**	-	**24.2**

자료: 해양수산부

2024년의 경우에도 실집행률이 21.8%에 불과하고 701억 8,000만원이 실집행단계에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실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유형)	해양수산부			최종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유형1)	13,986	13,986	12,826	12,826	3,184	16,445	859	13,261	582	**15,586**	-	**4.2**
(유형2)	27,907	27,907	26,927	26,927	15,793	43,308	14,920	27,515	7,155	**26,363**	2,025	**25.6**
(유형3)	39,835	39,835	39,312	39,312	4,970	44,282	16,051	39,312	10,095	**28,231**	-	**25.3**
합계	81,728	81,728	79,065	79,065	23,947	104,035	31,830	80,088	17,832	**70,180**	2,025	**21.8**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의 경우 8월말 현재 실집행률은 32.4%로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3개 유형 모두 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고 (유형1)의 사업 추진은 지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

[2025년 8월 기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유형)	해양수산부			최종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등)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유형1	36,000	36,000	19,452	19,452	6,729	26,181	10,350	19,452	**4,897**	-	-	**13.6**
유형2	92,400	92,400	72,590	72,590	18,822	91,412	34,207	72,590	**23,219**	-	-	**25.1**
유형3	86,100	86,100	68,041	68,041	16,732	84,773	53,305	68,041	**41,386**	-	-	**48.1**
합계	214,500	214,500	160,083	160,083	42,283	202,366	97,862	160,083	**69,502**	-	-	**32.4**

자료: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수탁기관에 유보된 금액도 증가하고 있음.

수탁기관 유보액은 2024년 12월말 기준으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248억 7,900만원, 한국농어촌공사에 207억 8,400만원이었음.

[2024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탁기관 유보액]

(단위: 개소, 백만원)

선정 연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탁 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수탁 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2023	10	26,483	4,541	21,941	-	2	5	3	19	23,849	12,275	11,574	-	9	2	8
유형1	2	11,112	666	10,445	-	-	-	2	3	7,076	306	6,770	-	-	-	3
유형2	1	720	3	717	-	-	-	1	5	2,084	-	2,084	-	-	-	5
유형3	7	14,652	3,872	10,779	-	2	5	-	11	14,689	11,969	2,720	-	9	2	-
2024	3	3,604	666	2,938	-	-	-	3	10	10,215	1,008	9,207	-	-	8	2
유형1	1	2,104	-	2,104	-	-	-	1	2	4,450	-	4,450	-	-	-	2
유형2	-	-	-	-	-	-	-	-	-	-	-	-	-	-	-	-
유형3	2	1,500	666	834	-	-	-	2	8	5,765	1,008	4,757	-	-	8	-
합계 (비율)	13	30,087	5,208 (17.3%)	24,879 (82.7%)	-	2	5	6	29	34,064	13,283 (38.9%)	20,784 (61.1%)	0	9	10	10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에 사업 예산이 크게 확대되면서, 두 기관의 유보액 또한 2025년 8월말 기준 각각 662억 5,100만원(88.3%), 634억 3,000만원(66.9%)으로 증가하였음.

[2025년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수탁기관 유보액]

(단위: 개소, 백만원)

선정 연도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농어촌공사							
	수탁 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수탁 지구수	교부액	집행액	유보액	추진 현황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준공	공사	설계	기본계획
2023	15	48,002	6,283	41,719	-	4	5	6	20	72,202	28,986	43,216	-	11	3	6
유형1	2	16,904	708	16,196	-	-	-	2	3	11,720	382	11,338	-	-	1	2
유형2	6	8,140	302	7,838	-	-	2	4	6	9,313	211	9,102	-	-	2	4
유형3	7	22,958	5,273	17,685	-	4	3	-	11	51,169	28,393	22,776	-	11	-	-
2024	7	14,589	2,435	12,154	-	-	3	4	12	22,562	2,348	20,214	-	1	7	4
유형1	2	7,673	1,697	5,976	-	-	-	2	2	6,950	63	6,887	-	-	-	2
유형2	1	-	-	-	-	-	-	1	2	-	-	-	-	-	-	2
유형3	4	6,916	738	6,178	-	-	3	1	8	15,612	2,285	13,327	-	1	7	-
2025. 8.	10	12,453	75	12,378	-	-	-	3	4	-	-	-	-	-	-	4
유형1	3	3,118	8	3,110	-	-	-	1	1	-	-	-	-	-	-	1
유형2	-	-	-	-	-	-	-	-	1	-	-	-	-	-	-	1
유형3	7	9,335	67	9,268	-	-	-	2	2	-	-	-	-	-	-	2
합계 (비율)	32	75,044	8,793 (11.7%)	66,251 (88.3%)	-	4	8	13	36	94,764	31,334 (33.1%)	63,430 (66.9%)	-	12	10	14

주) 2025년에 선정되어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수탁된 10개 지구 중 7개 지구는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으로 기본계획 수립 이전 단계임

자료: 해양수산부

2025년 8월말 현재는 2025년 예산액 2,145억원이 일부인 1,600억 8,300만원만 교부된 상태로, 544억 1,700만원의 미교부 예산이 추가로 교부되면 두 기관에 유보되는 사업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매칭 사업비 확보를 위한 시일 소요가 사업 지연의 주요 사유이며, (유형1)의 사업 지연 상황을 고려하여 2026년부터는 (유형1)의 사업기간을 종전의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민간투자를 100억원 이상 확보하도록 했던 것과는 달리, 민간투자 유치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는 설명임.

2026년부터는 사업 유형이 변경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부담이 줄어들면 (유형1)의 사업 추진이 다소 원활해질 가능성이 있으나, 기존에 선정되었던 사업지는 세 가지 유형 모두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 개소가 증가하면서 수탁기관 유보자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실집행단계에서 과도한 유보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사업지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연내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12.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사업 추진 일정 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만 40세 미만 귀어 청년, 신혼부부 및 가구원 등을 대상으로 주거, 어업 일자리, 어촌계 가입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5억원(50.0%) 증액된 45억원이 편성되었음.[26)]

[2026년도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청년어촌정착지원	6,074	6,074	8,064	1,990	32.8
청년바다마을 조성	3,000	3,000	4,500	1,500	50.0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2025년 계속 사업비: 30억원
- 3개소 × 100억원 ×국비 50% × 2년차 지원비율 20%
○ 2026년 신규 사업비: 15억원
- 3개소 × 100억원 × 국비 50% × 1년차 지원비율 10%

자료: 해양수산부

이 사업은 어업현장과 마을 접근성이 좋은 어항 유휴부지 등에 소규모 주택단지(개소당 30호 이내)를 조성하고, 사업지 인근에 어업, 가공, 해양관광 등 일자리 연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며, 사업참여자의 어촌계 편입을 보장하는 등 주거, 일자리,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사업임.

해양수산부는 2029년까지 8개의 청년바다마을을 조성할 예정으로, 개소당 사업기간은 3년, 사업비는 100억원 내임.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청년어촌정착지원(3347-363)(수산정책실)

나. 검토의견

청년바다마을 조성사업은 2025년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2개소만 선정되었고 선정된 사업지의 사업추진도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지 선정 일정을 앞당기는 등 사업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청년바다마을 조성 사업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2025년에 사업지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충남 서천, 전남 신안 2개소만 선정되었고, 1개소는 10월말까지 공모를 거쳐 11월에 선정할 예정임.

[2025년 청년바다마을 사업지 공모·선정 현황]

구분	1차	2차
사업대상지 공모 기간	2024. 11. 14. ~ 2025. 2. 28.	2025. 4. 30. ~ 10. 31.
평가 방법 및 기간	서면 및 현장평가 (2025. 3. 10. ~ 4. 24.)	서면 및 현장평가 (2025. 11. 예정)
사업지 선정	2025. 4. 24.	2025. 11. 예정
응모 사업지 수	2개소	공모 진행 중
선정 사업지	충남 서천, 전남 신안	공모 진행 중

자료: 해양수산부

사업지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편성, 사업시행자와의 위·수탁계약 체결, 기본·시행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공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2025년 8월말 현재 충남 서천은 지방비 예산 편성 중이고, 전남 신안은 지방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아직 사업시행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되지 않은 상황임.

[2025년 선정 사업지 사업 진행 현황(2025년 8월)]

(단위: 백만원)

지역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집행액	비고
충남 서천	1,000	1,000	1,000	0	지방비 예산 편성 중
전남 신안	1,000	1,000	1,000	0	지방비 예산 편성 완료
합계	2,000	2,000	2,000	0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2개소 모두 10월에 사업시행자(한국어촌어항공단)와 계약을 체결하고, 11월에는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해양수산부는 2026년에도 신규 사업지 3개소를 선정할 예정임. 하지만 2025년과 마찬가지로 상반기에 3개소를 모두 선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선정된 2개소

의 사례를 보았을 때 지방비 편성, 사업시행자와의 위·수탁계약 체결 등에 5개월 ~ 7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은 연말 또는 그 다음해 초에 시작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사업지 선정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지별 사업추진 일정 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수산발전기금】

<지 출>

13.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 실제 반납 실적을 고려한 기존 어구 반납비 예산 적정 규모 조정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은 폐어구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업인 등이 사용 완료된 폐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22억 8,500만원(27.1%)이 증액된 107억 200만원이 편성되었음.[27)]

[2026년도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46,341	46,341	48,599	2,258	4.9
	어구·부표 보증금제	8,417	8,417	10,702	2,285	27.1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제도운영: 64억 7,300만원(민간위탁사업비)
- 어구 표식 제작: 18억 900만원, 표식 취급수수료: 6억 5,000만원, 제도 운영 관리: 3억원, 연구·홍보: 7억원, 시스템운영: 2억 7,000만원, 폐통발 분리장치·무인반납장치 보급: 26억 5,000만원, 신고포상제 운영: 1,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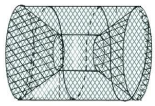
○ 회수관리비용: 42억 2,900만원(지방자치단체 보조)
- **기존 어구 수매비: 23억 3,000만원**
- 회수시설 운영비(인건비, 유지보수비): 12억 5,500만원
- 폐어구 수거처리: 6억 4,400만원
- 회수시설 관리비용: 1억 8,000만원

자료: 해양수산부

27) 수산발전기금-해양폐기물 정화사업(1065-301)(해양정책실)

어구·부표 보증금 제도는 바다에 버려지는 폐어구 및 폐부표를 줄이기 위해 통발과 같은 어구를 구매할 때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반환하면 돌려주는 제도로, 해양 환경 오염과 수산 자원 피해를 막고 어업인의 자발적인 폐어구 회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2024년 1월부터 시행되었음.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 개요]

<table>
<tr><th>구분</th><th colspan="5">내용</th></tr>
<tr><td>추진배경</td><td colspan="5">어구·부표의 유실·투기를 방지하는 데 규제적 수단은 집행에 한계가 있어 어업인의 자발적 회수를 유인(보증금)할 실효적 수단이 필요</td></tr>
<tr><td>적용대상</td><td colspan="5">어선에서 분리·사용되어 해상 투기가 용이하고 유실률이 높은 어구(2024년, 통발)부터 보증금제를 적용하고 2026년부터 자망, 양식장 부표로 확대</td></tr>
<tr><td>추진체계</td><td colspan="5">표식 부착 및 보증금 납부 → 어구 사용 및 반납(어업인) → 반납된 어구 관리·처리(지자체) → 보증금 환급(보증금관리센터)</td></tr>
<tr><td rowspan="2">보증금액
(통발)</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스프링(1천원)</td><td>원형(2천원)</td><td>반구형(2천원)</td><td>사각(3천원)</td><td>붉은대게(3천원)</td></tr>
<tr><td rowspan="2">표식·심볼</td><td colspan="2">  </td><td colspan="3"> 
</td></tr>
<tr><td colspan="2">어구보증금제 표식(케이블타이)</td><td colspan="3">보증금제 심볼</td></tr>
<tr><td>회수관리</td><td colspan="5">전국 184개소 폐어구 반납장소 지정 [2025. 8. 기준 128개소 운영 중]</td></tr>
</table>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증금제 표식이 있는 어구(이하 “보증금 어구”)뿐 아니라 보증금제 도입 이전에 생산된 어구(이하 “기존 어구”)에 대해서도 1개당 250원을 책정하여 수매하여 회수하고 있으며, 기존 어구 수매 대상은 보증금제 대상 어구와 동일함.

2026년도 계획안은 107억 200만원으로, 제도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64억 7,300만원과 기존 어구 수매 및 회수시설 운영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42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며, 2026년에 보증금 대상이 자망, 부표, 장어통발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음.

나. 검토의견

기존 어구 반납실적을 보면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반납된 수량이 연간 예상치의 9.4%에 불과하므로, 반납 수량을 보다 정확하게 추계하고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민간위탁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나뉘는데, 어구 표식 관리, 보증금 환급 등 제도 운영·관리는 한국수산자원공단(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 민간위탁 형태로 담당하고 있으며, 반납된 어구의 수거·처리, 기존 어구 수매, 반납장소의 운영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 형식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지역 수협이 담당하고 있음.

반납장소 운영, 기존 어구 수매 등 어구의 수거·처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실적을 보면, 2024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9억 9,8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2억 4,700만원으로, 집행률은 12.4%이었고, 2025년에도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2025년 8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은 13.2%임.

[어구·부표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본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4	1,998	1,998	1,998	-	1,998	247	1,280	471	12.4
2025. 8.	2,005	2,005	2,005	1,280	3,247	428	-	-	13.2

자료: 해양수산부

이와 같이 사업 추진이 저조한 이유는 기존 어구 반납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편성한 데에 주된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임.[28)]

어구·부표 보증금제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예산은 기존 어구 수매비, 회수시설 운영비 등이며, 이 중 기존 어구 수매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기존 어구 수매비의 집행 실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반납된 기존 어구는 301,363개로 75,340,750원의 수매비(개당 250원)가 집행되었음. 수매비는 해양수산부에서 50%,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부담함.

28) 해양수산부는 반납장소 운영 미흡(폐어구 반납장소로 지정된 곳은 184개소이나 2025. 8. 기준 128개소만 운영 중)에 따른 어구 반납 불편, 어업인 참여 부족 등도 원인으로 보고 있음.

[기존 어구 수매 현황]

(단위: 개, 원)

연도	반납개수(A)	단가(개당)(B)	수매비(A×B) (국비 50%, 지방비 50%)
2024	119,698	250	29,924,500
2025. 9.	181,665	250	45,416,250
합계	301,363		75,340,750

자료: 해양수산부

기존 어구 수매비의 연도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2024년과 2025년에 기존 어구 320만개가 반납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액을 각각 4억 150만원으로 책정하였음.

[기존 어구 수매비 예산 편성·집행 현황]

(단위: 원, %)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4	401,500,000	14,962,250	3.7
	321.2만개 × 250원 × 50%	119,698개 × 250원 × 50%	
2025. 9.	401,500,000	22,708,125	5.6
	321.2만개 × 250원 × 50%	181,665개 × 250원 × 50%	
2026(안)	2,330,000,000		
	(통발) 369백만원 = 440만개(연간사용량) × 0.67(회수율반영) × 250원× 50% (자망) 896백만원 = 280만폭(연간사용량) × 0.64(회수율반영) × 1,000원 × 50% (부표) 1,005백만원 = 457만개(연간사용량) × 0.88(회수율반영) × 500원 × 50% (장어통발) 60백만원 = 36만개(연간사용량) × 0.67(회수율반영) ×500원× 50%		

주) 기존 어구 수매비 부담은 국비 50%, 지방비 50%이므로, 일괄하여 50%를 곱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해양수산부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된 반납 어구 숫자 321만 2,000개는 우리나라 통발어선 4,820척(계산 편의상 5,000척으로 환산)이 배 1척 당 허용된 어구사용량 평균 2,640개[29]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통발을 3년 동안 사용하는 경우 한 해 동안에 반납될 것으로 추정한 수치임.

29)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2] 어업별 어구의 규모 · 형태 · 재질 · 사용량 및 사용방법

[2024년, 2025년 통발 수매 수량 산출 근거]

[통발어선 5,000척 × 어구사용량 2,640개 × 0.73(회수율 반영)] / 3년 = 3,212,000개

자료: 해양수산부

2026년에는 통발 외에 자망·부표·장어통발도 기존 어구 수매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어구 수매액을 2025년 4억 2,000만원 대비 5배 이상 증액된 23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수매 대상 확대에 따라 반납량 증가가 예상되지만 2024년부터 2025년 9월까지 1년 9개월간 반납된 기존 어구 301,363개는 당초 해양수산부가 1년 동안 반납될 것으로 예상한 320만개의 9.4%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6년도 계획안은 실제 반납 수요에 대해 정확하게 추계한 후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어구·부표 보증금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존 어구 및 폐어구의 반납률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안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30]

30) 해양수산부는 기상 여건 및 조업 과정 중 타 어구와의 꼬임 등으로 인해 어구 자연유실이 발생할 경우 어업인은 해당 어구의 보증금을 환급받지 못하는데, 어구 자연 유실에 따른 보증금 손실을 보전하고 어업인의 제도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해양경찰청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7.4%) 증가함.[1)]

[2026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70	70	75	5	7.4
총수입	70	70	75	5	7.4

2026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2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7억원(4.8%) 증가함.

[2026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19,923	19,926	20,870	947	4.8
총지출	19,923	19,926	20,870	947	4.8

문의 : 김선영 예산결산조사관 olive114@assembly.go.kr (02-6788-5685)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나. 예산안

2026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은 1개 회계(일반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75억원으로 전년 대비 5억원(7.4%) 증가함.

[2026년도 해양경찰청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70	70	75	5	7.4
합 계	70	70	75	5	7.4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2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47억원(4.8%) 증가함.

[2026년도 해양경찰청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9,923	19,926	20,870	947	4.8
합 계	19,923	19,926	20,870	947	4.8

주) 총계 기준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해양경찰청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개(10억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음.[2)]

‘AI기반해상긴급상황접수및대응체계개발(R&D)’ 사업은 현재 인력 중심의 무선통신 조난신호 청취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적 오류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신고접수 및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AI 기반의 신고접수 및 대응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해양경찰청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AI기반해상긴급상황접수및대응체계개발(R&D)	1,000
총지출		1,000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해양경찰청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함정건조’, ‘항공기도입’, ‘해양안전시스템구축관리(정보화)’ 사업 등 총 14개임.[3)]

[2026년도 해양경찰청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연안구조장비도입	11,987	16,832	4,845	40.4
2	함정건조	157,137	202,523	45,386	28.9
3	항공기도입	37,796	66,641	28,845	76.3
4	진압및전투장비관리	2,180	3,336	1,156	53.0
5	정보통신보안활동	1,396	2,340	944	67.6
6	청사관리	7,571	10,532	2,961	39.1
7	해양안전시스템구축관리(정보화)	280	5,492	5,212	1,861.4
8	초소형위성체계개발사업(R&D)(해경청)	12,000	32,080	20,080	167.3
9	가상융합기술기반재난안전대응교육훈련플랫폼기술개발(R&D)(해경청)	6,000	7,900	1,900	31.7
10	탄소중립해상환경변화에따른방제대응기술개발(R&D)	1,465	1,980	515	35.2
11	수상레저기구안전인증기술기준개발(R&D)	800	1,350	550	68.8
12	해양경찰현장맞춤형연구개발(오션랩2.0)(R&D)	1,492	2,717	1,225	82.1
13	차세대디지털VTS국제표준서비스및장비개발(R&D)	1,200	3,768	2,568	214.0
14	AI기반해양재난대응체계CDX기술개발(R&D)	1,000	4,800	3,800	380.0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해양경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음.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해양주권 수호, 구조안전 및 수사역량 강화, 해양환경보전, R&D 및 정보화 등 첨단기술 개발 분야 등의 예산에 중점을 둔 점임.

구조안전 분야의 경우 해양안전 관련 장비 도입과 지원을 확대하였고, 해상에서의 실제 비행 및 수색구조 환경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대형헬기 시뮬레이터 도입 예산을 반영하였음. 또한 노후된 3,000톤급 대형함정과 중형 공기부양정 및 합정탑재 고속단정 교체 예산 등을 반영하여 불법 외국어선 단속과 구조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임.

2026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으나, 2026년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5억 3,600만원 증가한 761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연구개발비 예수금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전망을 고려하여 세입 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경찰청은 드론 운용직원의 조종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드론 보유 대수 증가 및 순환보직에 따른 신규 교육 수요로 인해 교육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경찰교육원 중심의 자체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셋째, 해양경찰청은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여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 AI 모델 개발, 단말기 적용 등 복합적이고 순차적인 과업을 10개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나, 사업 범위에 비해 추진기간이 짧아 AI 학습데이터 확보 및 개발, 현장 적용 검증의 시간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내 수행 가능한 범위로 사업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입>

1. 기타재산이자수입: 연구개발비 예수금 이자 증가를 고려한 세입예산 증액 필요

가. 개 요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정부출연금 및 국고보조금과 세입·세출금의 금융기관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이 계상되는 세입과목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700만원(12.8%) 증가한 4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4)]

[2026년도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타재산이자수입	368	368	415	47	12.8

[기타재산이자수입 예산안 세부내역]

○ 기타재산이자수입: 4억 1,500만원
- [최근 3년간 R&D 예산 평균액(478억) x 예상이자율(0.8%)] + 기타 이자 3,20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나. 검토의견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예수금 이자수입을 고려하여 편성되었으나, 2026년 R&D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5억 3,600만원 증가한 761억 6,300만원이 편성되어

4) 일반회계-기타재산이자수입(54-546)(운영지원과)

연구개발비 예수금 이자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입전망을 고려하여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기타재산이자수입은 최근 4년간(2021년~2024년) 연례적으로 초과수납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해양경찰청이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예산액의 수납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매년 1억원 미만의 유사한 금액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임.

[2021년~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실적]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1	26	26	-	26	73	73	280.8	100.0	-	-
2022	87	87	-	87	115	115	132.2	100.0	-	-
2023	87	87	-	87	368	368	423.0	100.0	-	-
2024	92	92	-	92	531	525	570.7	98.9	6	-
2025. 8.	**368**	**368**	-	**368**		**384**				

자료: 해양경찰청

2025년에서야 최근 3년간의 수납실적을 고려하여 3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5년 8월 현재 이미 3억 8,400만원이 수납되어 올해 예산액보다 1,600만원 초과수납 되었음.

해양경찰청 기타재산이자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연구개발비 예수금 이자로, 해양경찰청의 연구비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예수금의 이자수익도 증가하고 있음.

[2021년~2024년 기타재산이자수입 수납액 상세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결산금액	상세내역		
			연구개발비 예수금 이자(비중)	국고보조금 이자(비중)	세입·세출금 이자(비중)
2021	26	73	43 (58.9%)	2 (2.7%)	28 (38.4%)
2022	87	115	102 (88.7%)	2 (1.7%)	11 (9.6%)
2023	87	368	344 (93.5%)	3 (0.8%)	21 (5.7%)
2024	92	525	501 (95.4%)	15 (2.9%)	9 (1.7%)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의 연구개발비는 2021년 262억 8,400만원이었다가 2022년부터 크게 증가해 428억 2,100만원, 2023년은 521억 5,600만원, 2024년은 416억 1,700만원, 2025년은 486억

2,700만원에 이르고 있음.

[해양경찰청 연구개발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예산액	26,284	42,821	52,156	41,617	48,627	76,163

자료: 해양경찰청

특히 2026년도 예산안에는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275억 3,600만원(56.6%) 증가한 76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에 비례하여 기타재산이자수입의 수납액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타재산이자수입 세입예산액은 최근의 연구개발비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음.

<세 출>

2. 드론 조종교육 사업: 자체 교육체계 구축 필요

가. 개 요

내내역사업인 **'드론 조종교육'** 사업은 함정에 탑재된 드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에서 드론 조종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5)]

[2026년도 드론 조종교육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경비대테러역량강화	17,907	17,907	17,503	△404	△2.3
드론운용	3,555	3,555	1,370	△2,185	△61.4
드론 조종교육	336	336	336	-	-

[드론 조종교육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드론 조종교육: 3억 3,600만원(직무교육대상자 56명 × 60만원) - 위탁교육비: 2억 8,000만원 - 교육여비: 5,60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를 말하며,[6)] 해양경찰청이 보유·운용 중인 드론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으로, 보유 대수는 총 77대임.

---

5) 일반회계-경비대테러역량강화(3102-300)(경비국)

6)「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자동·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해양경찰청 드론 보유 현황]

(단위: 대)

구분	형상	주요 역할	도입 대수	폐기 대수	운용 대수	폐기 사유
무인 헬리콥터		광역해역 감시, 불법외국어선 단속	17	-	17	-
무인 비행기		해양오염 예찰, 단속	16	8	8	노후화 및 고장 등 수리한계(부품단종)로 인한 활용 불가
무인 멀티콥터		연안해역 안전관리, 수색	81	29	52	
합계			114	37	77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대형함정(1,500톤급 이상)에 드론을 탑재하여 수색·감시·방제 등 다양한 해양임무에 활용하고 있는데, 17대의 무인헬리콥터 중 13대가 대형함정에 배치되어 있고, 4대는 해양경찰교육원에서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나. 검토의견

해양경찰청은 드론 운용직원의 조종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드론 보유 대수 증가 및 순환보직에 따른 신규 교육 수요로 인해 교육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해양경찰교육원 중심의 자체 교육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함정에 배치된 드론 수와 교육인원을 살펴보면 드론 수에 비해 교육인원이 2 ~ 3배 가량 많음.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드론 조종교육을 이수한 직원 95명 중 35.8%인 34명은 드론 운영 관련 직무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드론 조종교육자의 드론 운영 직무 종사 현황]

(단위: 명)

연도	교육인원	드론 운영 직무 종사 경험자	드론 운영 직무 종사 미경험자(비율)	현재 드론 운영 직무 종사자
2021	18	14	4 (22.2%)	1
2022	16	11	5 (31.3%)	3
2023	33	13	20 (60.6%)	12
2024	28	23	5 (17.8%)	23
합계	95	61	34 (35.8%)	39

자료: 해양경찰청

드론 조종교육은 민간교육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비 지출은 2021년 9,400만원에서 3억 3,6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드론 조종교육 예산집행 현황]

(단위: 명, 백만원)

연도	교육인원	예산액	집행액
2021	18	94	94
2022	16	93	93
2023	33	152	152
2024	28	156	156
2025. 8.	99	336	336

자료: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청은 향후 함정에 드론을 추가 배치할 계획인데, 드론이 추가 배치되면 운용 인력 또한 증가해야 하고, 순환보직의 특성상 신규 조종자 교육이 반복되면서 교육비용 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임.

[연도별 함정 탑재 드론 도입 현황 및 계획]

2021	2023 ~ 2024	2024 ~ 2025	2026 ~ 2027
무인헬리콥터 7대	무인헬리콥터 6대	무인멀티콥터 15대	4대(예정) (드론 종류 미정)

자료: 해양경찰청

한편 교육대상자 선발 기준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드론 배치 함정의 주·부·예비 조종자와 드론 운용부서 또는 업무 관련 부서(경비, 수색, 방제 등) 직원을 예비 인력 확보 차원에서 함께 선발하고 있다는 설명임.

실제로 해양경찰의 임무 다양성과 순환근무를 고려할 때 예비조종인력 확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교육 수료 인력이 드론 운영 관련 직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교육 운영의 실효성 및 활용성이 저하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드론 조종인력의 지속적 확대와 교육비 증가 추세를 고려할 때, 외부 기관에 의존하는 현행 위탁 방식보다는 해양경찰교육원 중심의 자체 교육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해양경찰교육원은 드론 교육 담당 교수 3명과 드론 23대(무인헬리콥터 4대, 무인비행기 2대, 무인멀티콥터 17대)를 보유하고 있고, 드론 자격증 취득 과정, 드론 운용 전문화 과정 등 6개 과정을 운영(계획)하고 있으므로, 외부 위탁교육을 줄이는 한편 해양경찰교육원의 드론 조종 교육과정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함정 탑재 드론 도입 현황]

과정 명	개설연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드론운용전문화 (무인멀티콥터 초급)	2022	무인멀티콥터 운용 초보자를 위한 기본과정	무인멀티콥터 보유부서 운용자 및 예비 운용자
드론 3종 자격증 자격취득	2024	무인멀티콥터 3종 국가자격 취득과정	무인멀티콥터 보유부서 운용자 및 예비 운용자
드론운용전문화 (무인멀티콥터 고급)	2022	무인멀티콥터 운용 고급자를 위한 기본과정	무인멀티콥터 3종 교육이수자 또는 자격보유자
드론 실기시험 과정	2022	무인멀티콥터 1종 국가자격 시험 과정	무인멀티콥터 1종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충족자
드론운용전문화 (무인비행기 운용)	2020	현장 무인비행기 운용 방안 교육 (해양오염방제과 무인비행기의 원활한 운용 및 사고예방을 위한 운용교육)	무인비행기 보유부서 운용자 및 예비운용자
드론운용전문화 (무인헬리콥터 자격취득)	2025 (12월 개설 예정)	무인헬리콥터 운용 교육 (함 탑재 무인헬기 운용·안전·보수 교육)	무인멀티콥터 1종 자격보유자로서 함 탑재 무인헬기 운용예정자 등

자료: 해양경찰청

3.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신규): 연내 수행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규모의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은 유관 기관 간 해양 데이터를 통합하여 AI 기술을 기반으로 불법어선 조업 예측·탐지·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2억 1,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

[2026년도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	23,966	23,966	29,921	5,955	24.8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	-	3,214	3,214	순증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32억 1,400만원
- 시스템 개발비: 16억 400만원
- 자산취득비: 16억 1,000만원

자료: 해양경찰청

이 사업은 ①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기상청, 수협 등 여러 기관이 보유한 선박·조업허가·기상·해양환경 정보 등을 수집·연계한 통합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② 이를 활용하여 AI 기반의 불법조업 예측모델, 경비함정 순찰·경로서비스 모델, 불법어선/어망·어구 탐지모델을 개발한 후 ③ 각 모델이 생성한 예측·탐지 결과를 상황실, 함정의 PC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대응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7) 일반회계-해양경찰정보화관리(정보화)(7238-300)(장비기술국)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 내용]

○ (통합 데이터 허브 구축) 해경청, 해수부, 기상청, 수협 등 기관이 보유한 선박·조업허가·불법조업이력·기상·어장·해양환경 정보를 수집·연계·정규화하여, 불법조업 예측 및 단속에 활용
○ (AI 불법조업 예측모델 개발) 격자 기반의 해역을 단위로 시간·위치·계절·기상 등 다양한 요소를 결합하여 불법조업 위험도를 수치화하고 시각화하는 예측모델 개발
○ (AI 경비함정 순찰·경로서비스 모델 개발) 불법조업 예측 결과를 기반으로, 경비함정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최적 경로 및 협력 패턴을 제공하는 경로 추천 AI 모델 개발
○ (불법어선/어망·어구 탐지모델 개발) 불법 어구 설치 및 위장 AIS 사용 등 고도화된 불법 조업 형태를 탐지할 수 있는 AI 기반 탐지모델 개발
○ (사용자 대응시스템 개발) 예측·탐지 결과를 상황실, 함정의 단말기 및 PC에 별도의 불법조업 대응 Agent설치 또는 Web 접속으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통합 사용자 시스템 구축



자료: 해양경찰청

나. 검토의견

첫째,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은 다양한 시스템을 연계·개발하는 복합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나, ISP 수립 없이 추진되고 있어 기능·구조 변경 및 시스템 간 연계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 구축은 ISP(정보화전략계획) 또는 ISMP(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8]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해야 함.[9]

따라서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도 이러한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ISP 수립 완료 후에 예산을 요구하였어야 했으나, 해양경찰청은 이 사업에 대한 ISP를 수립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어선은 연간 10만 척 이상이 출몰하고 있고 집단·조직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현재의 단속 방식은 인력 중심의 후속 대응으로 실시간성 및 예측성에 한계가 있어 해양 어족 자원 보호, 주권 수호 등 정책적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었고, 현재 정부에서 AI 정보화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ISP 수립 면제 기준을 현행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10]

그러나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은 총 사업비 32억원으로 현행 면제 기준인 20억원을 초과함.

---

8)

[ISP 및 ISMP 개요]

구분	ISP (Information Strategy Plan, 정보화전략계획)	ISMP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역할(목적)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목표모델 설계)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기능적·기술적·비기능적·프로젝트 지원 요건 도출)
적합 사업	신규 사업	재구축 사업
최종 산출물 포함 사항	환경 및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한 목표시스템 구축 방안, 이행과제별 추진일정, 이행과제별·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등	정보시스템 추진 범위 수립, 업무 및 정보기술 분석, 정보시스템 구조 및 요건 정의, 구축 이행방안 및 연차별·항목별 상세 투자 소요 등

자료: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제9판)」을 참고하여 재작성

9) 예외적으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단순 기능개발, 단순물품구매, 총 구축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별도의 ISP·ISMP 수립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은 ISP·ISMP 수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10)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정부부처 합동, 2025. 8. 22.)

또한 이 사업은 해양수산부, 기상청, 수협 등 다수 기관이 보유한 선박, 조업허가, 기상, 해양환경 정보를 통합하여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예측모델 및 탐지모델을 개발한 후 현장에서 사용하는 통합형 시스템 구축사업임.

따라서 ISP 수립을 통한 목표모델의 설계, 기술개발 방향의 설정, 통합된 프레임워크 제시가 필요하나, ISP 수립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실제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기능·구조의 반복 수정,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저하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목표모델의 설계, 기술개발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합 프레임워크를 정립하는 등 사전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해양경찰청은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구축 사업을 통해 여러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 AI 모델 개발, 단말기 적용 등 복합적이고 순차적인 과업을 10개월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나, 사업 범위에 비해 추진기간이 짧아 AI 학습 데이터 확보 및 개발, 현장 적용 검증 시간 등이 부족할 우려가 있으므로 연내 수행 가능한 범위로 사업 규모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양경찰청은 2025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6년 1월에 조달청에 사업 공고를 하고 2월까지 업체 선정을 한 후, 3월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돌입하여 2026년 연내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AI 기반 불법조업 탐지 차단 플랫폼 구축 일정]

과제명	202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통합 데이터 허브 구축												
AI불법조업 예측모델 개발												
AI경비함정 순찰·경로서비스 모델 개발												
불법어선/어망 탐지모델 개발												
사용자 대응시스템 개발												

자료: 해양경찰청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각 과제의 연계성, 기술적 복잡성을 고려할 때 사업 기간이 다소 짧은 것으로 보여짐.

이 사업은 데이터 허브 구축, AI 모델 개발, 사용자 시스템 연계라는 3단계의 구조를 가지며, 각 단계의 선행 결과물이 다음 단계의 투입요소로 작용하게 됨. 특히 여러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연계가 지연될 경우 AI 학습과 검증, 사용자 시스템 개발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현재의 구축 일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여유 기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또한 불법조업 탐지, 순찰경로 예측, 어망·어구 탐지 모델은 모두 대량의 학습데이터와 레이블링 작업[11]이 요구되는데, 데이터 확보와 정제, 모델 학습 및 성능 검증 단계를 9개월 내에 완료하기에는 현실적 제약이 큰 것으로 보여짐.

한편 일선 현장에서 AI모델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상황실·함정 단말기·PC 간 실시간 연계가 구현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 보안, 통신 지연 보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 복합적인 절차가 필요하나, 현재의 사업일정으로는 시범운용 및 오류 수정 기간이 충분히 확보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이로 인해 실제 운영단계에서 시스템 불안정성, 탐지 정확도 저하 등의 문제도 발생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일정은 사업 범위에 비해 압축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데이터 연계 지연으로 인한 후속 프로그램 개발 지연, AI 모델 검증 부족, 사용자 시스템 불안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2026년 내 전면 구축보다는 충분한 사업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사업을 분리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2]

11) 레이블링은 인공지능(AI)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데이터에 의미 있는 태그나 분류 정보를 붙이는 과정을 말하며, AI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의미를 미리 알려주는 작업임.

[레이블링 예시]

활용 분야	입력 데이터	부여하는 레이블
불법조업 탐지	위성·항공 영상	불법조업선/정상선 구분
순찰경로 예측	과거 단속 위치·시간, 조업 패턴	효율적 경로/비효율적 경로
어망·어구 탐지	해양카메라 영상	어망 위치, 어구 종류, 위험구역 표시

12) 이에 대해 해양경찰청은 학습데이터의 경우 AI모델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고, AI모델에 기반한 서비스는 함정 내 워크스테이션 등 엣지 환경을 구축하여 현장에서 직접 활용이 가능하므로 네트워크 보안, 통신 지연 보정, 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화 등의 기술적 제약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설명임. 또한 철저한 사업관리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연내 주요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하였음.

4. 시뮬레이터 도입 사업(신규): 도입 및 활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시뮬레이터 도입’** 사업은 실제 수색·구조 상황과 해상·함정·도서지역 등 특수한 환경을 시현할 수 있는 항공기 시뮬레이터를 제작·도입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2억 1,9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3)]

[2026년도 시뮬레이터 도입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항공기정비유지	34,529	34,529	37,667	3,138	9.1
시뮬레이터 도입	-	-	-	2,219	순증

[시뮬레이터 도입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시뮬레이터 도입: 22억 1,900만원
- 시뮬레이터 장비 제작 및 훈련센터 건축비 221억 9,000만원 × 10%(설계비)

자료: 해양경찰청

시뮬레이터는 실제 항공기의 조종석을 그대로 재현하여 항공기의 조작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훈련 장비를 말하며, 이 사업은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헬기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여 실제 비행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비상상황 대처 능력 및 임무수행 능력을 강화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

해양경찰청은 산림청 산림항공훈련센터의 KA-32T 모의비행장치(FFS급) 구축 사례[14)]를 참조하여 시뮬레이터 장비 제작 및 훈련센터 건축비용을 221억 9,000만원으로 산정하였고, 사업기간은 4년으로 계획하고 있음.

2026년 예산안에는 총 사업비 221억 9,000만원 중 10%인 설계비 22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시뮬레이터는 전남 무안 항공특화산업단지 내 해양경찰 통합항공기지

13) 일반회계-항공기정비유지(3103-301)(경비국)

14) 산림청 산림항공훈련센터 KA-32T 모의비행장치(FFS급)는 2023년 5월 구축되었으며 총 사업비는 199억 9,800만원, 사업기간은 2020. 11. ~ 2023. 5.이었음.

에 구축될 예정임.

[S-92 시뮬레이터 사양(안)]

구분	내용
모델 항공기	S-92
도입 장치명	S-92 모의비행장치(FFS/Full Flight Simulator)
등급	D등급(최고등급)
주요 기기	전기식 6축 운동시스템, 조종사 좌석 진동, 5채널 projector
설치 장소	해양경찰 통합항공기지
내·외부 모습 (예시)	 

주) 헬리콥터 모의비행장치는「모의비행훈련장치 지정기준 및 검사요령」(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B ~ D등급으로 구분되는데, D등급은 헬리콥터의 비행 특성을 매우 정밀하게 재현하며, 6축(Roll, Pitch, Yaw, Heave, Surge, Sway)의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고성능 장치임.

자료: 해양경찰청

나. 검토의견

해양경찰청은 대형헬기 시뮬레이터 도입 및 활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용 및 훈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필요가 있음.

시뮬레이터는 하나의 장비로 다양한 기종의 헬기 훈련이 가능한 범용이 아니라, 헬기 기종별로 제작해야 하는 장비임.

이는 기종마다 무게, 크기, 회전날개의 모양과 개수, 동력 전달 방식, 조종 방식 등이 다르고 비행 특성이 상이하여, 실제 비행과 동일한 조종 경험을 제공하려면 각 기종의 성능과 조종 매커니즘을 반영한 시뮬레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임.

이 사업을 통해 도입하려는 시뮬레이터는 해양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형헬기 S-92 기종에 대한 시뮬레이터임.

[대형헬기 S-92 사양]

구분	사양
순항속도	142노트(263km/h)
최대속도	165노트(305km/h)
최대탑승인원	21명
최대항속거리	571마일(1,072km)
최대체공시간	5.8시간
주요 장비	광학/적외선 탐지장비, 구조용 호이스트, 구명벌, 응급의료장비 등
제작사	시콜스키(미국)
보유 대수	3대
도입비용	평균 630억원



자료: 해양경찰청

대형헬기는 해상에서 조난 사고나 범죄 발생 시 함정보다 빠르게 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며, 넓은 지역을 수색하고 채증하는 데에 효과적임.

다만, 해상에서의 헬기 조종은 바람·파도 등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해상에서는 위치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형지물, 불빛 등이 없어 공간정위상실(이하 "비행착각")[15]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

실제로 2010년 이후 발생한 해양경찰청 소속 헬기 추락사고 3건 중 2건이 야간 해상에서 조종사의 비행착각에 의해 발생하였음.

[2010년 이후 발생한 해양경찰청 헬기 추락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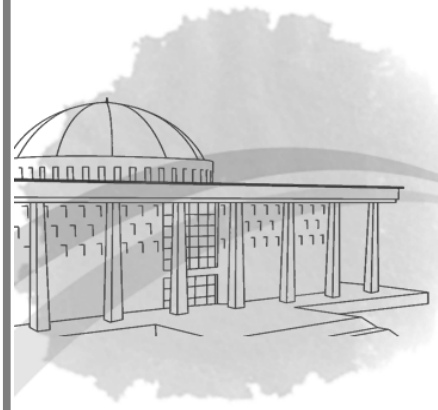
연번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상황
1	2011. 2. 23. 20시경 제주 서방 100km 해상에서 복통을 호소하는 1502함 소속 경찰관을 응급 후송하기 위해 함상 이륙 중 추락	야간 해상 참조점 부족에 따른 비행착각	물적 : 전손 인적 : 5명 사망
2	2015. 3. 13. 20시경 가거도 충수염 응급환자 후송을 위하여 가거도항 헬리포드에 착륙 중 추락	기상(해무)불량 및 야간 조명시설 미설치에 따른 비행착각	물적 : 전손 인적 : 3명 사망
3	2022. 4. 8. 01시경 마라도 서방 270km 해상에서 대만 해역에 좌초된 교토1호 대응중인 3012함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구조대원 6명 및 장비 이송 후 이륙 직후 추락	사고조사 진행 중	물적 : 전손 인적 : 3명 사망, 1명 중상

자료: 해양경찰청

15) 조종사가 시각 제한 등에 의한 신체적인 착각으로 항공기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 야간 등 시각 참조가 부족한 곳에서 주로 발생

시뮬레이터 도입 사업은 비행착각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 대해 통제된 공간에서 안전하게 훈련하여 조종사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인 만큼, 해양경찰청은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뮬레이터 도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뮬레이터 운용 및 조종사 훈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해양경찰청의 구조·구난 대응을 위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1)]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총수입은 7조 36억원으로, 전년 대비 661억원(1.0%) 증가함.

예산은 2조 6,4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71억원(△1.8%) 감소한 반면, 기금은 4조 3,622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2억원(2.7%) 증가함.[2)]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6,885	26,885	26,414	△471	△1.8
기 금	42,490	42,490	43,622	1,132	2.7
총수입	69,375.0	69,375.0	70,036	661	1.0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는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관사업 현황은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참조

2)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총지출은 13조 8,778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443억원(21.4%) 증가함.

예산은 10조 9,98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9,146억원(21.1%) 증가하고, 기금은 2조 8,791억원으로 전년 대비 5,297억원(22.5%) 증가함.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90,841	100,992	109,987	19,146	21.1
기 금	23,494	27,614	28,791	5,297	22.5
총지출	114,336	128,605	138,778	24,443	21.4

나. 예산안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은 총 4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조 7,4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510억원(1.8%) 증가함.

[2026년도 산업통상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1,888	1,888	2,352	464	24.6
에특회계	60,702	59,103	60,148	△554	△0.9
소특회계	22,843	22,843	24,310	1,467	6.4
지특회계	530	530	663	133	25.1
합 계	85,963	84,364	87,473	1,510	1.8

주 1) 에특회계 일부 사업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음
2) 총계 기준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5개 회계(일반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13조 6,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977억원(18.0%) 증가함.

[2026년도 산업통상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60,842	67,828	79,294	18,451	30.0
에특회계	24,836	27,039	23,859	△977	△4.0
소특회계	18,228	18,228	19,509	1,281	7.0
지특회계	11,879	12,887	14,103	2,224	19.0
고특회계	57	57	55	△2	△3.0
합 계	115,843	126,039	136,820	20,977	18.0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4개 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2조 26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7,296억원(8.5%) 증가함.

[2026년도 산업통상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전력기금	38,752	38,793	45,137	6,385	16.5
산촉기금	2,352	2,352	1,971	△382	△16.2
방폐기금	104,062	104,062	110,131	6,069	5.9
무보기금	57,807	60,807	63,030	5,223	9.0
합 계	202,973	206,014	220,269	17,296	8.5

주 1) 전력기금과 방폐기금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10월 1일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음
2)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산업통상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89개(1조 127억 1,8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3)]

그 중 ‘K-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기술개발(R&D)’ 사업은 주력산업인 자동차, 가전, 로봇, 드론 등 제품 자체에 AI구현에 필요한 핵심부품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850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국내 중소 조선사의 美 함정 MRO 시장 진출에 필요한 자격 및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9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산업통상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일반회계]		
1	첨단소재특화형AX플랫폼구축및실증	2,200
2	디지털제품여권대응한국형산업공급망데이터플랫폼구축사업(정보화)	705
3	탄소저감형건설기계재제조품질인증기반구축을통한신시장개척사업	500
4	자동차부품순환경제혁신인프라구축	200
5	해외인재유치사업	3,448
6	산업현장문제해결형산업AI에이전트기술개발(R&D)	6,000
7	한국형Manufacturing-X플랫폼표준모델개발및실증(R&D)	5,250
8	산업인공지능(AI)전환및확산기반조성	1,329
9	미래모빌리티용부품내충격성향상을위한저비용공정적용고분자공중합체 제조기술개발(R&D)	5,500
10	뿌리산업혁신공정장비개발(R&D)	6,200
11	첨단소재공정고도화 및기술역량확보기술개발사업	2,000
12	관세피해업종이차보전지원사업	2,858
13	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	157,500
14	모빌리티부품제조AI확산센터구축	2,000
15	특장산업 생태계 다각화를 위한 건설기계 상용화 지원	1,570
16	미래자동차구동계소음진동평가기반구축	330
17	전기상용차용멀티배터리시스템다중부하평가기반	2,160
18	글로벌규제대응자동차사이버보안인증평가지원	1,000
19	중소조선및기자재미국진출지원	7,663
20	친환경선박용극저온단열시스템생산제조기반구축	2,194

3)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21	수소엔진및기자재육상실증플랫폼구축	2,200
22	한-미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	6,644
23	중소조선설계엔지니어링기술지원	3,000
24	중소조선 함정 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4,985
25	AI 선박기자재 및 첨단부품실증지원센터구축	3,200
26	조선산업핵심인재디지털양성인프라구축	3,000
27	전북특별자치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100
28	민군융합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2,900
29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사다리조성사업	8,758
30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기반시설구축지원사업	20,099
31	이차전지원자재분자단위분석기반구축	3,615
32	미래이차전지원료소재실증플랫폼기반구축	2,280
33	가전산업AX전환을위한AI핵심모듈및혁신제품화기술개발	4,000
34	첨단반도체후공정소부장테스트베드구축	2,500
35	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센터구축	6,000
36	첨단나노소재산업안전성평가기술개발사업(R&D)	3,000
37	나노소재기반핵심전략산업열관리기술개발사업(R&D)	5,000
38	수요맞춤형산업별배터리소재및셀기술개발(R&D)	3,500
39	하이망간리튬이온이차전지핵심소재및셀제조기술개발(R&D)	5,000
40	K-온디바이스AI반도체기술개발(R&D)	185,060
41	K-치안수요기반피지컬AI조명핵심기술개발및실증(R&D)	5,000
42	반도체첨단산업기술개발(R&D)	47,283
43	배터리・디스플레이첨단제조공정용 레이저장비산업핵심기술개발(R&D)	5,640
44	첨단신산업창출형고성능피치계탄소소재개발사업(R&D)	3,075
45	동물세포기반 백신 공공 CDMO 전략적 육성 및 바이오텍 생산 지원	2,436
46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R&D)	19,980
47	세포및유전자치료제제조공정고도화기술개발(R&D)	6,400
48	산업용유무기혼합물물성예측AI파운데이션모델개발	15,000
49	열공정특화제조AI파운데이션모델개발(R&D)	12,000
50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R&D)	17,835
51	저탄소・기후변화대응을위한지속성장(R&D)	4,500
52	지역산업종합정보 시스템구축(정보화)	1,439
53	제품안전관리기술개발및실증	5,370
54	전력망물리기반AI모델개발및실증(R&D)	4,000
55	에너지기술사업화스피드업(Speed-Up)사업(R&D)	2,000
56	에너지차세대리더육성사업(R&D)	5,625
57	전기차충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화)	176
58	SMR혁신제조국산화 기술개발(R&D)	8,130
59	유통기업해외진출지원	50,000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계획안)
[에특회계]		
60	수소연료전지고도화지원센터플랫폼구축	599
61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918
62	수용가전기설비 원격점검및디지털 안전기술개발(R&D)	4,000
63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 고안전성확보및AI기반 안전관리기술개발	4,000
64	자원안보를위한고부가가치한국형텅스텐전주기기술개발및실증	4,000
65	배터리공정스크랩재자원화·재제조기술개발	3,600
66	핵심광물재자원화산업육성지원	3,777
[지특회계]		
67	지역거점AX혁신기술개발(R&D)	6,800
68	AX실증밸리조성(R&D)	7,033
69	지역전략산업기반고도화(R&D)	11,000
70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자율)	3,602
71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제주)	330
72	지방주도형투자·일자리지원(세종)	240
73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	18
74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자율)	6,250
75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제주)	500
76	마을단위LPG소형저장탱크보급(세종)	250
77	읍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구축(자율)	51,522
78	읍면단위(중규모)LPG배관망구축(제주)	9,289
[전력기금]		
79	가파도RE100마을(Net-Zeroisland) 조성	22,000
80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조성	24,500
81	AI 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119,616
82	재생e 인버터 성능개선 사업	3,000
83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8,247
84	해상풍력용부품시험센터구축	2,000
85	사고저항성핵연료(ATF)인허가대응기술개발사업(R&D)	1,000
86	차세대핵연료시범연료봉기술개발사업(R&D)	3,702
87	소형모듈원전(SMR)제조부품시험검사지원센터건립	100
88	원전생태계고도화사업	7,988
89	방사선환경실증기반구축사업	1,500
총지출		1,012,718

주) 음영 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됨
자료: 산업통상부

한편, 산업통상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사업,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사업 등 총 128개임.[4)]

[2026년도 산업통상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산업통상자원행정정보 시스템구축	2,983	4,727	1,744	58.5
2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	166,145	201,395	35,250	21.2
3	제조안전고도화기술개발(R&D)	2,550	6,500	3,950	154.9
4	한미첨단분야청년교류지원	10,023	11,625	1,602	15.9
5	제조데이터표준·인공지능활용제품 전주기탄소중립지원기술개발(R&D)	3,500	7,212	3,712	106.1
6	산업AI용데이터전처리자동화기술개 발(R&D)	3,200	6,325	3,125	97.7
7	철강·금속디지털전환 (DX)실증센터구축	2,240	3,360	1,120	50
8	No-Code제조기술혁신생태계구축	2,250	3,000	750	33.3
9	국가필수전략기술고도화를위한고부 가정밀화학소재개발(R&D)	4,045	6,696	2,651	65.54
10	핵심전략산업대응탄성소재재도약(R &D)	4,000	6,386	2,386	59.7
11	우주항공·방산용실란트소재초격차 기술개발·실증사업(R&D)	2,500	4,826	2,326	93.0
12	글로벌재활용규제대응플라스틱밸류 업을위한혁신기술개발(R&D)	1,200	8,910	7,710	642.5
13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	4,547	135,036	130,489	2869.8
14	신산업대응차세대공통·핵심뿌리기 술개발(R&D)	7,714	15,400	7,686	99.6
15	뿌리산업 고도화를 위한 BIZ 플랫폼 구축	2,000	3,103	1,103	55.15
16	로봇산업기술개발(R&D)	148,612	173,529	24,917	16.8
17	국가로봇테스트필드	38,131	57,655	19,524	51.2
18	농업기계 디지털전환향개방형A-SW오픈소스 및협력개발플랫폼구축(R&D)	300	2,500	2,200	733.3
19	생산기반의애그테크융·복합실증플 랫폼구축	1,300	3,230	1,930	148.5
20	SDV용AI가속기반도체기술개발(R&D)	4,250	6,188	1,938	45.6

4)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21	수소모빌리티확대를위한개방형연료전지시스템설계검증플랫폼기술개발(R&D)	2,068	3,330	1,262	61.0
22	수요기반협력사밸류체인고도화및자립화패키지지원	1,826	5,816	3,990	218.5
23	EV핵심부품안전성고도화시스템기반구축	2,000	3,075	1,075	53.8
24	모빌리티실제환경모사전자파장애평가시스템구축	2,600	3,800	1,200	46.2
25	서비스 맞춤 모빌리티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	2,100	2,900	800	38.1
26	자동차보안취약점기반위협분석시스템개발(R&D)	5,350	6,000	650	12.1
27	수요맞춤형전기구동경형특장차개발지원기반구축(3551-464)	1,600	2,040	440	27.5
28	SDV 아키텍처를 위한 In-Vehicle 초고속 통신 반도체 기술개발(R&D)	4,580	8,200	3,620	79.0
29	전기차 배터리시스템 일체형 급속무선충전 기술개발(R&D)	4,000	7,000	3,000	75.0
30	실도로인프라연계자율주행오픈이노베이션생태계 구축	1,660	3,003	1,343	80.9
31	전기이륜차배터리공유스테이션기술개발및실증(R&D)	2,000	5,905	3,905	195.3
32	친환경경량소재적용미래차부품산업전환생태계기반구축	3,200	4,080	880	27.5
33	친환경차전환촉진을위한이차보전	5,494	11,079	5,585	101.7
34	조선해양 미래혁신 인재양성센터	9,240	11,196	1,956	21.2
35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R&D)	119,165	178,562	59,397	49.8
36	안전기반소형수소추진선박기술개발및실증(R&D)	3,083	3,669	586	19
37	첨단산업용시스템엔지니어링설계모델링기술개발(R&D)	1,600	3,200	1,600	100
38	첨단민군융합기술개발(R&D)	4,800	10,278	5,478	114.3
39	차세대전차용하이브리드파워트레인개발사업	3,000	7,800	4,800	160
40	반도체아카데미 구축	4,710	8,620	3,910	83.0
41	빅데이터기반상용배터리 공정고도화 플랫폼구축	2,400	3,570	1,170	48.8
42	팹리스기업 첨단장비 공동이용지원	7,210	13,390	6,180	85.7
43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연대협력지원사업(R&D)	6,300	9,792	3,492	55.4
44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 구축	2,400	5,610	3,210	133.8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45	이차전지실시간고도분석센터	3,200	3,579	379	11.8
46	시스템반도체 검증지원센터구축	2,400	2,855	455	19
47	지능형 반도체 개발· 실증 지원	2,712	3,458	746	27.5
48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R&D)	100	115,737	115,636	1,156.4
49	섬유패션산업활성화기반마련	18,490	22,008	3,518	19
50	나노융합현장수요기반실증지원사업(R&D)	1,200	2,200	1,000	83.3
51	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레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R&D)	4,920	6,022	1,102	22.4
52	이차전지첨단전략산업글로벌협력지원(R&D)	2,000	2,500	500	25
53	폴리에스터 혼방섬유의 F2F (FiberToFiber)리사이클핵심기술개발(R&D)	4,000	6,196	2,196	54.9
54	인체밀착형 웨어러블기기용전고체리튬고분자배터리개발(R&D)	5,000	6,500	1,500	30
55	산업현장맞춤형온디바이스AI반도체 기술개발(R&D)	4,320	8,400	4,080	94.4
56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사업(R&D)	21,170	24,910	3,740	17.7
57	반도체첨단패키징선도기술개발사업(R&D)	17,800	39,188	21,388	120.2
58	의료데이터 합성기술및의료인공지능기술기반디지털의료제품개발사업(R&D)	2,800	3,750	950	33.9
59	AI기반표적맞춤형의약품제조자율랩 기술개발사업(R&D)	-	8,800	8,800	순증
60	국가신약개발사업(R&D)	41,161	51,586	10,425	25.3
61	세포기반인공혈액(적혈구및혈소판) 제조및실증플랫폼기술개발사업(다부처특위)(R&D)	3,200	4,600	1,400	43.7
62	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지능형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R&D)	4,800	7,260	2,460	51.3
63	혁신형융복합바이오의료 제품기술개발및실증(R&D)	4,440	5,100	660	14.9
64	바이오파운드리 핵심기기 및 장비 고도화 기술개발사업(R&D)	4,185	5,580	1,395	33.3
65	첨단바이오의약품비임상유효성평가 기술및제품개발사업(R&D)	2,088	2,820	732	35.1
66	나노융합산업생태계조성촉진	1,618	4,310	2,692	166.4
67	규제특례신산업창출(R&D)	2,000	4,800	2,800	140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68	R&D관리기관지원(R&D)	25,557	34,022	8,465	33.1
69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1,645	3,666	2,021	123
70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사업(R&D)	48,120	56,805	8,685	18
71	미래판기술프로젝트	5,000	7,600	2,600	52
72	CVC투자연계대중견중소기업협력(R&D)	1,875	5,125	3,250	173.3
73	기업수요기반차세대연구자도전혁신산업기술개발(R&D)	4,000	6,850	2,850	71.2
74	중견기업-공공연기술혁신챌린지(R&D)	2,000	3,250	1,250	62.5
75	중견중소기업상생형혁신도약사업(R&D)	15,587	25,166	9,579	61.5
76	IPEF청정경제촉진펀드조성(ODA)	2,100	4,418	2,318	110.38
77	수출지원기반활용	91,364	181,074	89,710	98.2
78	세계엑스포참가지원	10,390	14,048	3,658	35.2
79	킨텍스 3단계 건립	11,600	36,000	24,400	210
80	국가인증제도혁신기반구축	758	969	211	27.8
81	국가전략기준물질개발(R&D)	3,300	6,800	3,500	106.1
82	국제표준기반시험장비기술개발 및 고도화지원(R&D)	3,600	5,170	1,570	43.6
83	한국제품안전관리원지원	5,657	7,646	1,989	35.2
[소특회계]					
84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158,244	219,989	61,745	39.0
85	공간컴퓨팅구현을위한첨단XR디바이스부품통합형기술개발	2,700	7,000	4,300	159
86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및생태계 구축사업(R&D)	18,000	50,000	32,000	177.8
87	초고해상도 AMOLED 기반 초실감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5,175	6,210	1,035	20
88	차세대모빌리티용극한환경적용OLED 기술개발	3,000	4,000	1,000	33.3
89	XR디바이스를위한AMOLED마이크로디스플레이핵심기술개발	5,400	6,730	1,330	24.6
[지특회계]					
90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17,752	29,160	11,408	64
91	제조특화 초거대 제조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	5,920	7,680	1,760	29.7
92	지역균형발전지원	16,528	20,663	4,135	25.0
93	메가시티협력첨단산업육성지원(R&D)	3,980	11,276	7,296	183.3
94	지역투자촉진	221,831	251,347	29,516	13.3
95	지역투자촉진(세종)	4,281	5,026	745	17.4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96	지역산업위기대응	-	17,922	17,922	순증
[에특회계]					
97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	2,857	3,381	524	18.3
98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저감종합실증센터	5,912	7,612	1,700	28.8
99	에너지기술R&D관리기관지원(R&D)	1,542	5,275	3,733	242.1
100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44,018	52,113	8,095	18.4
101	CCUS(이산화탄소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진흥센터 구축	300	8,800	8,500	2,833.3
102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8,900	37,200	28,300	318.0
103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6,600	20,900	14,300	216.7
104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9,185	26,458	17,273	188
105	액화수소(LH2)인수기지핵심설비및 시설안전기술개발(R&D)	3,000	7,100	4,100	136.7
106	유전개발사업출자	837	10,922	10,085	1204.9
107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39,000	71,017	32,017	82.1
108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기반구축	1,645	5,698	4,053	246
109	공급망안정화를위한국내타이타늄최적화기술개발	2,767	4,943	2,176	78.6
[전력기금]					
110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R&D)	-	12,000	12,000	순증
111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해석기술개발(R&D)	4,500	7,409	2,909	64.6
112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1,160	3,130	1,970	169.8
113	에너지신소재 산업화 플랫폼 구축	4,183	5,559	1,376	32.9
114	차세대그리드센터 구축	5,790	9,310	3,520	60.8
115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156,373	202,085	45,712	29.2
116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326,300	648,000	321,700	98.6
117	차세대재생에너지표준화및인증고도화혁신지원(R&D)	2,000	5,615	3,615	180.8
118	무탄소에너지보증	42,000	50,000	8,000	19.0
119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R&D)	4,164	9,446	5,282	126.8
120	LiB기반 위험성평가및안전성강화기술개발(R&D)	5,000	16,040	11,010	220.8
121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2,500	7,500	5,000	200
122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3,500	7,100	3,600	102.9
123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5,408	10,155	4,747	87.8
124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사업	35,160	83,920	48,760	138.7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산촉기금]					
125	기술성과활용촉진	7,435	16,185	8,750	117.7
[방폐기금]					
126	처분시설운영	35,695	40,519	4,824	13.5
127	중저준위방폐물 복합처분시설안전관리강화기술개발 (R&D)	5,100	8,944	3,844	75.4
128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1,502	2,500	998	66.4

주) 음영 표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됨
자료: 산업통상부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산업통상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로 2조 3,04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9,091억원, 산업기술진흥사업화촉진기금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로 109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1억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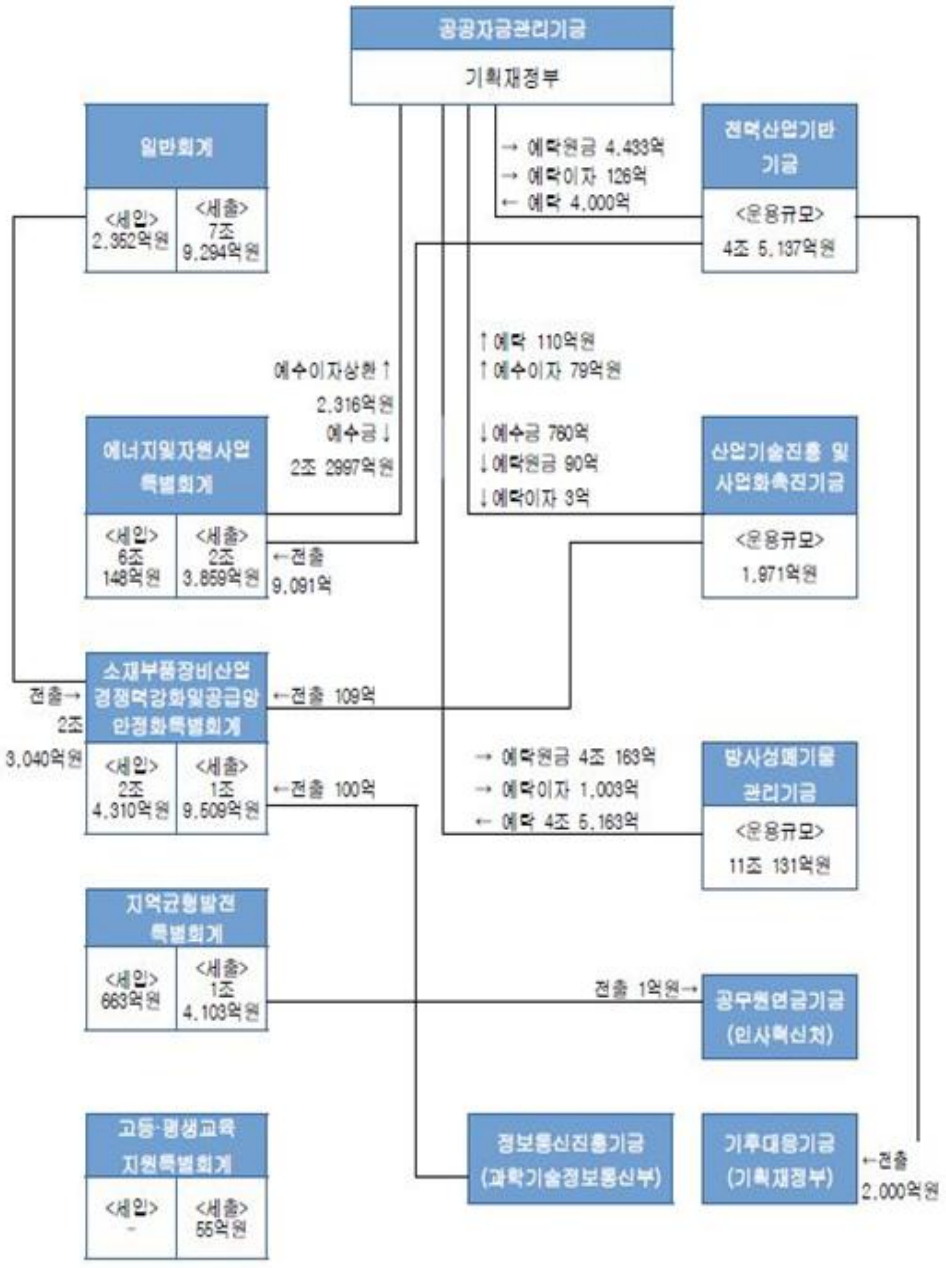
또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수이자 2,316억원이 상환될 계획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수금 2조 2,997억원이 회수될 예정임.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000억원이 예탁, 예탁원금 4,433억원, 예탁이자 126억원이 회수, 기후대응기금으로 2,000억원이 전출될 예정임.

또한,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금 110억원, 예수이자 79억원, 예수원금 300억원이 상환될 계획이고,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100억원이 전출될 예정임.

그리고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4조 5,163억원 예탁,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4조 163억원의 예탁원금, 1,003억원의 예탁이자가 회수될 예정임.

[산업통상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 총계 기준, 무역보험기금 별도(총계 6조 3,03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6,005억원)

주)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 3특 균형성장 등 새정부 핵심 과제와 관련된 6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산업통상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R&D 사업의 53개 연구시설장비 총 1,779억 5,900만원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둘째,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대미 고관세 부과 등 특정 통상위험 대응을 목적으로 신설된 사업임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미국 관세조치 대상 산업이나 수입규제 위험 품목, 통상분쟁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으로 한정하는 등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차별화된 요건 설계가 필요함.

셋째,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은 분기별 성과평가와 5년간 사후관리가 계획되어 있으나, 매출·고용 중심의 지표는 단기 성과에 치중해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 자산 축적 등 장기 경쟁력 확보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AI 기술 내재화 및 활용도, 데이터 자산, 신뢰성 등 질적 지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사후관리가 필요함.

넷째,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은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으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2025년 10월 1일「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같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상업 · 무역 · 공업 ·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 · 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 · 이용 · 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함.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으로 2026년도 산업통상부의 총수입은 2조 2,215억원으로 7조 36억원에서 4조 7,821억원이 감소하였고, 총지출은 9조 7,869억원으로 13조 8,778억원에서 4조 909억원이 감소하였음.

2026년 세출예산안으로 산업통상부는 회계(일반회계, 에특회계, 지특회계) 내 57개 세부사업 총 1조 3319억원과 전력기금 및 방폐기금 2조 7591억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였고, 이를 합한 2026년 이관된 예산액은 4조 909억원임.[5)]

‘본부인건비’, ‘본부기본경비(총액)’,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총액)’, ‘본부기본경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 ’,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사업은 인원 이체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와 여비 등 경상경비를 이관하였고, ‘행정능률향상 및 능력개발’ 사업은 청년인턴 관련 예산과 변화관리 등 일부 예산을 이관하였음.

또한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정보화)’ 사업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회선비 일부 이관하였고, ‘에너지자원정책연구’ 사업은 7개 과제 중 6개 과제를 이관 하였음.

[산업통상부 2026년도 이관 사업 현황(세출)]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전기차충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전기차충전시설통합관리시스템구축(정보화)	176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전력망물리기반AI모델개발및실증(R&D)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전력망물리기반AI모델개발및실증(R&D)	4,000

5) 총지출 기준

6) ODA 과제 분야를 기준으로 산업 관련은 산업통상부, 에너지 관련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구분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에너지기술사업화 스피드업(Speed-Up)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에너지기술사업화 스피드업(Speed-Up)사업(R&D)	2,000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SMR혁신제조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SMR혁신제조국산화 기술개발사업(R&D)	8,130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총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총액)	118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전기위원회기본경비(총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전기위원회기본경비(총액)	17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에너지정책실기본경비	1,311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전기위원회기본경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전기위원회기본경비	212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에너지차세대리더 육성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에너지차세대리더 육성사업(R&D)	5,625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건립	4,458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국가에너지위원회운영	160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에너지정보통계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정보통계센터	446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에너지센서스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센서스	1,490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협력	500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회계관리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회계관리비	39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분산에너지활성화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분산에너지활성화지원	37,200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공단 지원	82,842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시설안전관리강화	918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9,785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폐갱도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육상저장 시범사업	1,788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 저감종합실증센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시멘트산업이산화탄소 저감종합실증센터	7,612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6,458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4,853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저탄소 암모니아 유통구조 구축 시범 연구사업	1,935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도입기반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 생산 및도입기반구축	1,485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구축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저장·운송 클러스터구축사업	5,074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터빈시험연구센터구축	20,900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CCUS(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 진흥센터 구축	8,800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수소연료전지 고도화지원센터 플랫폼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소연료전지 고도화지원센터 플랫폼 구축	599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수요관리 핵심기술개발(R&D)	194,829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액화수소(LH2)수기지핵심설비 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액화수소(LH2)수기지핵심설비 및시설안전기술개발(R&D)	7,100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 고안전성확보및AI기반 안전관리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장거리고압수소배관망 고안전성확보및AI기반 안전관리기술개발(R&D)	4,000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수용가전기설비원격 점검및디지털안전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수용가전기설비원격 점검및디지털안전기술개발(R&D)	4,000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공동연구(R&D)	52,113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기술정책수립(에특R&D)	630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에너지기술R&D 관리기관지원(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기술R&D 관리기관지원(R&D)	5,275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R&D)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R&D)	10,473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	276,510
산업통상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급(융자계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급(융자계정)	6,864
산업통상부	지특회계	수소생산기지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수소생산기지 구축	5,990
산업통상부	지특회계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수소생산기지 구축 지원	180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주)	920
산업통상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지역에너지절약 시설보조(세종)	18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기금전담기관인건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금전담기관인건비	4,917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기금관리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금관리비	1,816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사업운영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사업운영비	1,06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5,06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127,674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R&D)(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R&D)(산업부)	83,92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전기설비안전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기설비안전점검	109,454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특별지원사업(발전소주변지역)	52,9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농어촌전기공급사업	114,952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K-그리드 인재·창업 밸리	24,5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노후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3,286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3,13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8,57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ESS통합관리시스템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ESS통합관리시스템구축	1,204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 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극한환경대응차세대BESS 고신뢰성검증및안전기술개발(R&D)	7,5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 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AI기반분산·예비전력안전관리 통합플랫폼개발및실증(R&D)	9,446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LiB기반위험성평가 및 안정성강화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LiB기반위험성평가 및 안정성강화기술개발(R&D)	16,04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전력효율향상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효율향상	120,334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노후 변압기 교체지원	1,7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202,085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648,0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9,0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차세대재생에너지 표준화및인증고도화혁신지원(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차세대재생에너지 표준화및인증고도화혁신지원(R&D)	5,615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재생에너지인버터성능개선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재생에너지인버터성능개선사업	3,0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무탄소에너지 보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무탄소에너지 보증	50,0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산업해외진출지원	8,247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해상풍력용 부품 시험센터 구축	2,0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가파도RE100마을(Net-Zeroisland)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가파도RE100마을(Net-Zeroisland)조성	22,0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에너지산업 AI화 플랫폼 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에너지산업 AI화 플랫폼 구축	5,559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육성	119,616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20,0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차세대그리드센터구축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차세대그리드센터구축	9,31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지원사업	1,7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수소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구축사업	13,085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국내무연탄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국내무연탄사용 발전소 한시적 지원	16,425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기타지원(발전소주변지역)	4,135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R&D)	335,756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가스터빈 부품 제조기업 기술역량 강화 및 품질/신뢰성 지원 인프라 구축 기술개발사업(R&D)	1,225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핵심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 기술개발(R&D)	3,168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가동원전 안전성 향상 핵심기술개발(R&D)	31,89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원전 해체 경쟁력 강화기술개발사업(R&D)	49,227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	26,665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및부품장비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현장수요대응원전첨단제조기술및부품장비기술개발(R&D)	7,153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R&D)	4,5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 해석 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계통 대전환을 위한 직류송배전 감시 해석 기술개발(R&D)	7,409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원전탄력운전기술개발(R&D)	7,1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500kV급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기술개발사업(R&D)	12,0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인허가대응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사고저항성 핵연료(ATF) 인허가대응기술개발사업(R&D)	1,0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차세대 핵연료 시범 연료봉 기술개발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차세대 핵연료 시범 연료봉 기술개발사업(R&D)	3,702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지능형 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지능형 전력망 표준기술 고도화사업(R&D)	76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금)(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전력기금)(R&D)	2,033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전력)(R&D)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전력)(R&D)	15,938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에너지산업협력개발지원(ODA)	21,526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전력산업홍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산업홍보	5,378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전력산업정책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산업정책개발	347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32,18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SMR제작지원센터구축사업	10,155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150,0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원전생태계고도화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원전생태계고도화사업	7,988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방사선환경 실증기반 구축 사업	1,500
산업통상부	전력기금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기금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100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방폐기금운영인건비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방폐기금운영인건비	986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방폐기금운영관리비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방폐기금운영관리비	435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처분시설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처분시설운영	40,519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처분시설방사선안전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처분시설방사선안전관리	9,872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17,572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관리기반조성	3,498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방사성폐기물홍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방사성폐기물홍보	2,762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R&D)	23,115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R&D)	700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중저준위방폐물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강화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중저준위방폐물복합처분시설 안전관리강화기술개발(R&D)	8,944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 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고준위방폐물처분을위한부지 환경장기변화예측기술개발(R&D)	5,500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사용후 핵연료 관리시설 확보	2,500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인건비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인건비	40,783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산업통상부	방폐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본경비	기후에너지환경부	방폐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기본경비	26,626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본부인건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본부인건비	17,622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본부기본경비(총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본부기본경비(총액)	332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총액)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총액)	18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본부기본경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본부기본경비	1,205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원전산업정책국기본경비	452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행정능률향상및능력개발	223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산업통상자원정책지원	258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산업기술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R&D)(에너지기술분야)	517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정보화)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반회계	사이버안전센터구축운영(정보화)	267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IEF, CCOP분담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국제기구분담금(IEA, IRENA 분담금)	3,125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6]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기후변화협약대응 한-개도국협력(ODA)	824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에너지바우처(연탄쿠폰)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바우처(에너지바우처)(에너지복지 사각지대해소)(사업운영비)	494,027
산업통상부	에특회계	에너지자원정책연구	기후에너지환경부	에특회계	에너지자원정책연구	224
산업통상부	지특회계	AX실증밸리조성(R&D)(자율주행모빌리티플랫폼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	지특회계	AX실증밸리조성(R&D)(에너지산업AX핵심기술개발)	4,923
합계						4,090,918

세입예산안으로 산업통상부는 일반회계에서 601억원, 에특회계에서 4조 1,566억원과 전력기금 및 방폐기금 15조 5,268억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하였고, 이를 합한 2026년 이관된 세입예산액은 19조 7,435억원임.[7)]

[산업통상부 2026년도 이관 사업 현황(세입)][8)]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목 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목 명	2026년도 예산안
산 업 통상부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15,066
산 업 통상부	일반회계	과태료	기후에너지 환경부	일반회계	과태료	110
산 업 통상부	일반회계	과징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일반회계	과징금	26
산 업 통상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44,920
산 업 통상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정부출자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정부출자수입	10,593
산 업 통상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기타재산이자수입	7,469
산 업 통상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기타경상이전수입	33,583
산 업 통상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계정간전입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계정간전입금	147,644
산 업 통상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기금전입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기금전입금	909,142
산 업 통상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기금예수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기금예수금	2,299,678
산 업 통상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전년도세계잉여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특회계 (투자계정)	전년도세계잉여금	355,452
산 업 통상부	에특회계 (융자계정)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특회계 (융자계정)	기타민간이자수입	22,269
산 업 통상부	에특회계 (융자계정)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후에너지 환경부	에특회계 (융자계정)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370,764
산 업 통상부	전력기금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금	기타민간이자수입	15,579
산 업 통상부	전력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56,453
산 업 통상부	전력기금	가산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금	가산금	2,798

7) 총계 기준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 /기금	목 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 /기금	목 명	2026년도 예산안
산 업 통상부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금	법정부담금	2,616,097
산 업 통상부	전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108,433
산 업 통상부	전력기금	기타잡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금	기타잡수입	31,532
산 업 통상부	전력기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금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85,543
산 업 통상부	전력기금	기금예탁원금회수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금	기금예탁원금회수	443,259
산 업 통상부	전력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12,649
산 업 통상부	전력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28,263
산 업 통상부	전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기후에너지 환경부	전력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13,050
산 업 통상부	방폐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방폐기금	기타재산이자수입	193,758
산 업 통상부	방폐기금	법정부담금	기후에너지 환경부	방폐기금	법정부담금	837,553
산 업 통상부	방폐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방폐기금	기타경상이전수입	41,347
산 업 통상부	방폐기금	기타잡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방폐기금	기타잡수입	88,184
산 업 통상부	방폐기금	기금예탁원금회수	기후에너지 환경부	방폐기금	기금예탁원금회수	4,016,300
산 업 통상부	방폐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기후에너지 환경부	방폐기금	기금예탁이자수입	100,321
산 업 통상부	방폐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기후에너지 환경부	방폐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352,147
산 업 통상부	방폐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기후에너지 환경부	방폐기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5,383,527
합계						19,743,510

8)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 과태료, 과징금, 기타경상이전수입
(에특회계 투자계정) 정부출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에특회계 융자계정) 기타민간이자수입,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Ⅱ. 사업별 검토

【총 괄】

1. 연구개발(R&D)사업의 기획평가관리비: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와 중복되는 사업별 기획평가관리비 조정 필요 등

가. 개 요

연구개발(R&D) 사업에서 편성되는 기획평가관리비(이하 “기평비”)란 정부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기획, 평가 및 성과관리 등의 활동에 쓰이는 운영비를 의미함.

2021년까지는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기평비로 편성하여 개별 R&D 세부사업마다 소액의 기평비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R&D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동일한 경우 이에 따른 관리비 중복 및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 2022년부터 R&D 전문기관에 기평비 세부사업을 편성하되, 개별 R&D 사업마다 편성된 기평비는 편성하지 않게 됨.

[통합된 기평비 구조]

<table>
<tr><th colspan="4">2021년</th><th></th><th colspan="3">2022년</th></tr>
<tr><th>회계명</th><th>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th><th>세부사업</th><th>예산</th><th></th><th>회계명</th><th>세부사업명</th><th>예산</th></tr>
<tr><td rowspan="2">소특회계</td><td rowspan="9">산업부
(한국산업
기술기획평가
원)</td><td>A 기평비</td><td rowspan="5">a</td><td rowspan="2">→</td><td>소특회계</td><td>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평비
(소특회계)(R&D)</td><td rowspan="9">a+b</td></tr>
<tr><td>B 기평비</td></tr>
<tr><td rowspan="7">일반회계</td><td>C 기평비</td><td rowspan="7">→</td><td rowspan="7">일반회계</td><td rowspan="7">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평비
(일반회계)(R&D)</td></tr>
<tr><td>D 기평비</td></tr>
<tr><td>E 기평비</td></tr>
<tr><td>⋮</td></tr>
<tr><td>F 기평비</td><td rowspan="3">b</td></tr>
<tr><td>G 기평비</td></tr>
<tr><td>⋮</td></tr>
<tr><td colspan="3">계</td><td>a+b</td></tr>
</table>

나. 검토의견

일부 R&D 세부사업에서 편성된 기획평가관리비 및 사업단 운영비 중 기획평가관리비적 성격의 경비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와 중복되므로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타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R&D 사업은 연구관리 전문기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 산하 R&D 연구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2026년도 기평비 예산은 별도의 세부사업에 각각 편성되었으며, 전년 대비 8억 9,600만원이 증액된 1,491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들 사업에는 각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산업통상부의 R&D 과제에 대하여 기획, 평가, 관리하기 위한 비용 및 인건비, 간접비 등 필수 경직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음.

[2026년도 산업통상부 산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평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감 (B-A)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44,445	45,625	1,180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R&D)	39,396	40,644	1,248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일반)(R&D)	19,550	20,249	699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지특)(R&D)	11,171	11,482	31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평가관리비(소특)(R&D)	4,814	4,748	△66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전력)(R&D)	17,766	15,938	△1,828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기획평가관리비(에특)(R&D)	11,121	10,473	△648
합계	148,263	149,159	896

자료: 산업통상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안에서 8개 개별 R&D 세부사업은 별도로 사업 내에 기평비가 편성되었고, 그 금액은 총 48억 2,400만원임.

[2026년 기평비가 편성된 개별 R&D 세부사업 리스트]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연구관리전문기관	2026년 기평비 또는 사업단운영비 금액
산업기술R&D연구기획(R&D)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31 (기평비)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R&D)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650 (기평비)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R&D)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880 (사업단 운영비)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 안전성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R&D)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1,000 (사업단 운영비)
열공정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R&D)	한국산업단지공단	300 (기평비)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660 (기평비)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R&D)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175 (기평비)
전력정보화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한국에너지공단	28 (기평비)
합계		4,824

자료: 산업통상부

① 기평비 감액 조정 검토 필요

‘산업기술R&D연구기획(R&D)’ 사업 기평비 1억 3,100만원, ‘화합물전력반도체 고도화기술개발(R&D)’ 사업 기평비 6억 5,000만원은 산업통상부 산하 3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편성된 기평비와 그 역할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별도 예산 반영의 필요성 등 예산편성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9)]

② 사업단과 연구관리전문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역할 중복성 및 기평비적 성격의 경비 철저한 관리 필요

그리고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R&D)’ 사업과 ‘사용후핵연료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개발(R&D)’ 사업은 사업단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하고 있는데,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및 성과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진도점검을 하기 위해 사업단장, 팀장, 주임연구원 등 소수의 전문인력을 구성하여 과제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사업단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는 기평비의 성격과 유사함.

이들 사업은 다부처 사업으로서 별도의 사업단을 두어 부처간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기획, 기술개발 로드맵 관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조정 등 기평비와는 구별되는 차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단 사무실 임대비용 및 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단순 과제평가 및 진도점검에 소요되는 기평비적 성격의 비용은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역할과 명확히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될 필요가 있음.[10)]

③ 연구관리 전문기관 체계 조정 검토 필요

마지막으로, 산업통상부 산하 3개 연구관리전문기관 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세부사업은 ‘열공정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R&D)’,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9)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산업기술R&D연구기획(R&D)’ 사업은 여러 전문기관(KEIT, KETEP)의 신규 R&D 사업 기획 수요를 반영하고 있어 기관별로 필요한 기평비 규모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사업 내 기평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화합물전력반도체고도화기술개발(R&D)’ 사업은 소재-소자-IC-모듈 협의체 운영 및 교류회 등 추진을 위해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0)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해당 2개 사업은 ① 사업단은 과제의 기획·관리·평가·성과 활용,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② 전문기관(에너지기술평가원)은 사업단 평가, 사업단 운영비 정밀검증, 문제과제 환수, 제재조치, 공동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므로, 사업단과 에기평의 역할과 집행비용은 중복되지 않으며, 사업단 운영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기관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R&D)’,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R&D)’, ‘전력정보화 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총 4개 사업임.

이들 사업은 R&D 사업임에도 불구하고「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 산하 연구관리 전문기관이 아닌 다른 공공기관을 통해 사업이 수행되고 있고, 이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평비 세부사업이 없음에 따라 개별 사업 내에 기평비를 편성하고 있음.[11)]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중심으로 R&D 사업을 일괄적으로 기획·평가·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사업 간 관리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열공정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R&D)’,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사업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통해 관리되도록 관리기관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12)]

이 중 ‘차세대 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고도화 혁신지원(R&D)’, ‘전력정보화 및정책지원(전력기금)(R&D)’ 사업의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나, 별도로 한국에너지공단의 기평비 세부사업이 편성되지 않고 여전히 각 사업별 기평비가 편성되고 있으므로, 현 체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1)「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 관리 · 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민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12)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열공정특화AI파운데이션모델개발(R&D)’ 사업은 산업단지공단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실증 인프라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므로 최소 15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고, 제조데이터 보유 기업모집과 실증을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고,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사업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6조(적용특례)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전문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입장임.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2026년도 산업통상부 신규사업 중 총 8개 사업은「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고 예산안이 편성되었음.[13)]

이 중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전력공급지원’ 사업은 2025년 4월 국무회의에서 면제를 받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그 외 7개 세부사업은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의결되어 2026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됨.

---

13)「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2026년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세부사업 리스트]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법령상 근거	총사업비 (2026년도 예산안)	상세 사유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R&D)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10호 (2025.8. 국무회의 의결)	2,685억원 (국비 1,129억원) (8,130)	AI 등 첨단 산업 에너지 수요 확대, 탄소중립 달성, 에너지 안보 중요성 부각에 따른 글로벌 SMR 시장 경쟁 확대에 대비, 국내 제조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 사업
AI기반 분산전력망 산업 육성		1조 29억원 (국비 5,018억원) (119,616)	AI 기반 분산 전력망은 송전 비용 절감, 재생e확대, 에너지신산업 수출산업화 등의 효과가 있는 사업
유통기업 해외진출지원		2,053억원 (국비 1,500억원) (50,000)	소비패턴의 변화와 내수시장 위축 등으로 국내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에 따른 신시장 개척 필요성 대두 및 잠김효과 등 플랫폼 경제의 승자독식 구조 고려시, 글로벌 유통시장으로 조속한 진출 시급
K-온디바이스 AI반도체기술개발 (R&D)		- (185,060)	글로벌 통상 위기와 우리 기업들의 외산 반도체 의존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산 AI반도체가 탑재된 첨단제품의 조속한 출시를 통해 시장 선점 필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국비 2,100억원 (157,500)	제조AI의 신속전환을 통한 우리기업 글로벌 시장 선점 목적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 (R&D)		1,700억원 (국비 1,020억원) (6,800)	디지털 경제 불균형 극복 및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AX혁신기술 개발 시급
AX 실증밸리 조성 (R&D)		1,669억원 (국비 1,055억원) (7,033)	국가 주력산업인 모빌리티, 에너지 분야의 AI적용을 통한 기술변화 대응으로 국가 정책·전략적 사업에 해당
용인평택반도체 클러스터전력공급 지원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0호 (2025.4. 국무회의 의결)	1조 5,363억원 (70% 국비 지원) (55,923)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대규모 전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 신속 조성

자료: 산업통상부

나. 검토의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고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7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14)]

산업통상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2025년 하반기에 신속히 진행하여 해당 검토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부터 2026년도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임.

그러나 통상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6~12개월이 소요되므로 2025년 10월에 이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빠르게 종료되는 시점은 2026년 3월로 예상되며, 특히 R&D 사업은 과제 공고부터 협약 체결까지 최소한 3개월은 추가로 소요될 수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조속히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완료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15)]

[신규사업 1차년도(2026년) 사업수행기간]

세부사업명	1차년도(2026년) 사업수행기간
SMR 혁신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R&D)	6개월
K-온디바이스 AI반도체기술개발(R&D)	9개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	12개월
지역거점AX혁신 기술개발(R&D)	9개월
AX 실증밸리 조성(R&D)	9개월

자료: 산업통상부

14)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15)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계획한 일정대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상세기획을 병행 추진하되,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예타면제 사업의 총사업비와 집행 계획 등을 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3. R&D 사업의 장비구축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이 편성된 문제

가. 개 요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지침”)」 제5조제4항 제1호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개최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16]

단, 해당 본심의를 거쳐야 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지침 제18조제1항 각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및 1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타 법령 또는 행정규칙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연구시설 장비임.[17]

---

16)「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는 당해연도에 개최되는 본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상시심의(이하 “상시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집행 단계에서 상시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본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이 공문으로써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17)「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18조(심의대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이때, 연구시설장비의 구축비용과 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설비비용 등의 부대비용 전체를 총 구축비용으로 산정하며, 하나의 연구시설장비로 심의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별표 1에 따른 연구시설 구성요소 중 토지, 건물 및 부대시설(시설 작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대시설을 말함)
나. 제2항에 따라 사전검토한 결과 ‘심의 제외’로 반려한 경우
다. 오피스 관련, 그래픽, 설계, 분석·해석, 데이터베이스 등을 위한 전문·범용 소프트웨어
라.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수의 재원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이상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3.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도입하는 연구시설장비 중 타 법령 또는 행정규칙상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된 연구시설장비(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시설장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따라서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중 지침 제18조제1항제1호 각목에 따른 예외를 제외한 연구시설장비를 202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야함.

이처럼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하여 예산 편성 이전에 본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는 고가 및 대형 연구장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실제 연구현장 및 산업계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며, 우선순위에 맞는 장비 도입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다만,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는 예산 집행 단계에서 상시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심의와 상시심의의 비교]

구분	본심의	상시심의
심의단계	예산편성 단계	예산집행 단계
심의대상	차년도 1억원 이상	당해연도 1억원 이상
심의일정	매년 5~6월(1회)	연 20회(월 2회 수준)
기타	심의결과는 차년도 예산안 배분·조정 시 반영	예산편성 단계에서 파악할 수 없거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자료: 산업통상부

나. 검토의견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R&D 사업의 53개 연구시설장비 총 1,762억 6,800만원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산업통상부의 2026년도 R&D 사업 중 지침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본심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채 2026년도 예산안으로 편성된 장비는 총 53개이며,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1,762억 6,800만원임.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2026년 상반기 협약 체결 후 상시 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하여 예산 편성 이전에 본심의를 거치도록 지침에서 규정한 취지는 고가 및 대형 연구장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실제 연구현장 및 산업계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며, 우선순위에 맞는 장비 도입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이러한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26년 도입 예정이 구체화된 이하 장비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본심의를 거쳐 구축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임.

[본심의를 거치지 않고 2026년도 예산안으로 장비구축비가 포함된 세부사업]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과제명	장비명	장비가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지원 (R&D)	디지털트윈기반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최적화센터 구축	디지털트윈 모니터링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구축	650
		유가자원 선별 통합시스템	460
		폐 배터리 파/분쇄 통합시스템	600
	인공지능 및 1nm 이하급 초미세 시스템반도체 소자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금속막 원자층 증착 장비	513
		산화물 원자층 증착 장비	514
		저압 화학기상 증착 장비	482
	친환경 모빌리티용 배터리팩 제품화 지원센터 구축	배터리 모듈 수명 평가 시스템	660
		배터리 팩 실차 환경 수명 평가 시스템	550
		온도충격시험기	550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및 활용기반 구축 (R&D)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 구축	자동 단백질 전기영동 장치	115.5
		자동 NGS 라이브러리 제작 시스템	254.5
		나노리터 액체시료 분주기	275
		자동 핵산 전기영동 장치	87
		자동화 실시간 PCR 시스템	65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 (R&D)	탄소제품 표준·인증 토탈솔루션 기반구축	버스트/서지 시험기	150
		고출력 전원공급 시스템	150
		시야시험 및 투명도시험기	150
		돌기부와 표면마찰 시험기	250
		충격흡수성_KC	350
		충격흡수성_DOT	350
		내관통성 시험기	350
무기발광디스플레이 기술개발및생태계구축 (R&D)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육성을 위한 인프라 및 스마트모듈러센터 구축	MOCVD(GaN)	8,000
		공정관리시스템	500
		Laser Lift-off system	3,850
		Pick and Place 전사기	350
		레이저 탈착 리페어기	150
		모듈 엣지 가공기	1,870
		모듈 엣지 전극 형성 장비	4,400
		휨 측정기	627
		레이저 갈륨 집속 이온빔 시스템	1,900
		초음파 현미경	323
		나노단층검사기	1,000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과제명	장비명	장비가격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R&D)	국가로봇테스트 필드 실증연구 인프라 구축	로봇 실증 데이터 플랫폼	22,582
	실환경 기반 로봇 신뢰성 및 안전성 평가 기술	생체역학적 한계치 측정 장치	150
		충돌 압력 측정 센서	130
		장애물 감지 안전 통합 평가 장치	300
		안전기능 I/O 성능 관련 안전·보안 통합 평가 장치	100
	실환경 시나리오 기반 로봇서비스 실증 및 평가기술	이동형 장애물 재현시스템	2,400
		레이저 트래킹 위치측정 시스템	1,950
	로봇 및 로봇서비스 디지털 트윈화 프레임워크 기술	가상화 실증 테스트 시스템	2,500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R&D)	멤브레인 화물창 단열시스템용 Plywood 대체 소재 및 생산 기술 개발	5축 CNC 가공기	200
조선해양산업기술개발 (R&D)	중대형 선박의 상반회전 전기추진시스템화를 위한 저속, 대형의 이중 추진축계 설계 기술 개발	3차원 레이저 정밀 계측 시스템	200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 (R&D)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	노광장비	-
		노광장비	-
		식각장비	-
		확산장비	-
		증착장비	-
		세정장비	-
		세정장비	-
		세정장비	-
		세정장비	-
		계측장비	-
		계측장비	-
합계			61,008

주)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R&D) 사업의 장비 11대는 SK 하이닉스와의 합의에 따라 비공개 처리하였으나, 2026년도 장비 총 예산은 1,152억 6,000만원이고, 이를 합한 총 합계는 1,762억 6,800만원임
자료: 산업통상부

【일반회계】

<세 출>

4.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은 무역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무역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205억원(650.6%) 증가한 6,005억원이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무역보험기금출연	80,000	380,000	600,500	520,500	650.6

산업통상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무역보험기금 수입의 일정 부분을 이 사업을 통한 정부출연금으로 조달하고 있는데,[19)] 이는 무역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수출금융사업 추진을 위한 것임.

이 사업은 무역보험기금 여력 확충 및 기금건전성 제고를 통한 대미 통상 관련 금융패키지 등에 5,700억원이 편성되었고, 중소형 조선사에게 선수금 환급보증(Refund Guarantee) 30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모두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으로 편성됨.[20)]

---

18) 일반회계-무역보험기금출연(1138-881)(무역정책국)

19) 이 사업에 따라 무역보험기금 수입인 일반회계전입금(91-911)도 2026년도 수입예산안이 전년 800억원 대비 5,205억원이 증가한 6,005억원으로 편성됨.

20) RG 보증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으나, 대형 조선사와 달리 중소 조선사는 신용도 및 자금여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RG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선박건조 및 수출계약 포기 사례가 다수 발생함. 이에 정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 사업을 통해 금융기관이 안정적으로 RG 보증서를 중소 조선사에게 발급하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것임.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ㅇ 무역보험기금출연 : 6,005억원(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 ① 對美 투자지원 (5,700억원) - 최근 통상현안 대응을 위한 무보 기금여력 확충 및 기금건전성 제고 ② RG 특례보증 지원 (305억) - 중소형 조선사 RG 지원 통한 조선산업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305억원 출연(총 2,000억원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2025년 10월 29일 정부는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고, 한·미 조선협력펀드는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투자·대출·보증을 모두 포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5%로 설정하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율을 15%로 인하하는 내용 등을 발표함.[21]

나. 검토의견

첫째,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을 반영한 한·미 조선협력펀드 및 대미 투자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0월 29일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정부는 대미투자펀드 및 조선협력펀드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인바, 특히 대미투자펀드의 연간 납입한도(200억 달러) 내 자금조달 방식, 한·미 조선협력펀드를 위한 대출·보증 등의 지원내용 등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음.

---

21)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우선,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불, 소위 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하여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상호관세는 7월 30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하였습니다.(대통령실, “한미 오찬 정상회담 관련 김용범 정책실장 브리핑”, 2025.10.29.)

따라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방식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한편,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부는 대미 투자지원 사업으로 5,70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안에는 별도 세부사업 없이 기타유가증권매입에 포함시켜 수지 균형을 맞춘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예산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0월 기준 현재 한미 정부간 대미투자 지원은 논의 중에 있음. 이에 대미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이 미정인 상황에서 2026년도 금융지원 수요 발생에 대비하여 정부는 이 사업 예산 중 대미 투자지원 내역사업으로 5,700억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2026년도 무역보험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이에 대응하는 세부사업 없이 기타유가증권매입 세부사업에 모두 포함시켜 기금의 수지차를 맞추어 편성해 놓았음.[22)]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대미투자 지원은 보증·보험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므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며, 이는 기존 세부사업(무역보험금지급)을 통해 사업 수행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세부사업 신설이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입장임.

22) 무역보험기금의 2026년도 지출예산안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을 통한 일반회계전입금 증액 금액인 5,205억원이 기타유가증권매입 세부사업에 포함되어 2025년 대비 1조 517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대미투자지원 확대에 대응하는 세부사업은 별도로 신설하지 않았음.

[2026년 무역보험기금 지출예산안 현황]

(단위: 백반원, %)

구 분	2025 계획액		2026년도		증감 (B-A)	
	당초(A)	수정	요구	조정(B)		(B-A)/A
무역보험금지급(1531-400)	477,000	477,000	400,021	400,021	△76,979	△16.1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1531-404)	19,596	19,596	30,732	30,732	11,136	56.8
무역보험 IT운영(1531-407)	-	-	12,418	12,418	-	-
중소기업수출지원기반강화(1531-408)	14,536	14,536	24,647	24,647	10,111	69.6
무역보험환급금등(1532-400)	17,284	17,284	20,200	20,200	2,916	16.9
인건비(1676-100)	87,259	87,259	93,164	93,164	5,905	6.8
기타경비(1677-200)	33,720	94,903	32,745	32,745	△975	△2.9
정보화경비(1677-201)	10,410	9,710	-	-	-	-
통화금융기관예치(9710-971)	2,920,860	3,160,377	2,425,187	2,425,187	△495,673	△17.0
국공채매입(무보기금)(9750-971)	229,690	229,690	241,772	241,772	12,082	5.3
기타유가증권매입(9780-971)	1,970,378	1,970,378	3,022,154	3,022,154	1,051,776	53.4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이러한 예산 편성은 무역보험기금출연 예산이 금융성기금 출연금(350-03목)이고, 이 사업으로 무역보험기금 수입에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은 「무역보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된다는 점에서 자금의 기존 목적과 달리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자본확충에 기여하는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음.[23)]

따라서 해당 예산이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투명한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셋째, 무역보험기금은 총수입 증가에 비해 지출 증가가 적고, 순자산과 여유자금이 확대되고 있으며,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미 3,000억원이 증액된 상황에서 2026년에 다시 대규모 증액 편성하였는바, 통상 환경을 고려한 정책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무역보험기금의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의 예산은 2022년 912억원에서 2023년 500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450억원, 2025년 3,8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24)] 2026년에는 5,20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대내외 통상환경 변화 및 대미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무역환경 조성 차원의 증액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인정되나, 단기간 확대된 증액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다각도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우선, 2022~2025년(추정) 무역보험기금의 순자산을 살펴보면, 2022년 3조 4,118억 4,700만원, 2023년 3조 9,186억 8,700만원, 2024년 4조 7,755억 5,900만원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2025년 추정 순자산 금액은 5조 5,577억 3,10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음.

[2022~2025년 무역보험기금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추정)
자 산	5,503,278	6,719,638	7,746,650	8,771,009
부 채	2,091,432	2,800,951	2,971,091	3,231,278
순자산	3,411,847	3,918,687	4,775,559	5,557,731

자료: 산업통상부

다음으로, 무역보험기금의 총수입 추이를 살펴보면, 결산 기준 2022년 8,668억 1,900

23) 「무역보험법」
제32조(기금의 관리) ② 기금 출연금은 자본금으로 회계처리한다.

24) 2025년도 금액은 본예산 800억원과 제1회 추경 3,000억원이 추가된 금액임.

만원에서 2023년 1조 1,926억 5,800만원, 2024년 1조 4,747억 3,200만원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1조 2,386억 1,2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7월말 기준 계획액의 67.5%인 8,361억 3,100만원이 이미 수납되었음.

이는 무역보험기금을 통해 운용한 이자금의 증가로 인해 기타재산이자수입의 결산 수납액이 계획 대비 과다 수납된 것에서 기인하는데, 2025년에도 기타재산이자수입은 2,469억원을 계획하였으나 7월말 기준 이미 이를 초과하는 2,487억원이 수납되었음.

이처럼 총수입은 2022년부터 연간 약 3,000억원씩 증가한 금액이 수납되고 있으며, 2026년 총수입 예산안은 1조 5,475억 6,200만원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음.

[2022~2025년 총수입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안)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건물대여료 (51-512)	1,322	956	2,427	1,072	1,062	1,149	1,173	673	1,173
기타재산이자수입 (54-546)	83,982	48,893	102,815	208,825	165,345	428,279	246,950	248,751	278,390
민간출연금 (59-594)	10,000	4,000	10,000	4,000	10,000	63,200	15,400	50,050	35,200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232,440	370,018	346,112	231,809	202,534	274,830	274,559	140,066	274,003
기타잡수입 (69-691)	655,127	442,952	837,881	746,952	630,240	707,274	700,530	396,591	958,796
합계	982,871	866,819	1,299,235	1,192,658	1,009,181	1,474,732	1,238,612	836,131	1,547,562

자료: 산업통상부

그리고 무역보험기금의 총지출은 크게 무역보험지원과 이를 위한 기금운영비로 나누어지는데, 결산 기준 2022년 6,721억원에서 2023년 4,768억원으로 감소하였으나 2024년 5,675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5년 계획액은 6,598억원임.

이러한 추이는 무역거래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 시 지급되는 무역보험금지급 사업에서 최근 3년간 지급 결산액이 적은 것에서 기인하며, 대내외 경제상황에 따른 보험금 지출규모의 변동폭이 크고 보험사고의 확률추정 및 보험금 지급에서 예측의 불확실성이 큰 무역보험의 특성상 계획 대비 오차가 다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결산 기준으로 총수입은 연간 약 3,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총지출은

연간 약 1,000억원 내외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또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 무역보험기금의 순수입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022~2025년 총지출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계획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무역보험금지급 (1531-400)	638,566	501,513	650,326	309,401	553,743	374,248	477,000
무역보험신용정보채권관리 (1531-404)	19,921	14,571	18,490	17,317	18,007	16,405	19,596
네오키스시스템고도화(정보화) (1531-407)	5,000	4,881	-	-	-	-	-
중소기업수출지원기반강화 (1531-408)	1,900	1,639	8,200	7,875	13,072	12,297	14,536
무역보험환급금등 (1532-400)	35,817	15,600	29,227	12,934	34,044	12,816	17,284
인건비 (1676-100)	78,536	76,810	80,314	79,589	82,468	80,856	87,259
기타경비 (1677-200)	37,591	45,671	40,650	38,936	61,553	60,550	33,720
정보화경비 (1677-201)	12,018	11,413	11,075	10,765	10,410	10,326	10,410
합계	829,349	672,098	838,282	476,817	773,297	567,498	659,805

자료: 산업통상부

마지막으로, 무역보험기금의 여유자금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4조 5,554억원에서 2023년 5조 6,540억, 2024년 6조 6,029억원으로 지속 증가하였고, 2025년 7월 말 기준 7조 5,116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러한 여유자금 규모의 증가는 보험금 회수금 및 정부 출연을 통한 재정지원이 증가한 반면 보험금 지급 부담은 감소하였고, 기금운용수익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2022~2025년 무역보험기금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여유자금규모(말잔)	여유자금 운용현황(평잔)			
		소계 (수익률)	직접운용 (수익률)	위탁운용	
				연기금투자풀 (수익률)	기타 (수익률)
2022	4,555,440	4,353,344 (△2.1)	2,146,244 (3.4)	2,206,665 (△8.0)	435 (△0.1)
2023	5,654,019	4,965,942 (6.0)	2,606,050 (4.7)	2,359,530 (7.4)	362 (0.1)
2024	6,602,925	6,133,074 (6.7)	2,542,804 (4.2)	3,589,978 (8.8)	292 (△0.0)
2025	7,511,607	6,940,009 (4.1)	2,368,059 (2.1)	4,571,658 (5.1)	292 (△0.0)

주) 2025년은 7월말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부

이처럼 무역보험기금은 총수입 증가폭에 비해 총지출 증가폭이 적음에 따라 순수입 및 순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여유자금 운용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임.

대미 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증액 편성한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000억원이 증액된 상황에서 2026년에도 전년 본예산 대비 5,205억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는 것은 단기간 전례 없이 확대된 규모라는 점에서 상술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조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25)]

25)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 지원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기금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026년 수입 증가분을 감안하더라도 출연금이 없을 경우 위험잔액 급증에 따라 기금 건전성 지표인 기금배수가 24.1배로 증가할 것이라 추정된다고 설명함.

[기금배수 및 2026년 추정치]

(단위: 억원, 배)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6*
위험잔액(A)	73.40	80.39	86.55	100.92	103.46	119.1	138.6	138.6
기금총액(B)	2.45	3.04	3.41	3.92	4.78	5.44	6.35	5.75
기금배수(A/B)	29.9	26.5	25.4	25.8	21.7	21.9	21.8	24.1

주) 2026* 는 출연금 6,005억원이 없을 경우 기금총액(B)과 기금배수(A/B)를 나타낸 것임
자료: 산업통상부

5.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차별화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개 요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민관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서비스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97억 1,000만원(98.2%) 증액된 1,810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2026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수출지원기반활용	91,364	180,171	181,074	89,710	98.2
통합지원	61,628	150,435	154,312	92,684	150.4
긴급지원 바우처	-	88,807	42,443	42,443	순증
K-수출스타 500	-	-	40,172	40,172	순증

내내역사업인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대내외 무역장벽 심화에 따라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추경으로 편성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이를 정규화하여 424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참고로, 2025년도 본예산 중 ‘산업별 선도기업 육성사업 통합 운영’ 사업(360억 5,000만원)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있고, 이는 2026년에도 474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와 별개로 대미 관세협상 등 최근의 통상환경을 고려하여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이 신설된 것임.

내내역사업인 **‘K-수출스타 500’** 사업은 10대 품목 중소·중견기업 100개사를 선정하여 해외마케팅, 인증, 특허 등 수출 중추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401억 7,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26) 일반회계-수출지원기반활용(1139-307)(무역투자실)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안
○ 민간경상보조(320-01) : 1,504억 3,500만원 가. 중견기업 수출역량강화(250억원) · 326개사×1억 5,300만원×50%=250억원 나.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1,248억 5,700만원) · (본예산) 산업별 선도기업 육성사업 통합 운영 : 1,014개사×51백만원×69.7%=360억 5,000만원 **· (추경1회, 관세대응바우처) 2,060개사 x 61백만원 x 69% = 846억 7,200만원** · (추경1회, 관세대응119 통합지원센터 운영) 4,135백만원 다. 수출바우처통합관리(5억 7,800만원) · 수출바우처 운영 및 관리 등	○ 민간경상보조(320-01) : 1,543억 1,200만원 가. 중견기업 수출역량강화(236억 7,000만원) · 310개사×153백만원×50%=236억 7,000만원 나. 산업 글로벌 진출역량 강화(1,300억 6,400만원) · 산업별 선도기업 육성사업 통합 운영 : 1,335개사×51백만원×69.7%=474억 4,900만원 **· 긴급지원바우처(424억 4,300만원)** **796개사×7,650만원×69.7%=424억 4,300만원** *추경사업(관세대응바우처) 정규 사업 편성 **· K-수출스타 500(401억 7,200만원)** **(지원패키지) 400억원** **(전담맨토링) 1억 2,200만원, (추진단) 5,000만원** 다. 수출바우처통합관리(5억 7,800만원) · 수출바우처 운영 및 관리 등

자료: 산업통상부

나. 검토의견

첫째,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대미 고관세 부과 등 특정 통상위험 대응을 목적으로 신설된 사업임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미국 관세조치 대상 산업이나 수입규제 위험 품목, 통상분쟁 가능성이 높은 전략품목으로 한정하는 등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차별화된 요건 설계가 필요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신규 편성된 관세대응 바우처의 1차 공고 실적을 살펴보면, 874개의 신청기업 중 709개의 기업에 바우처를 지원하였으며 그 규모는 304억 6,800만원임.

이후 2차 공고를 통하여 신청받은 1,593개 기업 중 일부 기업을 선정하여 잔액인 542억 4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임.

[2025년도 제1회 추경 관세대응바우처 실적]

(단위: 개, 백만원)

1차공고 (2025.5.16.(금) ~ 2025.6.5.(목))				2차공고 (2025.8.18.(월) ~ 2025.9.5.(금))			
신청 기업 수	선정 기업 수	국고 보조금	평균 보조율	신청 기업 수	선정 기업 수	국고 보조금	평균 보조율
874	709	30,468	69.7%	1,593	1,323	54,204	69.7%

주) 2025년 9월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부

공고문에 있는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추경 편성 이전에 이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수출바우처의 지원요건 중 미국을 대상으로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실적을 보유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 외에는 전반적인 지원요건 및 산업별 지원요건이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는 바, 이는 2026년 긴급지원바우처 사업도 마찬가지임.

[2025년도 제1회 추경 관세대응바우처 실적]

<table>
<tr><th>구분</th><th>수출바우처
(2025년 본예산)</th><th>관세대응(긴급지원)바우처
(2025년 추경, 2026년 예산안)</th></tr>
<tr><td rowspan="2">지원요건</td><td colspan="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中 각 세부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td></tr>
<tr><td>-</td><td>(추가 조건)
1) 2022~2024년 대 미국, 직수출 또는 간접수출 실적 보유기업
2) 2022~2024년 해외의 대미 수출 제조기업에 중간재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
3) 2022~2024년 해외 생산거점으로부터 대미 직수출 실적 보유기업</td></tr>
<tr><td>산업별 지원요건</td><td colspan="2">
<table>
<tr><th>세부산업</th><th>단계별 지원요건</th><th>바우처 발급한도</th><th>국고 보조율</th></tr>
<tr><td>소재·부품·장비</td><td rowspan="3">[진입]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
[성장]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확장]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0억원 이상</td><td rowspan="2">[진입] 75백만원
[성장] 105백만원
[확장] 150백만원</td><td rowspan="2">(중소) 70%

(중견) 50%</td></tr>
<tr><td>그린</td></tr>
<tr><td>소비재</td><td>[진입] 45백만원
[성장] 75백만원
[확장] 82.5백만원</td></tr>
</table>
</td></tr>
</table>

자료: 산업통상부

즉, 2025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된 관세대응바우처 및 2026년도 예산안을 통해 신규 편성된 긴급지원바우처 사업은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구별하여 지원조건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관세대응(긴급지원)바우처는 본래 대미 고관세 부과 등 특정 통상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된 것이므로, 지원대상을 미국의 관세조치 대상 산업, 수입규제 위험 품목 및 통상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 등으로 한정하고, 지원시기 및 지원 내용을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둘째, K-수출스타 500 사업은 유망 내수기업을 중추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수출바우처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부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음.

'K-수출스타 500' 사업은 100개사를 대상으로 4억원씩 400억원을 마케팅, 인증·특허·물류 컨설팅 및 R&D 컨설팅·실증을 위해 지원하고, 10대 산업/업종별 수출 중추기업 육성 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임.[27)]

그 중 한 기업당 지원되는 4억원의 상세 계획을 살펴보면, 해외수요 기반 수출상품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산업별로 현지 프리미엄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한 '프리미엄 해외마케팅'에 2.4억원, 수출 IP 전략 컨설팅 및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맞춤형 특허 지원 등 '인증·특허·물류' 지원 0.8억원, 수출목적형 R&D 컨설팅 및 단기실증 지원을 위한 'Post R&D'에 0.8억원이 지원될 예정임.

[K-수출스타 500 사업의 세부계획]

구분	지원내용(단가:백만원)	산출내역
프리미엄 해외마케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4억원	· 해외수요 기반 수출상품 공동 기획 및 마케팅(70) - 현지 최신 트렌드·수요 기반으로 예비 히트상품 및 시장 제시, 공동 기획 및 개발 후 마케팅 지원	(국내) 15백만원 x 2회 (해외) 20백만원 x 2회
	· 산업별 현지 프리미엄 마케팅 지원(140) - 핵심 바이어 발굴과 파트너십 형성, 마케팅 활동 및 영업망 구축, 현지시장 정착과 점유율 확대 지원 - 1년간 상시 맞춤형 지원 및 단독 행사·판촉 개최 지원	(행사) 52백만원 x 2회 (운영) 3백만원 x 12개월
	· 해외법인 설립 지원 및 경영애로 해소(30) - 현지 전문 컨설팅기관(법무·회계·노무·관세 등) 활용 지원, 현지 정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경영애로 해소	(컨설팅)1.5백만원 x 12회 (운영) 1백만원 x 12개월

27) 중추 수출기업은 수출 1천만불 초과 5천만불 이하 기업을 의미하며, 2021년 2,789개, 2022년 2,708개, 2023년 2,621개, 2024년 2,586개로 202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구분	지원내용(단가:백만원)	산출내역
인증・특허・물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0.8억원	·[인증] 인증조사 및 사후관리 원스탑 지원(20) - 필수인증확인-획득전략수립-시험진행·관리-사후관리	10백만원 x 2회
	·[특허] 수출 IP 전략 컨설팅,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분쟁지원 등 맞춤형 특허 지원(20)	10백만원 x 2회
	·[물류] 물류 최적화 컨설팅 및 풀필먼트 지원(40) - 물류 최적화 컨설팅(물류 협의체 연계) 및 해외 공동물류 네트워크 활용 지원 등 - FTA활용 및 관세・통관 관련 애로해소 지원	(컨설팅) 14백만원 x 2회 (운영) 1백만원 x 12개월
Post R&D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0.8억원	· 수출목적형 R&D 컨설팅(40) -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R&D 기획·수행 시 해외현지 기술규제·규격·인증 컨설팅 제공	20백만원 x 2회
	· 단기실증 지원(40) - 분야별 해외 주요기업 수요 반영 단기실증 관련 파트너 매칭, 실증결과 바탕 시제품 개발 및 인증 연계 지원	20백만원 x 2회

주) 무역보험 우대 등 수출금융 지원을 병행함.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이러한 사업내용은 다른 내역사업인 ‘수출바우처’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던 서비스 유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수출바우처의 지원 유형 14가지 중 특허/지재권, 조사/일반 컨설팅,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홍보/광고, 무역보험보증 등 일부 유형의 바우처는 해외마케팅 및 인증・특허・물류 지원과 사업내용이 겹치는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두 사업을 통해 중복으로 지원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023~2024년 수출바우처 서비스 유형 현황]

서비스 대분류 변환						
조사/일반 컨설팅	디자인개발	브랜드개발/관리	홍보동영상	통번역	역량강화 교육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해외규격 인증	특허/지재권	홍보/광고	국제 운송	서류대행/현지등록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무역보험 보증

자료: 산업통상부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망한 내수기업을 마케팅 및 R&D 지원을 통해 중추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기존 수출바우처 사업과의 지원유형 중복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고, 특히 유망 내수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음.

6.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개 요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은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공급을 위한 서안성-신이동 송전선로(345kV) 등 송전선로의 지중(地中)화[28]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59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29]

[2026년도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	62,580	55,923	55,923	순증

이 사업은 용인 및 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을 운영하는데 10GW[30] 이상의 전력이 필요하나, 이미 주변 산업단지 및 주거지역에 전력을 공급 중인 기존 전력망만으로는 대규모 클러스터 산단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신안성, 서안성 및 신평택 변전소로부터 345kV의[31] 송전선로를 지중화하여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려는 것이고, 신평택-고덕 송전선로 등 총 5개의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려는 것임.

[이 사업을 통한 수행되는 5개 송전선로 현황]

구분	송전선로 길이	지중화 여부
신평택-고덕#3	13.8km	전체구간 지중화
서안성-신이동	8.4km	전체구간 지중화

28) 전선 지중화란 송배전선을 배관, 공동구 등을 이용하여 땅 속에 설치하는 것을 의미함. 주로 도시 미관과 안전 등에 그 목적이 있고 2025년 현재 한국의 평균 송배전선로 지중화율은 약 20%에 불과함.

29) 일반회계-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3171-482)(산업정책실)

30) GW(기가와트, Gigawatt)는 전력의 단위이며 에너지 산업이나 발전소의 전력용량을 의미함. 참고로, 1GW는 대형 원자력 발전소 1기의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10GW는 10대의 대형 원자력 발전소가 생산하는 전력량 수준임을 의미함.

31) kV는 킬로볼트(kilovolt)의 약자로 전기의 압력을 나타내는 단위이고, 전압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에너지를 먼 거리로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데 345kV 발전소는 대형 산업단지로 전력을 보내기 충분한 초고압 송전임.

구분	송전선로 길이	지중화 여부
신안성-신기흥	0.3km	전체구간 지중화
신안성-동용인	6.6km	전체구간 지중화
신원주-신원삼	53.3km	일부구간 지중화

자료: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재구성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5개 송전선로 중 ‘신평택-고덕#3’, ‘서안성-신이동’, ‘신안성-동용인’ 3개 송전선로 대한 지중화 설계비 및 공사비 625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은 이에 더하여 ‘신안성-신기흥’ 송전선로까지 총 4개 송전선로에 대하여 559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제1회 추경		2026년 예산안	
625억 8,000 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625억 8,000만원 가.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및 설계비용 · 공사비 및 설계비 : 894억원×70%- 1억 4,000만원(기평비) 나.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사업 지원·관리 · 사업관리 등 : 1억 4,000만원	559억 2,300 만원	○ 사업출연금(350-02) : 559억 2,300만원 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공급시설 확충(557억 8,300만원) · 공사비 등 : 용인·평택반도체클러스터 2026년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 및 설계비용 민간부담금의 70% - 1억 4,000만원(기획평가관리비) 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기공급시설 확충(1억 4,000만원) · 사업관리 등 : 1억 4,000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이 사업은 2025년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예타면제(안) 의결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통해 사업 적정성 검토를 수행 중에 있고, 산업통상부는 2025년 10월 중 적정성 검토가 완료될 예정이라는 입장임.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반도체 특화단지 전력수요 대응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어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바, 산업통상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 및「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용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대규모 전력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기반시설을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음.[32)33)]

참고로, 2025년 추경으로 편성된 625억 8,000만원은 10월 현재 기준으로도 전액 미집행된 상황이고,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KDI를 통한 사업 적정성 검토가 끝나게 되면 집행이 시작될 것이라는 입장임.

[2025년 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1차 추경 금액	집행액	2026년 예산안	비목
신평택-고덕#3	197	-	469	설계비, 공사비
서안성-신이동	4	-	9.1	설계비
신안성-신기흥	-	-	0.63	설계비
신안성-동용인	424	-	80.5	공사비
신원주-신원삼	-	-	-	-
합계	625	-	559	-

자료: 산업통상부

32)「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략산업등의 신속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국가재정법」제38조 및 관련 법령과「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3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화단지 지원 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예타면제와 적정성 검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34]

34)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국내 유일한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공사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편성된 예산안이기 때문에, 사업적정성 검토에 따라 예산액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임.

7.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신규): 조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필요

가. 개 요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은 AI 융합산업 중 단기간에 성과창출이 가능한 유망분야를 선정하여, 이를 집중지원하는 ‘AX-Sprint(전력질주)300’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57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35)]

[2026년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	-	157,500	157,500	순증

이 사업은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는 ‘Type 1’ 30개 품목의 제품에 35억원씩 1,050억원을 지원하고, 시장 선도를 목적으로 하는 ‘Type 2’ 35개 품목에 15억원씩 525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됨.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업출연금(350-02) : 1,575억원
가. Type1 : 조기 상용화 제품 (1,050억원)
· 30개 품목 × 35억원 × 12/12개월 = 1,050억원
나. Type2 : 시장 선도형 제품 (525억원)
· 35개 품목 × 15억원 × 12/12개월 = 525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Type 1’은 시제품 완성 단계의 제품 및 서비스에 상용 AI 모델을 적용하여 조기 상용화 및 검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품목으로 1년 내에 즉시 개발이 가능하며 시장에 빠르게 침투가능한 품목을 의미하고, ‘Type 2’는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발전여지가 높은 제품 및 서비스에 고성능 AI 융합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품목을 대상으로 2년간 지원될 예정임.

산업통상부는 시제품 개발·검증하는 단계(TRL 5 이상)부터[36)] 지원하는 것을 원칙

35) 일반회계-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3174-421)(산업정책실)

36)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기술성숙도를 의미하고, 이는 어떤 기술이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될 준비가

으로 하되, 2년 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이라면 TRL 5보다 낮은 단계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Type 1 및 Type 2 유형별 구체적인 내용]

ㅇ (Type 1 : 조기 상용화 제품) 시제품 완성 단계 제품·서비스에 상용 AI 모델을 적용하여 조기 상용화 및 검증 등 지원 - 양산 준비를 위한 생산라인 구축, 품질관리체계 수립 지원 - 시제품 최적화(AI 기능 신뢰성 향상), 시제품 성능 고도화(AI 모델 고도화, AI 기능 향상) 지원 - 해외시장 조사, 해외규제 대응 제품 적합화, 해외투자 연계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화 활동 지원 - 제품 홍보 및 시장 확산을 위한 마케팅·홍보 지원 ㅇ (Type 2 : 시장 선도형 제품) 완성 단계는 아니지만 발전 여지가 높은 제품·서비스에 고성능 AI를 융합한 선도형 제품개발 지원(* Type 1 지원내용을 포함하여 아래 사항 추가 지원) - 지식재산권·상표권·저작권 등 등록, IP 전략 수립 지원 -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인증, 표준화 등 산업별 인증 지원 - 법/규제 대응 컨설팅, BM 기획 및 전략 수립 등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로, 이 사업은 2025년 8월 국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제조 AI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고,[37] 산업통상부를 포함하여 10개 부처에서 동시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사업비 1조 1,570억 8,300만원 중 국비는 9,340억원임.

[10개 부처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억원)

부처	물량	총 사업비	국비	부처	물량	총 사업비	국비
산업부	65개	2,625	2,100	농림부	30개	1,125	900
복지부	31개	975	780	환경부	15개	750	600
해수부	25개	937.5	750	국토부	29개	1,450	1,160
중기부	45개	1,687.5	1,350	과기부	20개	1,000	800
국방부	30개	833.33	750	식약처	10개	187.5	150

자료: 산업통상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단계별로 평가하는 척도임.

37)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 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 · 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바, 산업통상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국가재정법」제38조제5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위해 2025년 10월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임.

「국가재정법」제38조제5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통상부는 예타면제와 적정성 검토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조속히 완료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둘째, 산업통상부는 분기별 성과평가와 5년간 사후관리를 계획하고 있으나, 매출·고용 중심의 지표는 단기 성과에 치중해 기술 고도화와 데이터 자산 축적 등 장기 경쟁력 확보를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AI 기술 내재화 및 활용도, 데이터 자산, 신뢰성 등 질적 지표를 포함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철처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산업통상부는 분기별 1회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상용화 진행단계 등 실적을 관리하되, 사업화 성공률, 매출액, 고용창출 등의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과제 종료 이후 5년 간 사업화 성과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관리할 계획임.

그러나 산업통상부가 제시한 사업화 성공률, 매출액, 고용지표 등은 단기적·정량적 성과를 측정하는 데는 유용하나, 상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기 매출이나 고용 성과를 강조할 경우 기업들이 당장의 수익성을 우선시하여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기술 고도화나 데이터 자산 축적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또한 이 사업은 기대효과로 유망기술에 대한 상용화 지원으로 국내 신산업을 육성하고 AI 전문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AI 응용제품을 활용하는 기업·소비자 확대를 통해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AI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매출액과 고용 규모로만 측정하는 것은 AI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음.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의 기대효과]

o 유망기술에 대한 상용화 지원, 수요 창출 등으로 국내 신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 o AI 응용제품 상용화에 필요한 제조기업 - AI 기업간 매칭 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을 육성하고 협업 생태계도 조성 o 성능평가 기준, 인증절차, 표준모델 등을 개발해 제품 신뢰성 제고 o 일반 국민들이 제조현장, 일상 등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품을 확산하여 AI 전환 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 o AI 응용제품을 활용하는 기업·소비자 확대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생산성 증대 및 사회 전반의 편의성 향상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기존의 양적 지표에 더하여 AI 기술 내재화 및 자립도, 국민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의 제품 실제 활용도, 지속 가능한 데이터 자산구축 성과 및 서비스 신뢰성과 안전성 등 미래지향적이고 질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향후 5년간의 사업화 성과를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0월 현재 기준, 이 사업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략적인 지원 계획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단기/중장기적인 과제평가 및 상용화 실적 추적 계획은 향후 구체화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단순히 빠른 AI 상용화에 머무르지 않고, 중장기적인 전략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충분히 반영함과 동시에 철저한 사후관리도 필요함.

8.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사업: 사업실적 분석 후 예산 반영 필요

가. 개 요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사업은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투자 활성화를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04억 8,900만원(2,870.0%)이 증액된 1,350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38)]

[2026년도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	4,547	90,545	135,036	130,489	2,870.0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 기업 투자지원금	-	70,000	100,000	100,000	순증
고위험경제 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	14,558	29,116	29,116	순증

내역사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중 공급망 안정품목 및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의 신규 투자에 입지·설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등 총 4개 분야에 대한 투자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2026년에는 로봇, 방산 분야를 추가하여 총 6개 분야에 대하여 6,000억원의 투자예상액에 기업별 보조율과 국비 보조율을 차등적용하여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

38) 일반회계-소부장 공급망 안정종합 지원(3574-306)(산업정책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 세부내역]

2025년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안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700억원 : (1차 추경) 2025년 투자(4,000억원) × 기업별보조율(30~50%) × 국비보조율(60·40%)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1,000억원 : 2026년 투자(6,000억원) × 기업별보조율(30~50%) × 국비보조율(60·40%)

자료: 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이고, 수도권은 국비 40%, 비수도권은 국비 60%가 지원되는데 지원대상 기업의 유형에 따라 기업별 보조율도 차등 적용되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임.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보조금 보조비율]

구 분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국비 40%)	30%	40%
비수도권(국비 60%)	40%	50%

주)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자료: 산업통상부

또 다른 내역사업인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은 국내 생산 시설은 있으나 중국 등 해외 대비 경제성이 열위하여 생산 유지가 어려운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도 추경안 145억 5,800만원의 2배인 291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보조사업자로서 가동률 50%의 생산량에 대하여 국내 생산원가와 해외 수입단가의 차액 중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됨.[39]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 세부내역]

291억 1,600만원 = 단가차액 x 생산량(가동률 50% 한도) x 보조율(70%)

자료: 산업통상부

39)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대외 비공개 사항임.

나. 검토의견

두 내역사업은 2025년 실제 지원실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도 예산을 예상 투자수요 및 기간 확대에 근거하여 증액 편성하였는데, 2025년도 투자지원금 집행 결과와 기업 선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실제 지원 가능 금액과 투자실적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 사업은 2025년 7월말 기준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700억원 중 사업 공고 전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설명회를 위한 지출 900만원을 제외한 699억 9,100만원이 미집행된 상황임.

2025년 9월 26일까지 기업 신청을 접수하여 10월 중 서면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조사 및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11월 이내에 기업 선정 후 협약을 체결하고, 12월 이내에 협약절차를 완료하여 투자지원금이 집행될 예정임.

[추진절차 및 흐름도]

사전검토	서면평가 (10월)	현장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11월)	기업 선정 (11월)	협약 (12월)
자격요건 사전검토	핵심품목 요건 등	시설, 설비 입지 등	투자적합성 등	최종 지원 확정	사업계획 확정
KIAT	KIAT (평가위원회)	KIAT	KIAT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첨단위)	기업 ↔ KIAT

산업통상부는 본 사업의 2025년 추경 추진을 위해 4개 업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에 대해 2025년도 신규투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4,371억원의 투자수요를 확인하여 본 수요에 대응하는 추경 예산(국비 700억원, 총 투자규모 4,000억원)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임.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본 사업 2026년도 예산 수립을 위해 2026년도 신규 투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6개 업종(기존 4개 업종+로봇·방산 분야)에 대해 총 1조 2,055억원의 투자수요를 확인하여 2026년 예산(국비 1,000억원, 총 투자규모 6,000억원)을 수립하였고, 해당 예산을 모두 연내 소진 가능하다는 입장임.

[6개 업종에 대한 투자 수요조사 결과]

(단위: 개사, 억원)

구 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계
투자기업	7	2	5	6	5	8	33
투자수요	3,495	201	5,071	1,228	298	1,762	12,055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해당 수요조사는 단지 6개 업종에 대한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수요를 조사한 것으로서, 총 수요 1조 2,055억원 중 ① 품목요건 등을 판정하는 서면평가와 ② 필요시 진행되는 현장조사 및 ③ 투자 적합성 등을 평가하는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 기업이 투자한 금액은 투자예상 금액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으며, 예산안이 편성된 시점이 2025년도 추경 예산에 대한 사업 공고기간(7.23.~9.26.) 중이라는 점에서 실제 수요 및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40]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국내생산 촉진지원’ 사업은 2025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5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이 확정된 이후 2025년 8월 20일에서 비로소 공급망안정화 위원회가 개최되어 지원대상 및 규모가 결정되었음.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실적 등을 확인하여 10월 및 12월에 3분기 및 4분기 ‘고위험 경제안보품목’ 생산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임.[41]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추경 당시 6개월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2026년에는 1년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안을 2배로 반영하였음.

이 사업은 추경으로 예산이 확정된 이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가 개최되었고 편성된 추경 금액인 145억 5,800만원을 감안하여 지원대상 및 규모가 결정되었으며,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에 대한 기업의 생산실적 및 그에 따른 보조금 소요액 등이 집행 중인 상황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음.[42]

따라서 두 내역사업은 2025년도 투자지원금 집행 결과와 기업 선정 현황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실제 지원 가능 금액과 투자실적을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40)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2025년 추경 사업 공모 결과 실제로 접수된 투자계획은 총 1조 2,473억원으로, 예상했던 투자계획을 상회하는 규모로 접수되어, 향후 평가 절차를 감안하더라도 집행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투자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장임.

41) 이에 따라 실집행 기준, 2025년도 추경 예산액 145억 5,800만원은 전액 미집행(실집행 기준)된 상황임.

42)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당초 2025년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 국고에 반납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9.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사다리조성 사업(신규): 공정별 지원단가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사다리조성’ 사업은 시스템반도체[43] 창업 초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설계환경, 시제품 제작 등 전주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87억 5,8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4]

[2026년도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사다리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사다리조성	-	-	8,758	8,758	순증

이 사업은 16개 사무공간을 지원하기 위한 2억원과 EDA[45] 설계툴 5개사에 각각 6억원씩 지원하는 EDA 설계환경구축 30억원 및 시제품제작 및 컨설팅 55억 5,800만원으로 구성됨.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사다리조성 사업 세부내역]

가. (사무공간지원) 2억원 · 16개 사무공간 x 2,500만원 x 50% 나. (EDA 설계환경구축) 30억원 · EDA 설계툴 5社 x 6억원 다. 시제품제작(MPW) 및 컨설팅 : 55억 5,800만원 · 일반공정 10건 x 6,000만원 + 미세공정 6건 x 2억 2,500만원 + 초미세공정 5건 x 7억원 + 지원프로그램 6건 x 1,830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43)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구분되며,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시스템 반도체는 입력된 데이터를 연산・제어・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정보 저장 역할과 동시에 이를 계산하고 처리하는 기능을 함께 가진 반도체라고 할 수 있음.

44) 일반회계-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사다리조성(3171-446)(산업정책실)

45) EDA(Electronic Design Automation, 전자설계자동화)란 반도체 회로와 칩을 설계할 때 쓰는 전문 소프트웨어 툴을 의미함.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 중인 ‘시스템반도체기업 성장환경조성’ 세부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창업기업 발굴 및 기반 인프라 제공 중심의 기초 지원 체계에서 국내 파운드리 및 EDA를 활용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임.

기존 사업과 달리 사무공간 비용은 기업 자부담을 강화하여 50%만 지원하고, EDA 설계·검증 환경구축 지원비는 해외 3개사 중심에서 국내 2개사를 추가하여 총 5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임.

또한 국내외 파운드리 중심의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한 기존 사업과 달리 AI 첨단 공정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국내 파운드리 3개사를 집중 지원할 계획임.

이를 통해 지원되는 시제품 제작(MPW, Multi Project Wafer)[46] 및 컨설팅 비용은 팹리스 기업(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MPW 제작 비용 중 MASK 비용[47] 및 디자인서비스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임.

[기존사업과의 비교]

구분	기업성장환경조성(기존)	기업 성장사다리조성(신규)	비고
사무공간	비용 100% 지원 (입주 2년 이내)	비용 50% 지원	자부담 강화
설계·검증 환경	해외 3社 중심 (시놉시스, 케이던스, 지멘스)	해외 3社 + 국내 2社 (지원 대상 확대)	국내 EDA 기업 육성
시제품제작	국내외 파운드리	국내 파운드리 3社 + AI등 첨단공정 선택과 집중 지원	국내 공급망 강화
생태계 강화	-	설계+성능 검증 지원체계 신설	창업초기기업 全用
	투자유치, 세미나, 컨설팅 등	투자유치, 세미나, 컨설팅 등	-
	전시, 검증보드 지원 등	전시, 검증보드 지원, 해외전시공동관 운영	-

자료; 산업통상부

46) MPW(Multi Project Wafer, 멀티 프로젝트 웨이퍼)란 여러 개의 칩을 한 장의 웨이퍼에 같이 실어 시제품을 만드는 것임.
보통 팹리스(칩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 기업들이 자기 설계가 실제로 잘 동작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 웨이퍼 하나를 각자 제작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억~수십억의 비용이 듦. 이에 MPW 방식을 통해 여러 팹리스가 비용을 나눠 공동 제작하게 할 경우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음.

47) 회로 패턴을 웨이퍼에 새길 때 쓰는 원판 제작비용을 의미함.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AI 및 고성능 반도체 분야의 미래 성장 잠재력 및 시스템 반도체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임을 고려하여, 일반공정의 지원단가를 낮추고 대신 미세공정 및 초미세공정 부문에 지원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5년도 본예산 기준 'MPW 시제품제작 및 컨설팅' 사업의 지원 건당 단가에 비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다소 높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음.

[2025~2026년 MPW 시제품제작 및 컨설팅 사업 세부계획 비교]

2025년	2026년
시제품제작(MPW) 및 컨설팅 : 50억 9,500만원 · 일반공정(23건x6,000만원)+미세공정(3건x1억 8,500만원)+초미세공정(5건x5억 6,000만원)+컨설팅(20건x1,800만원)	시제품제작(MPW) 및 컨설팅 : 55억 5,800만원 · 일반공정 10건 x 6,000만원 + 미세공정 6건 x 2억 2,500만원 + 초미세공정 5건 x 7억원 + 지원프로그램 6건 x 1,830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그러나 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른 공정 및 nm(nanometer, 나노미터)별 MPW 평균단가를 살펴보면, 특히 미세공정과 초미세공정의 MPW 지원단가는 평균단가에 비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음.

[MPW 평균단가 및 지원단가]

(단위: 백만원)

구분(nm)	일반공정					미세공정			초미세공정		
	180↑	130	90	65/55	40	28	22	14/12	10/8	5	5↓
MPW 평균단가	약 40~50	약 60~70	약 80~90	약 140~150	약 170~180	약 300	약 400	약 700	약 1,300	약 3,000	약 4,000
지원단가 (2025년)	60					185			560		
지원단가 (2026년)	60					225			700		

자료: 산업통상부 및 반도체산업협회

물론, 일반공정 또한 180nm부터 40nm까지의 평균단가에 비해 지원단가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미세공정과 초미세공정의 지원단가는 최소 평균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음.

이러한 예산 편성은 일반공정에서의 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음에 따라 예산의 효율성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5nm 이하의 초미세공정은 고성능·저전력 CPU 나 AI 칩 등에 사용되는 시제품 제작 공정이고 향후 AI 및 고성능 반도체 분야의 미래 성장 잠재력 및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공정의 지원단가를 낮추고 대신 미세공정 및 초미세공정 부문에 지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예산 상황, 기업 수요, 공정별 단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0. 첨단반도체양산 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R&D) 사업: 장비 구축비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된 문제 등

가. 개 요

‘첨단반도체양산 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R&D)’ 사업은 반도체 소부장 육성 및 칩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양산연계형 반도체 소부장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56억 3,700만원(1,156.0%)이 증액된 1,157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48)]

[2026년도 첨단반도체양산 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첨단반도체양산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R&D)	100	100	115,737	115,637	1,156.0

이 사업은 2025년도 예산인 1억원으로 민-관 협력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하반기에 법인 설립을 목표로 산업부와 SK 하이닉스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2026년도 첨단반도체양산 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R&D) 사업 세부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1억원	■ 미니팹 운영체계 구축 : 1억원 ① (운영비) 미니팹 구축 제반(운영계획) 및 비영리재단 초기 운영인력 인건비 등 소요	1,157억 3,700만원	■ 미니팹 인프라 본격 운영(2027.上) 이전 사전 준비(장비구축 및 서바스 기획) 소요 ① (장비구축비) 1,152억 6,000만원 (양산타당성 서비스 필수 전공정 및 계측장비 등 및 양산 중 장비 도입을 위한 감정평가비 등) ② (운영비) 4억 7,700만원 (양산타당성 평가, 클린룸 임대, 기술 로드맵 수립, 인력양성 등 서비스 운영 준비 및 재단인력 인건비)

자료: 산업통상부

48) 일반회계-첨단반도체양산 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R&D)(3171-457)(첨단산업정책국)

2026년도 예산안은 운영비 4억 7,700만원과 장비구축비 1,152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장비구축비를 통해 노광장비 2대, 식각장비 1대, 확산장비 1대, 증착장비 1대, 세정장비 4대 및 계측장비 2대를 구축할 계획이고, 이를 포함한 2031년까지 장비구축 계획은 아래와 같음.

[2026~2031년 장비구축 계획]

(단위: 백만원)

공정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노광장비 (2대)						
식각장비 (4대)						
확산장비 (5대)						
증착장비 (7대)						
세정장비 (14대)						
계측장비 (8대)						
장비대수	11대	12대	6대	5대	4대	2대
장비가격	115,260	79,830	36,950	26,200	28,080	11,700
훅업비*	-	550	600	300	250	300
총액	115,260	80,380	37,550	26,560	28,330	12,000

주) 훅업비는 미니팹 내부 공조설비와 장비를 연결하기 위한 장비구축비용으로, 장비 대당 5,000만원 계산
자료: 산업통상부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 도입 예정으로 구축계획이 이미 파악된 11대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걸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5년 10월 기준, 2026년에 도입 예정인 장비 11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 장비에 해당함.[49]

따라서「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이하 '지침')」제5조 제4항제1호에 따라, 2025년에 개최되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본심의를 거쳐 11대 장비에 대한 예산안을 2026년에 편성하여야 함.[50]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2026년 상반기 협약 체결 후 상시 심의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하여 예산 편성 이전에 본심의를 거치도록 지침에서 규정한 취지는 고가 및 대형 연구장비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실제 연구현장 및 산업계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며, 우선순위에 맞는 장비 도입을 먼저 진행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이러한 지침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26년 도입 예정이 구체화된 11대 장비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본심의를 거쳐 구축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임.

---

49)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11대 장비는 기획 과정에서 도출된 것이며, 주관기관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심의 진행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입장임

50)「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5조(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문가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심의위원회 본심의(이하 "본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는 당해연도에 개최되는 본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의위원회 상시심의(이하 "상시심의"라 한다) : 예산편성 단계에서 구축계획이 파악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집행 단계에서 상시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본심의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소관 연구기관의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장이 공문으로써 해당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둘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비영리재단의 정관 내용의 구체화, 장비유지보수 책임체계 확립 및 장비구축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 등 보다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해 보임.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의 전제조건으로 ① 비영리재단 이사장 선임에 대한 정관 내용을 구체화하고, ②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소요재원에 대한 내용을 재단 설립 전에 민간참여기업과 협의하며, ③ 민간 참여기업과의 출자협약에 '양산 중 장비' 구매금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영리재단의 지출규모를 확정하고, ④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간참여기업의 유형자산 처분이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장비구축비용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0월 현재 비영리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음에 따라 상술한 4가지가 모두 해소되지 않은 채 2026년도 예산안이 편성된 것으로 보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의 전제조건]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은 비영리재단(미니팹)의 운영에 대한 이하의 사항들을 전제로 시행함을 제시함
- **비영리재단 이사장 선임에 대한 정관 내용을 구체화할 것**
- 비영리재단의 공공성 및 사업 합목적성을 위해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에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참여를 정관에 이사선임 등의 형태로 명시할 것
- 비영리재단 정관에 재단해산에 대한 사유와 절차를 명시할 것
  ※ 재단 설립목적 달성 또는 추가적인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재단해산 및 재산청산원칙과 절차 등
- **비영리재단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책임과 소요재원에 대한 내용을 재단설립 전에 민간참여기업과 협의할 것**
- 비영리재단에 대한 파견전문인력 계획은 민간 참여기업과의 협의 하에 원안을 유지하며, 민간 참여기업의 모든 형태의 출자는 재단설립 전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형태로 명시할 것
- 미니팹 양산 타당성 검증의 효과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영리재단의 5년 단위의 중장기 장비도입 및 개선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할 것
- 정관상의 사유가 없으면 비영리재단에 대한 정부출연은 사업기간으로 종료되며, 사업기간 이후 민간 및 지방비 출연에 대해서는 협의에 따라 재단설립 전에 정관 등에 명시할 것
- **민간참여기업과의 출자협약에 '양산 중 장비' 구매금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비영리재단의 지출규모를 확정하되,**
- **사업추진 과정에서 '양산 중 장비'에 대한 민간참여기업의 유형자산처분이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정평가결과에 따라 장비구축비용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것**

* 감정평가금액 대비 고가매입으로 인한 비영리재단의 손실(기회비용) 발생

자료: 첨단반도체양산 연계형 미니팹기반구축(R&D)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동 사업 협약 과정에서 장비 구매금액 등 지출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적용 대상으로서 관리될 계획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장비구축비 등 지출 규모는 지속 조정될 것이라는 입장임.

따라서 향후 비영리재단의 정관 내용의 구체화, 장비유지보수 책임체계 확립 및 장비구축비용에 대한 지속적인 조정 등 보다 철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해 보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세 출>

11.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 해외연구기관과의 국제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은 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혁신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1억 5,600만원(63.2%)이 증액된 158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51)]

[2026년도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R&D)	36,935	36,935	69,947	33,012	89.3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9,735	9,735	15,891	6,156	63.2

이 사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이고, 2025년에는 41개 계속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가 지원되었으며, 2026년에는 이 중 계속 진행될 예정인 12개 계속과제 대상 65억 2,000만원 외에도 36개 신규과제를 대상으로 93억 7,1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임.

[2026년도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 세부내역]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97억 3,500만원	-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 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혁신 지원 ·(계속) 41개 x 2억 3,750만원 x 12/12개월 ≒ 97억 3,500만원	158억 9,100만원	- 지역혁신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 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혁신 지원 ·(계속) 12개x5억 4,330만원x12/12개월=65억 2,000만원 ·(신규) 36개x3억 4,710만원x9/12개월=93억

51)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3362-301)(지역경제정책관)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7,100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참고로, 2025년 본예산으로 진행 중인 과제 41개는 해외 기업·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아닌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가 목표임에 따라 수소에너지, 모빌리티 산업 육성, 디지털 트윈 확산 및 AI 플랫폼 개발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연구과제 수행기관은 국내 산·학·연으로만 구성되어 있음.

[2025년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 41개 수행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국비	매칭
수소에너지 산업 기반의 개방형 혁신 거점 구축 및 핵심기술 개발	(재)충남테크노파크 등 1개	242	520
스마트빌딩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씨앤테크	133	75
무수 액화 암모니아 전기분해 효율 및 내구 개선을 위한 전용 전극을 채용한 10 Nm3/h급 수소추출기 개발	주식회사 에이이에스텍 등 1개	255	106
광주 에너지신산업 개방형 혁신생태계 OpenLAB 조성사업	(재)광주테크노파크 등 1개	459	556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 산업 생태계 구축	(재)전북테크노파크 등 1개	102	1,535
딥러닝을 이용한 상용차 및 특수차량용 인재 사고 예방 엣지 디바이스 시스템 개발	오토아이티 (주) 등 1개	191	106
사이버 보안 인증 기준 (ISO/SAE 21434)에 대응하는 EV용 BMS와 이를 적용한 다목적 배터리팩 제품 모듈 개발	한세모빌리티 주식회사 등 1개	191	151
스마트해양서비스 혁신기업 연계 글로벌 시장경쟁력 강화	텔레픽스 주식회사 등 1개	102	69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를 이용하는 대형 병렬 배터리 시스템의 화재안전기술 개발	주식회사인터맥 등 1개	205	149
전동화 농기계용 구동 모터 및 인버터 개발	(주)글로벌엔지니어링 등 1개	357	76
스마트 전동화 농기계용 조향 및 제어모듈 개발	(주)호룡 등 2개	460	197
전력망 응동 운영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연계 유연자원 시스템 구축 및 실증	(주)엘시스 등 1개	166	215
오픈랩 연계형 스마트안전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재)대전테크노파크	512	476
대구 모빌리티 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경북대학교산학협력단 등 2개	346	485
수소 모빌리티용 100kW급 연료전지 파워팩 운전 평가장치 기술개발	(주)하이어스 등 1개	254	110
스마트 보행안전 서비스 플랫폼 개발	삼인에이치엔티	133	71
기체구조물 패스너 양방향 조립 공정 및 시스템 개발	미래항공	103	51
대형 기체구조물 조립용 드릴링-패스닝 멀티 공정 및 시스템 개발	디엔엠항공 등 1개	128	61

(단위: 백만원)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국비	매칭
액체생검 데이터 기반의 패혈증 임상결정지원시스템(CDSS)개발 및 유용성 검증	주식회사 스몰머신즈 등 1개	245	93
도심형 에너지 공유 서비스 실증을 위한 피크 시프트 운영시스템 개발	주식회사 그리다에너지 등 1개	230	113
디지털 트윈 확산을 위한 5G 특화망 단말기 개발	주식회사 시아이솔루션 등 1개	103	54
OpenLAB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개방형 혁신 지원 사업	(재)강원테크노파크 등 5개	520	547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기반 뇌동맥류 검출 솔루션 개발 및 사업화	뉴로핏 주식회사(강원지사)	154	76
고도화된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의 사업화를 위한 전방위인지 다중센서시스템 개발	이인텔리전스 주식회사 등 1개	191	165
웨어러블을 사용한 에너지 산업 근로자 건강 안전 모니터링 솔루션	주식회사슈파스 등 1개	255	134
항공기 구조물 조립 자동화 개발을 위한 병렬 및 직렬기구 로봇 기반 공정 시스템 개발 및 개방형 연구실 구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28	247
DID를 사용한 소규모 건축물 에너지 관리 통합시스템	(주)가민정보시스템 등 2개	230	84
배터리모듈 혼합냉각 열관리 및 열폭주 완화 시스템 개발	엔비티에스주식회사	254	254
지능형 에너지 관리 제조 AI 플랫폼 개발	주식회사 아이젠 등 1개	255	110
충북 지능형첨단부품산업의 디지털전환 거점 구축 사업	(재)충북테크노파크	306	495
전력구동 모빌리티용 전지 및 에너지생산·저장 융복합산업 개방형 혁신사업	(재)울산테크노파크 등 2개	205	544
해양위성정보 기반 스마트해양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구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2개	11	306
해양수산 공공수요 기반 스마트해양서비스 플랫폼 개발 및 실증	스마트엠투엠 등 2개	229	98
산업단지용 IOT기반 무정전 전기안전대응 센서 개발 및 통합관제시스템고도화	(주) 에프에스	141	70
진공시스템 저압주조 공법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인클로저 원가절감형 부품개발	명화공업(주) 등 1개	307	130
LVDC 농공단지 마이크로그리드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최적운영 기술개발 및 실증	주식회사 지엔이피에스 등 1개	264	270
전남 지역혁신클러스터 에너지신산업 OpenLAB 고도화 사업	(재)전남테크노파크 등 1개	233	126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수요기반 산업데이터 자산 통합 데이터셋 구축	스마트뱅크 등 1개	117	49
자율주행 드론 시설물 안전점검관리 시스템 개발	주식회사 시에라베이스 등 3개	357	132
자율주행자동차요소장치 검사시스템 개발	계양정밀 등 6개	460	1,533
미래모빌리티를 위한 교통안전관리 시스템 기술개발	(재)경북테크노파크 등 1개	102	495
합계		9,735	11,134

자료: 산업통상부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2025년까지와는 달리 2026년에는 해외 기업·기관과의 기술개발, 투자유치,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라 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연구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보다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해외 투자유치 및 수출 등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파트너 간 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이 사업은 지역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과제가 수행되었던 2025년과 달리 2026년에는 이미 구축된 오픈랩(Open-Lab)을 중심으로, 해외 기업·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및 투자유치·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2025~2026년 거점기관 개방형혁신 사업 목적 비교]

연도	사업목표
2025년	클러스터의 산·학·연 연계협력 활성화 및 오픈랩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개방적 혁신 지원
2026년	기 구축된 오픈랩을 중심으로 해외 기업과이 연계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수행, 추후 해당 해외기업·기관의 투자유치 및 수출 활성화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산업통상부는 2026년부터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해외 연구기관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는 방향으로 사업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수행 중인 41개 과제는 모두 국내 산·학·연 연구기관 및 지역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각 지역의 혁신 수요는 반영되고 있을지라도, 해외 연구기관이나 글로벌 기업과의 공동연구 또는 협력 체계는 부재하여 단기간에 이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우선 사업 공고 및 과제 평가 단계에서 해외기관의 참여를 핵심 평가요소 및 예산 구조의 일부로 내재화 하여야 하는데, 이는 공동기획 및 과제공모 단계에서 해외기관의 매칭비율 조정 및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특허, 기술이전 등 지적재산권(IP) 문제가 과제를 수행하기 이전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전 행정절차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단순 연구개발 과제의 성격에서 벗어나 기술교류나 공동 실증 및 향후 투자유치 등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해외기관과의 협력이 일회성

기술개발 과제에 머물 경우 단기간의 정량적 성과(논문, 특허 등)에만 매몰될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글로벌 기술이전이나 산업화 연계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 설계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외국은 우리나라와 회계연도가 달라 4월 또는 10월에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국가들이 있는데, 한국의 신규과제 공고 시점이 통상 3월인 점을 고려하면, 해외기관의 참여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음.[52)]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 사업이 국제공동연구의 제도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회계연도 불일치에 따라 과제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연구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보다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해외 투자유치 및 수출 등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과 해외 파트너 간 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임.

52) 한국과 주로 협력하는 주요 해외 선진국의 회계연도 시작시점을 살펴보면, 프랑스 및 독일은 1월 1일에 시작하여 한국과 일치하지만, 영국 및 일본은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이고, 미국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0일까지임. 이로 인하여 해외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수행되는 R&D 과제는 회계연도 불일치로 인하여 과제 협약이 연말에 체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12. AX 실증밸리 조성(R&D) 사업(신규): 지방비 확보 노력 등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가. 개 요

‘AX 실증밸리 조성(R&D)’ 사업은 AI 기반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및 제조 고도화기술, 에너지산업 AX 기술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0억 3,3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3)]

[2026년도 AX 실증밸리 조성(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AX 실증밸리 조성(R&D)	-	-	7,033	7,033	순증

이 사업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사업 21억 1,000만원과 ‘AI 기반 에너지 운영화 최적화 및 안전관리’ 사업 49억 2,300만원 등 총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됨.[54)]

[2026년도 AX 실증밸리 조성(R&D) 사업 세부내역]

① 자율주행모빌리티플랫폼개발 : 21억 1,000만원, 순증(신규사업)
 가. (지능형 SDF 및 서비타이제이션) 신규 3개 x 5억 3,867만원 x 9/12개월 = 12억 1,200만원
 나. (차세대SDV플랫폼) 신규 4개 x 2억 9,933만원 x 9/12개월 = 8억 9,800만원

② AI기반에너지운영화최적화및안전관리 : 49억 2,300만원, 순증(신규사업)
 가. AI분산전력망브릿지핵심기술개발(33억 5,700만원)
  · 신규 : 18개×2억 4,866만원×9/12개월 = 33억 5,700만원
 나. AI기반지역분산에너지수요-공급데이터전처리기술개발(8억 9,500만원)
  · 신규 : 1개×11억 9,300만원×9/12개월 = 8억 9,500만원
 다. ESS용배터리시스템최적설계및화재방지AI기술개발(6억 7,100만원)
  · 신규 : 1개×8억 9,400만원×9/12개월 = 6억 7,100만원

자료: 산업통상부

5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AX 실증밸리 조성(R&D)(3541-301)(제조산업정책관)

54)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하여 ‘AI 기반 에너지 운영화 최적화 및 안전관리’ 사업 49억 2,300만원은 산업통상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었음.

내역사업인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사업은 자기 학습형 자율주행 시스템과 차량 플랫폼 등 모빌리티 AX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도심 환경에 대응이 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 및 맞춤형 모빌리티 제조 AX 기술 확보를 지원하는 것이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 동안 600억원이 투입되며, 그 중 국비는 360억원임.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사업 개요]

○ (전체 정부출연 사업비) 360억원
○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총 3년)

(단위: 억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국비	21.10	205.9	133	360
지방비	7.03	68.63	44.34	120
민간	7.03	68.64	44.33	120
총사업비	35.16	343.17	221.67	600

자료: 산업통상부

내역사업인 **‘AI 기반 에너지 운영화 최적화 및 안전관리’** 사업은 차세대 전력망 구축과 탄소중립 실현 및 미래지향적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AI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운영 최적화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 4년 동안 1,069억원이 투입되며, 그 중 국비는 695억원임.

[AI 기반 에너지 운영화 최적화 및 안전관리 사업 개요]

○ (전체 정부출연 사업비) 695억원
○ (사업기간) 2026년 ~ 2029년(총 4년)

(단위: 억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계
국비	49.23	460.77	120	65	695
민간	19.5	169.5	44	34	267
지방비	7	66	18	16	107
총사업비	75.73	696.27	182	115	1,069

자료: 산업통상부

나. 검토의견

첫째,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AI 기반 에너지 운영 실증을 추진하는 지역연계형 사업인 바, 실증환경 구축 및 확산 단계에서 사업의 성과가 제한되지 않도록 지방비 확보를 포함하여 사업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AI 기반 에너지 운영 기술의 실증과 확산을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개별 기술개발(R&D) 성과를 실제 지역 현장에 적용·운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임.

이에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사업에 2026년 투입 예정인 지방비가 7억 300만원이고, 'AI 기반 에너지 운영화 최적화 및 안전관리' 사업에는 7억원임.

그러나 2025년 10월 기준 국비는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나, 지방비에 대해 광주광역시는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지자체 예산안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다만, 광주광역시에서 시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점은 2025년 11월 중순 경으로,[55] 해당 시점은 이 사업 정부안에 대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인데, 이 경우 국비는 확보되더라도 광주광역시에서 매칭하여야 할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만일 지자체 예산이 2026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우려도 있음.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비가 확보되면 연구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나, 이 사업은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및 에너지 분야의 AX 실증밸리 조성을 목표로 하는 지역연계형 사업인 만큼, 지방비가 확보되어 국비와 동시에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산업통상부 및 광주광역시는 실증환경 구축 및 확산 단계에서 사업의 성과가 제한되지 않도록 지방비와 민간 자금이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55) 출처: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gwangju.go.kr/main.do)

둘째,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제 수행 시점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계획된 1차년도 연구 수행기간 9개월과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이 사업 중 일부 과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진행될 다부처 사업으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과제와 연계되어 진행될 예정임.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개요]

·(사업목적) 미래사회 기반 선도와 사회 전반의 AX를 촉진하는 AI 기술 확보 및 개방형 AI 실증 인프라 구축을 통한 AX R&D·실증의 핵심 거점 조성
·(기간/예산) 5년(2026~2030) / 6,000억원(국비 3,600(과기부 2,545, 산자부 1,055), 지방비 1,473, 민자 927)
·(사업내용)
① 광주형 '모두의 AI' 구현 (과기정통부/총사업비 1,010억원)
- 시민참여·시니어케어·공공미디어 등 일상생활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술 개발·실증, 도시·생활 AX(대중교통노선 최적화, 비침습 임산부 건강관리 등)
② 자율주행 AX (과기정통부-산업부/총사업비 1,597억원)
- 기존 규칙 기반 시스템을 넘어, 다양한 주행상황에서 스스로 학습·판단할 수 있는 딥러닝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 유연생산을 위한 인간-로봇 협업 기반 차량 제조 공정 최적화(산업부)
③ AI 기반 에너지 운영 최적화·안전 (산업부/총사업비 1,069억원)
- 분산에너지 확산으로 인한 전력망 공급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기반 전력망 자율운영 기술 및 ESS 화재 예방 기술 개발
④ AX 인프라 조성 (과기정통부/총사업비 2,234억원)
- AI 개발부터 실증·사업화 One-Stop 지원센터(AI InnoSpace) 및 AI 연구개발·실증 지원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GPU) 제공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과제를 9개월분으로 계획한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이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일정 및 과제 공고 일정 등을 고려하여 4.5개월분 예산만 편성하였음.

[AX실증밸리조성(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구개발활동비등(360-05): 169억 6,700만원
- '모두의 AI' 구현: 63억 8.500만원
· [광주형 '모두의 AI' 개발] 3개 과제 × 42억원 × 4.5/12개월
· [도시·생활혁신 AX] (지정) 2개 과제 × 16억 5,000만원 × 4.5/12개월 + (신규, 자유) 5개 과제 × 2억 2,550만원 × 4.5/12개월
- 미래 모빌리티 AX 혁신: 63억 5,200만원
· [자율주행 모빌리티 AX 핵심 기술개발] 2개 과제 × 84억 7,000만원×4.5/12개월

- AX 촉진 거점 구축 (42억 3,000만원) · [AI InnoSpace 구축] 국산 AI 반도체 검증장비 1개 × 14억 6,700만원 × 4.5/12개월 · [AX R&D 인프라 제공(GPU)] GPU 서버 31개 × 3억 1,660만원 × 4.5/12개월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산업통상부도 2025년 4분기 또는 2026년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을 예정이므로,[56] 산업통상부가 계획한 9개월분 예산이 확정될 경우 2026년 4월까지 과제 공고 및 협약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연구 일정은 다소 촉박할 것으로 생각됨.[57]

따라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과제 수행 시점 일치 여부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편성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과제의 1차년도 연구 수행기간 9개월 및 예산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56)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57) 본 검토보고서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과제공고·협약 절차를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 참조

13.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 사업(신규): 운영비성 경비와 사업비 간 예산안 상호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 사업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시설 확충을 통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확대가 가능한 기업에 공정설계・개선・자동화, 안전, 유지・보수, 측정・분석 등과 관련한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입자금과 재자원화 국・내외 거버넌스 운영을 보조·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7억 7,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8)]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증감	
	본예산 (A)	추경	예산안 (B)	(B-A)	(B-A)/A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	-	-	3,777	3,777	순증

핵심광물 재자원화란 이미 사용했거나 버려진 자원에서 중요한 광물을 다시 회수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폐배터리, 전자제품, 산업 폐기물 등에서 리튬, 코발트, 니켈 등 핵심광물을 뽑아 내어 새로운 배터리나 전자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의미함.

이는 수입에 의존하던 희귀광물을 국내에서 확보할 수 있고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친환경・산업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최근 각광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3년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통해 핵심광물 특정국 의존도를 2023년 80% 대에서 2030년까지 50%로 낮추고 재자원화율을 2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음.

이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 폐PCB 등을 재자원화 하기 위한 시설 및 장비 18set를 대상으로 3억 3,000만원의 단가를 설정하여 60%의 보조율로 34억 4,9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외에 보조사업 심사 및 평가비 200만원과 인건비 및 경비 1억 7,500만원, 국제 포럼 등 행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중 내역사업인 ‘재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에 편성된 인건비 및 경비 1억 7,500만원은 동 사업 수행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자원화사업팀 4명을 대상으로

5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5446-314)(자원산업정책국)

편성된 운영비성 경비이고, 내역사업인 재자원화 국내외 거버넌스 운영 사업에 편성된 포럼 및 국제협력 비용 1억 5,000만원은 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임.

[2026년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육성지원 사업 세부내역]

○ 민간자본보조(320-07): 36억 2,700만원 가. 재자원화 시설 지원(36억 2,700만원) · 재자원화시설·장비 18set × 3억 2,000만원 × 60% = 34억 4,900만원 · 보조사업 심사·평가 2회/년 × 100만원 = 200만원 · (인건비) 인력 4명 × 8,400만원(年보수) × 업무일수 160일/365일 = 1억 4,700만원 · (경비) (인력 4명 × 출장횟수 96회 x 여비 5만원) + (인력 4명 x 출장횟수 96회 x 숙박비 7만원 x 1/3) = 2,800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1억 5,000만원 가. 재자원화 국내외 거버넌스 운영(1억 5,000만원) · 포럼 개최 1회 × 5,000만원=5,000만원 · 재자원화 원료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1억원×1회 = 1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나. 검토의견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인건비 및 경비 등 경상보조금 성격의 경비는 민간경상보조로 비목을 변경하고, 현재 편성된 운영관리비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조정하되, 재자원화 시설·장비 등 사업비로 변경하여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재자원화사업팀 4명이 총괄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재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의 인건비 1억 4,700만원, 경비 2,800만원과 ‘재자원화 국내외 거버넌스 운영’ 사업의 예산 1억 5,000만원은 모두 한국광해광업공단 재자원화사업팀 4명을 대상으로 편성된 것임.

우선, 이러한 인건비 및 경비는 경상보조금의 성격에 해당하므로, 민간자본보조(320-07목)로 편성된 보조사업 심사·평가비 200만원과 인건비 1억 4,700만원, 경비 2,8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이 사업은 새로이 인력을 채용하여 진행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 인력 4명이 공단의 정규 예산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해당 신규사업에 대한 전담기관이라는 이유로 연(年)보수 8,400만원을 기준으로 이를 일할 계산하여 160일 만큼의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재자원화 국내외 거버넌스 운영’ 사업의 포럼 개최 및 국제협력 예산 1억 5,000만원에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과 관련하여 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기술협력, 정보교류, 정책제안 및 국제 협력기반 구축 등을 위한 국내외 기업・협회・기관・정부 등이 참여하는 행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숙박비, 여비 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재자원화 시설 지원’ 사업의 경비 2,800만원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

한편, 정부는 2025년 3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방향」을 통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율을 20%로 제시하였는데, 2024년 기준 재자원화 수준이 약 7%임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함.[59]

따라서 통상적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약 3% 내외 수준에서 운영관리비가 편성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인건비, 경비 및 보조사업 심사・평가비에 편성된 운영비성 경비를 사업비의 3%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재자원화 시설・장비 등 사업비로 변경하여 계획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9) 또한 핵심광물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고,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핵심원자재 재활용 목표를 25%로 설정하는 등 글로벌 주요국들도 전략적으로 재자원화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융자계정)】

<세 출>

14.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과거 지원된 융자금의 회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가. 개 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은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석유·가스 및 해외광물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국내대륙붕 포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20억 1,700만원(82.1%) 증액된 71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60]

[2026년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39,000	39,000	71,017	32,017	82.1

이 사업은 탐사사업 융자수요 944억 4,000만원 및 개발·생산사업 융자수요 1,829억 7,200만원에 조정률 25.6%를 적용하여 710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 세부내역]

ㅇ 2026년 예산안 : 710억 1,700만원
- (요구) 13개 탐사사업(특별융자 지원), 8개 개발·생산사업(일반융자 지원)의 융자소요액
- (산출) 탐사사업 융자소요액 241억 7,500만원(융자수요 944억 4,000만원 × 조정률 25.6%) + 개발·생산사업 융자소요액 468억 4,200만원(융자수요 1,829억 7,200만원 × 조정률 25.6%)

• 탐사사업 융자수요(944억 4,000만원) = (7개 정책적 중요사업 투자수요 1,409억 3,800만원 × 지원비율 50%) + (투자가능성이 높은 6개 일반사업, 투자수요 799억 300만원 × 지원비율 30%)

• 개발·생산사업 융자수요(1,829억 7,200만원) = (7개 정책적 중요사업 투자수요 2,742억 7,300만원 × 지원비율 50%) + (투자가능성이 높은 1개 일반사업, 투자수요 1,527억 8,100만원 × 지원비율 30%)

6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융자계정)-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5447-301)(자원산업정책국)

융자는 석유와 광물, 일반융자와 특별융자로 구분하여 이루어지며, 산업통상부가 승인할 경우 융자기간 연장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는 15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함.

참고로, 일반융자는 상환금 및 상환기간이 확정된 융자로 원금균등 분할상환이 원칙이나, 특별융자는 상업적 생산 성공 시 융자원리금에 더하여 특별부담금을 추가로 징수받게 됨.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상세조건]

구분		석유	광물
일반 융자	조사(탐사)	-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개발·생산	10년 이내(거치기간 5년이내)	15년 이내(거치기간 5년 이내)
특별 융자	조사(탐사)	15년 이내(거치기간 포함) ※ 산업부 승인시 융자기간 연장 가능	

자료: 산업통상부

또한 해외자원개발 탐사 사업은 사업성공에 대한 리스크가 크고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하는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61] 반대로 상업적 생산에 성공할 경우 특별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음.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자원개발 융자사업의 특성상 산업통상부의 승인 시 융자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사업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병행되고 있으므로, 산업통상부는 과거 지원된 융자금의 회수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1982년부터 수행되었고, 198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예산액 5조 8,005억원 중 실제 집행되어 융자금으로 지원된 예산이 5조 6,109억원임.

그 중 2025년 9월 기준 회수된 융자원금은 2조 6,729억원이고, 회수된 이자금은 1조 7,332억원으로, 총 4조 4,062억원의 원리금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융자계정)의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및 기타민간이자수입(54-544)로 회수되었음.

다만, 개요에서 서술하였듯이 1982년부터 2025년까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

6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융자) ③ 정부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제13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및 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 또는 제13조의8제1항에 따른 투자위험보증기관이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감면된 금액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감면된 금액은 석유 융자금 중 16억 227만 6,558 달러, 광물 융자금 중 원화 141억 6,652만 7,353원, 미화 1,720만 2,969 달러임.

[1982~2025년 지원 융자금 중 감면액 현황]

(단위: 만달러, 백만원)

구분	석유	광물
원화	-	14,167
미화	160,227	1,720

자료: 산업통상부

이 중 미화의 경우 1982년 이후 2025년 현재까지 감면 당시 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정확하나, 원/달러 환율을 약 1,025원으로 잡아 계산 시 약 1조 6,741억원의 감면액이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음.[62)]

이를 고려할 때, 2025년 8월까지 지원된 총 융자금 5조 6,109억원 중 회수원금 2조 6,729억원과 감면액 1조 6,741억원을 제외한 1조 2,639억원이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982~2025년 지원 융자금 및 회수된 원리금 현황]

(단위 : 억원)

지원된 융자금	회수된 융자원금(A)	회수된 이자금(B)	회수금 (A+B)	감면액	채권액 (향후 회수예정)
56,109	26,729	17,332	44,062	16,741	15,031

주) 2025년 9월 기준
자료: 산업통상부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향후 회수가 예정되어 있는 채권액이 1조 5,031억원이고,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 회수금이 1조 7,332억원이므로 회수율은 양호하다는 입장임.

그러나 자원개발 융자사업의 특성상 산업통상부의 승인 시 융자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사업 실패 시 융자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병행되고 있어 과거 융자금이 향후 상당기간 동안 분할하여 회수된다는 점에서, 산업통상부는 향후 회수예정인 1조 5,031억원이 장기간 미회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지원된 융자원금이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수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음.

62) 원/달러 환율은 FRED(미 연방준비은행)에서 계산한 1982~2024년 평균 환율인 약 1,025원으로 잡아 계산하였음.

【기후대응기금】

<지 출>

15. 투자지원 사업: 예상 협약체결 건수를 고려한 일정 금액 감액 조정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투자지원’**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63] 향후 설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회수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액 대비 90억원(△40.9%)이 감액되었으나, 순감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기금운용계획변경) 계획액 대비 130억원이 증액되었음.[64]

[2026년도 투자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온실가스 국제감축	30,425	8,425	21,545	△8,880	△29.2
투자지원	22,000	-	13,000	△9,000	△40.9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을 통해 한국은 2030 NDC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 대비 투자지원금의 비중에 따라 분배량을 산정하는 지분방식과 연간 투자지원금 상환액과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분배량을 산정하는 금액방식을 통해 실적을 산정하게 됨.

---

63) <지원 대상 예시>

발전	열 공급	연료 교체/효율	기타
풍력, 태양광, 소수력, 조력, 바이오매스 발전, 매립가스 발전 등	태양열, 지열, 폐열회수, 바이오매스 열병합, 소각열 열병합 등	LNG 연료 교체, 고효율 모터, 교통체계 개선 등	시멘트, HFCs 등

자료: 산업통상부

64) 기후대응기금-온실가스 국제감축(산업부)(6131-311)(미래전략국, 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또한 지원규모는 소규모・중규모・대규모로 구분되고, 대규모를 기준으로 프로젝트당 최대 100억원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이나 최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함.

[투자지원 사업의 개요]

ㅇ 사업목적: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신재생, 고효율, 저탄소 설비 투자를 지원하고 향후 설비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회수

ㅇ 투자지원금 기준: 파리협정 6.4조 사업의 등록비 기준에 따른 사업 규모 구분

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감축량 기준 (tCO2-eq/yr.)	15,000 톤 이하	15,000 톤 초과 30,000 톤 이하	50,000 톤 초과
소요예산 기준 (1년 기준)	연간 3억원 (= 1.5 만톤 x 20,000원*)	연간 6억원 (= 3.0 만톤 x 20,000원)	연간 10억원 (≒ 5.0 만톤 x 20,000원)
	* 할당배출권(KAU) 2022년 평균가 22,048원, 3년 평균(2020~2022) 24,546원		
총 규모(10년 기준)	30억원	60억원	100억원

ㅇ 지원규모: 프로젝트당 최대 100억원 이내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최대 2년까지)

ㅇ 지원분야: 산업·발전부문*을 포함하는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감축설비 설치투자를 지원하고 그에 상당하는 국제감축실적 회수
* 태양광・바이오매스・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및 수요관리, 연료전환 등

ㅇ 지원비율: 총 사업비 중 투자비의 최대 50% 이내 지원

ㅇ 지원범위: 감축설비(부대・계측설비 포함)의 구매, 설치공사(설계비 포함), 감리, 시험 운전 등을 포함하는 취득설비 투자비 대상

ㅇ 분배기준: 투자지분방식과 투자금액방식으로 분류
- 지분방식: 총 사업비 대비 투자지원금의 비중에 따라 수탁기관 분배량을 산정
- 금액방식: 연간 투자지원금 상환액과 국제감축실적 가격을 기준으로 수탁기관 분배량을 산정

ㅇ 기대효과: 국내 감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 국제감축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개도국 시장 진출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투자지원’ 사업의 2026년도 계획안은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1건과 소규모 프로젝트 지원 1건을 계획하여 총 130억원이 편성됨.

[2026년도 투자지원 사업 세부계획]

○ 투자지원 : (2025 추경) - → (2026 계획안) 130억원, 순증
(2025 당초 계획 220억원 → 제2회 추경 순감)
- (요구) 외부 지적사항(재정사업자율평가, 기재위 2024 결산, 예결위・기재위 2025 추경 등)을 반영,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 지출 구조조정
- (산출) 대규모(연간 5만톤 이상) 100억원 × 1건, 소규모(연간 1.5만톤 이하) × 30억원

자료: 산업통상부

나. 검토의견

투자지원 내역사업은 협력국의 승인 지연으로 2024년도 예산이 이월·미집행된 가운데, 향후 확정되지 않은 2건의 국제감축사업이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가정하더라도 최대 227억 3,300만원의 지원금만 필요할 예정이나, 2025년 계획현액과 2026년도 계획안은 총 383억 5,100만원이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투자지원 사업은 2024년 계획현액 296억 2,900만원 중 42억 7,800만원을 실집행(집행률 14.4%)하고, 2025년에는 당초 계획액 220억원이 순감되었음에도 2024년도 이월액 253억 5,1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된 상황임.

[2024~2025년 투자지원 사업의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A)	실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당초	수정						
투자지원	2024년	33,000	29,629	-	29,629	4,278	25,351	-	14.4
	2025년	22,000	-	25,351	25,351	-	(연말 집계)		-

주) 2025년 8월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부

이 사업을 통해 체결된 협약은 2023년에 체결된 베트남과의 협약 3건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협약 1건과 2024년에 체결된 캄보디아와의 협약 1건 등 총 5건임.

협약 체결액은 총 119억 2,000만원이고, 협약 체결과 동시에 국비지원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선금 및 10~15%에 해당하는 중도금은 현재 지급된 상황이나, 상대국의 관련 규정 미비로 최종 사업승인이 지연됨에 따라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23~2024년 체결된 협약 현황]

(단위: 백만원)

협약 체결국	선금	중도금	잔금	국비지원 금액
베트남 ①	2,100	450	450	3,000

(단위: 백만원)

협약 체결국	선금	중도금	잔금	국비지원 금액
베트남 ②	1,050	225	225	1,500
베트남 ③	364	78	78	520
우즈베키스탄	630	90	180	900
캄보디아	4,200	-	1,800	6,000
계	8,344	843	2,733	11,920

자료: 산업통상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지침」 제15조제4항에 따라, 중간평가에 따른 중도금 지급된 상황임

그 외에 G2G 협력을 위한 MOU가 몽골 대기질 개선 부문과 캄보디아 수송부문에서 체결됨에 따라 향후 이 사업을 확장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나, 위 사례처럼 구체적인 협약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은 아님.

즉, 기 체결된 5건 계약의 잔금 27억 3,300만원이 상대국의 관련규정이 정립되면 지급될 예정이고, 그 외에는 체결 예정인 협약 및 지급 예정인 지원금이 없는 상황임.

만약 MOU만 체결된 상황인 몽골 및 캄보디아 2건의 계약이 확정되어 그것이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하더라도 최대 20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2025년 계획현액 253억 5,100만원과 2026년도 계획안 130억원을 합한 금액은 383억 5,100만원이므로, 잔금 27억 3,300만원과 200억원을 합한 227억 3,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65]

65) 이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는 2025년 계획현액 253억 5,100만원은 국가재정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반납 예정이며, 2025년 4분기에 사전검토 중인 사업 및 캄보디아·몽골 MoU 후속 사업이 2026년 연내에 협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2026년도 계획안은 향후 프로젝트 협약 계획을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 규모라는 입장임.

지식재산처

Ⅰ. 개 관

1. 예산안 개요[1)]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총수입은 7,018억원으로, 전년 대비 559억원(8.7%) 증가함.[2)]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6,459	6,459	7,018	559	8.7
총수입	6,459	6,459	7,018	559	8.7

문의 : 노장원 예산결산조사관 shwkddnjs12@assembly.go.kr (02-6788-5697)

1) 예산안 개요는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이관사업 현황은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참조

2)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총지출은 6,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666억원(11.8%) 증가함.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5,641	5,641	6,307	666	11.8
총지출	5,641	5,641	6,307	666	11.8

주) 총지출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의 이관이 완료(2025.10.1.)된 예산 34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나. 예산안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은 총 2개 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1개 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829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억원(0.2%) 증가함.

[2026년도 지식재산처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811	7,811	7,829	18	0.2
합 계	7,811	7,811	7,829	18	0.2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2개 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7,901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억원(0.2%) 증가함.

[2026년도 지식재산처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7,811	7,811	7,829	18	0.2
고등·평생 교육지원 특별회계	72	72	72	-	-
합 계	7,883	7,883	7,901	18	0.2

주 1) 총계 기준
2) 총계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의 이관이 완료(2025.10.1.)된 예산 34억원이 제외된 금액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지식재산처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2개(198억 7,1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3)]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사업은 특허 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 편성되었음.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 사업은 산업재산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분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98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지식재산처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10,000
2	산업재산정보 분석플랫폼 구축(정보화)	9,871
총지출		19,871

3)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지식재산처의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사업 등 총 8개임.[4)]

[2026년도 지식재산처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B-A)/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2,286	15,547	13,261	580.1
2	대학(원) 및 실무형 IP인재 양성	1,137	2,982	1,845	162.3
3	교육환경개선(자본)	634	1,488	854	134.7
4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8,124	17,123	8,999	110.8
5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	4,109	7,476	3,367	81.9
6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허관리체계 구축	1,788	2,771	983	55.0
7	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26,853	36,698	9,845	36.7
8	WIPO 국제분담금(ODA)	1,706	2,218	512	30.0

4)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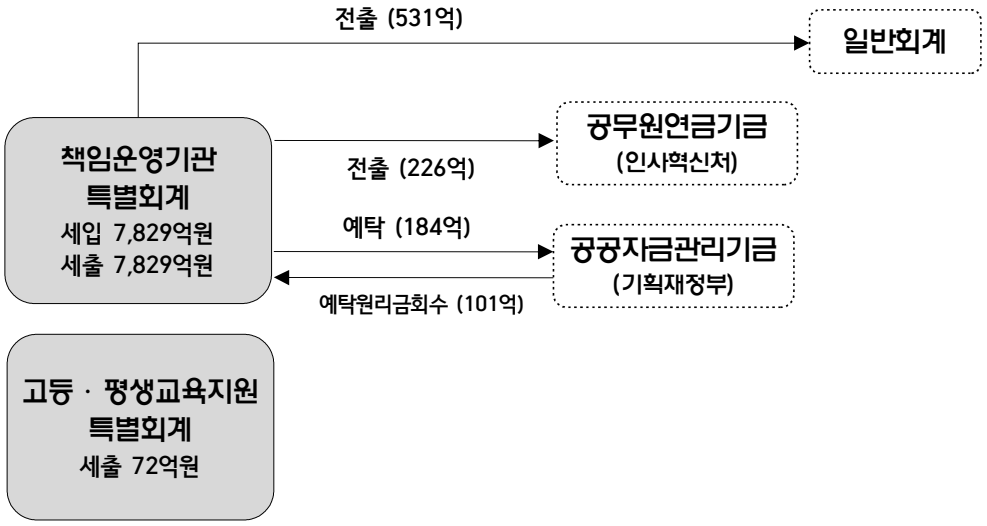
3.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지식재산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2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간,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먼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회계로 531억 3,100만원, 공무원연금기금으로 225억 8,500만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이고,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183억 7,600만원이 예탁될 계획임.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63억 300만원의 예탁 원금과 38억 500만원의 이자가 회수될 예정임.

[지식재산처 2026년도 예산안 재정구조]



주 1) 총계 기준
2) 정부안 제출시점(2025.9.3.)을 기준으로 작성

4. 2026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심사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특허·상표 등 심사지원 사업 확대, ②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확대, ③ 미상환 부실 IP담보대출의 담보물인 특허권을 매입하고 활용하기 위한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확대, ④ 지식재산 보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 강화 사업, 기술 분쟁대응 지원,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 사업을 확대한 것을 들 수 있음.

2026년도 지식재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사업은 판정운영팀 운영비 사업경비 중 간담회·MOU 체결, 유인물, 매체홍보, 여비 등 8,974만원은 다른 경비인 제경비 9,533만원 및 일반관리비 4,030만원과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재정지출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AI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사업은 신규 AI 시스템 검증비용으로 편성된 1억 9,700만원은 신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지만, 기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1억 6,000만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별도로 인력을 추가 채용해 투입하는 것은 중복 소지가 있고, 신규 AI 시스템 또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 검토한 이후, 기존 유지관리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셋째,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사업은 2026년 과제 수행 시 MVP 제작 및 검증 외에도 2~3단계까지 고려한 데이터 관리 및 제품화와 생산공정이 포함된 중장기적인 로드맵 설계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고, 향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 현황

2025년 10월 1일 「정부조직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식재산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3개 세부사업을 이관받았으며, 해당 사업들의 2026년도 예산안은 33억 8,500만원임.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사업 이관으로 2026년도 지식재산처 총지출은 6,307억원에서 6,340억원으로 증가함.

[지식재산처 2026년도 이관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기존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변경 소관부처	회계/기금	세부사업명(안)	2026년도 예산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지식재산처	일반회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3,2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	지식재산처	일반회계	총액대상 인건비	15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반회계	총액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지식재산처	일반회계	총액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13
합계						3,385

Ⅱ. 사업별 검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

<세 출>

1.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사업(신규): 민간위탁사업비와 국외업무여비의 명확한 집행목적 구분 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사업은 해외에서 무단 선점된 우리 상표나 한국 제품으로 혼동이 가능한 위조상품 피해에 대응하여 현지 시장조사 및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93억 9,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

[2026년도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	8,124	8,124	17,123	8,999	110.8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	9,390	9,390	순증

이 사업은 지식재산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모니터링 대상국가를 선정하고 판단기준을 마련하여 출원동향 조사(온라인), 시장조사(오프라인, 해외IP 센터) 및 한류편승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민간위탁사업비 93억 2,000만원과 국외업무여비 6,000만원 및 사업추진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수출기업 지식재산 역량강화(1531-302)(산업재산보호협력국)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93억 2,000만원
 · 출원동향 및 시장조사 : 10개국x1억 6,700만원+시장조사 10개국x9,700만원 = 26억 4,000만원
 · 한류편승 대응전략 수립 : 개별 대응 180건x3,300만원+공동대응 5건x1억 5,000만원 = 66억 8,000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6,000만원
 ·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6,000만원
○ 사업추진비(240-01) : 1,000만원
 ·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 1,000만원

자료: 지식재산처

이 사업은 ① 해외에서 무단선점된 우리 상표나 한국 제품으로 오인 가능한 해외 상표에 대한 출원동향 조사를 10개국을 대상으로 월 2회씩 온라인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② 위조상품 피해가 집중되는 해외 주요 10개국을 선정하여 현지 시장조사도 계획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위 2가지 조사를 통해 피해기업 및 업종을 확인하여 개별 및 공동 대응전략을 기업들이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사업 세부계획]

o (해외 상표 조사) 해외에서 무단선점된 우리 상표나 한국 제품으로 오인·혼동이 가능한 해외 상표에 대한 출원동향 조사(10개국, 월 2회)

o (현지 오프라인 시장조사) 한류편승 위조상품 피해가 집중되는 해외 주요국(10개국)에 대한 현지 시장조사 및 피해기업 정보 제공
 * 상위 10개 국가 : 인도네시아, 중국,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대만 등

o (대응전략 수립) 상표 출원동향·시장조사를 통해 피해기업·업종을 확인하여 개별·공동 대응전략 수립 지원

구분	주요내용
개별대응	한류편승 피해기업 대상 개별기업 대응전략 수립, 경고장 대응 및 권리확보 등을 종합 지원 * ① 한류편승 피해 수출기업의 피해현황 분석, ② 대응전략(무효심판, 소송, 협상 등) 수립, ③ 경고장 대응 및 ④ 출원지원 등 권리보호전략 지원
공동대응	한류편승 주요 피해업종(식품, 뷰티, 패션 등) 및 피해 빈발 주요국에 대한 공동대응 전략(3개사 이상)수립 및 공동대응* 지원 * ① 업종·국가별 한류편승행위 증거수집, ② 피해유형별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③ 형사단속·행정단속 및 ④ 민·형사소송 제기, 공동출원 등

자료: 지식재산처

나. 검토의견

민간 위탁업체의 해외 시장조사를 위한 목적의 여비와 공무원의 현지 협의·관리·감독을 위한 국외업무여비가 혼동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증빙자료를 철저히 제출하고 사후 보고서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면밀한 관리가 필요함.

이 사업은 민간 위탁업체가 선정되면,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된 93억 2,000만원 내에서 국외여비를 일부 편성하여 해외 시장조사를 수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금액은 시장조사 대상인 해외국가 10개국이 선정된 이후에 확정될 예정임.

그리고 이와 별개로 국외업무여비(220-02목) 6,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두었는데, 이는 해당 국가기관·현지로펌·유관기관 등과의 업무협의, 사업 관리·감독, 현지 단속지원 요청 등 현지 실태조사 사업의 진행을 위한 담당 공무원의 여비로 활용할 계획임.

즉, 민간 위탁업체의 해외 시장조사 활동과 정부 및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국외업무 수행이 함께 계획되어 있는데, 유사한 성격의 경비가 혼동되어 집행되지 않도록 명확한 구분과 관리가 요구됨.

먼저, 민간 위탁업체가 활용하는 사업비는 해외 시장조사, 수요처 발굴, 현지 기업 네트워킹 등 사업 목적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관련 증빙자료(출장 계획서, 조사 결과 보고서, 영수증 등)를 철저히 제출받아 관리할 필요가 있음.

반면,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이 현지 기관·로펌·단속기관 등과 협의하거나 사업 관리·감독을 수행하는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민간위탁사업비와 국외업무여비 집행 간 회계 코드와 절차를 분리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사후 보고서 검증 강화 등을 통해 혼동 및 중복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2.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사업(신규):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일부 사업경비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사업은 위조상품 여부를 확인하여 상표특별사법경찰의 위조상품 수사·단속, 온라인 플랫폼의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차단 및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8억 9,4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

[2026년도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	4,109	4,109	7,476	3,367	81.9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	-	2,894	2,894	순증

이 사업은 시스템 구축비용 15억원과 감리 및 기반비용 3억 9,600만원, 판정지원팀 신설 및 운영비 9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해당 시스템은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를[7)] 총괄하는 지식재산처가 상표권자-플랫폼-소비자원(공정위)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위조상품 판정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임.

또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2026년도 예산안 중 시스템 구축 및 감리·기반비용은 민간위탁사업자가 집행하고, 판정지원팀 신설 및 운영비 9억 9,800만원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집행할 예정임.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AI 위조상품 판정지원 : 28억 9,400만원(순증)
- 시스템 구축 15억원
- 감리·기반 비용 등 3억 9,600만원
- 판정지원팀 신설 및 운영비 9억 9,800만원

자료: 지식재산처

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지식재산 보호 인프라 구축(1531-305)(산업재산보호협력국)

7)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란 지식재산처, 상표권자 및 플랫폼 간 상표권 보호 협의체로 현재 123개 회원이 속해 있음.

세부내역 중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집행하게 될 판정지원팀 신설 및 운영비용 9억 9,800만원의 상세 계획을 살펴보면, 인건비 5억 5,760만원과 사업경비 3억 474만원 및 SW 관련 인력 인건비의 50%인 제경비 9,533만원, 일반관리비 4,030만원이 계획되어 있음.

[판정지원팀 운영비 세부내역]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산출 내역</th><th>비고</th></tr>
<tr><td rowspan="8">인건비</td><td>책임연구원</td><td>10,952,179원×1명×12개월</td><td>131,426,148원</td><td rowspan="3">학술연구용 역단가</td></tr>
<tr><td>연구원</td><td>8,397,985원×1명×12개월</td><td>100,775,820원</td></tr>
<tr><td>연구보조원</td><td>5,613,769원×2명×12개월</td><td>134,730,456원</td></tr>
<tr><td>IT프로젝트관리자</td><td>9,145,473원×1명×12개월</td><td>109,745,676원</td><td rowspan="3">SW기술자 평균임금</td></tr>
<tr><td rowspan="2">소프트웨어기술자
(IT지원기술자)</td><td>5,058,021원×1명×12개월</td><td>60,696,252원</td></tr>
<tr><td>5,058,021원×1명×4개월</td><td>20,232,084원</td></tr>
<tr><td colspan="2">소계</td><td>557,606,436원</td><td rowspan="7">-</td></tr>
<tr><td rowspan="6">사업 경비</td><td>외부 전문기관 활용 등</td><td>AI판매패턴분석이용×1식(50,000,000원),
소재 동일성분석이용×1식(50,000,000원)</td><td>100,000,000원</td></tr>
<tr><td>감정기구 구입</td><td>고정밀 촬영장비 × 1식(30,000,000)
전자현미경 등 전문기구 × 1식(20,000,000)</td><td>50,000,000원</td></tr>
<tr><td>정책조사,
연구용역 및
대외 협업 등</td><td>위조상품 환불지원체계 표준화 방안 등
연구용역×1식(30,000,000원),
간담회, MOU 체결 등×1식 (50,000,000원),
유인물비×1식(4,493,410원)</td><td>84,493,410원</td></tr>
<tr><td>홍보 및
사업성과 환류 등</td><td>매체홍보×1식(30,000,000원),
KPI측정 만족도 조사×1식(5,000,000원),
위조상품 판정 결과 데이터베이스화 및
연간보고서 발간×1식(30,000,000원)
여비(4명)×1식(5,250,000원)</td><td>70,250,000원</td></tr>
<tr><td colspan="2">소계</td><td>304,743,410</td></tr>
<tr><td>제경비</td><td colspan="3">95,337,006원(SW 관련 인력의 인건비의 50.0%)</td></tr>
<tr><td>일반 관리비</td><td colspan="3">40,301,263원(인건비, 경비(제경비 제외)의 6%)</td></tr>
<tr><td colspan="4">총계 : 997,988,115원</td></tr>
</table>

주) 볼드 표시는 ‘나. 검토의견’에서 검토한 부분임
자료: 지식재산처

나. 검토의견

판정운영팀 운영비 사업경비 중 간담회·MOU 체결, 유인물, 매체홍보, 여비 등 8,974만원은 다른 경비인 제경비 9,533만원 및 일반관리비 4,030만원과 성격이 유사하여 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재정지출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판정운영팀 운영비 중 사업경비 항목을 살펴보면, '정책조사, 연구용역 및 대외협업 등' 목적으로 간담회, MOU 체결 등을 위한 비용 5,000만원과 유인물 비용 449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홍보 및 사업성과 환류 등' 목적으로 매체홍보비 3,000만원과 여비 525만원이 반영되어 있음(총 8,974만원).

그러나 이와 동시에 제경비 9,533만원 또는 일반관리비 4,030만원이 사업경비와 별개로 편성되어 있음.

흔히 제경비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간접적인 비용으로 사무용품 구입비, 회의비, 출장비, 교통비 또는 장비 유지 보수비용 등을 의미하고, 일반관리비는 사업 관리와 운영 전반에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편성되므로, 사업경비 중 상술한 8,974만원은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사업경비로 편성된 간담회·MOU 체결, 유인물, 매체홍보, 여비 등 8,974만원은 유사한 목적으로 편성된 제경비 및 일반관리비가 있음을 고려하여 재정지출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8)]

8)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처는 '간담회, MOU 체결, 유인물비, 매체홍보 및 여비'는 직접 경비이고 제경비·일반관리비는 사업의 행정운영을 위한 기획, 경영, 총무 분야에서 발생하는 간접 경비이므로, 이들 비용은 중복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임.

3. AI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사업(신규): 기존 관리 시스템의 유지·관리 예산과 신규 시스템 검증 비용의 중복성 검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AI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사업은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 대학 등이 손쉽게 영업비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2억 2,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9)]

[2026년도 AI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기술 분쟁대응 지원	11,057	11,057	13,274	2,217	20.1
AI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	-	1,226	1,226	순증

이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동화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구축비 10억 2,900만원과 검증비 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AI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 12억 2,600만원 ·(시스템 구축 비용) 1식 x 10억 2,900만원= 10억 2,900만원 ·(시스템 검증) 1식 x 1억 9,700만원= 1억 9,700만원

자료: 지식재산처

현재 기업들에 보급 중인 관리시스템은 이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영업비밀 보호지원’ 사업에[10)] 편성된 시스템 유지 및 관리 비용 1억 6,0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6년에는 위 신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자료 유출 및 보안성을 강화할 계획이고, 두 내역사업 모두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사업수행기관임.

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기술 분쟁대응 지원(1531-303)(산업재산보호협력국)

10) ‘영업비밀 보호지원’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13억 3,300만원이고, 전액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되었음.

[AI 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시스템과 기존 시스템의 비교]

구분	기존 관리시스템	AI 시스템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영업비밀 분류	영업비밀 수동 분류	영업비밀 자동 등급 분류 수행
접근권한	문서별 사용자, 부서, 직위에 따른 접근 제한	시간·장소 등 평상시와 다른 환경에서 접근 시 AI가 판단·차단
이력관리	문서나 파일 열람 및 반출 이력관리	자료 조회·수정·반출 등 평상시 사용자 행위를 학습·분석하여 특이 행동 발생시 경고 발생
서약서관리	그룹별 서약서 업로드 및 보관	AI로 서명, 날짜 등 유효성 검사를 통해 실제 서약서인지 자동 판별

자료: 지식재산처

참고로, 2026년 연내에 AI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기존 관리시스템 이용 기업들을 AI 시스템으로 이관할 예정임.

나. 검토의견

신규 AI 시스템 검증비용으로 편성된 1억 9,700만원은 신규 시스템을 검증하기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지만, 기존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예산 1억 6,000만원이 편성된 상황에서 별도로 인력을 추가 채용해 투입하는 것은 중복 소지가 있고, 신규 AI 시스템 또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기반으로 구축될 수 있는지 검토한 이후, 기존 유지관리 예산을 적극 활용하여 검증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이 사업에 편성된 신규 AI 시스템 검증 비용 1억 9,700만원은 사업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 지식재산처는 해당 인력이 시스템 기획, 위탁 업체의 시스템 구성 및 개발 관리, AI 학습화 테스트 및 개발 후 학습 결과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이에 지식재산처는 2025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연구원 기준단가인 9,900만원에 2배를 적용하여 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개요에서 서술하였듯이, 이미 기존 관리시스템의 운영·유지 비용으로 1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신규 AI 시스템 구축 시에도 해당 비용을 활용하여 기획·관리·검증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시스템 구축 비용과 동시에 별도로 1억 9,700만원의 신규 시스템 검증 비용을 편성한 것은 중복 소지가 있다고 판단됨.

특히, 향후 기존 시스템 이용 기업을 신규 AI 시스템으로 이관할 계획인 만큼 신규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성과 호환성을 전제로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고려하면 기존 유지관리 비용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시스템 설계에도 효율적일 것임.

따라서 신규 시스템 검증을 위해 별도의 전문인력 2인을 추가 채용하여 지급하기 위한 인건비 1억 9,700만원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지식재산처는 기존에 확보된 1억 6,000만원의 유지관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11]

11) 이에 대하여 지식재산처는 신규시스템은 AI를 활용하므로 지속적인 학습데이터 업데이트 등 기존 시스템과 달리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기존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업데이트 제공 및 시스템 이관을 유도하기 위해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입장임.

4.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공정성을 위한 전문가 구성 및 체계적인 환류구조 마련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은 산업·경제·사회 전반의 문제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범국가 집단지성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1억 3,000만원(636.0%)이 증액된 82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식재산활용 (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	26,853	26,853	36,698	9,845	36.7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1,121	1,121	8,251	7,130	636.0

이 사업은 지식재산처가 직접 수행하며, 2025년까지는 전산자원 임차료 1억 4,100만원과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경비 9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부처·기업으로부터 지정공모 과제 수요를 받아 지식재산처가 이를 검토하여 활용할 예정이며 한국발명진흥회를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 과제 공모 및 1차·2차 평가, 멘토링 등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2026년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세부 계획]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11억 2,100만원	○ 임차료(210-07) : 1억 4,100만원 ·(산출) 전산자원 임차료 1억 4,100만원 ○ 관리용역비(210-15): 9억 8,000만원 ·(산출) 아이디어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9억 8,000만원	82억 5,100만원	○ 민간위탁사업비(320-02) ·(산출)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운영 82억 5,100만원

자료: 지식재산처

1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지식재산 활용(사업화, 거래, 평가) 지원(1332-303)(산업재산정책국)

이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아이디어 공모 과제 모집 및 관리, 과제별 선정평가 및 홍보, 전산 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건비 7억 5,400만원과 시스템 전면 개편 비용 2억 7,000만원, 선정평가 비용 9억원, 멘토링 비용 20억원, 공모 시상식 개최, 대국민 홍보 및 공모 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 17억 8,000만원, 포상금 14억 4,000만원 및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11억 700만원이 계획되어 있음.

이 중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11억 1,000만원은 한국발명진흥회가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으로 집행될 예정이고, 부가가치세 7억 5,000만원은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비용이며, 그 외 경비 63억 9,000만원은 홍보·멘토링 등을 위해 별도 용역업체에게 지급되거나 전문가 또는 아이디어 선정자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원될 예정임.

[2026년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산출금액
인건비		아이디어 공모 과제 모집 및 관리(책임연구원 1인, 연구원 3인), 공모과제별 선정평가 및 홍보(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1인), 전산 시스템 운영(연구원 1인, 연구보조원 2인)	754
경비	시스템	기존 플랫폼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플랫폼으로 시스템 전면 개편	270
	1차 및 2차 선정평가	1차 서면평가(200만원(전문가 5인)×400회)	800
		선행문헌·기술조사 등을 통한 공모 아이디어 유사성 판별(30만원(건당)×200회)	60
		2차 발표평가(200만원(전문가 5인)×20회)	40
	아이디어 구체화 (멘토링 지원)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해결책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아이디어 고도화지원 (변리사 등 전문가 멘토링 지원 1,000만원×200건)	2,000
	시상식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시상식 개최	300
	홍보	대국민 홍보	1,000
	상담센터 운영비	공모 상담센터 운영(8,000만원×6개월)	480
	포상금	선정자 포상(42,000만원×2회)	840
		우수 아이디어 포상(30,000만원×2회)	600
일반관리비		(인건비+경비) ×5%	357
부가가치세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10%	750
총계			8,251

자료: 지식재산처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2026년부터 부처·기업 공모 과제 아이디어 및 자유공모 아이디어를 받는 구조로 확대되어 다수 전문가가 상시 채용되는 만큼, 평가위원과 멘토의 중복 참여나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풀 구성 및 이력 검증이 필요하고, 평가·멘토링 효과를 사후 점검하여 체계적인 환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추진절차를 살펴보면, 범부처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부처·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과제를 발굴하여 과제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핵심과제 10개를 선정할 계획임.

이후 민간위탁사업자(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10개 과제에 부합하는 아이디어와 자유공모를 통한 아이디어를 국민들로부터 접수받아 1차 평가를 통하여 200개 아이디어를 선정한 후, 선행기술 및 정책조사를 거쳐 100개의 아이디어를 최종 선정할 예정임.

다음으로 멘토링 지원을 거쳐 이를 고도화한 후, 최종 발표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이를 정책이나 법령, 후속 R&D, 공공조달, 창업 및 특허출원 등에 활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임.

[2026년도 모두의 아이디어 공모 사업 사업추진 절차]

ㅇ (과제선정) 범부처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부처·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업 및 정책 핵심과제 총 10개 선정 ㅇ (기관선정) 민간위탁사업자(한국발명진흥회) 선정 및 협약체결 ㅇ (공모·접수) 홈페이지 개편, 공모개시 및 아이디어 접수 ㅇ (1차 평가) 지정·자유공모 각 100개씩(200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한 후, 선행기술·정책조사를 거쳐 각 50개씩(100개) 최종 선정 * 지식재산처는 1차 평가를 위한 플랫폼(절차, 평가요소, 전문가 요건 등)을 제공하고, 접수된 아이디어의 해당 부처·기업은 평가를 위한 전문가를 구성하고 평가를 진행 ㅇ (멘토링) 제안된 아이디어를 실현 가능한 해결책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제안자 대상 전문가 멘토링 지원 * 정책 아이디어는 법률·행정 컨설팅을 통해 보완·구체화하고, 기술 아이디어는 산업현장 적용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컨설팅 지원(필요시 특허 출원까지 지원) ㅇ (2차 평가 및 포상) 최종 발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아이디어 선정하고, 모두의 아이디어 시상식 개최·포상 ㅇ (후속활용) ❶정책·법령반영(관계부처), ❷후속 R&D(관계부처), ❸공공조달, ❹창업, ❺특허출원·거래(지식재산처) 등으로 연계

자료: 지식재산처

과제선정 단계에서는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과제 중 공모과제를 선정하는 과제선정평가위원회 개최가 계획되어 있고, 1차 및 2차 선정평가에는 과제 분야별 총 20개 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각 심사위원회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해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이 있으며, 아이디어 고도화 단계에서는 변리사 등 전문가의 멘토링 지원이 있을 계획인데, 각 과정에서 새로운 전문가들이 상시적으로 채용되어 아이디어 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음.

이와 같이 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채용되는 만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평가위원이 동시에 멘토로 참여하거나 특정 기업·기관과 이해관계가 얽힌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풀을 사전에 구성하고 참여 이력·관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13)]

특히, 이 사업은 2025년까지 지식재산처 소관 과제를 중심으로 수요를 받던 구조에서 2026년부터는 전 부처 및 기업의 공모 과제 아이디어 및 자유공모 아이디어를 받아 선정 및 평가를 거친다는 점에서 투명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필수적일 것임.

또한 평가 과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익명 심사, 외부 검증 절차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 성과와 연계된 평가 및 멘토링 효과성을 점검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14)]

13) 2025년 현재는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평가를 수행하되, 해당 분야가 없을 경우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음.

14)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10명씩 총 200명의 전문가를 섭외할 예정이며, 해당 전문가 섭외는 19개 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할 계획임.

5.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 상대 국가와 신속한 합의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은 IP 활용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IP 행정역량 강화 및 IP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등 개도국의 지식재산 분야 역량강화와 인식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52.3%)이 증액된 14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음.[15][16]

[2026년도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WIPO 국제분담금 (ODA)	1,706	1,706	2,218	512	30.0
WIPO 한국신탁기금	956	956	1,456	500	52.3
개도국 AI 활용지원	50	50	250	200	400.0
IP사업화지원	80	80	480	400	500.0

내내역사업인 **‘개도국 AI 활용지원’**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I 기술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원(400.0%)이 증액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대비 개도국 AI 활용지원 지원 횟수를 1회에서 5회로 늘림에 따른 것임.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IP 사업화 지원’** 사업은 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원(500.0%)이 증액된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1회에서 8회로 지원 횟수가 증가함에 따른 것임.

1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WIPO 국제분담금(ODA)(1035-301)(산업재산보호협력국)

16) WIPO는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세계지식재산기구)의 약자로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 제도를 국제적으로 조화시키고 회원국 간 협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또한 WIPO 한국신탁기금은 한국 정부가 WIPO에 출연한 기금을 말하며,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대상 지식재산 역량 강화, 국제 협력 사업 등을 지원하는 구조임.

[2026년도 WIPO 한국신탁기금 사업 세부 계획]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9억 5,600만원	가. 개도국 IP 심사행정역량강화 : 2억 5,000만원 · 개도국 심사관 교육 : 4회x5,000만원 **· 개도국 AI 활용지원 : 1회x5,000만원** 나. 개도국 IP 인력개발 지원 및 인식제고 : 7억 600만원 **· IP사업화지원 : 1회x8,000만원** · WIPO 지재권 심화과정 : 1회×8,000만원 · 개도국 IP 역량강화 : 1회×7,000만원 · 지재권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 1회×1억 7,600만원 · 여성발명역량강화 : 1회×1억원 · 지식재산개발정책석사과정 : 1회×2억원	14억 5,600만원	가. 개도국 IP 심사행정역량강화 : 4억 5,000만원 · 개도국 심사관 교육 : 4회x5,000만원 **· 개도국 AI 활용지원 : 5회x5,000만원** 나. 개도국 IP 인력개발 지원 및 인식제고 : 10억 600만원 **· IP사업화지원 : 8회x6,000만원** · WIPO 지재권 심화과정 : 1회×8,000만원 · 개도국 IP 역량강화 : 1회×7,000만원 · 지재권교육프로그램개발보급 : 1회×1억 7,600만원 · 개도국 집행분야 역량강화 : 1회x2억원

자료: 지식재산처

나. 검토의견

개도국 AI 활용 지원과 IP 사업화 지원 사업은 2026년 지원 횟수를 확대하며 총 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국제회의 공동선언문 채택이나 WIPO 발언 등 포괄적 합의에 근거한 것으로, 지원대상 국가선정을 위한 WIPO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국가당 지원 단가 및 횟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식재산처는 신속히 협의를 마무리하여 2025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산안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개도국 AI 활용 지원’ 사업과 ‘IP 사업화 지원’ 사업은 2026년 지원 횟수를 크게 늘려 각각 5회, 8회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10월 기준 지원 상대국이 확정되거나 개별적으로 사전 협의가 완료된 상황은 아님.

‘개도국 AI 활용 지원’ 사업의 경우 제8차 한-아세안 지식재산처장 회의에서 AI를 활용한 IP 행정 등을 포함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향후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는 이유로 증액 편성되었고, ‘IP 사업화 지원’ 사업은 2025년 4월 WIPO 사무총장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한국 지식·노하우 전수 확대 언급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임.

즉, 개도국 AI 활용 지원 및 IP 사업화 지원 사업의 증액 편성은 WIPO에서의 개발도상국의 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지원대상 국가 선정을 위한 WIPO와의 협의는 향후 진행될 예정임.

따라서 지원 대상국과의 선정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액 편성된 6억원(‘개도국 AI 활용 지원’ 사업 2억원, ‘IP 사업화 지원’ 사업 4억원)은 협의 결과에 따라 국가당 지원 단가 및 횟수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17] 지식재산처는 신속히 협의를 마무리하여 2025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산안의 효율적인 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7) 지식재산처는 연례적으로 6월에 WIPO와의 합의를 완료하고 7월부터 집행해 온 관행에 따라, 2026년 6월까지 개별국가 선정을 위한 WIPO와의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임. 또한 2025년 10월 현재 기준으로는 개발도상국의 지원 수요(아세안 회원국 10개국 등)가 많아 증액된 예산안을 모두 소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6.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사업(신규): 후속 단계인 사업화 R&D를 고려한 로드맵 보완 필요

가. 개 요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사업은 첨단산업 기업의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 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의 제품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	-	10,000	10,000	순증

이 사업은 첨단산업 분야의 지재권(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변리사 등)이 1년차 특허진단 및 MVP[19)] 검증을 위해 100개 과제를 대상으로 1억원씩 지원될 예정임.

[2026년도 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 사업 세부 계획]

ㅇ (목적) 첨단산업 기업의 우수 특허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사업화 되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재권 중심 제품혁신 지원
ㅇ (대상) 첨단산업 분야의 지재권(IP)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ㅇ (내용) 전문인력(변리사 등)이 ①기업의 특허를 진단하고, ②특허정보 분석을 통한 사업화 단계의 기술문제 해결 및 제품개발 지원

1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R&D)(1233-309)(산업재산정책국)

19)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기능제품)란 제품 개발 과정에서 핵심 기능만 담은 최소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의미함. 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만 구현해서 시장에 빠르게 내놓고 고객 반응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단계(MVP검증)	2단계(특허 빅데이터 활용 사업화R&D)			
1년차(1억)	2년차(5억)		3년차(5억)	
특허진단 & MVP	제품 개발	사용성 검증	제품 생산공정 개발	IP 전략(포트폴리오)
· 보유특허 진단 · 특허·시장 분석 · 제품개발 로드맵 · 기술문제해결 · MVP 제작 · (필요시)기술거래	·기술·제품 문제해결 ·제품 고도화 ·제품 설계 ·시제품 제작	·소비자 요구분석 ·특허분석으로 공급망 발굴 및 전략 수립	·제품원가 절감 ·공정 개선 ·인증 등 품질검증	·IP권리 확보 ·제품군 확장 로드맵 ·IP전략 수립

○ 일반연구비(260-01) : 100억원
가. 특허기반 사업화 R&D(100억원)
· 특허기반 사업화 R&D : 100개과제×1억원=100억원

자료: 지식재산처

2026년 1년차의 경우, ① (보유기술 진단) 특허·시장 분석으로 기업의 보유특허를 진단하고, ② (제품개발 로드맵) 경쟁사·협력사 등 동종 산업군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제품개발 로드맵을 도출하며, ③ (기술문제해결) 기업과 지식재산(IP)·기술 전문가가 함께 동종·이종산업 특허를 분석하여 기술문제 해결 솔루션을 도출하고, ④ (MVP 검증)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시작품(실물모형 등) 제작·검증, 3D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품을 고도화하는 것으로 계획됨.

[2026년 1차년도 세부계획]

■ (1단계 : 특허진단·MVP) 첨단기술 보유기업의 특허를 진단하고, 제품개발 로드맵 구축 및 기술문제해결로 MVP(Minimum Viable Product, 최소기능제품) 제작

① (보유기술 진단) 특허·시장 분석으로 기업의 보유특허를 진단*하고, 사업화 단계의 기술문제를 도출하여 근본 원인 분석
* 시장 동향분석, 해당 산업분야의 경쟁사·연구자·권리자 등의 특허기술 분석 등

〈선택〉
(공공 특허기술 매칭) 분석으로 기업에 필요한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을 추가 발굴*하고 계약 조건·협상 등을 통한 기술매칭 지원
* 기업니즈 분석 → 특허기술 및 시장 동향분석 → 공공 특허기술 분석 및 적정기술 발굴

② (제품개발 로드맵) 경쟁사·협력사 등 동종 산업군의 특허 데이터를 분석하여 단계별 (단기-중기-장기) 제품개발 로드맵* 도출
* 기업 핵심 특허기술(예 : 누설전류 제한기술) → 보유 특허의 고도화로 적용 제품군 확장 (예 : 무감전 전기차, 공장·건설현장·데이터센터용 무감전 전선, 무감전 멀티탭 등)

③ (기술문제해결) 기업과 지식재산(IP)·기술 전문가가 함께 동종·이종산업 특허를 분석하여 기술문제 해결솔루션 도출(단기 과제, 1개)

* 이종산업 분야의 특허정보 분석 및 벤치마킹을 통해 기업 보유 특허기술의 사업화시 문제해결 원리를 도출하고 시장수요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론 활용 ④ (MVP 검증) 도출된 솔루션에 대한 시작품(실물모형 등) 제작・검증, 3D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제품 고도화(필요시 제품 설계수정)

자료: 지식재산처

나. 검토의견

이 사업은 2026년 과제 수행 시 MVP 제작 및 검증 외에도 2~3단계까지 고려한 데이터 관리 및 제품화와 생산공정이 포함된 중장기적인 로드맵 설계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고, 향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 사업의 1년차 계획은 MVP(최소기능제품)의 제작 및 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후 2~3년차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이를 바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품 생산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시장성이 높은 기술과제를 도출해내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임.

[2027년 이후 향후 세부계획]

❷ (2단계 : 사업화R&D) 제품개발 로드맵 중 시장성이 높은 기술과제를 선별(2개 이상)하여 기술・IP 전문가팀과 함께 제품화 全과정 수행 * 1년차 지원기업 중 우수제품화 가능성이 있는 과제를 50% 수준으로 선발하여 2단계 지원 [2년차] 시제품 제작 ①(기술・제품개발) 전문가팀과 함께 동종・이종산업 특허를 분석하여 기술문제 해결솔루션 도출 및 제품 설계안에 대한 시제품 제작 ②(사용성 검증) 현장 소비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테스트 및 의견수렴,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시제품 고도화 진행 ③(공급망 전략) 경쟁사 특허 분석으로 특허침해 이슈를 제거하고, 협력사를 발굴하여 공급제품을 맞춤형으로 설계 [3년차] 제품 생산기반 구축 ①(제품생산) 전문가팀과 함께 이종산업 특허를 분석으로 제품원가 절감, 공정개선, 품질 시험・인증 획득 등에 대한 생산 문제해결 * 이종산업 분야의 특허정보 분석으로 부품 단일화, 제작공정 변경, 공정관련 이전 특허기술 등 문제해결 솔루션 도출 → 원가절감, 불량률 감소, 생산시간 단축 등 가능

② (IP전략) 안전한 사업화를 위한 추가 IP권리확보, IP포트폴리오 구축(특허・디자인・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후속 제품R&D 전략 등 지원

자료: 지식재산처

그러므로 1년차 사업 수행 시에도 단순 MVP 제작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로드맵이 실제 제품화 및 생산 기반 구축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는 구조인지 점검하는 절차가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됨.

또한 특허 시장 분석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IP전략을 2~3단계에서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분석 자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데이터 관리 체계 및 IP 매핑도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1년차 때 구축되는 로드맵이 실제 제품화 및 생산기반 구축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음.

따라서 2026년 과제 수행 시 MVP 제작 및 검증 외에도 2~3단계까지 고려한 데이터 관리 및 제품화와 생산공정이 포함된 중장기적인 로드맵 설계가 함께 병행될 필요가 있고, 향후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사업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7.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매입 IP의 활용성과에 대한 관리 병행 필요

가. 개 요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은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해당 담보 산업재산권을 매입함으로써 기업이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2억 6,100만원(580.1%)이 증액된 155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20)]

[2026년도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2,286	2,286	15,547	13,261	580.1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담보 IP 매입비가 크게 증액된 147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에 IP 평가분석비와 사업운영비는 유사한 수준으로 반영되었음.

[2026년도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 세부 계획]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22억 8,600만원	가. 담보 IP 매입비 : 15억원 나. IP평가분석비 : 6억 7,500만원 · [평가검증 8억원 + 운영확산 5억 5,000만원] × 50% 다. 사업운영비 : 1억 1,100만원 · 사업운영비 2억 2,000만원 × 50%	155억 4,700만원	가. 담보 IP 매입비 : 147억 4,700만원 나. IP평가분석비 : 6억 7,500만원 · [평가검증 8억원 + 운영확산 5억 5,000만원] × 50% 다. 사업운영비 : 1억 2,500만원 · 사업운영비 2억 5,000만원 × 50%

자료: 지식재산처

20)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손익계정)-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1332-306)(산업재산정책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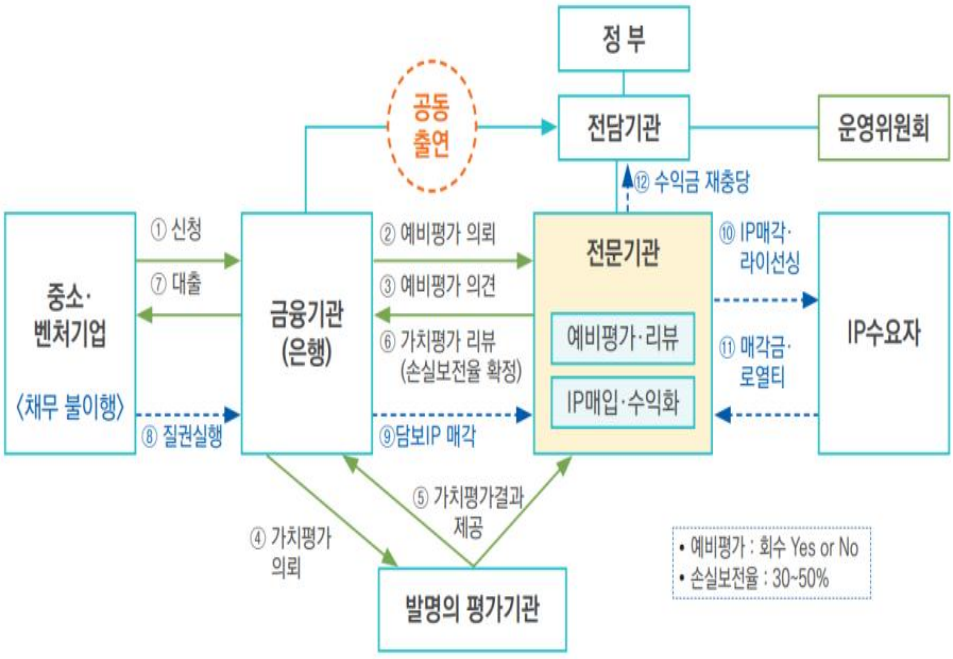
참고로, 이 사업의 수행은 아래와 같이 이루어짐.

우선 중소기업 등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해당 기업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IP(Intellectual Property) 회수전문기관의 예비평가·가치평가 등을 토대로 대출을 실행함.

이후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는 경우, 기존에 결정된 손실보전율로 회수전문기관이 해당 담보 IP를 매입 결정하게 되고, 이때 매입한 IP는 회수전문기관이 아닌 별도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하게 됨.

회수전문기관은 매입한 IP를 향후 수요자에게 매각하거나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매입에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고, 이를 다시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구조임.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의 구조]



자료: 지식재산처

나. 검토의견

IP 담보대출 부실률 증가에 따라 매입 예산 집행규모는 확대될 수 있으나, 매입 IP 자산의 매각 및 실시권 부여 성과가 저조할 경우 특수목적법인(SPC)의 재무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매입 IP 자산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담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의 담보 IP 매입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6.9%, 2021년 12.1%, 2022년 15.4%, 2023년 20.4%, 2024년 58.4%이고 2025년에는 10월 기준 전년도 이월액 47억 7,100만원을 포함한 교부현액 70억 5,700만원 중 57억 8,700만원을 실집행하여 82.0%임.

[2020~2025년 담보 IP 매입비 실집행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					
	예산		교부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0	3,750	3,750	3,750	3,750	-	3,750	633	3,117	16.9
2021	9,040	9,040	9,040	9,040	3,117	12,157	1,471	10,686	12.1
2022	3,525	3,525	3,525	3,525	10,686	14,211	2,190	12,021	15.4
2023	550	550	550	550	12,021	12,571	2,559	10,012	20.4
2024	1,450	1,450	1,450	1,450	10,012	11,462	6,691	4,771	58.4
2025.10.	2,286	2,286	2,286	2,286	4,771	7,057	5,787	-	82.0

자료: 지식재산처

이와 같이 실집행률이 저조한데 대해 지식재산처는 이 사업이 IP 담보대출 채무불이행 발생 후 은행이 매입요청을 해야만 매입절차가 진행되는데, 코로나 19로 인한 원리금 상환유예 및 대출만기연장으로 인해, 담보 IP 매입요청액 자체가 예산편성 당시 예측보다 낮았기 때문이라는 입장임.

그런데 최근 IP 담보대출 부실률이 급증하고 있고,[21]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이 종료되면서 매입요청액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지식재산처는 2025년 말 담보 IP 매입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가정하고 있음.

21) IP담보대출 부실률 : (2023) 1.05% → (2024) 3.71% → (2025.3월) 3.95%

[연도별 담보IP 매입요청액 등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0월	2025년 말 예상
연도별 담보IP 매입요청액(신규)	3.2	30.5	46	82.4	177.3	174.7	262.0
담보IP 매입액(정부+은행)	3.2	18.4	34.1	41.3	123.6	100.1	125.4
담보IP 매입예산 잔액(정부분)	31.2	106.9	120.2	100.1	47.7	12.7	0

자료: 지식재산처

다만, IP 담보대출 부실률이 급증하더라도, 은행이 실제 매입 요청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담보 IP 평가 과정에서 해당 IP의 매입 적정성이 인정되는지 및 SPC의 보유 가능범위와 자산운용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집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식재산처의 입장처럼 예산이 모두 소진된다고 하더라도 특수목적법인(SPC) 및 회수전문기관의 재정 측면에서 매입한 IP 자산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관리가 병행될 필요가 있음.

매입한 IP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의 2020~2024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2024년에는 부채가 210억 5,800만원으로 자산(175억 4,700만원)을 크게 초과하여 자본이 △35억 1,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5억 6,200만원에 비해 크게 악화된 수치임.

[2020~2024년 특수목적회사(SPC) □□사의 재무상태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계정과목	2020	2021	2022	2023	2024
자산	당좌자산(매출채권, 부가세 등)	2	101	84	146	520
	무형자산(특허권)	312	1,930	4,427	7,330	17,027
자산 총계		314	2,031	4,511	7,476	17,547
부채	장기차입금 등	341	2,158	5,142	9,034	21,052
	미지급비용	-	-	2	4	6
	계	341	2,158	5,144	9,038	21,058
자본	자본금(10만원), 결손금	△27	△127	△633	△1,562	△3,511
부채 및 자본 총계		314	2,031	4,511	7,476	17,547

주 1) 무형자산은 매입한 특허권에 대한 감가상각을 반영한 금액을 인식하였음
2) 장기차입금은 특허권 매입비용(2024년 기준 누적 약 210억원) 지급을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차입한 자금임

자료: 지식재산처

이는 IP 매입금액 대비 매각 및 연간 실시료 수입이 저조한 것에서 비롯하며, 2024년 말 기준 회수전문기관은 2020~2024년 5년 동안 총 307건의 IP를 220억 5,800만원에 매입하였으나 매각 및 실시료 수입은 77건의 IP를 대상으로 5억 8,700만원을 회수하는데 그쳤음.

따라서 2026년도 증액된 예산안이 전액 예산 소진(IP 매입)으로 이어진 이후, 이 IP 자산이 시장에서 매각되거나 사용권 부여를 통해 수익화되지 않으면 회수전문기관과 SPC의 재정 부담은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매입 IP 자산의 활용성과 제고를 위한 철저한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Ⅰ. 개 관

1.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은 9조 7,828억원으로, 전년 대비 2,905억원(3.1%) 증가함.

예산은 2,70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0.1%) 감소한 반면, 기금은 9조 5,12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08억원(3.2%) 증가함.[1)]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수입]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2,708	2,708	2,705	△3	△0.1
기 금	92,215	91,401	95,123	2,908	3.2
총수입	94,923	94,109	97,828	2,905	3.1

문의 : 김지수 예산결산조사관 kkjjss@assembly.go.kr (02-6788-5689)

1) 총수입·총지출은 총계에서 보전거래(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회수 등), 내부거래(회계·기금·계정간 전출입, 예수·예탁 및 상환 등)와 8개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하고 산출한 것임.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은 16조 8,449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5,961억원(10.5%) 증가함.

예산은 4조 7,7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375억원(31.3%) 증가하고, 기금은 12조 702억원으로 전년 대비 4,587억원(4.0%) 증가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총지출]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예 산	36,372	40,218	47,747	11,375	31.3
기 금	116,116	169,295	120,702	4,587	4.0
총지출	152,488	209,513	168,449	15,961	10.5

나. 예산안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은 총 3개 회계(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됨. 이 중 세입예산안은 2개 회계(일반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705억원으로 전년 대비 3억원(△0.1%) 감소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2,498	2,498	2,502	4	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210	210	203	△7	△3.2
합 계	2,708	2,708	2,705	△3	△0.1

주) 총계 기준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3개 회계(일반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9조 827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 4,606억원(37.2%) 증가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세출예산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일반회계	61,716	91,899	86,054	24,338	39.4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및 공급망안정화 특별회계	357	357	106	△251	△70.3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4,148	4,148	4,667	519	12.5
합 계	66,221	96,404	90,827	24,606	37.2

주) 총계 기준

다.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3개 기금(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2조 3,944억원으로 전년 대비 4,409억원(2.0%) 증가함.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기금운용계획안]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중소벤처기업 창업및진흥기금	115,595	125,945	118,435	2,840	2.5
기술보증기금	33,080	33,780	38,526	5,446	16.5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70,860	113,758	66,982	△3,877	△5.5
합 계	219,535	273,483	223,944	4,409	2.0

주) 총계 기준이며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총 8개(7,321억 4,700만원)의 신규사업이 편성됨.[2)]

그 중 ‘R&D사업화계정출연’ 사업은 R&D 성과와 기술이전 등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이를 위한 사업화 자금 보증지원을 제공하는 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00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은 EU 및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 강화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이 겪는 수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R&D를 지원하며, 2026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 편성되었음.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은 중소제조기업이 겪는 공정 기술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공정도를 기반으로 공정 최적화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신규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202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1	신용보증기금 출연[1)]	80,000
2	R&D사업화계정 출연	50,000
3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5,000
4	민관공동기술사업화(R&D)[2)]	129,912
5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2)]	457,041
6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3,000
7	중소제조 특화 Multi AI Agent개발(R&D)	3,60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8	지역특화산업육성(자율)[3)]	3,594
총지출		732,147

주 1) 2025년 본예산은 2024년 대비 순감이나, 2026년 예산안이 반영됨
2) 2025년 과목구조개편에 타세부사업에서 내역사업 분리 후 사업편성
3) 회계 내 계정 이관사업임. (기존) 지역지원계정 → (이관) 지역자율계정

2) 신규사업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및 추경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을 의미함.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증액사업은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 등 총 26개임.[3)]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증액 사업]

(단위: 백만원, %)

연번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당초계획액) (A)	2026년도 예산안 (계획안) (B)	증감 (B-A)	(B-A)/A
[일반회계]					
1	기술보증기금출연	40,000	60,000	20,000	50.0
2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	20,000	27,000	7,000	35.0
3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236,076	436,556	200,480	84.9
4	기술혁신기반조성	16,521	42,161	25,640	155.2
5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R&D)	344,385	494,242	149,857	43.5
6	창업성장기술개발(R&D)	596,010	786,419	190,409	31.9
7	디지털기반중소제조산재예방 기술개발(R&D)	1,650	7,700	6,050	366.7
8	수출지원기반활용	127,560	150,203	22,643	17.8
9	창업사업화지원	403,567	448,468	44,901	11.1
10	민관협력창업자육성	208,281	239,856	31,575	15.2
11	K-바이오랩허브구축사업(R&D)	1,561	6,963	5,402	346.1
12	그린창업생태계기반구축	13,505	22,500	8,995	66.6
13	벤처캐피탈선진화	3,533	4,956	1,423	40.3
14	구미전자공고생활관개축	1,556	2,776	1,220	78.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5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21,560	96,939	75,379	349.6
16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10,261	16,426	6,165	60.1
17	상권활성화사업(제주)	970	2,000	1,030	106.2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8	재도약촉진	41,549	106,731	65,182	156.9
19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00,000	1,100,000	600,000	120.0
20	전남연수원건립	8,013	12,178	4,165	52.0
21	차입금이자상환(기금)	752,254	772,791	20,537	2.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2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83,422	128,069	44,647	53.5
23	소상공인성장지원	265,085	621,243	356,158	134.4
24	소공인특화지원	119,870	130,494	10,624	8.9
25	소상공인재기지원	274,806	351,649	76,843	28.0
26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65,205	564,145	98,940	21.3

3) 주요 증액사업이란 총지출 기준 세부사업 단위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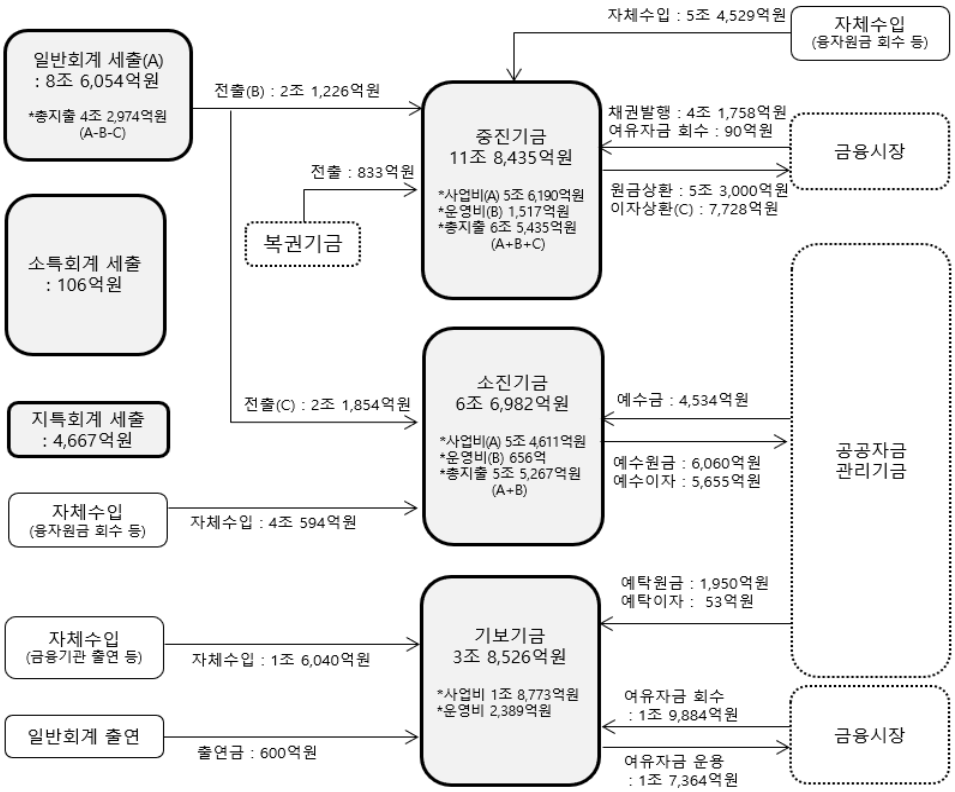
3.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일반회계와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기술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 구성됨.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2조 1,226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2조 1,854억원이 각각 전출될 예정임.

다음 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은 복권기금에서 833억원이 전입됨.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수원금 6,060억원 및 예수이자 5,655억원을 상환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금 4,534억원을 받을 계획임. 아울러 기술보증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탁원금 1,950억원 및 예탁이자 53억원을 받을 계획임.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4.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 및 개선과제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특징으로는, 벤처투자 시장을 확대하고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을 최대규모로 편성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R&D) 예산이 최대규모로 증액되었으며, 중소 제조기업의 DX 및 AX 대전환을 위해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사업이 증액되었음. 또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사업에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소상공인의 스케일업 기반 마련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확대되었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 국회 심의 및 향후 집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사업(신규)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거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지는바 관련 절차를 이행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 예산안 제출 후 사후적으로 사전수요 및 과제발굴을 진행하고 있어 사전준비가 미흡해 보임.

둘째,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신규)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셋째, ‘투·융자연계기술개발(R&D)’ 사업은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및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의 지원대상 및 기업당 지원액이 모두 대폭 확대되었는데, 사업규모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넷째, ‘K-뷰티 클러스터’ 사업(신규)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정책금융 확대에 따라 퇴직연금, 연기금투자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등의 민간 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매칭 조성 및 투자 유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신규)은 정보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화전략계획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하지 않아 예산안 세부 내역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가 미흡해 보임.

Ⅱ. 사업별 검토

【일반회계】

<세 출>

1.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신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은 중소 제조현장의 신속한 AI 전환 촉진을 위해 1~2년 내 성과도출이 가능한 스마트제조 분야 AI 제품·서비스 상용화 및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99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4)]

[2026년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36,076	286,923	436,556	200,480	84.9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	-	99,000	99,000	순증

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기업 등에 인공지능 전환(AX; AI Transformation) 제품을 빠르게 보급·확산하려는 것으로, 2026~2027년 2년간 45개 과제에 대해 국비 1,350억원을 지원(국비 80%, 민간 자부담 20%)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스마트 제조분야 AI 제품·서비스를 ① (유형1) 1년 내 신속 개발하여 현장에 침투 가능한 AI 제품·서비스와 ② (유형2) 2년 내 개발이 가능한 파급효과가 큰 핵심적인 AI 제품·서비스로 2개 유형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

---

4) 일반회계-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2111-303)(지역기업정책관)

2026년 예산안은 단년도 유형1 과제를 21개 선발하여 각각 30억원씩 지원하고, 다년도 유형2 과제를 24개 선발하여 각각 1차년도분 15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990억원이 편성되었음. 참고로 2027년에는 유형2 과제 24개에 대해 각각 2차년도 15억원을 지원할 예정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사업 개요]

○ (목적) 중소·중견기업이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AI 응용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중소 제조업에 AX 제품을 빠르게 보급·확산 ○ (지원대상) 중소·중견기업 ○ (지원규모) 2026~2027년, 2년간 1,350억원(민간부담 별도), 45개 과제 - 2026년: 유형1 21개 과제×30억원, 유형2 24개 과제×15억원(1년차) = 990억원 - 2027년: 유형2 24개 과제×15억원(2년차) = 360억원 ○ (사업방식) 과제당 정부지원금 80%, 민간 자부담 20% ○ (지원분야) ①제조기반업종·공정혁신 분야, ②지역 주력산업 선도분야, ③제조업-공급기업 협업 분야 ○ (중점추진방향) ①산업재해 근절(안전·위험요소 해결), ②인력난·열악 환경 해소, ③수출경쟁력 확보(원가절감·글로벌시장 대응) 중심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의 신속한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뿌리업종 공정혁신형, 지역주력산업 선도형, 중소 제조현장 수요형 등 3개 분야로 구분하여 1차년도 사업(유형1)과 2차년도 사업(유형2)로 지원할 계획임.

유형1은 AI 기술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하여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사업화 임박 단계의 기술성숙도와 중간2 이상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유형2는 단계적 고도화를 통해 공정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공동활용·확산이 가능한 플랫폼 기반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를 지향하는 것으로, 상용화 임박 단계의 기술성숙도와 중간 1 이상의 스마트공장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임.

[중소벤처기업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기준(안)]

구분	기술성숙도(TRL)	스마트공장수준	제조데이터 보유
유형1 (단기형)	TRL 8~9(사업화 임박)	중간2 이상(고도화)	AI에 활용할 표준화된 제조데이터 확보
유형2 (중기형)	TRL 6~7(상용화 임박)	중간1 이상	AI에 활용할 부분적 제조데이터 확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유형별 지원기준(안)]

<table>
<tr><td rowspan="5">스마트공장수준</td><td>고도화</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 rowspan="2">유형1</td></tr>
<tr><td>중간2</td><td></td><td></td><td></td><td></td><td></td><td colspan="2" rowspan="2">유형2</td></tr>
<tr><td>중간1</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기초</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구분</td><td>1단계</td><td>2단계</td><td>3단계</td><td>4단계</td><td>5단계</td><td>6단계</td><td>7단계</td><td>8단계</td><td>9단계</td></tr>
</table>

기술성숙도(TRL)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사업은 2년간 국비 1,3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거나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보여짐.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하여 10개 부처가 참여하여 300개 제품에 신속한 AI 적용을 지원하는 AX-Sprint 300 사업의 일환으로, 동 사업은 10개 부처의 신규사업으로서 2026~2027년 2년간 총 8,815억원이 편성될 계획임.

[10개 부처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개, 억원)

부처	물량	총 사업비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면제여부	부처	물량	총 사업비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면제여부
산업부	65	2,625	2,100	○(제10호)	복지부	31	975	780	○(제10호)
중기부	45	1,687.5	1,350	×	해수부	25	937.5	750	×
국토부	29	1,450	1,160	×	국방부	30	833.3	750	×
농림부	30	1,125	900	○(제10호)	환경부	15	750	600	○(제10호)
과기부	20	1,000	800	×	식약처	10	187.5	150	×

자료: 부처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를 재가공함

이 사업은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비 3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다른 부처와 달리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음.

참고로,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는 제조 AI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하여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10호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2025.8.)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었음.[5)]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이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세부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사업을 세부사업과 내역사업 중 어느 층위로 편성할 것인지는 예산안 편성 시 편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보다 규모가 작은 보건복지부의 경우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여 국무회의 의결로 이를 면제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이 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지원대상 선정 기준, 사업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의 2026년 예산안은 단년도 유형1 과제를 21개 선발하여 각각 30억원씩 지원하고, 다년도 유형2 과제를 24개 선발하여 각각 1차년도분 15억원을 지원하기 위해 총 990억원이 편성되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9월(9.2.~9.23.)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원,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KAMPA),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이 보유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요조사를 진행하였고, 제조 분야에서 1~2년 이내 신속 상용화 및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응용 제조혁신 기술 관련 793건의 수요조사서를 접수하여 10월 현재 선별 중에 있음.

5)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해, AI 응용제품 시장 선점, AI 응용제품의 활용을 통한 산업 생산성 증대 및 사회 전반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된다면서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제10호)으로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음.

[2025년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 사업 준비 계획]

ㅇ 과제 수요조사 추진(9.2~9.25)

- (조사개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방향 정립 및 지정공모를 위한 AI응용테마 발굴·기획

수요제안서 선별	→	AI응용테마 기획	→	AI응용테마 지정·도출
수요제안서 中 1) AI 응용 가능성이 높고, 2) 신속 상용화가 가능하며 3) 산업에 파급력이 높은 수요제안서 채택		1) 수요제안서를 바탕으로 테마 분류기준 수립 등 2) 테마 주제를 발굴하고, 3) 테마정의서 기획		테마 상세기획 → 최종 테마 지정·도출

- (조사방법)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원, 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KAMPA),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이 보유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의견 수렴
- (조사대상) 지역TP, 기술공급기업, 중소제조기업(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연구기관, 협동조합 등

분야	제조기반업종·공정혁신 분야	지역주력산업 분야	SW 지능화 분야	그 외 민간 수요분야
조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원	KAMPA	추진단
조사대상	조합 등	지역 TP	협회 회원사	제조-공급기업

ㅇ 협의체 2차 회의 개최(9.16)
- 과제 수요조사 현황 및 애로사항 공유, 협력사항 논의 등

ㅇ 사업기획위원회 킥오프 회의 개최(9.19)
- 과제 수요조사 검토 참여 및 후보과제 컨설팅, 사업기획 지원 등

ㅇ AI 상용화 실적 및 경험 보유 중소기업 현장방문(9월말)

ㅇ 사업 본격 시행(2026.1월~)
- 후보과제, 유망분야 선정 및 사업기획 착수(10월초~),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12월초), 신청접수 및 평가(1월중), 사업수행(1월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요조사, 과제발굴 및 사전기획을 통해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사업 중복지원 방지 방안, 구체적인 사업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이 사업의 경우 1차년도 사업과 2차년도 사업의 기술성숙도, 스마트공장 수준 등을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면서도 과제별 지원액은 동일하게 30억원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비 30억원의 지원액이 연구과제별로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를 달성하기 위해 적정한 소요액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 수요조사 접수 결과]

○ (목적)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내역 신설에 따른, 제조AI 분야 상용화 테마(품목) 발굴·기획을 위한 수요조사 추진

○ (대상) 지역TP, 기술공급기업, 중소제조기업(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기업), 연구기관, 협동조합 등

○ (기간) 2025.9.2. ~ 9.23 (약 3주간)

○ (방법)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원,한국자율제조플랫폼협회(KAMPA),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등이 보유한 기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현장의견 파악

○ (내용) 제조 분야(업종·산업 등)에서 1~2년 이내 신속 상용화 및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응용 제조 혁신 기술

○ (지원분야) ①뿌리업종 공정혁신형 분야, ②지역주력산업 선도형 분야, ③중소제조현장 수요형 분야

구분	참여 컨소시엄
뿌리업종 공정혁신형	협동조합, 생기연, 공급기업 등
지역주력산업 선도형	TP, 지역제조업 및 공급기업, 지역연구기관 등
중소제조현장 수요형	제조업, 공급기업, 연구기관 등

○ 접수결과: 수요조사서 총 793건 접수

구분	뿌리업종 공정혁신형 분야	지역주력산업 선도형 분야	중소제조현장 수요형 분야	
			KAMPA	그외 민간수요
조사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기술정보원	KAMPA	스마트제조혁신 추진단
조사물량	224건	359건	50건	160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 제조혁신구축 사업: 전년도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제조혁신 구축지원’** 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고 제조로봇·자동화설비·인공지능 등의 접목을 통해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1억 2,400만원(43.5%) 증액된 3,172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6)]

[2026년도 제조혁신구축 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36,076	286,923	436,556	200,480	84.9
제조혁신구축지원	221,166	270,141	317,290	96,124	43.5
자율형공장	12,000	32,000	95,000	83,000	691.7
대중소 상생형	30,000	34,000	40,000	10,000	33.3

내내역사업인 ‘자율형 공장’은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① 인공지능 및 디지털 트윈, ② AI 단독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자율형공장(AI 트랙)은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 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AI 공장을 구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의 50%에 대해 2억원을 한도로 최대 9개월 이내 추진될 계획이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100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억원이 편성되었음.

6) 일반회계-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2111-303)(지역기업정책관)

[2025년 자율형공장 AI 트랙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제조현장의 업종과 공정에 특화된 맞춤형 AI 지원을 통한 중소 제조기업의 자율제조기반 마련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지원내용) 중소제조업에 적합한 AI에이전트, 온디바이스AI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예측유지보수 등을 지원하는 AI공장 구축
- 기업이 보유한 제조생산·업무데이터 등 대량의 데이터를 AI를 통해 실시간 학습·분석하고, 제조혁신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지원
- 고도화 수준(중간1 이상)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목표로, 도입기업별 기존 구축 수준 이상*의 AI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기존)기초→(AI)중간1, (기존)중간1→(AI)중간1 or 중간2, (기존)중간2→(AI)중간2
○ (지원예산) 2025년 200억원 편성(2차 추경), 10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스마트공장 구축 후* AI 스마트공장 구축을 희망하는 기업
* AI 도입확산을 위해 선도형제조혁신 타사업과 동시수행 가능(단, 자율형공장 제외)
- (도입기업) 국내 제조기업 중「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사업계획서 제출마감일까지 스마트공장 구축이력(수준확인 등)이 확인된 기업
- (공급기업)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공급기업 중 AI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총 사업비의 50%, 2억원 한도, 최대 9개월 이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 다른 내내역사업인 ‘대중소 상생형’은 정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 협업하여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① 고도화 트랙과 ② AI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중 대중소 상생형(AI 트랙)은 정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대기업 주도의 AI 솔루션 및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을 구축할 계획임. 총 사업비의 50%에 대해 5억원을 한도로 최대 9개월 이내 추진될 계획이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8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4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5년 대중소 상생형 AI 트랙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국내 중소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디지털전환 촉진을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 (지원내용) 정부, 대기업(LG전자) 간 협업을 통해 AI 기반 스마트공장 One-Package 지원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LG엑사원 기반의 AI 솔루션 및 스마트공장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

○ (지원예산・규모) 2025년 40억원(2차추경), 8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대기업(LG전자) 협력 중소・중견 제조기업

* 선도형제조혁신 타사업과 동시수행 가능(단, 공정 및 구축내용이 다른 경우에 한함)

○ (공급기업) 엑사원 및 AI를 제조현장에 공급 가능한 역량보유 기업

○ (지원조건) 총사업비(10억원)의 50% 이내(최대 5억원), 9개월 이내

지원유형	지원기간	정부 지원한도	분담비율			구축목표수준
			정부	대기업	도입기업	
고도화	9개월	5억원	50%	20%	30%	중간1 이상 목표설정 (기존 수준 이상 달성 필수)

- LG전자는 전문인력 기술지도・컨설팅, 엑사원 구독료 등 20% 부담(현물)
- 도입기업은 30%를 부담(필요시,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 가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자율형공장(AI트랙) 사업과 대중소 상생형(AI트랙) 사업에 대해 2026년도 예산안에는 ① 자율형 공장(AI트랙)의 과제 수를 종전보다 4배 확대하여 사업비 4억원 규모의 400개 과제에 대해 50%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800억원이 편성되었고, ② 대중소 상생형(AI트랙)의 과제수를 종전보다 2.5배 확대하여, 사업비 10억원 규모의 20개 과제에 대해 50%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00억원이 각각 편성되었음.

[자율형 공장 및 대중소 상생형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예산(제2회 추경)	2026년 예산안
○ (자율형 공장) 320억원 - AI+DT: (신규20개+계속20개)×6억원×50%=120억원 - AI트랙: 100개×4억원×50%= 200억원(2회추경)	○ (자율형 공장) 950억원 - AI+DT: (신규30개+계속20개)×6억원×50%=150억원 - AI트랙: 400개×4억원×50%= 800억원
○ (대중소 상생형) 340억원 - 본예산 250개×4억원×30%= 300억원 - AI트랙: 8개×10억원×50%= 40억원(2회추경)	○ (대중소 상생형) 400억원 - 고도화 250개×4억원×30%= 300억원 - AI트랙: 20개×10억원×50%= 10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자율형 공장’ 사업과 ‘대중소 상생형’ 사업의 AI 트랙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신설된 사업으로 2025년 10월 현재 아직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이 사업의 사업성과를 살펴본 후 예산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AI 트랙은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 및 제조 AI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제조현장의 혁신을 도모하고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 편성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여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 제조기업의 AI 도입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부족하고, AI를 통한 해결방안을 수립할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의향 실태조사(2024.11.)’ 결과에 따르면, 현재 AI를 적용 중인 중소기업은 5.3%에 불과하여 중소기업의 94.7%가 AI를 활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AI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도 16.3%에 그쳤음. AI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사업상 필요성을 못 느낀다’(80.7%)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영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14.9%), ‘AI 도입 및 유지 비용 부담’(4.4%) 순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율형 공장(AI트랙) 및 대중소 상생형(AI트랙)은 중소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접목을 통한 제조 경쟁력을 제고하는 당초 목적 외에도, AI 도입 교육 및 제조현장에 적합한 AI 솔루션 도입방안 등을 교육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AI 필요성 및 역량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자율형 공장(AI트랙) 과제선정절차(안)]

구분	AI 도입 교육 후 사업계획서 작성		자율형공장(AI트랙) 선정평가	
	공장 내 문제정의	AI 도입 방안 및 사업계획 작성	선정평가	AI 팩토리 구축
수행내용	▸ 제조 현장 문제인식 ▸ 공장 내 AI 도입을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 정의	▸ 제조 현장에 적합한 AI 및 솔루션 도입방안 마련 ▸ 유사 적용사례 탐색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도입-공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기술성평가,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실시	▸ 중소제조특화AI 스마트공장 구축 진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은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전환(AX) 및 제조 AI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AI 트랙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2025년 7월 초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사업 공고, 신청·접수 및 요건검토 등에 따라 2025년 10월 현재 아직 과제별 협약이 체결되지 않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상황임.

자율형 공장(AI 트랙)의 경우 8월 1일부터 14일까지 500개사의 신청·접수를 받고, 8월 14일부터 9월 27일까지 사전 교육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상황으로 10월 선정평가를 거쳐 11월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또한 대중소 상생형(AI 트랙)의 경우 당초 8월 14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접수하였다가 기한을 9월 19일로 한차례 연장하였고, 추가공고를 통해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다시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임. 이 경우에도 선정평가 및 협약은 적어도 11월에야 이루어질 예정임.

[2025년도 자율형 공장(AI 트랙) 추진일정]

절차	내용	일정
사업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제조특화 AI공장 사업 공고	2025.7.
신청·접수 도입-공급 컨소시엄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2025.7.~8.
요건검토 제조혁신센터(TP)	▸ 신청자격 등 검토·확인	2025.8.
사업계획서 작성 도입-공급 컨소시엄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AI적용계획 수립 포함)	2025.8.~9.
기술성평가(대면) 제조혁신센터(TP)	▸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기술성평가	2025.9.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제조혁신센터(TP)	▸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현장확인 및 원가계산	2025.9.~10.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도입-공급 컨소시엄 -추진단-TP	▸ 선정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25.10.~11.
사업 수행(중간점검) 제조혁신센터(TP)	▸ 선정된 컨소시엄의 사업 수행 ▸ 선정과제의 사업 수행내역 중간점검	2025.12. ~2026.8.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제조혁신센터(TP)	▸ 스마트공장 구축 최종점검(감리) 및 최종평가진행 ▸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진행	2026.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도 대중소 상생형(AI 트랙) 추진일정]

절차	내용	일정
운영기관 협약 추진기관-운영기관	▸ 추진기관(추진단), 운영기관(LG전자, 생기원, 경남TP) 협약 ▸ 사업비 교부 및 사업 공고문 게시	2025.7.
신청·접수 운영기관	▸ 사업 수행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2025.8.
요건검토/기술성평가 운영기관	▸ 도입기업 신청자격 및 요건검토 ▸ 요건검토 통과기업 대상 기술성 평가위원회 실시	2025.9.
현장확인 운영기관	▸ 기술성평가 통과기업 대상 현장확인 실시	2025.9.
원가계산 원가계산기관	▸ 최종 선정된 도입기업 대상으로 구축비 원가계산 실시	2025.9.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추진기관, 주관・운영기관, 도입・공급기업	▸ 선정된 도입기업 대상으로 협약 및 사업비 지급	2025.10.
중간・완료점검 운영기관	▸ 선정된 도입·공급기업을 대상으로 중간・완료 점검	2026.3.~7.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운영기관	▸ 스마트공장 감리·검증 및 집중 A/S,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2026.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사업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6년에 지원대상의 수를 4배(자율형 공장, AI 트랙) 또는 2.5배(대중소 상생형, AI 트랙)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사업의 수행성과를 살펴본 후 예산 증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7)]

7) 자율형 공장의 경우에는 2025년 500개 사가 신청하여 100개 사가 선정되었는데, 2026년 지원대상의 수를 4배로 늘리게 되면 사실상 2025년에 신청한 대상기업이 대부분 신청만 하면 선정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경쟁을 통한 가능성 있는 기업의 선별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음. 또한 대중소 상생형의 경우에는 사업의 특성 상 AI 솔루션을 갖춘 대기업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나, 2025년에 참여한 LG 엑사원 이외에는 대기업의 참여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임.

3. R&D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신규): 법률 개정을 통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 마련 필요

가. 개 요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은 R&D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보증, R&D기술 유동화 보증, IP 유동화 보증, 중소기업 기술거래기반조성 등을 수행하는 R&D 사업화 계정을 기술보증기금 내 설치하고 보증재원 및 보조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출연금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8)]

[2026년도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R&D 사업화 계정 출연	-	-	50,000	50,000	순증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 내 R&D 사업화 계정을 설치하고 이에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정부R&D 성과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임.

[R&D 사업화 계정을 통한 보증사업(안)]

구분	프로젝트 방식 R&D보증	R&D기술 유동화보증	IP 유동화보증
지원대상	정부R&D 성과 보유 중소기업	정부R&D 성과 보유 중소기업	공공연구개발기관
지원방식	사업화 자금 보증 (간접금융)	회사채 기반 유동화보증 (직접금융)	로열티 기반 유동화보증 (직접금융)
지원한도	사업화 과제 소요자금 이내	기술사업화가치 이내	로열티 수입의 현재가치 이내
지원규모 (2026년)	2,600억원	500억원	30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먼저 프로젝트 방식의 R&D 보증은 기존의 기업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R&D 과제의 사업화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기존 정책보증과 별도 한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의

8) 일반회계-R&D 사업화 계정 출연(2131-306)(기술혁신정책관)

R&D 성공과제 사업화 추진기업 또는 공공연구소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중심의 평가와 소요자금 산정으로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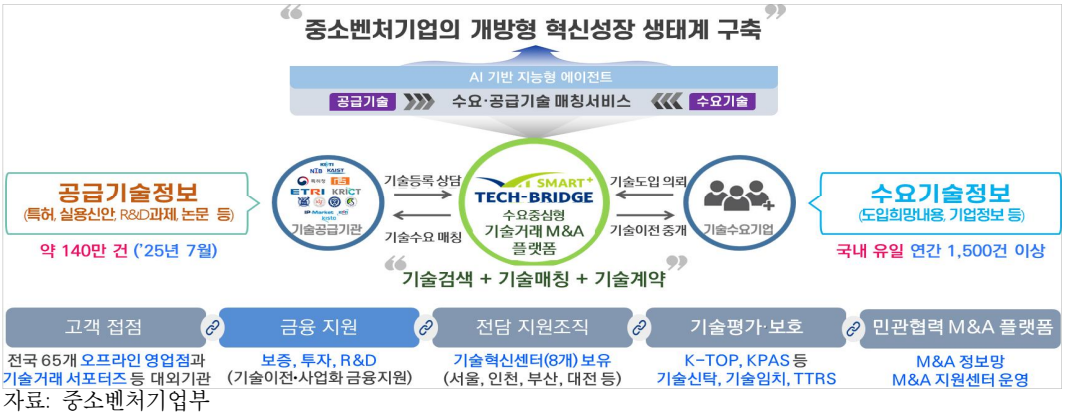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소요자금을 산정하여 과제당 최대 30억원(시설자금은 100억원)을 지원하고 성과연동 상환방식을 도입하여 성공 시에는 추가지원 인센티브로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실패 시에는 상환 유예를 통해 기업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기존 기업의 보증 한도를 넘어 혁신적 기술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자금조달을 확대하려는 것임.

다음 IP·R&D 기술 유동화 보증은 공공 연구개발기관의 IP 및 기업의 R&D 기술에 투자하는 유동화 금융상품을 도입하려는 것으로, 공공 연구개발기관 기술료 수입의 조기 현금화 및 직접금융을 통한 기업의 R&D 사업화 자금 조기 확보 등으로 공공 연구개발기관 및 중소기업의 자립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는 ① (IP 유동화) 기술료 수입이 확인된 공공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IP가 창출하는 기대 기술료 기반의 자산유동화를 통해 R&D 자금을 조달하는 한편, ② (R&D 기술 유동화)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매출시현이 예상되는 기업에 회사채 기반 자산유동화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사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기술거래 시장 활성화와 R&D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수요·공급·중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기술거래 플랫폼 고도화를 위한 ISMP 및 AI 언어모델 구축을 위한 선행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플랫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급하는 것임.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구성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IP 유동화 보증: 69억 2,000만원
- 대손충당금 35.2억원(보증공급 300억원×대손충당률 11.6%)
- 기본재산 30억(보증공급 300억원÷운용배수 10배),
- 운영시스템 구축 4억원
○R&D 기술 유동화 보증: 108억 8,000만원
- 대손충당금 58.8억(보증공급 500억원×대손충당률 11.6%)
- 기본재산 50억원(보증공급 500억원÷운용배수 10배)
○프로젝트 방식 R&D 사업화 보증: 306억 1,000만원
- 기본재산 306억 1,000만원(보증공급 2,600억원÷운용배수 8.5배)
○중소기업 기술거래 기반조성: 15억 9,000만원
- 기술정보 발굴 및 활용 촉진 5억 1,500만원, 기술중개 지원 1억 5,000만원,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운영 9억 2,5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은 국가연구개발 과제의 효과성 제고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 사업은 연구개발 과제가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이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과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별도의 보증상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국가 연구개발 과제가 단순 연구에 그치지 않고 수익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구체적으로는, ① 프로젝트 방식 R&D 보증의 경우 중소기업이 아니라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소요자금에 대해 기존 보증한도 외에 보증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이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사업화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② R&D 기술 유동화 보증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매출시현이 예상되는 기업의 회사채를 유동화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를 조속히 현금화하여 사업화 자금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9)]

9)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지적 재산권의 유동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회사채를 유동화하되 시장 성숙도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설명함.

③ IP 유동화보증의 경우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 연구개발기관이 보유한 지식 재산권(특허·실용신안 등)에 대한 경상기술료 등을 기초로 자산유동화를 통해 공공 연구개발기관이 조속히 현금화하여 R&D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공공 연구개발기관은 신속한 사업화수익을 확보하고 경상기술료 방식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한편, 공공 연구개발기관이 일시불 대신 경상기술료 방식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공공 연구개발기관의로부터 기술 이전 시 단기적인 비용 부담이 감소하여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R&D 예산안 편성 시,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고,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도 이의 일환으로 편성되었음.[10]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기금 내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1]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상황인바,

---

10) 중소벤처기업부, “역대 최대 2.2조원 중소벤처 R&D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 2025.9.25.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알선 및 중개
2. 중소기업 기술거래정보·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제공
3.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이 경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정보망과의 연계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5. 기술의 매입 및 기술에 대한 투자
6. 중소기업 기술거래를 위한 수요발굴 및 조사·분석
7. 중소기업 기술거래 관련 연구개발 지원
8.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중소기업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의3(계정의 설치 및 재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정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술보증기금 내 ‘(가칭)기술혁신 사업화 계정’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현행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는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공급하므로, 프로젝트 방식 R&D보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단위로 보증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IP 유동화보증과 같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공공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을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중소기업이 아닌 공공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해서도 유동화보증 범위에 포함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R&D 사업화 계정 출연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연내에 이를 상정 및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참고로, 2025년 10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및 관련 자금의 이자 지원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826)이 발의되었음.

4.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신규): 예비타당성조사 도출 전 예산 편성 문제 등

가. 개 요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은 글로벌 탄소 규제 대응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10대 품목의 탄소감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12)]

[2026년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	-	5,000	5,000	순증

구체적으로는, 3대 중점 분야 10대 품목의 탄소감축 기술혁신을 통한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극복을 위해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4,168억원(국비 3,058억원, 민자 1,110억원)이 투입될 계획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 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함.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3대 중점분야 및 10대 핵심품목]

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 기술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 저감 기술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
→ 고정 연소원 및 원료의 저탄소·무탄소 전환	→ 공정 내 직접배출 또는 간접배출 감축 공정·설비	→ 사용후 원료·부품 제품화를 통한 탄소감축

❶ 정밀화학원료, ❷ 석유화학합섬원료, ❸ 합성수지, ❹ 플라스틱 제품, ❺ 자동차 부품, ❻ 철강재, ❼ 알루미늄, ❽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❾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❿ 원동기 및 펌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12) 일반회계-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2134-474)(미래기술대응지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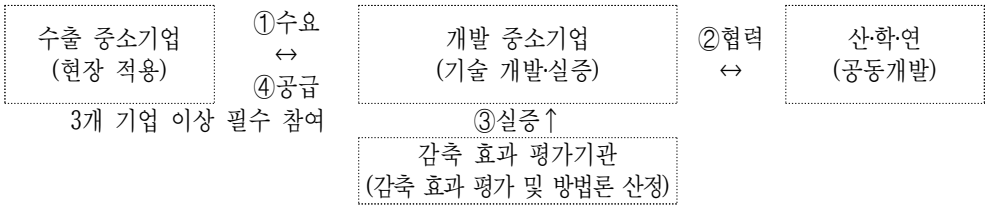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사업 개요]

○ (개요)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 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개발 지원

○ (기간/예산)
- 2026～2030년 / 총사업비 4,168억원*(정부3,058억원, 민간1,110억원)
  * 총 71개 과제, 과제당 평균 4.9년, 평균 58억원(국비 기준 43억원)

○ (지원 내용)
- (R&D) 탄소감축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10대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핵심품목별로 적합한 탄소감축 3대 중점분야의 R&D 지원
  * 중소기업 수출액, 배출량, 기업 수, 수출증감률 및 규제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
- (실증) ①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 확인*, ②수요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 확인 등 단계별 실증
  * 탄소배출 인정·인증기관을 활용하여 ISO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탄소감축 방법론 수립 지원 등

○ (지원 대상) 기술개발(공급) 및 수출(수요) 중소기업, 산·학·연 등 공동 연구기관, 탄소감축 효과 전문 평가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기대효과) 71개 과제별 탄소 감축량은 306만톤으로 예상하고, 수출 중소기업 활용 확산 시 사업 지원 효과는 2034년 9,591억원으로 예상함
  * 탄소 감축(배출)량을 효과(비용)로 환산하기 위해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산식 활용

구분	2031년	2032년	2033년	2034년
연간 감축량(만톤CO2)	125	185	246	306
감축 기술 활용·확산(개사)	441	654	867	1,080
인증서 구매 저감 효과(억원)	2,004	3,809	6,283	9,59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예산안에는 연소 연료 및 원료 대체기술,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 저감기술,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기술 총 71개 과제에 대해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연소 원료 및 원료 대체기술 - (신규, 다/하) 18개 x 6억원 x 6/12개월 = 54억원 ○ 단위공정 개선 및 전력 저감기술 - (신규, 다/하) 34개 x 5억 8,300만원 x 6/12개월 ≒ 99억원 ○ 원료·부품 재사용 제품화기술 - (신규, 다/하) 19개 x 5억 3,700만원 x 6/12개월 ≒ 51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예산안이 편성·제출되어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국가재정법」 제38조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13)]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은 향후 5년간 총사업비가 4,168억원이고 국비 3,058억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여 예비타당성조사가 2025년 5월부터 진행되고 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도출되기 이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예비타당성조사는 2025년 11월 완료될 예정으로, 2025년 10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임.

---

1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진행경과]

○ 예비타당성조사 요청시기 - 2025-1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신청(2025.3.4.) ○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경과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2025.5.13.) - 1차 자문회의 및 주관부처 사업설명회(2025.6.30.) * 추가자료 요청(2025.7.4.) 및 제출(2025.7.11.) - 2차 자문회의 및 쟁점토론회(2025.8.6.) * 추가자료 요청(2025.8.13.) 및 제출(2025.8.21.) ** 추가보완자료 제출(2025.9.11.) - 과기혁신본부 중간 점검회의(2025.9.23.) ○ 향후 예상 일정 - 조사 완료 시기 : 2025. 11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재정법」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신규사업 수행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요약된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규정한 이유는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사전에 신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전문기관이 분석하도록 하여 예산안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이 사업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서 조사 중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향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라 사업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둘째, 이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누락되어 있는바, 향후 정부가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관련 내용이 누락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탐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 목적에는 중소기업의 주요 수출품목 위주의 탄소감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중소기업이 다수 활용하도록 확산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량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65만톤 감축하고, 2034년까지 306만톤을 감축할 계획임.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R&D)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ㅇ 사업내용
- (지원내용) 중소기업 수출 핵심품목 탄소감축 기술 확보부터 현장 실증을 통한 감축 효과 확인까지 완결성 있는 기술 개발 지원
- (R&D) 탄소감축이 시급한 중소기업 수출 10대 핵심품목을 선정*하고 핵심품목별로 적합한 탄소감축 3대 중점분야의 R&D 지원
  * 중소기업 수출액, 배출량, 기업 수, 수출증감률 및 규제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
- (실증) ①기술 적용 시 공정 조건·생산 제품별 예상 감축 효과 확인*, ②수요기업 생산공정에 적용하여 실제 감축량 확인 등 단계별 실증
  * 탄소배출 인정·인증기관을 활용하여 ISO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탄소감축 방법론 수립 지원 등

ㅇ 감축잠재량
-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연차별 개발기술 확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 2030년 65만톤, 2034년 306만톤 감축 계획

(단위: tCO2eq/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	5,337	45,453	648,597	1,252,000	1,854,000	2,458,000	3,06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일반회계 사업의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및 그린창업 생태계 기반 구축 사업만 포함되어 있고, 이 사업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인지와 관련된 나머지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개요]

(단위: 백만원, tCO2eq)

회 계	구 분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		예산 증감 (B-A)	예산 증감률 (%)
		2025년 (A)	2026년(안)					
			전체(B)	감축	2026년	2030년까지 누적		
합계		74,891	87,734	87,734	15	418	12,843	17.1
일반 회계	소계	74,891	87,734	87,734	15	418	12,843	17.1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61,386	65,234	65,234	-	-	3,848	6.3
	그린창업 생태계 기반구축	13,505	22,500	22,500	15	418	8,995	66.6

주)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내역사업 내 감축 관련 예산은 118억 4,000만원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였으나 최종적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에 누락되었으며,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설명함.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는 기후 온난화로 인한 극한 기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안 첨부서류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를 포함하도록 2022년부터 도입한 것이므로,[14][15] 정부재정 투입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작성될 필요가 있음.

14)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5.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R&D): 팁스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대폭 확대에 대한 검토 필요 등

가. 개 요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R&D)’ 사업은 시장에서 성장가능성, 유망성 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하거나 융자를 받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822억 3,100만원(161.5%) 증액된 4,570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음.[16)]

[2026년도 투·융자연계기술개발 사업(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투·융자연계기술개발사업(R&D)		174,810	184,810	457,041	282,231	161.5
	스케일업 팁스	146,750	156,750	292,425	145,675	99.3
	글로벌 팁스	-	-	74,706	74,706	순증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16,800	16,800	70,873	54,073	321.9

이 중 내역사업인 **‘스케일업 팁스’** 사업은 벤처캐피탈 등 민간투자사와 연구개발 전문회사 등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민간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면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56억 7,500만원이 증액된 2,924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다른 내역사업인 **‘글로벌 팁스’** 사업은 해외 벤처캐피탈 등의 검증 또는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을 발굴·선별하여 기술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R&D 자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년까지 스케일업 팁스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6년부터 별도 내역사업으로 독립 편성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74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16) 일반회계-투·융자연계기술개발(R&D)(2134-486)(기술혁신정책관)

다른 내역사업인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사업은 역량 및 의지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이 혁신적 R&D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 주도의 임무 중심의 R&D 프로젝트 전략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40억 7,300만원이 증액된 708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및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 (스케일업 팁스) 1,567억 5,000만원 - 일반형: 1,366억 1,700만원 · 신규 152개×4억원×(4,6,9/12)= 286억 1,700만원 · 계속 180개×3.2억원×10/12= 480억원 · 계속 150개×4억원×12/12= 600억원 - 글로벌형: 57억 9,200만원 · 신규 24개×5억원×(4,9/12)= 57억 9,200만원 - 기업신청(일반): 143억 4,100만원 · 종료 66개×2.85억원×(7,10/12)= 143억 4,100만원	○ (스케일업 팁스) 2,924억 2,500만원 - 일반형: 2,409억 2,500만원 · 신규 200개×6.67억원×6/12= 667억원 · 기업성장지원비 667억원×3%= 20억 100만원 · 계속 332개×4억원×10/12= 1,226억 6,700만원 · 종료 149개×4억원×(8,11/12)= 495억 5,700만원 - 정책지정형: 515억원 · 신규 100개×10억원×6/12= 500억원 · 기업성장지원비 500억원×3%= 15억원
	○ (글로벌 팁스) 747억 600만원 - 일반형: 670억 9,400만원 · 신규 90개×12.5억원×6/12= 562억 5,000만원 · 기업성장지원비 562.5억원×1.5%= 8억 4,400만원 · 계속 24개×5억원×10/12= 100억원 - 정책지정형: 76억 1,200만원 · 신규 10개×15억원×6/12= 75억원 · 기업성장지원비 75억원×1.5%= 1억 1,200만원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168억원 - 기술도전형: 168억원 · 신규 20개×12억원×(4,6/12)= 88억원 · 계속 10개×9.6억원×10/12= 80억원	○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708억 7,300만원 - 기술도전형: 583억 7,300만원 · 신규 35개×16.67억원×6/12= 291억 7,300만원 · 계속 28개×12억원×(10,12/12)= 292억원 - 생태계혁신형: 125억원 · 신규 5개×50억원×6/12= 125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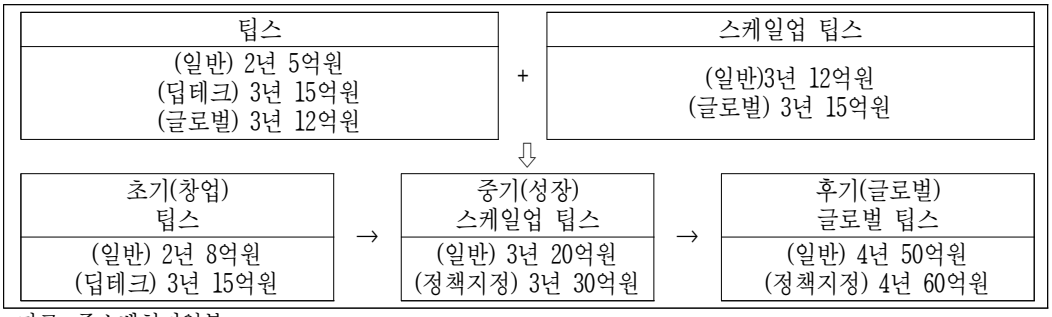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를 ①초기(팁스) → ②중기(스케일업 팁스) → ③후기(글로벌 팁스)로 명확히 구분하여 팁스 지원 프로그램을 재

구조화할 계획임.

구체적으로는 초기 단계에 포함되어있던 ‘글로벌 트랙’을 후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통합·재편하여 글로벌 스케일업을 목전에 둔 유망 창업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한편, 팁스 및 스케일업 팁스를 통해 성장한 기업이 후속 단계에서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할 때 ‘글로벌 팁스’ 프로그램을 통해 집중 지원하는 구조로 변경할 예정임.

[팁스 프로그램 재구조화(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대비 2026년 팁스프로그램 개편안]

2025년 팁스 프로그램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프리팁스 (비R&D, 보조)		8개월	1억원
팁스	일반 (R&D)	2년	5억원
	딥테크 (R&D)	3년	15억원
	글로벌 (R&D)	3년	12억원
	창업사업화 (비R&D, 보조)	10개월	1.5억원
	해외마케팅 (비R&D, 보조)	10개월	1.5억원
포스트팁스 (비R&D, 보조)		18개월	7억원
글로벌팁스(사업화) (비R&D, 보조)		3년	6억원
스케일업 팁스	**일반 (R&D)**	**3년**	**12억원**
	글로벌 (R&D)	**3년**	**15억원**
	지분투자	-	최대 20억원

2026년 팁스 프로그램

사업명		지원기간	지원금액
프리팁스		8개월	1억원
팁스	일반 (R&D)	2년	8억원
	딥테크 (R&D)	3년	15억원
	창업사업화 (비R&D, 보조)	10개월	1.5억원
	해외마케팅 (비R&D, 보조)	10개월	1.5억원
포스트팁스 (비R&D, 보조)		18개월	7억원
글로벌팁스(사업화) (비R&D, 보조)		3년	6억원
스케일업 팁스	**일반 (R&D)**	**3년**	**20억원**
	정책지정 (R&D)	**3년**	**30억원**
	지분투자	-	최대 20억원
글로벌 팁스	**일반 (R&D)**	**4년**	**50억원**
	정책지정 (R&D)	**4년**	**60억원**
	지분투자	-	최대 4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스케일업 팁스는 일반형, 글로벌형, 기업신청형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는데, 2026년부터 글로벌형은 '글로벌 팁스' 내역사업으로 독립 편성되고 기업신청형은 종료되는 대신 정책지정형을 신규 신설하였음.

2025년 일반 스케일업 팁스는 10억원 이상의 선투자를 받은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R&D 비용을 3년간 12억원 지원하였으나, 2026년에는 일반형과 정책지정형으로 구분되어 각각 3년간 20억원 또는 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편될 계획임.

[2026년 스케일업 팁스 개편 방향]

구분	2025년	2026년	
개편 방향	■ 기업 수요 중심의 상향식 선별 중심으로, 기술분야별 정책 니즈에 대한 수용성에 한계	■ 기업수요형 외 정책지정형 도입, 부처 협업을 통해 기술분야별 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	
지원 규모	■ 선투자 10억원→R&D 3년, 12억원 + 후속투자 20억원(최대) →지분투자 20억원(1배수)	일반형	〈1단계 : R&D〉 선투자 10억원 → R&D 3년, 20억원 〈2단계 : 사업화〉 후속투자 10억원(최소) → 지분투자 20억원(1배수)
		정책 지정형 (신설)	〈1단계 : R&D〉 선투자 10억원 → R&D 3년, 30억원 〈2단계 : 사업화〉 후속투자 15억원(최소) → 지분투자 30억원(1배수)
지원 구조	■ (독점형) 제한적 운영사 방식	■ (개방형) 분야별 특화운영사 도입 및 지속 확대, 일반 투자자 등도 참여 가능한 Pool 방식 개편	
지원 방식	■ 자유응모	■ 자유응모, 지정공모 신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스케일업 팁스 유형별 지원개요]

구분	일반형	정책지정형
대상	■ 스케일업 단계의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 분야	■ 전략기술 분야	■ 전략기술 분야 * 부처협업을 통한 정책지정 수요 포함
지원 방식	■ 등록 운영사(Pool방식) 투자(10억원 이상) → R&D 자금 지원(최대 3년, 20억 원)	■ 전략분야 특화운영사 등 투자(10억원 이상) → R&D 자금 지원(최대 3년, 30억 원)
후속 투자	■ 민간 후속투자(10억원이상)와 1:1조건으로 매칭투자(최대 30억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스케일업 팁스 자금지원 흐름]

구분	선투자(민간)	출연R&D(정부)	후속투자(민간)	지분투자(정부)
일반형	10억원	⇨ 3년, 20억원	⇨ 최소 10억원	⇨ 최대 20억원(1:1매칭)
정책 지정형	10억원	3년, 30억원	최소 15억원	최대 30억원(1:1매칭)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글로벌 팁스는 팁스 운영사로부터 10억원 이상 투자 받고 해외 벤처캐피탈 또는 글로벌기업으로부터 100만달러 이상의 투자실적이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R&D 비용을 3년간 최대 15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26년에는 일반형과 정책지정형으로 구분되어 각각 4년간 50억원 또는 6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편될 계획임.

[2026년 글로벌 팁스 개편 방향]

구분	2025년	2026년	
개편 방향	■ 기업 수요 중심의 상향식 선별 중심으로 글로벌 정책 니즈에 대한 수용성에 한계	■ 기업 수요형 외 정책지정형 도입, 부처 협업을 통해 글로벌 정책니즈를 적극적으로 반영	
지원 규모	■ 운영사투자 10억+해외투자 100만불 →R&D 3년, 15억원 →후속투자 20억원(최대), 지분투자 20억원(1배수)	일반형	〈1단계 : R&D〉 선투자 15억+ 해외투자 100만$ 이상→R&D 4년, 50억원 〈2단계 : 사업화〉 후속투자 15억원(최소)→지분투자 30억원(1배수)
		정책 지정형 (신설)	〈1단계 : R&D〉 선투자 15억+ 해외투자 100만$ 이상→R&D 4년, 60억원 〈2단계 : 사업화〉 후속투자 20억원(최소)→지분투자 40억원(1배수)
지원 구조	■ (독점형) 제한적 운영사 방식	■ (개방형) 글로벌 특화운영사 도입 및 지속 확대, 일반 투자자 등도 참여 가능한 Pool 방식 개편	
지원 방식	■ 자유응모	■ 자유응모, 지정공모 신설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글로벌 팁스 유형별 지원개요]

구분	일반형	정책지정형
대상	■ 글로벌 성장 단계의 딥테크 유망 중소벤처기업	
지원 분야	■ 전략기술 분야	■ 전략기술 분야 * 부처협업을 통한 정책지정 수요 포함
지원 방식	■ 등록 운영사(Pool방식) 투자(15억원 이상) + 글로벌 검증(해외투자 100만달러 이상) → R&D 자금 지원(최대 4년, 50억 원)	■ 전략분야 특화운영사 등 투자(15억원 이상) + 글로벌 검증(해외투자 100만달러 이상) → R&D 자금 지원(최대 4년, 60억 원)
후속 투자	■ 민간 후속투자(15억원이상)와 1:1조건으로 매칭투자(최대 40억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글로벌 팁스 자금지원 흐름]

구분	선투자·검증(민간)		출연R&D(정부)		후속투자(민간)		지분투자(정부)
일반형	(선투자)15억원 +(검증)100만$	⇨	4년, 50억원	⇨	최소 15억원	⇨	최대 30억원(1:1매칭)
정책 지정형	(선투자)15억원 +(검증)100만$		4년, 60억원		최소 12억원		최대 40억원(1:1매칭)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는 딥테크 분야의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 출연연구기관 등이 프로젝트 팀을 이루면 R&D 비용을 3년간 최대 36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26년에는 기술도전형과 생태계혁신형으로 구분되어 각각 3년간 50억원 또는 4년간 2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개편될 계획임.

[2026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개편 방향]

구분	2025년	2026년	
개편 방향	■ 수요 기반의 기획, 운영으로 정책·현장 니즈 전반을 수용하는 데 한계	■ 민간 및 각 분야별 전문기관 중심의 프로젝트 과제 발굴·기획 체계 정립	
지원 규모	■ 운영사투자 20억 → R&D 3년, 36억원 → 후속투자 20억원(최대) → 지분투자 40억원(2배수)	기술 도전형	■ 선투자 20억원 → R&D 3년, 50억원 후속투자 최소 20억원 → 지분투자 최대 50억원(2배수)
		생태계 혁신형	■ 선투자 30억원→R&D 4년, 200억원 후속투자 최소 30억원 → 지분투자 최대 100억원(2배수)
지원 구조	■ (독점형) 제한적 운영사 방식	■ (개방형) 운영사 등 다양한 투자자 등도 참여 가능한 Pool 방식으로 개편	
투자방식	■ 운영사 컨소시엄 투자	■ 투자시장 전면 개방	
운영방식	■ RFP 기반 신청·접수	■ 전략기술뱅크에 저장·공개하고, 기업 및 투자사와 연결된 과제는 상시접수·평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유형별 지원개요]

구분	기술도전형	생태계혁신형
대상	■ 중소기업+투자사+출연연구기관 등 R&D 도전을 위한 프로젝트 팀	■ 선도기술기업+수요기관+협력기관 투자사+출연연구기관 등 빅 프로젝트 팀
지원 목적	■ 딥테크 기술혁신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의 도전·혁신형 R&D	■ 선도기업 중심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규모 R&D
기획 방식	■ 전문가위원회+기획실무반을 통한 RFP출제 (* 전략기술로드맵반영)	■ 전략기술 ABCEDF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주체의 참여와 협업을 반영한 RFP 출제
지원 분야	■ 기술수요조사+정책지정형 기반 과제	■ 선도기술 개발 중심의 분야별 생태계 조성
지원 규모	■ 선투자(20억 원 이상)+팀 단위 컨소시엄 → R&D 자금 지원(최대 3년, 50억 원)	■ 선투자(30억 원 이상)+팀 단위 컨소시엄 → R&D 자금 지원(최대 4년, 200억 원)
후속 투자	■ 민간 후속투자(20억원이상)의 2배수 매칭투자(최대 100억 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 자금지원 흐름]

구분	선투자(민간)		출연R&D(정부)		후속투자(민간)		지분투자(정부)
기술 도전형	20억원	⇨	3년, 50억원	⇨	최소 20억원	⇨	최대 50억원 (1:2매칭)
생태계 혁신형	30억원		4년, 200억원		최소 30억원		최대 100억원 (1:2매칭)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2026년 예산안은 스케일업 팁스, 글로벌 팁스 및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의 지원대상 및 기업당 지원액이 모두 대폭 확대되었는데, 사업규모 확대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2026년도 예산안의 스케일업 팁스 사업은 2025년 대비 지원대상 및 기업당 지원액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고, 이로 인해 사업규모도 전년대비 급증하였음.

먼저 스케일업 팁스는 2025년 152개 기업에 대해 기업당 4억원(3년 12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은 300개 기업(일반 200개, 정책지정형 100개)에 대해 기업당 (일반) 6.67억원(3년 20억원) 또는 (정책지정형) 10억원(3년 3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 그 결과 당해연도 신규사업 R&D 지원액은 286억 1,700만원에서 1,167억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증가한 것임.

다음 글로벌 팁스는 2025년 24개 기업에 대해 기업당 5억원(3년 15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은 100개 기업(일반 90개, 정책지정형 10개)에 대해 기업당 (일반) 12.5억원(4년 50억원) 또는 (정책지정형) 15억원(4년 6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 그 결과 당해연도 신규사업 R&D 지원액은 57억 9,200만원에서 637억 5,0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1,001% 증가한 것임.

또한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는 2025년 20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12억원(3년 36억원)을 지원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은 40개 과제(기술도전형 35개, 생태계혁신형 5개)에 대해 과제당 16억 6,700만원(3년 50억원) 또는 50억원(4년 2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 그 결과 당해연도 신규사업 R&D 지원액은 88억원에서 416억 7,300만원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전년대비 378% 증가한 것임.

먼저 지원대상 기업과 관련하여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팁스 방식 R&D를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고도화하기 위해 팁스 사업 지원대상 기업을 800개로 하고, 팁스 지원기업 중 시리즈 A 투자유치 비율(36.2%)를 고려하여, 창업(팁스)에서 성장(스케일업 팁스)으로, 다시 글로벌(글로벌 팁스)로 단계별 상위 30% 수준의 기업을 선별·지원하기 위해 기업 수를 확대하였다고 설명함.

[팁스 단계별 기업선정 비율]

창업 (팁스, 800개)	→	성장 (스케일업 팁스, 300개)	→	글로벌 (글로벌 팁스, 100개)
Seed	31.3%	Series A	33.4%	Series B

주) 31.3%와 33.4%는 각각 팁스 및 스케일업 팁스 지원기업의 민간 후속투자 유치비율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임의적으로 설정한 팁스 프로그램의 체계에 맞추어 단계별로 상위 30% 창업기업에 대해 지원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17]

다음 기업당 지원액 및 과제단가의 증액과 관련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충분히 지원하고 민간투자와 정부지원을 합하여 R&D 투자액을 기업가치의 5%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R&D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였다고 설명함.

창업기업의 연구개발 예산 확대를 위해 기업당 지원액 및 과제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나, 기존 팁스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팁스 단계별 연구개발 과제 수요에 대한 사전조사 없이 단가가 증액됨에 따라 증액 규모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바,

연구개발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정한 연구개발 과제 규모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운용사 및 팁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팁스 참여기업의 연구개발 인력 및 매출액을 기초로 적정 지원규모를 도출하는 내용의 용역이 사후적으로라도 수행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실제 사업 추진 시 팁스 운용사가 성장 가능성 높은 창업기업을 제대로 선별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7)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장한 대로, 일반 팁스 지원대상 수 확대에 맞추어 스케일업 팁스 지원대상 수를 늘리는 것이라면, 일반 팁스가 종료된 이후에 스케일업 팁스를 순차적으로 늘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둘째, 정책지정형은 정부가 주도하여 국가전략 분야의 정책적 기술 수요를 반영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혁신 창업기업에 임무 중심의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별 협의 및 사전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준비에 철저할 필요가 있음.

정책지정형 유형은 AI, 바이오 등 국가전략분야의 정책적 기술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과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추진계획 수립 이전부터 부처 간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는 한편, 일반형에 비해 지원규모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더 면밀한 제안요청서(RFP) 작성 등의 사전준비가 필요함.

즉, 정책지정형은 부처별 추천과제로서 참여부처로부터 사전수요조사가 가능하고, 사전에 과제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 과제기획을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구체화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큰 지원액을 고려할 때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전 과제기획을 기초로 연구개발과제를 보다 구체화하여 공고할 필요가 있음.[18)]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국·과장급으로 구성된 '팁스 R&D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부처별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 등을 협의·조정하여 연내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18) 중소벤처기업부는 과제기획 및 사전수요조사가 진행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와 달리 스케일업 팁스와 글로벌 팁스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부처 추천 과제를 공고하면 이에 관심이 있는 창업기업에 대해 벤처캐피탈 등 운영사의 투자매칭이 이루어지게 되고, 운영사의 추천에 따라 창업기업이 선정될 예정임.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지정형에 대해 (일반형) 전략분야 특화운영사 및 (글로벌) 글로벌 특화 운영사 등 특화된 운영사를 모집하겠다는 계획이나, 이에 대한 선정기준 및 모집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하지 못한 상황으로 해당 운영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방안이 있는지가 불명확함.

6.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신규): 대표 공정도 마련 등 사전준비 철저 필요

가. 개 요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신규)’ 사업은 중소기업의 대표 공정도[19]를 기반으로 공정최적화 및 고도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핵심성과지표를 제고하고 제조혁신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0]

[2026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R&D)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	-	3,000	3,000	순증

구체적으로는,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의 경우 전문 연구기관이 대표 공정도를 활용하여 중소 제조기업의 공정을 분석하여 핵심공정기술을 발굴하고 제조현장 진단을 통해 공정최적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에 6개월 간 최대 4억 5,000만원을 지원하며 100% 국비 지원으로 이루어짐.

공정최적화 R&D의 경우 현장진단 기업 중 공정 성과지표(KPI) 개선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고, 인공지능 전환(AX) 및 디지털전환을 활용하여 공정최적화 및 핵심장비·자동화 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2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하며 자부담율은 25%임.

---

19) 대표 공정도란 국제표준(ISO 22400)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기반으로 관련된 핵심 제조데이터, 필요 장비의 사양 등 해당 공정 전반의 표준화된 공정 정보를 도식화한 것으로, 제조공정별 핵심장비, 핵심 관리데이터 등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신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공정 정보를 제공함.

20) 일반회계-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2134-487)(지역기업정책관)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개요]

○ (사업목적)

- 대표 공정도*를 활용한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지원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혁신적인 KPI 제고 및 AX 기반 마련

*대표 공정도: 국제표준(ISO 22400)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기반으로 관련된 핵심 제조데이터, 필요 장비의 사양 등 해당 공정 전반의 표준화된 공정 정보

○ (지원내용)

- 전문연구기관의 ①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을 통해 공정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②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및 고도화 지원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전문 연구기관이 대표 공정도를 활용하여 공정 분석 및 핵심공정기술 발굴, 제조현장 진단을 통한 공정 최적화 방안 도출
- (R&D지원) 현장진단 기업 중 공정 KPI 개선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하고, AX·DX 기술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 및 고도화 R&D지원
  - (공정 최적화) 제조현장 내 취약공정 요인 개선을 위한 작업동작 효율화, 공정 흐름 단축 등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 지원
  - (공정 고도화) 제조공정의 KPI 제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AX·DX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장비·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공정기술개발을 통해 공정최적화 의지가 있는 중소 제조기업

○ (지원기간/조건) 개발완료된 대표 공정도를 반영하여 핵심공정 품목지정

구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한도		총사업비	
				국고	민자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연구기관	6개월	최대 4.5억원	100%	-
공정 최적화 R&D	중소기업	2년	최대 10억원	75%	25%

○(지원규모) 2026년 국고 30억원 (민간부담금 4억 1,700만원)

사업기간 : 2026~2030년(5년), 총사업비: 452억 5,000만원(국비 352억 5,000만원, 민간부담금 10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문연구기관 4개소가 6개월간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을 위한 예산 17억 5,000만원과, 현장진단을 통해 선정된 10개 중소기업의 과제에 대하여 3개월간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12억 5,000만원이 편성됨.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R&D)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 사전연구 및 제조현장진단: 17억 5,000만원 - 전문연구기관 4개 x 4억 3,700만원* x 6/6개월 ≒ 17억 5,000만원 *① 대표공정별 분석(대표공정 20개 x 1,000만원) + ② 제조현장진단(15개 중소기업 x 792만원) + ③ 공정최적화 방안 및 핵심기술 도출(15개사 x 792만원) ◦ 공정최적화 R&D: 12억 5,000만원 - (신규 다/하) 10개 중소기업 x 5억원 x 3/12개월 = 12억 5,000만원 * 획기적인 공정 단축 및 최적화를 위한 기존 공정 통합, 공정 흐름 개선 및 자동화 등의 공정기술 개발·적용 R&D 내용을 감안하여 최대 2년(10억원)까지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은 해당 사업의 전제가 되는 대표 공정도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과 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사업 간 시너지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은 대표 공정도를 활용하는 공정 최적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문 연구기관이 개발완료된 대표 공정도를 활용하여 공정 분석 및 핵심공정기술을 발굴하고, 제조현장 진단 및 후속 R&D가 진행되는 구조로 이루어짐.

대표 공정도는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공정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만일 대표 공정도가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장비 및 제조데이터 등이 표준화되지 않아 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됨.

[대표 공정도 개요]

■ (목적)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신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공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별 핵심장비, 핵심 관리데이터 등 표준화된 공정 정보 도식화 ■ (내용) 국제표준(ISO 22400)에서 규정하고 있는 핵심성과지표(KPI)를 기반으로 관련된 핵심 제조데이터, 필요 장비의 사양 등 해당 공정 전반의 표준화된 공정 정보 도출 * 대표 공정도 개발 계획(누적) : (2025) 80개 → (2026) 160개 → (2027) 240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까지 대표 공정도를 80종 구축하고, 2026년 및 2027년에 매년 대표 공정도를 80종씩 늘려 2027년 말에는 240종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함.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안에서 대표 공정도를 개발하는 사업은 ‘ICT융합 스마트공장보급·확산(2111-303)’ 세부사업의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 내역사업의 국가표준연구를 통해 추진되고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8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또한 표준공정 기반으로 공정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장비별 제조데이터 표준 역시 동 내역사업으로 수행되고 있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72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제조데이터 생태계 구축사업 개요]

◦ **국가표준연구** - (개요) 대표업종 공정표준 참조모델 개발로 사업 개편을 통해 개발표준 활용성 제고 및 장비-공정-공장 표준 연계체계 구축 - (공정표준 개발) 제조데이터 표준화에서 도출된 대표 공정의 작업순서, 사용원료, 필요 장비 · 사양 등의 공정 단위 표준 77종 개발 완료 * 2024년 중장기 스마트공장 표준개발 로드맵 및 기업수요 등을 종합해 기술 단위의 스마트공장 표준 2종 개발 - (예산) 2025년 예산 5억 1,000만원 / 2026년 예산안 8억 8,000만원 (표준개발 4종 x 20백만) 80백만 + (참조모델개발 제조공정 80개 x 9백만) 720백만 + (교육과정 운영) 80백만 = 880백만원 ◦ **제조데이터 표준화** - (개요) IEC 국제표준(AAS) 기반의 공장 내 핵심장비 데이터 표준 개발·확산으로 중소 제조기업의 표준 활용 기반 마련 - (장비표준 개발) 중소기업 현장 설비에서 나오는 각기 다른 데이터 정보의 표준화를 위해 장비별 제조데이터 표준 참조모델 115개 개발 * 제조데이터 표준화 장비(목표 500개) : (24) 50개 → (25) 115개 → (26) 335개 - (확산체계 마련)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표준 활용확산을 위해 제조데이터 표준화 수행기관 인프라와 연계한 데이터 확산 체계 설계 * 제조현장에서 표준을 적용할 전문가를 대상으로 표준 참조모델, 가이던스 등 전문교육 6개 과정 개발 및 교육 실시 - (예산) 2025년 예산 24억 9,000만원 / 2026년 예산안* 72억 6,000만원 * 장비 335개 × 2,170만원 = 72억 6,000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4개 전문연구기관이 각각 20개의 대표공정을 분석하여 총 80종의 대표 공정도가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나, 2025년 9월 현재에는 77종이 구축되어 있는 상황으로 2025년 말 80종이 모두 구축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임.

이러한 구조 하에서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은 전년도 국가표준연구 사업의 사업성과에 의존하게 되는데, 만일 국가표준연구 사업이 부진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차년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됨.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 기술개발 사업계획 수립 이전까지 해당 사업의 전제가 되는 대표업종 공정표준 80종을 완비하기 위해 국가표준연구 사업의 사업관리에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고, 향후 국가표준연구 및 차년도 공정최적화 기술개발의 사업계획을 연계하여 사업 준비단계부터 사업 간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국가표준연구 및 제조데이터 표준화 사업의 추진 중에 공정과정의 미비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미리 표준공정 기반 공정최적화의 제안요청서에 반영하는 한편, 공정최적화를 통해 도출한 제조데이터를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데이터플랫폼(KAMP)에 조속히 등재하는 등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7. K-뷰티 클러스터 사업(신규):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지원내용 및 사전계획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K-뷰티 클러스터'** 사업은 체험-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복합 공간을 조성하고, 수출지원을 통해 K-뷰티 브랜드를 제고하고 혁신 기업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1)]

[2026년도 K-뷰티 클러스터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마케팅지원사업	21,827	21,827	22,644	817	3.7
K-뷰티 클러스터	-	-	3,000	3,000	순증

K-뷰티는 정부가 발표한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22)] 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다양한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K-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글로벌 뷰티 허브로 도약하고자 함.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K-뷰티 통합 클러스터'는 ① 공간적으로는 K-뷰티, 패션 등 K-컬쳐 연관 산업이 직접되어 있고,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지역을 '뷰티'를 매개로 통합하여 브랜드화하고, ② 정책적으로는 각 부처의 정책수단과 민간자원을 연계조정하여 연관산업 육성, K-뷰티 마케팅 및 수출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21) 일반회계-마케팅지원사업(4835-305)(글로벌성장정책관)

22)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내 K-뷰티 통합클러스터 관련 사항]

- K-뷰티 유망 중소 수출기어 육성, K-할랄 화장품 수출확대 지원(해외인증 등) 등을 통해 글로벌 화장품 수출 2강으로 도약
- 맞춤형 K-뷰티 통합 클러스터(체험·문화·관광·산업융합) 육성(1곳)을 통해 글로벌 뷰티 허브로 육성
- 중기 수출(2024년 68억 달러→2030년 100억 달러) 및 수출기업(2024년 8,987개사→2030년 10,000개사) 확대 (K-할랄 화장품 수출액 확대: 2024년 9억 달러→2030년 15억 달러)

관계부처 합동,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2025.8.22.

중소벤처기업부는 주관부처를 맡아 협업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협의체(가칭 'K-뷰티 클러스터 추진단')를 구성하고, K-뷰티 클러스터 시범지구 1곳을 선정한 후 지역 중심으로 확산을 추진하며, 중소기업이 K-뷰티 클러스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팝업스토어, 체험관 등 인바운드 K-뷰티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임.

2026년 예산안은 K-뷰티 클러스터 선정을 전제로, 팝업스토어 16억원, K-뷰티 체험관 10억원, 바이어 상담회 4억원을 합하여 총 3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협의체 논의를 통해 구체화 예정으로 세부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함.

[2026년 K-뷰티 클러스터 사업 개요]

○ (개요) K-뷰티가 지닌 문화적 파급력을 활용하여 K-컬쳐 연관 산업이 함께 지속 성장하는 공간·정책적 합동 클러스터 조성
○ (지원대상) 뷰티 등 K-컬쳐 연관 산업 영위 중소기업
○ (지원내용) K-뷰티 산업 육성을 위한 특화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세부 추진방안)
- 팝업스토어: 클러스터 조성지역 내 건물을 단기 임차하여, 브랜드관 등 인디·신생제품 등으로 구성한 팝업스토어 조성(16억원: 연 4회, 회당 7일 이내 운영, 100개사 지원 예정)
- K-뷰티 체험관: 민간 앵커기업 등과 협업하여 앵커기업 매장 내 제품 체험공간 및 전시간 운영(10억원: 공간 1개소 조성, 연중 상시 운영, 100개사 지원 예정)
- 바이어 상담회: 국내외 VC, 바이어 등을 초청하여 기업 IR 기회 제공 및 현장투자상담회 개최(4억원: 300개사 내외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K-뷰티 클러스터 사업은 종전의 K-뷰티 산업 육성방안에서 제시되어 이미 시행 중인 사업 또는 이미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하므로, 화장품 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위해서는 차별화된 지원내용 및 사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K-뷰티 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임차 형태의 팝업스토어, 상설 K-뷰티 체험관, 바이어 상담회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사실 2019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K-뷰티 미래화장품산업 육성방안'에서도 K-뷰티 홍보관 상설운영, 글로벌 수준의 화장품 박람회 개최, K-뷰티 클러스터 지정·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음.[23)]

[2019년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주요내용]

연구 개발	**현장 수요 기반 미래 신기술 확보**			
	기초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유전체 분석 맞춤형 기술 개발	글로벌 시장선도를 위한 신기술 개발	
규제 혁신	**스마트 규제를 통한 기업활동 제고**			
	제조자 표기의무 삭제	맞춤형 화장품 신설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등 안전성관리 강화	
브랜드 제고	**K-뷰티 브랜드 경쟁력 강화**			
	신남방 신흥국가 진출지원 강화	**K-뷰티 홍보관 상설 운영**	**글로벌 수준의 국내 화장품 박람회 개최**	해외수출을 위한 정보제공 강화
산업 인프라	**K-뷰티 클러스터 구축**			
	산업지원 인프라 신설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 지정**)	특성화된 우수인력 양성	화장품산업 전시관 신설	스마트공장 도입지원

자료: 관계부처 합동, “K-뷰티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 2019.12.5.

K-뷰티 홍보관 상설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2025년 현재 ‘뷰티플레이(Beauty Play)’라는 이름으로 K-뷰티 홍보 및 체험공간이 명동(2021년~)과 홍대(2024년~)에서 운영 중에 있음.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 운영하는 뷰티 체험 홍보관으로, 방문객은 퍼스널 컬러 진단, 중소기업 화장품 테스트 등을 체험해볼 수 있음.[24]

[K-뷰티 체험·홍보관(뷰티플레이) 개요]

○ 사업 개요

- (지원내용) 국내 중소 화장품기업 제품 전시・체험장을 구축하여 해외 관광객 방문 명소화하고 K-뷰티문화의 거점으로 육성
- (운영기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 (장소) (1호점) 서울 중구 명동「페이지 명동」3층(2021~)
  (2호점)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3-16번지 태성빌딩 2~5층(2024~)

○ (구성) 제품 전시, 뷰티 교육・체험 등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운영

- (오프라인) K-화장품 전시, 상설체험(뷰티파우더룸, 피부진단, 라이브스튜디오 등), 뷰티세미나 운영 등 체험・관광 프로그램
- (온라인) 글로벌 SNS 채널 운영(제품 및 홍보관 자료 게시), 뷰티 콘텐츠(메타버스) 체험, K-뷰티 라이브 커머스 등
- (뷰티 서포터즈 운영) 국내・외 주요 인플루언서를 K-뷰티 크리에이터로 선정, 현지 잠재 소비자 대상 한국 화장품 홍보 및 체험 활동 추진

자료: 보건복지부, “K-뷰티 체험·홍보관 확대, 중소 화장품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지원 강화”, 2024.1.31.

23) 참고로 화장품 특화 클러스터의 경우, 2019년 K-뷰티 화장품산업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여러 지방자치단체(충북, 인천, 경북 등)의 노력이 있었으나 국가 지정 클러스터 계획이 무산된 바 있음.

24) 보건복지부, “K-뷰티 체험·홍보관 확대, 중소 화장품기업의 우수제품 홍보 지원 강화”, 2024.1.31.

이와 같이 중소기업 화장품 제품을 위한 홍보·체험공간이 이미 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명동과 홍대에 각각 운영 중인 상황에서, 이 사업을 통해 K-뷰티 체험관을 신규로 추가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종전의 보건복지부 사업[25]과 별도로 중소벤처기업부도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산업 전반의 질적 수준을 향상할 목적으로 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여 부처 간 정책수단을 연계하고, 산업 선도기업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개별기업 단위의 경쟁을 넘어 협력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둘째, K-뷰티 클러스터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범부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에서야 클러스터 추진단이 구성되어 협의를 시작하는 등 사전준비가 다소 부족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특히 클러스터 지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의견조율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인 초혁신 경제 15대 과제로 'K-뷰티 클러스터'가 선정되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서야 관계 부처, 공공기관, 협·단체 및 화장품 관련 기업이 참여한 K-뷰티 클러스터 추진단을 구성하였음.

구체적으로는 9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기관 및 협·단체, 기업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협업 및 K-뷰티 클러스터 운영방향 등을 논의한 바 있음.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추진단은 정책적으로는 각 부처의 정책수단과 민간자원을 연계조정하여 연관산업 육성, K-뷰티 마케팅 및 수출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관이 협력하기 위한 추진기구임에도, 예산안이 편성되고 나서야 개괄적인 논의를 시작한 것은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임.

---

25) 202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사업(3039-303)으로 155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당 사업은 화장품 종합지원센터 운영, 현장 전문인력 양성, 국내K뷰티체험홍보관 상설운영, 피부유전체분석센터구축, 중소화장품해외진출지원, 오송 국제 K-뷰티스쿨 설립, 남원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구축, 충북 글로벌 클린화장품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관리비 등으로 구성됨.

[K-뷰티 통합 클러스터 추진단 1차 회의 개요]

○ 추진목적
- K-뷰티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업 및 K-뷰티 클러스터 운영방향 논의

○ 회의개요
- (일 시) 2025. 9. 29.(월)
- (장 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사무소(여의도 한마루빌딩 5F)
- (참석자) 관계 부처, 기관·협단체, 기업, 전문가 등 22명

구 분	참석자
부 처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관 및 협단체	· 대한화장품협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기업	· 유통제조기업, 중소 브랜드사 등 11개사
전 문 가	· 증권업계종사자(뷰티산업전문가), 상권기획자

○ 주요내용
- (부처) 활력 있는 핵심상권을 선정하여 민관협업으로 관광·체험·축제까지 가능한 선순환 구조 마련
- (기업) 중소·인디브랜드의 성공은 마케팅과 브랜딩에 달려 있어,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글로벌 마케팅 역량 지원 필요
- (전문가) 인디브랜드의 오프라인 유통망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셀렉션 스토어를 운영하고, 판매 검증 후 대형 유통점 입점 연계방안 마련
- (기관 및 협단체)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 B2B 행사와 팝업스토어 등 B2C 행사를 연계하여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 모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특히 이 사업은 2026년 K-뷰티 클러스터 시범지구 선정 및 지역별 확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진단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지 않아 향후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 조율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K-뷰티 클러스터는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중 하나이자 범 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아직 사전 준비가 미흡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이 사업을 통해 중소 화장품 수출기업의 수출 기반 마련 및 확대라는 정책 성과를 뚜렷이 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적극적인 사업추진 및 향후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조율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세 출>

8. 지식산업센터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강구 필요

가. 개 요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은 비수도권지역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를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건립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1억 1,800만원(10.6%)이 증액된 948억 1,700만원이 편성되었음.[26)]

[2026년도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A)	추경			(B-A)/A
지식산업센터(자율)	85,699	85,699	94,817	9,118	10.6

이 사업은 2022년까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 편성되어, 예산안 편성 및 심사를 통해 건립지역과 예산을 결정하였으나, 2023년부터 지역자율계정에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포괄보조사업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게 사업 공간 제공 및 일자리 창출 기여
○ (시행주체) 지자체(자치단체자본보조), 건립비의 70% 이내(160억 한도)
○ (추진배경) 2009년 고위당정회의에서 비수도권 지역 지식산업센터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2012년부터 추진
○ (추진현황) 총 70개 센터(완료 23, 건립 중 47 / 2026년 신규 5)
* 세종·제주 계정 제외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지식산업센터(자율)(5153-303)(지역기업정책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 현황]

구 분	1차 (2012~2016)	2차 (2015~2018)	3차 (2016~2019)	4차 (2017~2020)	5차 (2018~2021)	6차 (2019~2022)	7차 (2020~2023)
지 역	부산(북구) 대구(북구) 광주(동구)	대구(수성) 대전(동구) 경남(진주)	대구(달서) 충북(청주) 전북(전주)	울산(남구) 전북(전주) 경북(포항)	부산(남구) 강원(원주) 충남(천안) 전남(고흥)	강원(춘천) 전북(남원) 전남(나주) 전남(영광) 경남(창원)	부산(강서) 대구(북구) 광주(북구) 충북(제천) 충남(홍성) 전북(전주) 전남(광양)
센터 수	3	3	3	3	4	5	7
진행 사항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중	운영 4, 공사 1	운영 3, 공사4

구 분	8차 (2021~2025)	9차 (2022~2026)	10차 (2023~2027)	11차 (2024~2028)		12차 (2025~2029)	13차 (2026~2030)
지 역	충북(충주) 충북(영동) 충남(아산) 충남(서천) 전남(화순) 경북(경산)	광주(남구) 강원(강릉) 충남(금산) 전북(김제) 전북(순창) 경북(영천) 경남(김해)	광주(북구) 울산(울주) 충남(천안) 전남(순천) 경남(밀양)	광주(광산) 대전(중구) 대전(유성) 충북(청주) 충북(보은) 충북(증평)	충남(공주) 충남(보령) 전북(익산) 전남(목포) 경남(양산)	부산(서구) 부산(사상) 강원(동해) 충남(계룡) 전북(전주) 경북(안동) 경북(예천) 경남(사천)	강원(삼척) 충남(천안) 전북(정읍) 전남(강진) 경북(포항)
센터 수	6	7	5	11		8	5
진행 사항	공사5 설계1	공사3 설계4	공사1 설계4	설계		설계 준비	설계준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단계에서의 집행 부진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이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에 편성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교부 받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집행가능 규모에 비해 많은

예산을 교부 받고 연내 집행하지 못한 채 실집행 단계에서 이월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예컨대, 2023년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교부된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중 11개(나주·부산에코델타·대구북구·광주·제천·아산·화순·김제·울산·천안·순천)의 경우에는 2023년 교부액을 2023년 및 2024년에도 실집행을 완료하지 못하여 2025년으로 실집행단계에서 재재이월되었음.[27)]

2024년 지방자치단체로 보조금이 교부된 27개의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 중 20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교부현액 기준 실집행률이 70% 미만이고, 대구북구(0.6%)·화순(4.1%)·강릉(0.3%)·금산(9.4%)·울산(0%)·밀양(0%)·광주(3.0%)·대전중구(0%)·대전유성구(0%)·청주(9.4%)·공주(0%)·보령(1.6%)·익산(0%)·양산(0%)의 경우 실집행률이 10%도 미치지 못하였음.

2025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단계에서의 집행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2024년 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전년도 이월액 833억 6,800만원이 본예산 637억 7,000만원보다 많은 상황으로, 이를 연내 집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2025년 8월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545억 8,400만원을 교부받고, 전년도 이월액 824억 8,700만원을 더한 교부현액 1,370억 7,100만원 중 546억 2,500만원만 집행하였음.

2022~2025년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 경우 전년도 이월액보다 당해연도 이월액이 많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이월액이 누적되고 있고, 2024년에는 전년도 이월액보다 실집행액이 적어 교부된 보조금의 재이월이 발생하였음.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률은 2022년 56.8%, 2023년 50.5%, 2024년 43.9%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27) 세종특별자치시계정의 지식산업센터(세종)(5153-302)의 경우에도, 2023년 교부액 59억 9,500만원이 2024년 전액 이월되고 2024년 52억원 교부액을 합한 111억 9,500만원 중 45억 7,100만원이 실집행되고 66억 2,300만원이 이월되어 결과적으로 2023년도 교부액 중 14억 2,400만원이 2025년으로 재재이월되었음.

[2022~2025년 지식산업센터(자율)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실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2022년	48,804	61,154	61,154	42,842	103,996	59,051	44,945	510	56.8
2023년	123,408	123,408	123,408	44,945	168,353	84,984	83,368	-	50.5
2024년	63,770	63,770	63,770	83,368	147,138	64,651	82,487	-	43.9
2025년8월	85,699	54,584	54,584	82,487	137,071	54,625	-	-	39.9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자율계정 특성 상 중앙 부처 차원의 실집행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건축 공사 시에 행정절차 지연 및 건설단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해 사업진도와 집행현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임.

그러나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의 실집행 부진은 2023년도 결산 심사,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시에서도 연례적으로 지적된 바 있으므로,[28]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구축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 단계에서의 집행 부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8)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 4권, 2024.8., p.585.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4권, 2024.11., p.514.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총 괄>

9. 중소기업·스타트업 AI 인력 양성 관련: 스타트업·중소기업 취업자·재직자를 위한 체계적인 AI 교육 체계 마련 필요

가. 개 요

먼저, 연수사업의 내역사업인 **‘중소기업 재직자 AI 역량강화 연수’**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AI와 연계한 스마트제조 연수과정 및 직무분야별 AI 도메인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41억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29)]

[2026년도 중소기업 재직자 AI 역량강화 연수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연수사업	23,785	23,785	25,931	2,146	9.0
중소기업 재직자 AI 역량강화 연수	-	-	4,136	4,136	순증
AI 연계 스마트 제조 역량강화 연수	-	-	800	800	순증
AI 자율제조 및 도메인 전문가 양성과정	-	-	3,336	3,336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AI 연계 스마트 제조 역량강화 연수(연 2,000명)를 위해 8억원과 AI 자율제조 및 도메인 전문가 양성과정(연 8,000명) 33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9)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연수사업(5451-307)(지역기업정책관)

[중소기업 재직자 AI 역량강화 연수사업 개요]

○ 도메인 및 AI 자율제조 전문가 양성 (年 8,000명) - (직무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직무 전문가를 대상으로 AI를 현업에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AI 능력 배양 - (도메인 전문가 양성) 주요 직무 분야별* 초·중·고급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소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인식개선 포함) * (경영분야) 영업·마케팅, 인사·총무, 재무·회계, 전략·기획 등 - (AI 자율제조 전문가 양성) 신규추진이 필요한 AI 적용 현장분야(자율제조)의 신규과정* 개발 및 교육과정 운영 * (제조분야) 생산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등 ○ AI 연계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양성교육 운영(年 2,000명) - (기존과정 고도화) 현재 운영중인 스마트제조 교육과정 중 AI 연계가 가능한 교육과정을 고도화* 하여 AI 전문과정으로 운영 - (현장기술연수) 스마트공장 5대 기술분야* 등 현장 수요가 큰 기술과정을 운영하여 제조AI 활용을 위한 맞춤형 인재 양성 * ①자동생산, ②머신/딥러닝, ③공장자동화, ④생산성, ⑤데이터분석/처리 -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중소기업 재직자의 연수 참여도 제고 및 교육 효과성 증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혼합연수* 운영 * 이론교육은 온라인으로 이수한 후 실습 위주 교육을 오프라인으로 운영 - (기업현장 맞춤연수) AI 연계 스마트공장 활용능력 및 문제해결 역량 고도화를 위해 기업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교육* 운영 * 전문가 현장파견을 통한 현장개선 프로젝트 등 실시

다음, 창업성공패키지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사업은 혁신 벤처 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AI 청년인재 및 해외(베트남) SW 실무인력 양성을 통해 스타트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39억원이 편성되었음.[30]

구체적으로는 구직 중인 청년 인재를 대상으로 200명을 선발하여 9개월간 게임·금융·유통·바이오에 대한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AI 청년인재 양성’ 사업으로 23억원이, 베트남 현지대학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SW 실무교육 및 언어교육을 지원하여 국내 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하려는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으로 16억원이 편성되었음.

30)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창업성공패키지(5152-302)(청년정책과)

[2026년도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창업성공패키지	100,031	100,031	106,431	6,400	6.4
스타트업 AI 기술 인력양성	3,900	3,900	3,900	-	-
AI 청년인재 양성	2,300	2,300	2,300	-	-
해외인력 취업매칭지원	1,600	1,600	1,600	-	-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AI 청년인재 양성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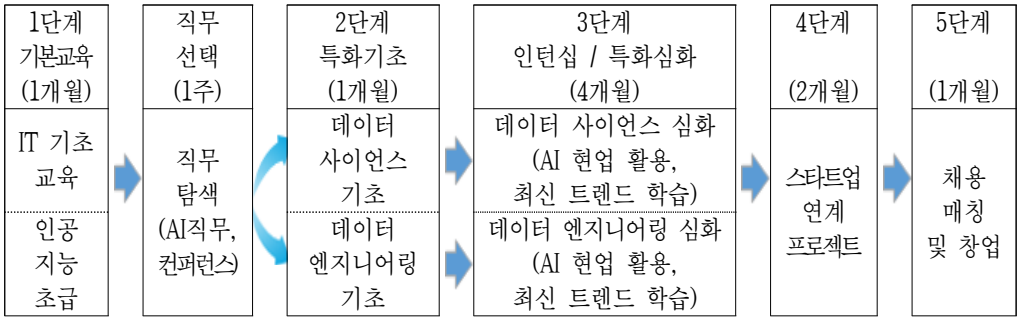
○ 추진목적

- 혁신 벤처·스타트업이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 실무인력 양성 및 취·창업 연계를 통한 청년인재와 스타트업간 미스매치 해소

○ 사업개요

- (예산규모) 23억원
- (교육대상) 39세 이하 청년(학력·전공 무관), 200명(대면 50명, 비대면 150명)
  * 수도권/비수도권 신청 비율을 감안 균형적 지역인재 선발
- (교육기간) 9개월(3~11월), 하루 8시간(주 5일)
- (교육방식) 대면(현장)·비대면(온라인) 방식 병행
- (교육과정)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접목되는 4대 분야(게임, 금융, 유통, 바이오)에 대한 인공지능 실무인재 양성 교육과정 운영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이어드림 스쿨) 교육과정]



○ (취·창업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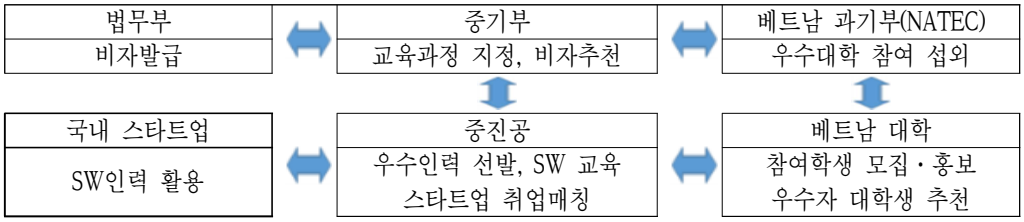
- 졸업생·교육생과 AI 스타트업 간 취업 연계(인턴십, 기관협업 등)
- 창업 역량 강화 지원(창업교육, 멘토링, IR 참여 등)
  * 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프로그램과 연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국내 스타트업 SW인력난 완화를 위해 해외 유망한 SW인력 대상 실무교육 진행 후 국내 기업으로의 취업 연계

○ 사업개요
- (예산규모) 16억원
- (사업대상) 베트남 현지대학 졸업(예정)자 및 현지 구직자 200명
- (사업기간) 2026년 3~12월(10개월)
- (사업방식) [교육반] / [취업반] 이원화 운영
  * 교육반 : 교육 후 매칭 방식으로 현지대학 졸업(예정)자 대상 SW실무교육 실시
  * 취업반 : 매칭 후 교육 방식으로 현지 구직자(경력자) 대상 한국기업 취업교육 실시
- (교육과정) [교육반] 실무인력 양성 목표의 백엔드 교육 / [취업반] 한국기업 취업 목표의 언어 및 기업문화 교육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마지막으로, 재도약촉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지역별 산·학·연·관 합동 사업단을 통해 지역의 주력(특화) 산업 AI 솔루션을 개발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도입하고 AI 활용을 확산시키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과 동일한 350억원이 편성되었음.[31]

[2026년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재도약촉진	41,549	76,549	106,731	65,182	156.9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	35,000	35,000	-	-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 자본보조(330-03목)로 관련 예산 350억원을 교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AI사업단을 갖추어 AI 솔루션 개발·보급, 산학연 연계, AI 인력 양성, 학습 데이터 확보 및 AI 규제해소·대응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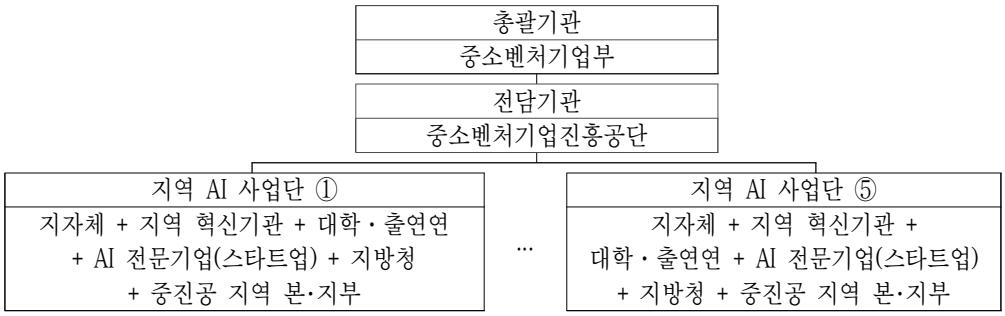
31)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재도약촉진(5161-302)(지역기업정책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정부는 재정만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AI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할 계획임.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 AI 전환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전환 및 지역 경제 활성화
- AI 활용률이 낮은 지역의 중소기업에게 AI 활용·확산을 촉진하고 지역 AI 생태계 구축 등 기업 경쟁력 및 지역 AI 균형발전 제고

○ (지원대상) 5개 광역 지자체(지역 AI 사업단)
- 5개 지역자치단체 선정 예정으로, 2025~2026년 국비 총 700억원 지원 예정(지역별 140억원)



○ (지원내용)
- 지역산업 및 중소기업의 AI 활용 촉진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지역 맞춤형 AI 활용·확산 사업 지원
- 지역별 산업특성 등을 고려한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AI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 AI 현장인재 양성 등 전방위 지원 실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중소기업 재직자 AI 역량강화 연수 사업은 2025년 AI 연수 운영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AI 교육과정 로드맵을 적기에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2026년 AI 교육이 내실 있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특히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도 AI 연수 운영체계 구축 사업(2억 3,000만원)을 통해 분야별 현장맞춤 실습형 신규과정을 13개 개발하고, 직무별로 AI 이해-적용-내재화의 단계별 AI 교육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으로, 연말에 중소기업 AI 교육과정 로드맵을 도출할 예정임.

2026년 도메인 및 AI 자율제조 전문가 양성(8,000명)의 내용에는 중소기업의 영업·마케팅, 인사·총무, 재무·회계, 전략·기획 등 주요 직무분야 별로 AI를 활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025년 중소기업 AI 연수 운영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세부 교육 커리큘럼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함.

[중소기업 AI 연수 교육과정 로드맵(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경영 분야에 대한 AI 활용 교육은 교육대상자의 AI 활용역량을 제고하여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AI 도입 필요성을 제고하고 AI 인력수요를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2024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AI 도입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4.7%가 현재 AI를 미적용 중으로, 80.7%가 AI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83.7%가 향후에도 AI 적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혀 중소기업의 AI 도입 필요성 인지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임. 따라서 AI 활용 교육을 통해 중소기업이 AI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내부 재직자의 AI 활용역량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의 AI 활용수요에 내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재직자 AI 역량강화 연수 사업 수행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비수도권 소재 연수원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AI 교육환경의 소외지역을 정책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AI 활용 교육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져 비수도권의 AI 인력 육성이 필요한 상황으로,[32][33]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6개 연수원(안산, 태백, 천안, 광주, 경산, 창원) 및

스마트공장 배움터(안산, 천안, 광주, 전주, 경산, 창원)를 활용하여 비수도권 중심으로 중소기업 재직자의 AI 활용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지역별 AI 미스매칭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임.

둘째, AI 청년인재 양성 사업은 모든 참여자에게 기초교육부터 시작할 것이 아니라 교육참여자의 인공지능 활용 수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맞춤형 인공지능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내용을 개편할 필요가 있음.

AI 청년 인재양성 사업은 인공지능 관련 대학 학과의 4학년 전공 과정을 10개월의 집중과정을 통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34] 4대 분야(게임·금융·유통·바이오)를 중심으로 인턴십 및 스타트업 연계프로젝트를 지원하도록 설계됨.

구체적으로는 ① IT기초·인공지능 초급교육은 대학교 1~2학년 수준의 전공 기초 필수과정을 2개월에 걸쳐 교육하고, ② 특화기초(데이터 사이언스·엔지니리어링) 교육은 대학교 3학년 수준의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본개념과 클라우드 컴퓨팅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을 위한 기초이론 및 실습을 1개월에 걸쳐 교육함. 이후 ③ 인턴십 또는 데이터 사이언스·엔지니어링 교육 중 하나를 4개월간 선택적으로 진행하고, ④ 4대 분야 중 관심 분야에 대해 현업전문가의 코칭을 받아 2개월 간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실습하게 됨.

그러나 AI 청년 인재양성 사업은 참여자의 IT 활용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참여자를 대상으로 IT 기초교육부터 진행하여 일부 참여자의 경우 비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참여자의 IT 활용역량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35]

참고로 2026년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경우 ‘K-하이테크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교육을 통해 빅데이터·코딩 등의 초·중급 과정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고,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AI·빅데이터·클라우드·핀테크 등에 대한 전문적 훈련도 가능한 상황임.[36]

---

32) 국제신문, “산업연구원 AI 활용 기업의 82%는 수도권에 집중”, 2025.2.23.

33) 한국경제, “그나마 있는 인재도 수도권에 82% 쏠림... 지역 AI 인력 육성 시급”, 2025.5.25.

34) 구체적으로는, IT기초・인공지능 초급교육(2개월) → 특화기초교육(1개월) → 인턴십 / 특화심화교육(4개월) → 스타트업 연계 프로젝트(2개월) → 채용매칭 및 창업연계(1개월)으로 진행됨.

35)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입교 초기의 입교생의 IT 활용역량을 분석하여 입교생의 역량에 맞게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겠다고 설명함.

36) [K-디지털 트레이닝 주요 훈련과정]

AI 활용 교육이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AI 청년 인재양성 사업 추진 시 종전과 같이 모든 참여자가 AI 관련 활용지식이 전무하다고 가정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의 성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참여자의 AI 활용 정도에 따라 세분화된 교육훈련 내용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또한 AI 청년 인재양성 사업은 인턴십 및 실습 프로젝트가 인공지능과 관련성이 있는 4대 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나, 현재 전 산업군별로 인공지능 전환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을 고려하여 연계산업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셋째, 전 산업군에 걸친 인공지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베트남 현지 인력에 대해 한국어 및 소프트웨어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는 내용인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은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안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구인난에 시달리는 국내 스타트업 업계에 해외 소프트웨어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인력 교육 및 취업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베트남 현지 대학 재학생에게 한국어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원하고 국내 취업을 연계하려는 사업임.

구분	훈련기관명	훈련과정명	훈련분야
선도기업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	빅데이터
	KT	AIVLE School AI 개발자	빅데이터
		AIVLE School DX 컨설턴트	AI
	포스코	청년 AI·Bigdata 아카데미	빅데이터
	카카오	카카오(Kakao) 클라우드 개발자 양성과정	클라우드
		카카오(Kakao) 클라우드 엔지니어 양성과정	
	마이크로소프트	MS AI School	AI
민간 혁신 훈련기관	멀티캠퍼스	AI 엔지니어 취업캠프(Python)	AI
		백엔드 개발자 취업캠프(Java)	웹&콘텐츠개발
	앨리스	엘리스 AI 트랙	AI
		엘리스 SW Engineer 트랙	웹&콘텐츠개발
	팀스파르타	실무형 클라우드 엔지니어 양성 과정	클라우드
		실무형 Android 앱개발자 양성과정	정보시스템구축
	구름	AI기술 자연어 처리 전문가 양성 과정	AI
		쿠버네티스 전문가 양성 과정	클라우드
우수대학	서울대학교	빅데이터 핀테크 과정	핀테크
	성균관대학교	Digital/Analog IC 기반 첨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 실무과정	반도체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전 산업군에 걸친 인공지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각종 인공지능 교육을 확대하려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에 대한 소프트웨어 및 한국어 교육까지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지원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특히 언어적 제약이 있는 외국인에게 단기간의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국내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참고로 2024년 사업은 교육생 200명 중 취업자 수는 107명에 불과하고, 2025년 9월 기준으로 교육생 122명 중 취업자 수는 61명으로, 교육생 중 절반 정도만 실제 국내 기업 취업연계에 성공하여 사업성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해외인력 취업매칭 지원사업 운영 성과]

(2025.9. 기준)

구분	2024년	2025년
교육생 수	200명	122명
수료생 수	182명	61명
취업자 수	107명	61명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즉 한정된 예산 하에서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해외 대학생에게 소프트웨어 및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대신에 국내 구직자·재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실제 산업현장의 인공지능 수요에 대응하는데 실효적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한 예산안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넷째,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국비로 AI 인프라를 조성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한 AI 인력양성, AI 솔루션 등의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는 구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AI 연수프로그램과 지방자치단체 AI 인력양성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AI 인프라 구축 예산 350억원을 교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AI사업단을 갖추어 AI 인력 양성, AI 솔루션 개발·보급, 산학연 연계, 학습 데이터 확보 등을 추진하려는 사업으로, 실제 AI 지원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기획·수행하게 됨.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예시)]

분야	세부내용
AI 인력 양성	• AI 현장인재 양성, AI 실습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AI 교육·인력 매칭 플랫폼
AI 솔루션 도입·활용	• 기업 맞춤형 AI 솔루션 도입·활용 • 지역 산업특성을 고려한 AI 개발·실증
AI 인프라 구축	• AI 컴퓨팅 인프라, 공공 데이터셋 및 사전학습 모델 • AI 테스트베드 및 실증환경, 공동 장비 및 입주 공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수행하는 경남, 대구, 울산, 전남 및 제주 5개 지역의 경우 AI 인력양성과 AI 솔루션 도입·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데, AI 인력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이나 가이드라인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전환 관련 사전준비 및 기획 정도에 따라 AI 인력양성 및 AI 솔루션 도입·활용 관련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제조 스타트업 관련 인공지능 교육의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연수사업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표준화된 교육내용을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AI 인력양성 교육내용을 지방자치단체마다 개발해야 하는 비용부담이 절감될 수 있음.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 지역별 프로그램(안)]

지역	프로그램 계획(안)	
	AI 인력양성	AI 솔루션 도입·활용
경남	■ AI융합과정, 인공지능 우수인력양성 과정 ■ 산업안전 교육 및 전문가 양성 ■ 제조AI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 ■ 우주항공 제조AI경진대회	■ 제조 특화산업 ‘가치사슬형’ AI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全제조업 ‘저변확대형’ AI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대구	■ 재직자 인력양성(일반) ■ 재직자 인력양성(업종특화) ■ AI전문 교육	■ 자동차(모빌리티) 부품 분야 AI 솔루션 실증과제 지원 ■ 수요연계 PoC 및 확산지원
울산	■ 현장연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 CEO 경영혁신 특별과정	■ 즉시 활용 가능한 AI솔루션 보급·확산 ■ 실증기반 PoC 프로젝트 지원 ■ AI기반 기술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전남	■ AI-ON 캠퍼스 ■ AI-BASE 캠퍼스 ■ AI 인사이트 포 리더스 ■ 교육생-구직자 기업 매칭	■ 체계적 지원 시스템에 기반한 AI보급확산 ■ 산업별 특화 AI Agent 개발 및 실증
제주	■ 산업맞춤형 교육 ■ 지역생태계 육성 AI강사 과정 ■ AI인재 취·창업 매칭 지원 ■ 제주 바이오·AI 성장서포터즈	■ 진단 기반 솔루션 개발·실증 지원 ■ 빅데이터, 바이오 데이터 융합 플랫폼 연계를 통한 솔루션 개발 및 실증 ■ 데이터 기반 검증 체계 구축 및 지역 특성화 AI솔루션 평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AI 인력양성 및 AI 솔루션 도입 관련 자료 및 데이터를 중소벤처기업부의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내 제조 AI데이터셋 및 AI 솔루션 실증사례 등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통한 사업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 및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37]

37)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2111-312)의 경우 AI 분석 전문가, 솔루션 공급기업, 지역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제조 AI센터를 3개소 구축하고, 해당 사업과정을 통해 도출한 제조데이터 등을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에 등록하도록 함.

<수 입>

10. 기타경상이전수입: 경륜·경정수익금의 출연금에 상응하는 사업 수행 필요

가. 개 요

‘기타경상이전수입’ 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실시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따른 기술료 및 경륜·경정 수익금 중 일정 비율(4%)을 수납하여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계획액 대비 2,500만원(△0.1%)이 감액된 306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음.[38)]

[2026년도 기타경상이전수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타경상이전수입	30,710	30,710	30,685	△25	△0.1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2025년도 기술료 징수 예상액을 300억 7,200만원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익금 배분계획액을 6억 1,300만원으로 계상하여, 기타경상이전수입을 총 30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나. 검토의견

「경륜·경정법」에서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이 특정 용도에 우선 사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해당 출연금에 기초한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을 기금에 편성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편성은 「경륜·경정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현행 「경륜·경정법」에서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수익금 중 일부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해당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38)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기타경상이전수입(59-596)(기업금융과)

위한 용도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39] 또한 「산업발전법」에서는 자전거·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의 재원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40]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까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경륜·경정의 전년도 수익금 중 일부를 수납 받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수납하고,[41] 레저장비산업 발전이라는 출연 목적에 대응하기 위하여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 계획액을 편성·집행해오고 있었으나, 2026년에는 동 사업 계획액은 편성하지 않았음.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이 ① 실 수혜자의 수가 협소한 점, ② 사업효과가 제한적인 점, ③ 오랜 기간 지속으로 반복 지원된 점, ④ 지원을 통한 효과가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2025년 말 폐지’ 판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

39)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 경주사업자는 경주의 시행에 따른 제15조제1항의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다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금은 자전거 및 모터보트 선수육성을 위한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수익금의 사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익금의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주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17.5
2. 경주사업자가 진흥공단인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에 100분의 4

40) 「산업발전법」
제33조(사업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재원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서 지원한다.
6. 자전거 · 모터보트 등 레저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

41) 참고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4년도 경륜 및 경정사업 수익금 540억원에 대하여 202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279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110억원, 청소년육성기금 88억원,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8억원, 지방재정지원 45억원 등으로 배분하였음.(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 “경륜경정본부, 수익금 540억원 사회 환원·세금 3297억원 납부”, 2025.5.12.)

[경륜경정 수익금 관련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8.	2025 (예상)	2026 (예상)
수납액 (기타경상이전수입)	1,415	-	-	-	1,465	1,796	1,796	613
지출액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1,962	1,767	1,591	1,351	701	515	561	-

주) 코로나19 집합제한 등으로 인해 2020~2022년은 경륜·경정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2021~2023년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았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경륜·경정수익금에 대해서는 기타이전수입으로 계상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은 2025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폐지)를 근거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지 않아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즉, 현행 「경륜·경정법」 및 「산업발전법」 등의 법률에서는 경륜·경정 수익금을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용도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사업을 개편하거나 이를 대체할 신규 사업을 편성했어야 함.[42)]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경륜·경정 수익금을 출연받는 이상 출연금의 우선 활용 용도를 명시한 현행 법령에 따라 자전거 및 모터보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 대체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42) 중소벤처기업부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과 보조사업 연장평가가 2025년 5월 비슷한 시기에 진행됨에 따라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의 대체방안이 기금운용 계획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보조사업 평가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폐지된 사업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지 출>

11.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적극적인 민간 자금의 매칭 조성 및 투자 유도 필요 등

가. 개 요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은 벤처투자모태조합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되는 민간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당초 계획액 대비 6,000억원(120.0%)이 증액된 1조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43]

[2026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500,000	800,000	1,100,000	600,000	120.0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예산인 출자금은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모태펀드에 귀속되고, 민간자본과 매칭되어 자펀드를 조성한 후 투자가 이루어지며, 자펀드는 조성 후 약 4년간 투자되고 5~8년간 운용된 후 청산됨.

[모태펀드 사업 집행 절차]

모태조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에 의해 중진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결성 ■ 운용기관 : 한국벤처투자 (펀드출자 및 관리 · 감독 등 모태조합 자산 관리 · 운용)
↓↑	
투자 자펀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의해 VC 등이 모태조합 출자를 받아 결성(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 중소 · 벤처기업에 자금공급 및 투자수익 배분
↓↑	
중소 · 벤처기업	■ 중소 · 벤처투자 펀드로부터 투자받아 기업성장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43)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5264-301)(벤처정책관)

2026년도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NEXT UNICORN PROJECT, 지역, 재도약, 글로벌, LP 플랫폼, 회수활성화, 임팩트, 청년창업, 여성기업 등의 분야에 출자하기 위해 1조 1,000억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자펀드 분야별 출자계획]

(단위: 억원)

계정명	분야명	2025년		2026년	투자 내용
		당초	수정		
중진	스타트업 코리아	1,500	좌동	-	초격차 10대 분야 관련 딥테크 스타트업, K-글로벌 등
	글로벌	700	좌동	700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지원
	M&A	200	좌동	-	기업승계 등 M&A 목적 투자
	재도약	100	좌동	800	재창업기업, 사업전환기업 등 재도약 기업 지원
	여성기업	100	좌동	100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여성인 기업 등
	LP 첫걸음펀드	200	좌동	-	벤처투자조합에 참여한 적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기관투자자 등의 벤처투자 유도
	NEXT UNICORN PROJECT	-	3,000	5,500	AI·딥테크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 등
	LP 플랫폼	-	-	500	연기금, 금융사 등의 벤처투자 유도
	회수활성화	-	-	500	인수합병(M&A) 및 구주매각(세컨더리) 거래 지원
	임팩트	-	-	200	사회적기업 등 소셜 임팩트 분야
청년	청년창업	200	좌동	200	대표이사가 만39세 이하인 청년기업 등
지방	지역	2,000	좌동	2,000	지역혁신 기업, 규제자유특구 등
혁신모험	창업초기	-	-	500	창업초기기업에 투자
계		5,000	8,000	11,000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중소벤처기업부는 모태펀드를 통한 벤처펀드 조성 시 연기금 및 연기금투자풀, 민간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재원을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의 계획액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이 사업 예산은 2019년 2,900억원 편성되었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대응하기 위해 2020년 9,400억원, 2021년 1조 1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되었고, 2022년 4,600억원, 2023년 2,835억원, 2024년 4,500억원으로 다시 축소 편성되었다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8,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되었음.

[2019년 이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사업 계획액 편성 현황]

(단위: 억원)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안)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수정	당초
2,400	2,900	7,400	9,400	7,400	10,100	4,600	4,600	2,835	2,835	4,500	4,500	5,000	8,000	11,00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원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2021년 1조 100억원이 편성된 이래 1조원 규모의 예산안이 처음 편성된 것임. 특히 중소기업모태조합의 회수재원을 통한 투자까지 고려할 때 2026년 실제 출자 규모는 적어도 1조 5,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됨.[44]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의 확대는 모태펀드를 통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민간의 여유자금을 미래 성장산업, 벤처·중소기업으로 유도하는 생산적 금융으로서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특히 중소기업모태조합의 경우, 민간 벤처금융에서 소외된 부분인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투자하는 한편, 벤처투자 후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인수합병(M&A) 및 구주매각(세컨더리)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자펀드를 결성할 예정임.

44)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및 한국벤처투자는 2026년 모태펀드의 회수재원에 대해서는 자펀드 청산 등이 완료된 연말에서야 구체적으로 파악이 가능한 상황으로, 연내 추정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함.

[2025년 중소기업모태조합 계정별 출자현황]

(단위: 억원, 2025.9. 기준)

부처	계정	분야		모태약정액				
				계 (C=A+B)	본예산	추경 예산	재정 소계(A)	회수 예산 등(B)
중기부	중진	루키리그		1,000	-	-	-	1,000
		여성기업		100	100	-	100	-
		재도약		300	100	-	100	200
		스케일업·중견도약		250	-	-	-	250
		바이오		300	-	-	-	300
		라이콘		102	-	-	-	102
		기업승계 M&A		300	200	-	200	100
		스타트업코리아펀드		1,754	1,500	-	1,500	254
		LP첫걸음펀드		200	200	-	200	-
		R&D매칭펀드		300	-	-	-	300
		밸류업펀드		100	-	-	-	100
		창업사업화지원 매칭펀드		40	-	-	-	40
		글로벌펀드		1,800	700	-	700	1,100
		NEXT UNICORN PROJECT	스타트업	1,500	-	1,500	1,500	-
			스케일업	1,500	-	1,500	1,500	-
	지방	지방시대 벤처펀드		2,000	2,000	-	2,000	-
	청년	청년창업		400	200	-	200	200
	혁신모험	창업초기		1,095	-	-	-	1,095
합계				13,041	5,000	3,000	8,000	5,04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러나 코로나 19 시기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이 급증함에 따라, 정책자금의 과잉공급으로 인한 창업기업의 과잉 가치평가(밸류에이션 버블)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고 정책자금에 상응하는 민간자금의 유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2020~2021년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이 확대됨에 따라 벤처투자시장 참여자로부터 정책자금 및 투자재원 규모가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나, 민간 출자자(LP)[45] 등 민간 펀드 투자자 모집에 일부 난항을 겪은 바 있음. 참고로, 해당 기간 VC 대상 벤처투자 시장에 대한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투자 대상 기업의 벨류에이션 상승과

45) 유한책임투자자(LP: Limited Partner)란 투자한 금액만큼만 리스크와 책임을 지는 투자자로, 펀드에 자신의 자금을 제공하고 펀드의 수익을 배분받는 것으로 수익을 얻음.

투자를 고려할 만한 기업 수 감소 등의 의견이 제기된 바 있음.[46]

최근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의 증감규모가 상당하였고 이로 인해 벤처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역시 큰 폭의 부침을 겪게 됨에 따라, 이와 같은 예산안의 대폭 확대가 다시 벤처기업의 벨류에이션 증폭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정책자금 확대 시기에 결성된 자펀드 운용사의 경우 벤처기업의 적정 가격보다 높게 평가하여 투자를 진행하였다가, 정책자금 축소 시기에 벤처투자가 급감하여 기투자기업이 후속투자를 받지 못하고 기업가치가 정체 또한 하락하는 현상이 일부 발생된 바 있음. 이로 인해 민간 출자자(LP)의 밸류에이션 상승 및 투자를 고려할만한 대상 기업 수 감소 등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난 설문조사 결과도 있음.[47]

또한 중소기업모태조합 자펀드 결성단계에서 민간 출자자(LP)로부터의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출자예산 증액에 따른 민간 출자자 확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퇴직연금, 연기금투자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48]

먼저 퇴직연금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지 않은 상황으로,[49] 퇴직연금의 예금 위주의 투자로 인한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고 민간자금을 벤처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간 협의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 연기금투자풀의 경우 2018년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을 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50] 2024년까지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벤처투자펀드에 출자하는 사례가 전무하였으나, 2025년 8월 LP 첫걸음 펀드를 통해 무역보험기금이 최초로 연기금투자풀을

---

46) 한국벤처투자, 「VC(Venture Capital) 트렌드 리포트 2021」, 2021.11.

47) 더벨, “저금리 훈풍 민간 출자 확대 기대... 버블 우려도 공존”, 2025.9.19.

48) 참고로 정부는 2024년 10월 「벤처·스타트업 글로벌화를 위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권, 산업자본, 연기금, 일반국민 등 투자주체별로 벤처투자 참여경로를 대폭 확대하여 새로운 모험투자자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음.

49) 현행 「퇴직급여법 시행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서는 퇴직금연금의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출자조합 출자를 허용하지 않고, 비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금지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간접투자하는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도 마찬가지로 투자방식에서 제외되고 있음.

50) 「연기금투자풀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연기금투자풀은 각 기금 등에서 예탁받은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다.
7. 모태조합과 공동출자하는 벤처투자

활용하여 모태펀드와 공동으로 벤처펀드에 출자한 바 있음.[51]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도 2025년 계획과 마찬가지로 LP 플랫폼 예산이 500억원 편성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는 연기금투자풀 내 여유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등을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52]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혁신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가 2026년 3월부터 허용될 예정인데,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53]

둘째,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사업을 통해 창업 초기단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등 국민성장펀드와 차별화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는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을 1조 1,000억원 확대 편성한 것 이외에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국민성장펀드 사업 1조원이 편성되었음.

국민성장펀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 가치사슬에 제공하여 첨단산업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 지역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펀드임.[54]

---

51) LP첫걸음펀드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연기금, 금융사 등 기관투자자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하는 펀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벤처투자조합 출자 경험이 없는 기관을 대상으로 함. 모태펀드는 LP첫걸음펀드에 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고, 투자 분야는 최초 출자자가 자유롭게 선정함.
LP첫걸음펀드는 최초 출자자의 시장 진입 유도를 위해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풋옵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우선해 자펀드 결성액의 10% 이내 손실을 충당하는 '우선손실충당'과 최초 출자자 출자지분의 30% 이내에서 최초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매각할 권리를 부여하는 '풋옵션'을 기본으로 제공함. 또 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할 경우 모태펀드가 수령할 초과수익의 30% 이내에서 수익을 이전하는 '초과수익이전' 옵션과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30% 이내에서 모태펀드의 출자지분을 매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콜옵션'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음.

52)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펀드 출자 경험이 없는 기관투자자(최초 출자자)의 벤처투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모태펀드와 최초 출자자와 공동 출자하는 'LP첫걸음펀드'를 2025년 신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손실 위험을 줄이고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태펀드가 우선손실충당, 초과수익이전 등 강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한 바 있음.

53) 2025년 10월 현재 모태펀드 자펀드 운용사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부터 자펀드 투자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지 또는 모태펀드의 자펀드 운용사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임.

54)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9.10.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이며, 향후 법령개정을 통해 게임 및 컨텐츠 분야 등의 산업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할 계획임. 특히 장기 인내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임.

국민성장펀드 조성규모인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됨.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과정에서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2026년 예산안 1조원)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임.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모태조합과 국민성장펀드가 투자방식이나 지원분야, 성장단계 등이 상이하여 두 정책금융 상품간 유사중복이나 간섭의 여지가 적다고 설명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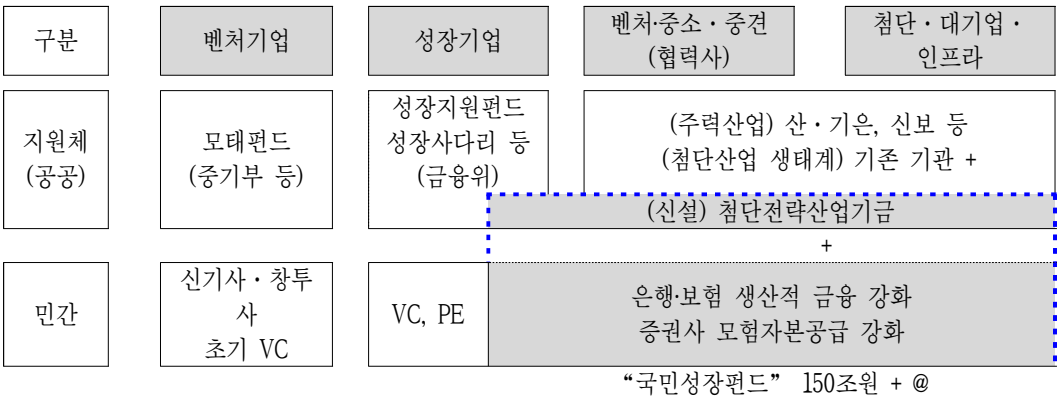
① 투자방식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한 국민성장펀드와 달리 중소기업모태조합은 간접투자 중심이고, ② 투자대상 측면에서 국민성장펀드가 10대 첨단전략 산업을 위주로 하나 중소기업모태조합은 AI·딥테크 등 전략분야 외에도 시장 소외 분야 및 콘텐츠・스포츠・관광・영화・해양 산업 등 다양한 업종에 투자하며, ③ 기업의 성장단계 측면에서 국민성장펀드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을 불문하나, 중소기업모태조합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임.

[국민성장펀드 및 중소기업모태조합 비교]

구분	국민성장펀드	중소기업모태조합
지원(투자) 방식	직접투자, 간접투자, 인프라 투·융자, 초저리 대출 등	간접투자 중심
분야	10대 첨단 전략 산업, 90개 기술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AI・딥테크 등 전략 분야, 초기창업・청년・여성 등 시장 소외 분야, 콘텐츠・스포츠・관광・영화・해양 등
성장 단계	중소・중견・대기업, 인프라 등 메가프로젝트 중심	비상장 중소・벤처기업
재원	정책자금(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일부 펀드는 국민참여형으로 조성)	(모태펀드) 정부 부처 재정 출자 (모태자펀드) 모태펀드, 민간자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성장단계 내 국민성장펀드 위상]



자료: 관계부처 합동,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2025.9.10.

그러나 2026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계획액 1조 1,000억원 중 절반인 5,500억원이 인공지능 융합 및 딥테크 분야의 창업기업에 60% 이상 투자하는 'Next Unicorn Project 펀드'에 편성되어 있는데, 주목적 출자 분야인 '인공지능 융합' 및 '딥테크'[55]는 국민성장펀드의 지원대상인 첨단전략산업과 상당 부분 중복됨.

특히 금융위원회는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예시로 첨단산업과 관련된 기술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와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출자하는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56] 국민성장펀드의 '초장기기술투자펀드'와 중소기업모태조합의 'Next Unicorn Project 펀드' 간의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투자단계별 지원대상을 구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내 벤처투자의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상반기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20.4% 수준이고 업력 7년 초과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53.9%로, 국내 벤처투자가 창업 초기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창업 후기기업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참고로 한국의 벤처 투자가 수도권 소재, 창업한 지 7년이 넘은 창업 후기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57]

55) 중소기업모태조합 "Next Unicorn Project" 출자분야별 투자 대상 기업

출자 분야	투자 대상
인공지능(AI) 융합	인공지능(AI) 분야 기업, AI 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포함
딥테크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분야 기업

자료: 모태펀드(중기부 소관)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 2025.7.11.

56)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 조성 및 운용방안", 2025.9.19.

[피투자기업 업력별 투자실적]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초기(3년 이하)	금액	30,585	33,594	26,808	22,243	11,595
	비중	19.2%	26.9%	24.6%	18.6%	20.4%
중기(3~7년)	금액	58,083	42,828	30,709	33,551	14,582
	비중	36.4%	34.3%	28.1%	28.1%	25.7%
후기(7년 초과)	금액	70,703	48,284	51,616	63,663	30,603
	비중	44.4%	38.7%	47.3%	53.3%	53.9%
합계		159,371	124,706	109,133	119,457	56,780

주) 벤처투자회사·조합 및 신기술금융회사·조합의 합산통계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4년 전체 벤처투자 보도자료”(2025.2.12.), “2025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결성 동향 보도자료”(2025.8.14.)를 재가공함

이와 같이 벤처투자가 창업 후기 기업에 집중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모태조합 공고 시 창업 초기 및 중기 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벤처투자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창업기업에 대해 정책자금이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특히 중소기업모태조합이 국민성장펀드와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모태조합은 기업 성장단계에서 초기 단계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해 중견기업·대기업에 대규모 융자·출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모태조합과 국민성장펀드가 기업 성장단계별 정책금융 지원을 아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57) 동아일보, “벤처투자, 수도권-창업후기 기업에 쏠려... 정부 주도 모태펀드로 지역경제 살려야”, 2025.7.29.
한국경제, “벤처캐피털 5곳 중 1곳은 ’개점휴업’…초기 창업 생태계 붕괴 위기”, 2025.8.2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지 출>

12.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신규): 소상공인의 AI 활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활용을 위한 교육, 제품·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하여 새로운 가치와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113억 6,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58)]

[2026년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83,422	83,422	128,069	44,647	53.5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	-	11,360	11,360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중소벤처기업부는 AI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및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발에 참여하는 AI 기업과 수요자인 소비자까지 연계하는 시너지를 창출하여 모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함.

구체적으로는 경영관리, 홍보·디자인, 업무자동화, 제품개선·개발, 판로개척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AI 활용을 교육한 후, AI 전문 멘토와 협업하여 실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3단계 구조로 추진할 예정임.

구체적으로는 ① (기초교육) 2,000명을 대상으로 90만원 상당의 기초교육을 지원(자부담율 20%)하여 총 14억 4,000만원을 투입하고, ② (심화교육) 이 중 1,000명을

5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4131-316)(소상공인정책관)

대상으로 240만원 상당의 심화교육을 지원(자부담율 20%)하여 19억 2,000만원을 투입하며, ③ (사업화 지원) 이 중 500명에게 2,000만원 상당의 사업화 지원을 지원(자부담율 20%)하여 80억원을 투입하려는 것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지원절차 및 운영(안)]

구분	선발인원	내용	운영주체
기초교육	2,000	· AI 툴 활용 교육(약 1개월)	소진공 전문기관
↓			
심화교육	1,000	· 5개 분야별 AI툴 심화교육 및 분야별 활용 방안 마련 및 AI 멘토그룹과 팀빌딩(약 3개월)	전문기관 (AI멘토그룹)
↓			
사업화 지원	500	·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사업화를 위한 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약 6개월)	전문기관 (AI멘토그룹)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추진목표
- AI를 활용한 제품개발 및 서비스 도입으로 소상공인의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및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지원

○ 주요 추진내용
- (분야) ①경영관리, ②홍보·디자인, ③업무자동화, ④제품개선·개발, ⑤판로개척 등
- (지원방식) 지원 분야별로 AI 적용을 교육한 후, AI 전문 멘토와 팀빌딩(협업)하여 5개 분야별 실제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 (지원절차) 교육 → 실전모델 설계 → 사업화 지원의 3단계 지원
  · (1단계) AI 활용 교육
  · (2단계) 심화교육 및 AI 기업·멘토간 팀빌딩(BM개발)
  · (3단계) 사업화 지원을 통한 실전모델 적용
- (성과확산) 발굴된 사업모델 중 우수모델은 다른 소상공인들에게 소개하여 사업모델에 대한 AI 적용 확산 유도

○ (2026년 계획안) 113억 6,000만원
- (기초 교육) 14억 4,000만원 (2,000명×90만원×80%)
- (심화 교육) 19억 2,000만원 (1,000명×240만원×80%)
- (사업화 지원) 80억원 (500명×2,000만원×8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첫째, 소상공인이 AI 활용지원 사업을 통해 실제 업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에 특화된 구체적인 AI 교육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필요가 있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의 1단계 기초 교육의 경우, AI 입문자를 위해 업종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초 공통교육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경영활동에 즉시 활용가능한 실습 중심의 업종별 특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임. 이는 소상공인에게 AI 신기술에 대한 기초 이해를 도모하는 한편, 경영활동에 즉시 활용 가능한 실습 중심으로 교육을 추진하려는 것임.

[기초 공통교육(예시)]

구분	지원 내용
마케팅 자동화	· AI 답변·이미지·영상 등 콘텐츠 결과물을 사업장에 접목하는 실습 * (예시) 리뷰 답글 작성, 홍보이미지, 음식점 메뉴판 제작 등
업무 효율화	· 데이터 기반 고객분석, 자동응답 기능 등으로 업무 효율화 실습 * (예시) 챗봇 응답 자동화, 예약공지, 리뷰 요약 등
상품/서비스 기획	· AI도구를 활용한 트렌드분석, 경쟁사 분석 등으로 상품/서비스 기획 실습 * (예시) 신제품 개발, 상품조합/패키지 구성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업종별 특화교육(예시)]

구분		목표	강의내용	협업(안)
서비스	외식	고객유입을 통한 매출향상	리뷰 분석, 자동댓글 메뉴판 제작, SNS 홍보 등	배민, 네이버, 카카오, 미리디 등
	도소매	판매채널 확대, 광고 효율	검색 추천 알고리즘 POS 데이터로 매출 분석	네이버, 쿠팡, 현대홈쇼핑 등
	미용	예약률, 재방문율 증가	예약 챗봇 설정, SNS	네이버, 카카오 등
제조	B2C	생산, 재고 효율화	판매데이터 기반 생산 예측	KT 등
	B2B	납기관리	과거 납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산일정 계산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은 소상공인에 대한 AI 공통교육 및 특화교육의 경우, 중소기업과 달리 아직 AI 교육에 대한 표준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59]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운영기관별 편차 발생 및 낮은 교육품질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AI 활용 교육의 경우, 2025년도 AI 연수 운영체계 구축 사업(2025년 2억 3,000만원)을 통해 분야별 현장맞춤 실습형 신규과정을 13개 개발하고, 직무별로 AI 이해-적용-내재화의 단계별 AI 교육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 AI 연수 교육과정 로드맵(안)]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의 경우, 기초 공통교육 및 업종별 특화교육의 구체적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고 협업기업에 대해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으로, 중소기업 재직자 AI 활용교육 대비 사전준비가 미흡한 상황임.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기관 선정 시 전국교육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으로, 소상공인 AI 기초교육의 표준적인 교육 커리큘럼 및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기관별 편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

59)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초·심화 교육에 대한 상세 커리큘럼 등 세부 추진계획을 2025년 11월까지 수립하겠다는 계획이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연수사업과 달리 구체적인 연구용역 등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체적으로 수립할 계획임.

한편,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내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서는 ① 소상공인 상생협업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소상공인연합회에게 국비 100% 지원을 통해 업종별 AI 전문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3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60] ②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1만명에게 최대 30만원 상당의 AI 경영지원 SW를 보급(국비 100%, 자부담 0%)하기 위한 보조금 예산 3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61]

소상공인연합회의 업종별 AI 전문교육의 경우, 이 사업의 기초교육 및 업종별 특화교육의 교육 커리큘럼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표준화된 AI 교육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보다 지역밀착 방식으로 AI 활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상공인 AI 경영지원 SW 보급 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AI 활용교육 시 교육성적이 우수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경영지원 SW 사업의 가점을 부여한다거나 소상공인 AI 경영지원 SW 보급사업으로 AI 활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AI 활용 심화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교육사업과 보조사업간 연계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둘째,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은 권역별 운영기관 및 AI 전담멘토에 따라 교육내용 및 성과가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협의 및 선정기준 마련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 추진시 2026년 1월 민간 운영기관을 모집공고하여 수출 전문성과 지원인프라 등을 보유한 우수 운영기관을 지정하되, 전국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권역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겠다는 계획임.

[권역별 참여 주관기관·기업(안)]

권역	참여 기업・기관
수도권	네이버, 카카오, 언더독스, 삼성SDS, LG CNS,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 등
충청권	KAIST AI,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ETRI AI오픈랩,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호남권	스마트인재개발원,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GIST 인공지능연구소 등
대경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구테크노파크, DGIST 인공지능대학원 등
동남권	POSTEC 인공지능대학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경남테크노파크 등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지원인프라(4131-321)

6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스마트화지원(4131-322)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권역별 참여 주관기관·기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전문성이 있는 대학원 및 산업계 지원시설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62] 주로 산업통상부의 인공지능 관련 연구개발(R&D) 사업에 적합한 기관으로 보여 소상공인에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이 사업은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AI 툴을 가르치는 기초교육 외에도, 업종(서비스·제조) 및 경영 분야별로 AI를 활용하여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민간 운영기관의 AI 및 소상공인 교육·컨설팅 관련 전문성이 모두 필요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및 인공지능에 모두 전문성을 갖는 민간 운영기관과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치는 한편, 소상공인의 AI 교육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적합한 민간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셋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내 기초교육(1개월), 심화교육(3개월) 및 사업화지원(6개월)을 모두 수행하기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 커리큘럼 마련, 민간 운영기관 선정 및 소상공인의 단계별 선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사업화지원을 연내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한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추진일정으로, 2026년 1월 권역별 민간 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을 마치고, 2월 내 소상공인 선정평가 및 최종선정을 완료하여, 3월부터 소상공인 AI 활용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12월 경진대회 및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설명함.

[2026년 월별 혁신 소상공인 AI 활용지원 사업 추진일정(안)]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0월</th><th>11월</th><th>12월</th></tr>
<tr><td>기초</td><td colspan="2" rowspan="3">전문기관 및
소상공인
모집 및 선정</td><td colspan="2">기초교육</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rowspan="3">성과
공유</td></tr>
<tr><td>심화</td><td></td><td colspan="3">심화교육</td><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사업화</td><td></td><td></td><td></td><td colspan="6">사업화 지원</td></tr>
</table>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2)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시된 기관 중 실제 얼마나 참여하였는지 사후적으로라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러나 소상공인 AI 활용에 대한 분야별·업종별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를 반영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에도 일정 기간이 필요하므로, 권역별 민간 운영기관 공모 및 선정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소상공인의 단계별(기초-심화-사업화) 신청 및 선정 시에도 심사에 필요한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시한 추진일정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교육이 완료되기도 전에 곧바로 다음단계의 교육이 진행되는 것으로 추산된 것임.

따라서 이 사업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 내역 중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13.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기금운용계획 확정 이후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의 임의 변경 유의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은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672억 1,000만원이 증액(17.2%)된 4,579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63)]

[2026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	465,205	1,905,130	564,145	98,940	21.3
온누리상품권 발행	390,748	458,673	457,958	67,210	17.2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총괄적인 사업계획 수립·운영을 담당하고 있고, 2025년 2월까지는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한국조폐공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비즈플레이·하나은행,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KT·비씨카드에 위탁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으나 2025년 3월부터 지류상품권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 통합) 모두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 1조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4조 5,000억원 등 총 5조 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임.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① 4,0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은 할인 없이 판매하고, ② 6,0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은 5% 할인하여 판매할 예정으로, 발행수수료율(2.8%) 및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580억원이 편성되었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① 2조 8,3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은 7% 할인하여 판매하고, ② 1조 6,700억원 상당의 상품권은 10% 할인하여 판매할 예정으로, 발생수수료율(0.53%)과 할인율 등을 반영하여 3,88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63)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소상공인정책관)

그 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기타운영비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110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분			발행 계획액	수수료율	발행예산
직접비	지류	비할인	4,000	2.8%	112
		5% 할인	6,000	7.8%	468
		소계	10,000	-	580
	디지털	7% 할인	28,300	7.53%	2,131
		10% 할인	16,700	10.53%	1,759
		소계	45,000	-	3,890
	직접비 소계		55.000	-	4,470
간접비	기타운영비				110
총 계					**4,58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과 관련하여 국회가 심사·확정한 기금운용계획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의 추가할인 및 환급행사를 추진하였는데, 2026년도에는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온누리상품권 발행 사업 관련 2025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은 ① 지류형 상품권은 비할인 또는 5% 할인, ② 디지털 상품권은 5% 또는 10% 할인하는 등 총 5조 5,000억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계획액 3,90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말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거쳐 확정(2024.12.10.)되었음.

그러나, 정부는 2025년이 시작하자마자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편성된 것과 달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하고 결제액 환급행사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2025년 경제정책방향(2025.1.1.)」을 발표하였고, 국회 심사내용과 달리 집행하였음.

구체적으로는, ① (할인율 상향) 2025년 1~2월(1.10.~2.10.)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5%로 상향하였고,[64] ② (결제액 환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결제액의

일부를 다시 환급하였는데, 1~2월(1.10.~2.10.)에는 결제액의 15%를 환급하고,[65] 3월(3.17.~28.)에는 결제액의 20%를 환급하였음.[66]

참고로 2025년 9월 말 기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2조 1,529억원으로, 이 중 특별 판매기간 동안의 판매실적은 8,453억원으로 전체의 39.3%를 차지함. 특히 당초 5% 할인판매로 2조 3,000억원을 공급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특별 판매기간동안 15% 할인판매로 8,393억원을 공급하였고, 상품권 발행 소요비용을 고려할 때 사실상 5% 할인판매 관련 예산을 모두 특별할인판매기간 동안에 전액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임.

64) [2025년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개요]
○ (할인기간) 2025.1.10.(금) ~ 2025.2.10.(월)
○ (할인율·한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판매율을 상향(10→15%) (지류형 상품권은 제외)
○ (할인구매한도) 1인당 월 200만원
○ (할인규모) 예산 소진시까지

[2025년 할인판매행사 기간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

(단위: 억원)

구분	지류	모바일	카드형	합계
비할인	739	-	70	809
5% 할인	1,135	-	-	1,135
10% 할인	-	△5	△6	△11
15% 할인	-	3,330	5,063	8,393
소계	1,874	3,326	5,127	10,32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65) [2025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환급행사 개요]
○ (행사기간) 2025.1.10.(금) ~ 2025.2.10.(월)
○ (행사내용)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환급
- 결제 누적액 최소 7,000원 이상, 회차별 최대 2만원, 최대 8만원 한도 지급
-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
○ (환급액) 170억원

66) [2025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20% 환급행사 개요]
○ (행사기간) 2025.3.17.(월) ~ 2025.3.28.(금)
○ (행사내용) 행사 기간 동안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다시 환급
- 결제 누적액 최소 5,000원 이상, 회차별 최대 2만원 한도 지급
- 결제금액의 20%를 산출한 금액에서 1,000원 단위로 환급
○ (환급액) 103.2억원

[2025년 온누리상품권 유형별 판매현황]

(단위: 억원, 2025.9.30. 기준)

구분		계획액	판매실적		
			전체 판매 실적	1~2월 특별판매 기간	1~2월 특별판매 기간 제외
지류	비할인	8,000	3,080	739	2,341
	5% 할인	9,000	6,621	1,135	5,486
	10% 할인	-	-	-	-
	15% 할인	-	-	-	-
	소계	17,000	9,701	1,874	7,827
디지털[2]	비할인	-	952	70	882
	5% 할인	23,000	△0.1[1]	-	△0.1
	10% 할인	15,000	12,329	△10	12,339
	15% 할인	-	8,248	8,393	△145
	소계	38,000	21,529	8,453	13,076
계		55,000	31,230	10,327	20,903

주 1) 온누리상품권 환불 시에는 환불액을 음의 값(-)으로 표기함
2) 디지털상품권은 결제취소 및 환불 건 발생으로 일부 수치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5년 1~2월 결제액 15% 환급행사 시 170억원이 지급되었고, 3월 20% 환급행사 시 103억 2,000만원이 지급되어 총 273억 2,000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이 환급되었음.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상향조정하거나 환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사업내용의 변경을 넘어서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가능 총량이 축소되는 효과가 발생함.[67] 실제로 당초 5% 할인판매로 2조 3,000억원을 공급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관련 예산이 발행 소요비용이 3배에 달하는 15% 할인판매로 8,248억원[68]을 공급하는데 사실상 전액 소진되었고, 이로 인해 2025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발행가능규모가 약 1조 5,000억원 가까이 축소되는 결과로 귀결된 것임.

즉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 내용으로 사업을 임의로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달성하기

67) 할인율 5%의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15%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형의 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는 당초 계획의 약 33% 수준으로 감소하게 됨.

68) 특별할인판매 기간 동안의 판매액 8,393억원에서 결제취소 및 환불 등에 따른 환급액 145억원을 차감한 수치임.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였음.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7%, 10%로 설정하여 총 4조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인바, 향후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결 이후 국회 심사내용과 달리 임의로 변경·집행하여 국회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형해화하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

14.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신규):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 필요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은 소상공인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등 경영활동에 활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5,790억 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69)]

[202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소상공인 성장지원	265,085	1,962,421	621,243	356,158	134.3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	-	579,005	579,005	순증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	1,565,980	-	-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참고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공과금 및 4대 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용대상은 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였으나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되어 추진되고 있음.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소상공인이 정해진 사용처에 5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

○ 지원요건
- (개업일) 2025.5.1.(추경 확정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
- (활동 여부)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국세청 DB 기준)
- (매출액 기준)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이 아닌 모든 업종

69)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성장지원(4131-317)(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 사용처
- (당초) 7개: 전기 · 가스 ·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변경) 9개: 기존 사용처 + 통신비, 차량 연료비

○ 지원절차
- ① (대상선정) 소상공인이 크레딧을 신청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선정 및 9개 카드사에 명단 제공
- ② (카드등록) 소상공인이 기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거나, 신용·체크카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카드사에 선불카드 발급 요청
- ③ (크레딧 차감) 소상공인이 등록된 카드로 지정된 사용처 항목을 결제 시, 한도 50만원 내에서 크레딧 자동 차감

○ 예산: 1조 5,660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후속사업으로 간이과세자(전년도 매출액 1억 400만원 이하)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이 공과금, 4대 보험료 등에 대해 25만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포인트를 신용·체크·선불카드에 지급하려는 사업임. 기존 사업과는 소상공인의 매출액 기준 및 1인당 지원액에서 차이가 있고, 나머지 지원요건 및 지원절차 등은 기존 사업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 비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연도	2025년(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액	1조 5,660억원	5,790억 500만원
지원대상	연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휴·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휴·폐업,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제외)
사용처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추가), 차량연료비(추가)	좌 동
지원액	1인당 최대 50만원	1인당 최대 25만원
지원절차	소상공인 신청 및 카드등록, 사용 후 차감	좌 동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계획안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5,747억 5,000만원과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비용 42억 5,500만원이 편성됨.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급: 5,747억 5,000만원 - 229만 9,000명 × 25만원= 5,747억 5,000만원 ○ 신청접수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임차비용 등: 42억 5,500만원 - 42억 5,500만원 × 1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후속사업으로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이 전년 대비 축소 편성되었는바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계획안 확정 후 향후 사업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202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는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과 비교할 때 지원대상이 축소(매출액 3억원 이하→1억 400만원 미만)되고 지원금 역시 축소(50만원→25만원)되어 관련 예산 역시 1조 5,660억원에서 5,790억원으로 사실상 감액 편성되었음.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및 경영안정 바우처 비교]

구분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예산	1조 5,660억원 (2025년 제1회 추경)	5,790억원 (2026년 본예산)
사용처	공과금(전기・수도・가스), 4대 보험료(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차량연료비(추가), 통신비(추가)	좌동
대상・단가	❶ 연매출: 0원 초과 ~ 3억원 이하 ❷ 지원금: 50만원	❶ 연매출: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 ❷ 지원금: 25만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은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약 311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9월 10일 기준으로 322만명이 1조 6,100억원을 신청하였고 실제 지급은 272만명에게 1조 3,608억원이 지원되었음.

2026년도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의 경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간이과세자)의 소상공인 23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81만명의 소상공인은 2025년에는 보조금을 수령하였으나 2026년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보조금을 받더라도 지원액이 절반으로 축소됨.

이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으로부터 지원규모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70] 국회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지원규모의 적정성 역시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고, 국회의 계획안 심사 후 확정된 사업내용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의적으로 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등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관련 보조사업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한 이후 실제 사업 수행 과정에 국회 심사내역과 달리 보조사업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확대한 사례가 다수 있음.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매출기준을 연매출 3,000만원 이하로 설정하여 국회 심사를 거쳤으나,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다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2차례 확대한 바 있음.

[2024년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내용 변경 내역]

구 분	1차·2차 공고 (2024.2.15.~7.7.)	3차 공고 (2024.7.8.~9.1.)	4차 공고 (2024.9.2.~12.31.)
매출기준	3,000만원 이하	6,000만원 이하	1억 400만원 미만
주요 변경 사항	(직접) 신청자 정보만 입력 (비계약) 한도액 이상 고지서 첨부	(직접) 한전 고객번호 제출 (비계약) 월 1.2만원 증빙인정	(공통) 고객번호 없이 신청 6,000만원 이하 업종제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또한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당초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매출기준을 연매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설정하여 국회 심사를 거쳤으나,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한 바 있음.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내용 변경 내역]

구 분	1차 공고 (2025.2.10.~5.19.)	2차 공고 (2025.5.20.~)
매출기준	1억 400만원 미만	3억원 이하
소급 지원	-	기존 신청자 중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 사업자(4만개사) 지급 전환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70) 노컷뉴스, “소상공인 안전망 강조 중기부, 관련 예산은 ‘찔금’ 증액”, 2025.9.3.

또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의 경우, 당초 사용처를 공과금(전기·수도·가스) 및 4대 보험료로 한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고 국회 심사를 통해 확정되었으나, 실제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용처에 차량연료비와 통신비를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음.

15.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신규): 사실상 정보화 사업으로서 관련 절차 미실시 및 명확한 산출근거 부족

가. 개 요

내역사업인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정보를 집중·통합 제공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5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71]

[2026년도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 계획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년도		2026년도 계획안 (B)	증감 (B-A)	
	당초 (A)	수정			(B-A)/A
소상공인재기지원	274,806	350,455	351,649	76,843	27.9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	-	-	5,000	순증

주) 2025년도 수정계획은 8월 말 기준임

이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정책, 상권분석 등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망라하여 지원사업 정보 및 신청 보조, 상권정보 및 창업 업종·지역 등의 맞춤형 상담·분석·제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 도우미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24’[72]와 ‘소상공인365’[73]에 AI 도우미를 탑재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데이터 준비 10억원, LLM 활용 20억원, 시스템 연계 10억원, 검증·교육 10억원으로 총 50억원을 편성하였음.

71)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소상공인 원스톱 지원(4131-319)(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72) 소상공인 24란, 소상공인 관련 각종 지원사업의 공고·소개 및 신청을 한번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의미함.

73) 소상공인 365란, 빅데이터 기반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가이드 등을 제공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홈페이지 및 관련 정보시스템을 의미함.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 개요]

○ 주요내용
-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다양한 질문을 이해하고 대화형으로 답변하며, 상황에 맞는 맞춤 상담・분석・제안을 제공

○ 제공범위
- 지원시책, 상권분석 모든 소상공인 정책을 총망라하여 맞춤형 상담・분석・제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상담 AI 도우미 구현
  * 지원사업 정보 및 신청 보조, 상권정보 및 창업 업종・지역 등 맞춤형 추천 등

○ 제공위치
- '소상공인24'와 '소상공인365'에 AI도우미를 탑재하여, AI 상담 결과가 지원정책 신청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체계 구축
  * (기존) 지원사업, 상권정보 각각 제공 → (개선) 지원사업+상권정보 통합 제공

○ (제공방식)
- LLM 기반으로 자유형 질의와 복잡한 상담까지 이해하고, 지속적 학습을 통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분석・제안을 제공
  * (기존) 대화형 챗봇: 사용자 입력 키워드로 미리 정해진 FAQ에서 답변 제공
  * (개선)대규모 언어모델: 질문자의 의도・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여 자유형 질의에 대응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 계획안 세부내역]

○ (데이터준비)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 수집・정제 및 환경구축: 10억원
- (통합DB) 소상공인24・소상공인365・민원상담DB 등 AI 서비스를 위한 통합 DB 구축(7억원)
- (통합DB 운영환경) 클라우드 기반 환경의 서버, 네트워크, 보안장비 등 통합DB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임차(3억원)

○ (LLM활용) 사업별・유형별 데이터셋 학습으로 맞춤형 소상공인 AI 모델(LLM) 구현: 20억원
- (학습데이터셋) 소상공인 지원정책, 정보, 전문지식(세무・법률 등) 등을 학습・정제 처리(10억원)
- (활용 SW도입・API) UI/UX 및 시나리오, 통계 대시보드 등을 위한 서비스·API 구축(5억원)
- (LLM 운영환경) AI LLM 학습・튜닝, RAG 기반 지식베이스 등을 위한 고성능 GPU 서버 임차 활용(5억원)
  * RAG(Retrieval-Augmented Generation) 기반 지식베이스 : 외부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여 보다 정확하고 최신성 있는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

○ (시스템연계) 소상공인24・소상공인365 포털에 통합 서비스 구현 및 내・외부 DB 연계 지원: 10억원
- (운영 시스템 구축) 내부・외부 데이터 관리 및 AI 서비스, 정책 등의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7억원)
- (대외DB 연계) 공공 및 민간기관 등 전문정보 최신화를 위한 데이터 크롤링・API연계(3억원)

○ (검증・교육) 서비스 모니터링과 상담사・컨설턴트 등 사용자 교육 실시: 10억원
- (검증 운영관리)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사용량・오류・위험신호 탐지, 실시간 알림 대시보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7억원)
- (교육・홍보) 소진공, 콜센터 등 관리자 대상 약 1천명 대상 교육 및 대국민 활용을 위한 홍보(3억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나. 검토의견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은 AI 데이터 구축 커스터마이징 및 시스템 연계 개발이 필요한 대규모 정보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등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아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로 사업비가 산정되었으므로 예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정보화 사업은 정부 및 공공기관이 정보를 생산·유통·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효율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으로,[74] ①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하기 위한 사업,[75] ②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 사업,[76] ③「전자정부법」,「지능정보화 기본법」 등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을 의미하고, 정보화 유형으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일반사업 및 R&D사업에 포함된 정보화 사업의 경우에도 정보화 사업의 편성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됨.[77]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을 완료한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ISP·ISM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 이후 관련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함. 참고로, ISP·ISMP의 수립 제외 사업은 총 구축비 2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정보시스템 구축·재구축 사업, 단순 기능개발, DB 구축, 단순물품구매 등 별도의 ISP·ISMP 수립의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정한 사업임.

---

74)「전자정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전자정부서비스“란 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를 통하여 다른 행정기관등 및 국민, 기업 등에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
13. “정보시스템“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75)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구입비 및 임차료, 정보시스템 개발비 및 컨설팅 비용,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경비 등으로 구성됨.

76) 정보화 관련 표준화,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구축, 전파관리, ICT산업 기반조성, 정보격차 해소, 정보보호 강화 등을 의미함.

77) 기획재정부,「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43.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은 민간 LLM을 커스터마이징하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업으로서 정보시스템 구축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화 사업이 아니고, 정보화 사업으로 보더라도 단순기능개발 및 DB 구축에 해당하여 정보화전략계획(ISP)의 수립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임.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하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사업은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소상공인24·소상공인365) 내 '(가칭)소상공인 AI 도우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시스템에 연계서비스를 신규 제공하려는 것으로,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정보화 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정보화 사업 예산안 편성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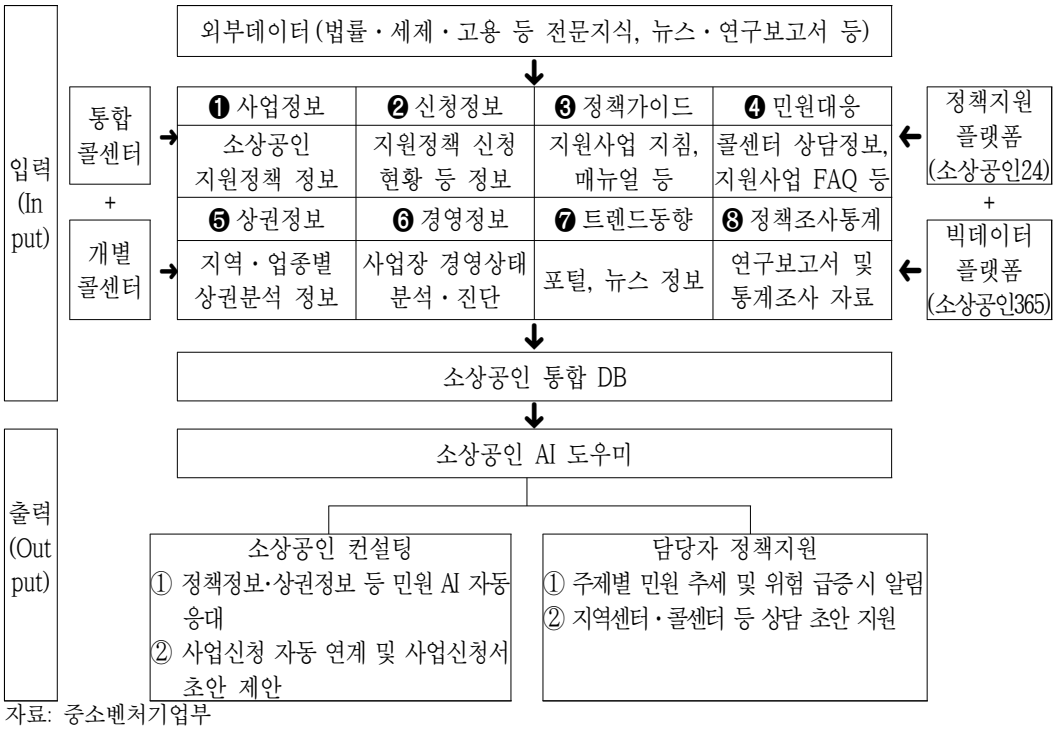
특히 이 사업의 과업내용은 단순 AI 서비스의 도입이 아니라 시스템 통합형 AI 데이터 구축 커스터마이징으로 상당한 데이터 가공·구축, 커스터마이징 및 소프트웨어·정보시스템의 개발사항이 필요하고, 사업비 중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및 시스템 구축·개발비용은 적어도 20억원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므로[78] ISP 수립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 상권정보, 상담정보 등의 정보에 대해 민간 LLM에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 데이터 관련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수집·정제·가공·검수 등의 데이터 구축·재구축, 데이터 품질 검증 및 안정화 등의 작업수행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AI 데이터 구축 커스터마이징은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데이터 구축 및 서비스 검증 및 안정화 등 각 비용요소마다 상당한 과업이 발생함.

또한 소상공인 24 및 소상공인 365에 커스터마이징한 LLM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AI 도우미를 활용하는 서비스마다 LLM 서비스를 API를 통해 연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내·외부망의 네트워크 보안 및 서비스 안정화에 필요한 다양한 구축·개발비용이 필요함.

78)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사업비는 서비스 가격표 또는 견적서에 제시된 서비스 총이용료와 투입공수 방식의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구축·개발비용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AI 서비스 도입 사업비는 서비스 총이용료,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및 구축·개발비용으로 구성됨.

[AI 활용 소상공인 원스톱지원 사업 개요]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은 정보화 사업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전략계획(ISP)을 통해 환경 및 분석, 목표모델 설계(개선과제 상세화, 업무프로세스 설계, 정보시스템·데이터·기술보안 구조 설계) 및 통합이행계획 등을 파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를 거치지 않아 예산안의 세부 산출근거가 미흡한 상황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 예산을 산정함에 있어 사용규모 및 단위이용료를 기초로 서비스이용료를 산출하거나, 기능요소 및 평균 투입공수를 고려하여 커스터마이징 및 구축·개발비용을 구체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바,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사용규모 및 단위 이용료에 따른 과금산출이 불가능하고, 그 외 커스터마이징 및 구축·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전 초기단계로 과업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아 각 요소별 투입비용을 억원 단위로 추정하여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보화 사업의 경우 예산안 편성 이전에 과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요소별 기능점수 및 난이도를 고려하여 투입비용을 객관적으로 산출하여 사업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는바, 예산안 제출 후 실제 사업 시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것은 사전준비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임.

참고로 AI 도입 방식의 서비스의 사업비를 산정할 때에는 서비스이용료의 경우 도입기간·사용규모·단위이용료 등을 추산하고,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및 구축·개발비용 등은 각각의 비용항목별 투입공수 및 비용항목별 단가 등을 추산하여야 함.[79][80]

[인공지능(AI) 도입 사업비 산정 총괄표 양식]

<table>
<tr><td>사업명(서비스명)</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2">서비스이용료</td><td>도입기간(월)</td><td>사용규묘
(인원수, 사용량)</td><td>단위이용료</td><td>총이용료</td></tr>
<tr><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8">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td><td colspan="2">항목</td><td>비용
(데이터 유형,
데이터 규모, 단가)</td><td>비고</td></tr>
<tr><td colspan="2">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td><td></td><td></td></tr>
<tr><td rowspan="4">데이터 구축</td><td>수집</td><td></td><td></td></tr>
<tr><td>정제</td><td></td><td></td></tr>
<tr><td>가공</td><td></td><td></td></tr>
<tr><td>검수</td><td></td><td></td></tr>
<tr><td colspan="2">모델구현 및 학습</td><td></td><td></td></tr>
<tr><td colspan="2">검증 및 안정화</td><td></td><td></td></tr>
<tr><td rowspan="2">구축·개발비용</td><td colspan="2"></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r>
<tr><td>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합계</td><td colspan="4"></td></tr>
<tr><td>구축·개발 비용 합계</td><td colspan="4"></td></tr>
<tr><td>총 서비스 도입 사업비</td><td colspan="4"></td></tr>
</table>

자료: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5 개정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p.164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서비스이용료,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구축·개발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 산정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과업의 내용을 고려할 때 ISP 수립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ISP를 수립하지 않았음.

79)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 사업비는 서비스 가격표 또는 견적서에 제시된 서비스 총이용료와 투입공수 방식의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 구축・개발비용에 따라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총이용료는 서비스 가격표 또는 견적서에서 기업이 제시한 이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단위 이용료와 도입기간(월)에 따라 연간 총이용료를 산정한다. 커스터마이징 작업비용과 구축・개발비용은 작업 항목에 따른 서비스 기업의 견적가를 참고하여 투입공수방식으로 산정한다.(“(2025 개정판)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p.157)

80)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SW개발비 등에 대한 예산 수립, 사업발주, 계약 시 적정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수립하고 있으며, 2025년 개정판에서는 인공지능 서비스 도입 관련 산정대가 방식이 신설되었음.

따라서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사업은 사업 예산의 구체성이 결여되고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실제 사업 수행시 정보시스템 구축의 완결성이 낮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ISP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 예산안은 ISP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후 논의가 필요해 보임.